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16, No.1 2024

16집 1호 · 202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례

기획 :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반도 미래

- 정영철 ■ 북한의 '두 개 국가론'
: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7
- 이혜정 ■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49

일반논문

- 김선호 ■ 북한의 38선 경비부대 창설과정과 제한전 구상 99
- 막스 알텐호펜 ■ “독일은 제2의 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한국전쟁의 그늘에서 서독 재무장에 반대하는
여성 평화 운동가의 활동 141
- 김도민 ■ 1953~1957년 중립감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193
- 류기현 ■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가입론의 대두 229
- 전순영 ■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민사회의 실태
: 재구성된 시민사회지표(CSI)를 중심으로 261
- 김학재 ■ 독일 통일 여론의 변화와 세대
: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일을 이뤘는가? 299
- 나준성 ■ 도명학 소설의 자본주의 비판과 가치 교환의 (불)가능성 343

이문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 전황과 전망 381

현장 보고

이예정 |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민간 남북교류협력 전망 419

모순영 | 《겨레말큰사전》을 통해 본
남북 공동 국어사전의 위상과 과제 431

서평

배개화 | 텍스트의 유동성과 진실성
: 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2023)에 대한 서평 447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반도 미래

북한은 2023년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 왔던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대남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정면승부의 반미 적대 투쟁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집권당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대남·대외 전략의 전환에 따른 영토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만간 법제화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남북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으며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통일과 평화』는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론과 통일 불추구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 문제를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호에는 북한의 대남·대외 전략 전환에 관한 논문과 국제관계의 변화를 다룬 논문 2편을 게재한다. 한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문제 등은 다음 호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획

북한의 '두 개 국가론'*

: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영철 (서강대학교)

국문요약

지난 해 말,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의 두 개 국가론의 분리를 선언하였다. 이어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두 개 국가의 분리를 넘어 남북이 교전 국가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금과옥조로 여기던 '조국통일3대헌장' 탐을 '꿀볼건'이라 표현하면서 철거해버렸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의 '민족' 중심의 통일론의 폐기이며, 동시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유흔까지의 폐기를 의미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2018년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의 국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귀결된 것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민족과 민족주의를 둘러싼 개념의 변화가 이론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한민족을 포괄하던 '민족'의 개념이,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김일성 민족'의 등장,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국가 제일주의'로 변화하면서 민족에서 국가로 초점이 옮겨갔던 것이다. 북한에서 벌어진 '민족'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민족'이라는 기표에 '민족'과 '국가'의 두 가지 기의가 결합되는 과정이었고, 이번의 조치는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7>

* 이 논문에 대한 세 분 심사자들의 소중한 논평에 감사를 드린다. 충분한 수정을 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의 판을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당분간 '통일'은 책상의 서랍 속에 넣어두고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박정희 시절의 '선건설'론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로서는 남북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힘들게 만들어 온 평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 김정은, 민족, 민족주의, 국가

I. 들어가며

지난해 말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그리고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시정연설을 통해 기존의 '1민족 1국가'에 기초한 남북의 특수 관계를 부정하고, 두 개 국가 - 적대적인 교전국가로 규정하였다. 지난 80년간의 남북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아마도 2019년 이후, 그간의 남북관계에 대해 내부에서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1991년의 '기본합의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그간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의 민족에 기초한 통일정책의 실패와 좌절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²⁾ 이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그

1) 결정적인 계기는 2018-2019년의 대변환이 별다른 성과없이 오히려 북미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의 대립 심화로 귀결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뒤드거 프랑크의 글을 볼 것. FRANK, RUEDIGER, "North Korea's New Unification Policy: Implications and Pitfalls,"

<<https://www.38north.org/2024/01/north-koreas-new-unification-policy-implications-and-pitfalls>>.

간 통일의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조국통일 3대헌장탑>을 '꿀볼건'이라 표현하면서 즉시 철거해버리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났다.³⁾ 또한, <조선중앙TV>에서는 그간 일기예보 등에서 보여주었던 전체 한반도 지도를 북한 지역만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남과 북의 분리를 명백히 하였다.

비록 이번의 규정과 주장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그간의 남북 '91년 합의'가 종결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91년 기본합의서 이후, 정치·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겪기는 했지만, 남북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연대를 실현해왔으며, 공동생산과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경제협력(개성공단) 및 관광을 통한 연결의 공간(금강산)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교전국가'로 규정된 조건에서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남북관계의 연대는 사실상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⁴⁾ 새롭게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이번 주장은 현재 한반도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법·제도화한 측면이 있다. 즉, 이미 1991년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을 통해

3) 최고인민회의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3대헌장탑'을 즉시 철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미국 NK뉴스에 따르면 1월 19일까지 촬영된 '3대헌장탑'이 23일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하였다. 정혜정, 「김정은 “통일 개념 자체를 제거” 지시에… 北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 『중앙일보』 2024년 1월 2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103#home>>.

4) 물론 북한의 이번 선언과 조치는 일방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 그간의 교류와 협력이 '91년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이러한 합의에 기초한 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졌음은 분명하다 하겠다.

객관적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별개의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인정받았으며,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으며, 통일에 대한 희망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⁵⁾ 또한, 아직까지 한국전쟁이 법-제도적으로 종결되지 않음으로써 ‘불안한 평화’상태에 놓여 있으며, 여전한 전쟁 상대방으로서의 적대적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 북한의 선언은 10여년 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할 무렵부터 예고되어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⁶⁾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최고지도자로서 최초의 공개연설에서(2012년 4월 15일), 그는 당면한 최고의 과제로서 ‘인민생활’ 향상을 제기하였고, 평화의 문제는 경제건설을 위한 수단이자 환경으로 위치시켰다.⁷⁾ 1955년 김일성이 당면한 북한의 과업으로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이라는 2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 것에서의 후퇴이자, 조국통일의 과제를 건설의 뒤편으로 밀어낸 주장이라 할 수 있다.⁸⁾ 1955년 김일성의 주장은 김정일 시대까지 별다른 저항과 굴곡 없이 유지되고, 추진되었다.⁹⁾ 김정은의 이번 선언과 조치는 결국 지난 김일성

5) 이에 대해 김상준은 코리아 양국체제라 이름하고 있다. 김상준, 『코리아 양국 체제』 (파주: 아카넷, 2019). 또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해마다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통일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 김범수 외,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 31쪽.

6) 물론, 이는 지극히 사후적인 평가이다.

7) 김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2012.4.15.)」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8) 북한에서 평화적 환경의 마련은 일찍부터 경제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환경으로 인식되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을 위한 전제였고, 선차적인 과제로 위치되었다. 김정은의 발언은 평화보다는 주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건설이 선차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통일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겠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에서 북한이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남북관계와 '민족'의 문제에 대한 향후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 글은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두 개 국가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미국과 한국의 '두 개 한국'에 맞서 '1민족 1국가'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북한이 '두 개 국가'를 주장하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의 북한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것인지를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의 변천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아울러, 지난 시기 북한의 변화를 올바르게 읽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될 것이다.

II. 민족과 민족주의

1. 근대,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사회주의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일반적인 배척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맑스와 엥겔스에게서 민족주의는 계급의식을 가로막는 혁명의 장애

9) 김일성은 1955년 4월 소위 '4월 테제'를 발표하게 된다. 이때 김일성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2대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곽과 과업에 관한 테제(1955.4)」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물이었고, 부르주아의 계급의식의 산물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민족은 근대의 산물로서 자본주의 시장의 출현과 함께 상상된 것 혹은 발명된 것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족에 우선하여 계급을 주장했던 사회주의(자)조차도 결국에는 민족/민족주의에 굴복하였고, 스탈린은 히틀러의 침공에 맞서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고취하기도 하였다. 콜라코프스키가 주장하듯,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와 결합하지 못했던 국제주의는 언제나 패배했다.¹⁰⁾

사회주의의 교리가 아니더라도 민족/민족주의는 근대적 구성물 혹은 발명품으로 인식되었다.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 민족을, 혹은 매일매일의 국민투표로서 민족을, 또는 역사적인 발명(invented)으로서 민족을 말했던 모든 주장의 공통점은 이를 근대의 산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¹¹⁾ 따라서 홉스봄에게 민족과 민족주의는 1990년대 이래, 자신의 정치적 기획을 마감하고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¹²⁾ 근대적 구성물로서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요인의 중요성에서 차이를 두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분석의 초점은 근대의 발명품 혹은 구성물로서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

¹⁰⁾ 콜라코프스키, 「마르크스철학과 민족의 실체」, 임지현 옮김, 『민족문제와 맑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55쪽.

¹¹⁾ 각각 앤더슨, 르낭, 홉스봄 등이며, 이들 이외에도 겔너, 네언, 브루윌리, 킬리, 기든스, 카우츠키, 한스 콘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근대 민족/민족주의를 주장하였다.

¹²⁾ 홉스봄은 냉전 붕괴 이후, 구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민족주의적 발흥을 목격하면서 이는 미완성된 2차대전 이후의 민족자결권의 원리가 마지막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보고, 이 과정이 끝나면 민족과 민족주의는 더 이상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Hobsbawm, Eric J.,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사실, 이러한 주장은 20세기의 역사를 민족들의 국가 구성의 역사로 판단했던 필연적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민족/민족주의는 여전히 강고한 정치적 변동의 동력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민족이 쉽사리 소멸되거나 다른 단위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세계사에 특수한 서유럽을 모델로 한 '서구 중심주의'라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았다.¹³⁾ 그러기에 근대적 상상 속에서도 스미스는 족(ethnie)에 기반한 혹은 족의 연속으로서 '민족'에 대한 심성과 의지, 객관적 조건을 중심으로 사고하였고, 최근의 아자 카트(Azar Gat)는 진화론에 기초하여 서유럽과는 다른 민족 형성의 일반적인 경로와 특징을 추적하기도 하였다.¹⁴⁾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일반적인 상식처럼 논의되는 근대, 민족/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의 관계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¹⁵⁾

2. 북한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북한 역시 초기 사회주의 교리에 따른 민족/민족주의 이론의 수용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인 수용과는 달리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감성과 실천은 초기 김일성 역사의 시작부터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사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는 여타의 제3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강력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었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민족(주의)론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영역에서는 민족(주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¹⁶⁾ 훗날 김일성의 역

13) 강철구, 『역사와 이데올로기』 (서울: 용의숲, 2006).

14) 아자 카트는 현재의 서유럽에서의 민족/민족주의 문제가 비교적 덜 격화되고 있는 것의 원인에 대해, 이들은 이미 갈등의 단계를 지났고, 안정된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자 카트·알렉산더 야곱슨, 유나영 옮김, 『민족』 (파주: 교유서가, 2020).

15) 특히,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붕괴되지 않은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 기획은 '민족주의'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혜석, 『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학위논문, 2017) 중 2장을 참고할 것.

사를 추적한 한홍구에 의하면, 주체 형성의 역사적 배경에는 만주에서의 김일성의 경험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민생단 사건 등 김일성의 경험은 민족적 한(Han)이 자리잡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¹⁷⁾

초기 북한은 당시 사회주의 민족이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스탈린의 민족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스탈린은 1913년에 발표한 자신의 책에서(<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민족을 ‘공통의 문화에 나타나는 심리적 성격 및 언어, 지역, 경제적 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안정적 공동체이다’라고 규정하였다.¹⁸⁾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규정한 스탈린의 이론은 언어와 혈통 등에 익숙한 제3세계 ‘민족’ 개념과는 불일치하였고, 더욱이 반제 민족해방 운동에 의해 형성된 과거 식민지/제3세계 국가에서는 그대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스탈린의 민족이론은 ‘이론’으로서 그

16)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파주: 돌베개, 2015), 1-2장.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당면목표는 조선에서의 혁명 즉, 독립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일이 가장 중요한 실천의 과제였다. 또한, 반봉건 사회의 특성상 그 혁명의 성격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혹은 인민 민주주의 혁명 등 사회주의 지향의 민족적, 민주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로부터 초기 공산주의 운동은 민족주의와의 결합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레닌의 제3세계, 식민지 해방운동 및 반제국주의 운동의 세계 혁명의 동력으로서의 규정 등과도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7) 민생단 사건의 경험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대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했으며, 이것이 훗날 주체 형성의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연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Han, Hong-gu, “Wounded Nationalism: The Minsaengdan Incident and Kim Il Sung in Eastern Manchuri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관련하여 1960-70년대 중국이나 소련 등의 수정주의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대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표출되었다.

18) Stalin,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서울: 나라사랑, 1989).

권위를 대체할 여타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많은 사회주의 진영은 이를 수용하고 있었다. 북한 역시 스탈린의 이론을 수용하였지만, 국가 건설의 초기부터 강력한 민족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었다.¹⁹⁾ 비록 민족주의 용어가 금기시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애국주의 -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민족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²⁰⁾

스탈린 민족이론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초기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아주 진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었음은 분명하다.²¹⁾ 국제주의적 연대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혁명의 우선과 민족 혁명에의 충실이 국제적 혁명에도 충실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²²⁾ 더욱이 북한의 현실은 남북의 분단에 따른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탈린 민족이론의 현실 적용에서의 문제가 있었다.²³⁾

19) 초기 북한 형성의 역사를 연구한 암스트롱에 의하면, 북한은 '민족적 형식,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이론적 도식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민족적 형식, 민족적 내용'을 추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찰스 암스트롱,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 탄생』 (파주: 서해문집, 2006).

20) 북한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1957년 김일성의 공식화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정고은, 「북한 애국주의의 기원과 변용」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9쪽.

21) 김일성, 「조선의 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1943.9.15.)」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이 글에서 김일성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민족적 자존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40년대 후반의 노동한 강연과에서 집필한 『민족과 민족 문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김태우, 「북한의 스탈린 민족 이론 수용과 이탈 과정」 『역사와 현실』 (2002년 6월호), 256~285쪽.

22)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이미 1930년대부터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세계혁명에도 충실할수 없으며 진정한 국제주의자로 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김일성,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1936.2.2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3)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민족개념의 정립과 민족주의

이후, 1955년 ‘주체’가 제기되면서 민족이론에서도 북한의 독자적인 이론의 모색과 주장이 점차 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1960년대에 북한의 독자적인 민족이론이 등장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언어와 핏줄에 근거한 민족이론이 논의되고 있었다.²⁴⁾ 또한, 지금까지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한 스탈린 민족이론으로부터도 이탈하기 시작하여, 핏줄과 언어 특히, 핏줄에 근거한 민족이론으로의 모색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민족주의에 대한 보편적 평가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서 규정되었고, 다만 그 실체로서 ‘민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된 역사적 공동체로서 영속주의적 입장과 유사한 이론적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⁵⁾ 이러한 민족이론의 변형은 주체사상의 형성·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어 갔다. 김정일은 이미 1960년 민족에 대한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그의 이론이 바탕이 되어 1980년대에 북한의 독자적인 민족(이론)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²⁶⁾

의 재평가」 『문학과 사회』 16권 4호(2003), 1,668~1,690쪽.

- 24) 이에 대해서는 김종진, 「1950년대 북한 민족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960년 김정일의 민족론에 대해서는 이계환, 「북한의 민족론과 민족주의」, 정수일, 『21세기 민족주의』 (서울: 통일뉴스, 2010).
- 25) 이러한 민족이론의 변형에는 ‘통일’의 문제가 놓여있었다. 통일을 ‘2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규정한 이상, 민족적 동질성 혹은 민족의 통일을 위한 민족 ‘이론’이 정당성으로 뒷받침되어야 했다, 스탈린의 민족이론에 따르면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남북은 경제생활의 이질성이 강화되는 ‘다른’ 민족으로 구분되어야 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오랜 기간의 민족 공통성과 영속적인 ‘민족’공동체의 이론이 요구되었다.
- 26)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1960.10.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물론, 그렇다고 하여 경제생활의 공통성 등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강혜석, 「북한 민족주의론의 원형과 정치적 동학(1945-1985)」 『북한연구학회보』 21권 2호 (2017), 119~154쪽.

초기 스탈린의 민족이론에 기반하여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사고하던 북한이 이처럼 민족이론을 변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민족과 민족주의는 정교한 이론적 체계이기 이전에 현실의 실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에게는 러시아(소련)나 유럽 등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의 문제가 있었고, 더욱이 분단이라는 조건에서 스탈린의 민족이론은 결코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비록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따라서 애국주의를 대체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민족주의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연대, 사회주의 이념의 공통성 등에 따라 민족주의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북한의 현실은 오히려 더욱 민족(주의)와의 친화성이 강화되고 있었다. 민족주의적이었지만, 민족주의를 공식적으로 호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은 사회주의의 붕괴를 전후하여 급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1991년 김일성에 의해 민족주의를 재호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3. 북한의 새로운 민족주의 이론의 등장과 그 의미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외적으로는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에 따라 그간의 진영이 무너지고 있었고, 반면, 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남북간의 우열이 분명해지고, 남한의 공세적인 대외정책 - 북방정책에 따라 국제적인 <두 개 한국>이 실현되기 직전이었다. 이를 전후하여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태껏 애국주의로 호명하던 사실상의 민족주의가 김일성에 의해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진정한 민족주의로 구분되고, 진정한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사상의 흐름으로 규정하였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공통성으로서 애국(주의)를 놓고, 그 자신이 스스로 공산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임을

천명했던 것이다.²⁷⁾

1991년 김일성에 의해 새롭게 정식화된 민족주의에 대한 재규정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김정일의 1960년의 언급이 소환되는가 하면, 단군에 대한 실체론적 재조명, ‘대동강 문명’에 대한 발견과 발명 등이 벌어졌다.²⁸⁾

1991년 김일성에 의해 새롭게 정식화된 민족/민족주의의 재규정은 크게 3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냉전의 해체와 북한 체제의 위기 속에서 민족주의와의 결합을 통한 사상적 재무장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약화 속에서 자신들 사회주의의 독자성과 특수성에 대한 정당성의 추구를 들 수 있다. 셋째, 김일성의 연설이 통일 문제와 관련된 인사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급변하고 있던 한반도의 상황과 통일의 사상적 동력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김일성에 의해 정식화된 민족주의의 진보성은 특히나 남북관계/통일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에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등 국제적으로 두 개의 한국이 공식화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7)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91.8.1.)」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이 책에서는 ‘공산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자이자 애국자’로 표현되어 출간되었지만, 훗날 원래대로 돌아와 ‘공산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로 표기되었다.

28) 특히, 단군릉의 발굴과 이를 둘러싼 북한 학계의 연구는 자신들의 ‘문명’을 독자적인 것으로 놓고, 그 시원을 5000년 전까지 거슬러 가는 유구한 것으로 위치지었다. 이에 기반하여 ‘민족’을 영속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유구한 사상의 한 흐름으로 해석하였다. 북한의 단군릉 발굴과 이를 둘러싼 학술적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선전자료집』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95).

남북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국제적인 두 개 국가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상호간에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서로의 관계를 합의하였다.²⁹⁾ 남북이 두 개의 특수한 관계를 이루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 '하나의 민족'에 있었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에 기반한 공통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확인하는 것은 통일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김일성의 이 발언이 '범민련' 등과 관련된 인사들과 모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김일성으로서는 불리한 여건에 놓인 국제적인 환경, 그렇지만 자신이 제안한 2대 전략적 과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설득력을 보여주어야 했다. 바로 그 지점의 하나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교조에서 이탈하여, 민족주의를 하나의 진보적 사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남북의 공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동-서독의 통일에 따라, 북한 붕괴 및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담론이 당시 남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먹고 먹히는 통일'이 아니라 이질적인 체제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제 형식의 고수와 지역 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외교와 국방권) 방식의 연방을 묶어놓는 유력한 힘은 남북 공통의 민족 감정을 강조하는 것이었다.³⁰⁾ 사실, 2000년 정상회담에서 제2항의 합의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론은 여기로부터 더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김일성 민족'이 등장하면서 '민족'의 기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의'를 담

29)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30) 김일성. 「신년사(1991)」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그리고 이 방안은 2000년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과 연합의 공통성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6.15 공동선언> 제2항.

아내기 시작하였다. 물론, 1986년 ‘민족 제일주의’ 담론이 나오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1994년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Ⅲ. 민족에서 국가로

1. 두 개 ‘민족’으로서 민족 제일주의와 김일성 ‘민족’

김일성의 2대 전략과제는 김정일 시기까지 굴곡을 거치긴 했지만, 그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남북의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고, 체제 경쟁과 함께 민족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김일성 민족’의 등장이었다.³¹⁾ 김일성 민족은 ‘민족’의 기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대상으로 설정한 청중은 북한의 ‘인민’이었고, 결국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 스스로도 김일성 ‘민족’은 ‘사회주의 시조’로서 김일성을 칭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시조로서 북한을 ‘김일성 민족’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의 기표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가 결합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북한에서 민족의 ‘기표’에 국가라는 기의가 덧씌워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다. 1986년 김정일에 의해 제창된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³²⁾ 1979년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가 나온

31)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1994.10.16.)」 『김정일선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2)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김

이래, 1986년 '우리 민족제일주의' 혹은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한반도 전체의 '민족'을 상상하던 데에서 벗어나 맥락상 '전체 민족'과 '북한의 국가'를 상상하는 것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덧씌워졌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통일의 담론으로 등장했던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를 말한다면, 때로는 '조선' 민족제일주의를 통해 북한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94년 이후, '김일성 민족'은 북한만을 지칭하는 확실한 민족적 기표로 작용하였다.

실상, 1990년대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즉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 북한 사회주의 우월성, 과학성,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고,³³⁾ 자신들을 과거의 사회주의 '동방의 보루'에서 이제는 유일한 '사회주의 보루'로 위치시켰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의 이념적 붕괴는 단지 자신들 사회주의 독자성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중화 민족주의'가 강대국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호명된 것처럼, 북한 역시 민족/민족주의에 대한 호명을 통해 자신들의 독자성을 보강해야만 하였다.³⁴⁾ 1980년대부터 그간 소홀히 취급했던 민족적 명절과 전통 등이 재강조되었고, 단군릉 발굴을 통해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신들을 포장하였다.³⁵⁾ 이 과정에서 등장한 '김

정일선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또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1986년 1월에 등장하고 있었다.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1986.1.3.)」 『김정일선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33)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김정일선집 1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4) 이에 대해서는 강혜석,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 『다문화사회연구』 10권 1호(2017), 65~96쪽.

35) 단군릉의 발굴은 '민족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일성 민족'은 민족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사회주의 북한으로 한정되었고, 결국에는 이후 국가주의 담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순을 잠재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민족'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에서는 결코 호명되지 않았다. 2000년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등장한 것은 '우리'로 포괄되는 남북한 모두를 하나의 민족으로 호명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 민족끼리'였다. 여기서 '우리'는 남과 북 및 해외의 모든 한민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2000년 정상회담과 함께 고양된 '민족'의 가치를 하나의 담론으로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때로는 '조선 민족제일주의' 혹은 '김일성 민족'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이, 때로는 '우리 민족제일주의' 혹은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전체 한민족을 소환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³⁶⁾ 이러한 담론과 개념의 혼용은 그 자체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 적어도 북한의 현실 속에서는 - 전혀 충돌되지 않았다. 그것은 민족/민족주의가 정교한 이론의 체계이기 이전에 실천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는 것과 함께, 맥락을 통해 '민족'을 호명하는 청중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인민'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으로서 '김일성 민족'에 자부심을 가지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통해 전체 한민족을 청중으로 하는 호명에도 아무런 경계와 거부감없이

쌓여 있었던 사대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들어낸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였다. 즉, 중국 못지않은 오랜 역사와 독자적인 문명을 건설한 '민족'의 시조로서 단군의 재조명은 '한'민족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연결되었다. 이 역시 애국주의와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36) '조선 민족제일주의'와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포괄적 범위와 그 의미,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는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24권 1호 (2021), 139~177쪽. 리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변화와 '우리'에 대한 포괄 범위에 대해서는 박소혜,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와 전략』 22권 3호 (2022), 69~100쪽.

반응할 수 있었다. 어찌 되었든 민족적 정통성이 자신들에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를 남북관계에서 주도하는 것 역시 자신들이라는 긍지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민족 제일주의'와 '김일성 민족'이라는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 담론 속에서도, 북한은 이 자체를 아무런 거부감없이 동원할 수 있었고, 오히려 사회주의 이념의 강력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민족제일주의에서 국가제일주의로

2011년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김정은이 새로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김정은은 그 무엇보다도 '인민생활 향상'을 당면의 최고목표로 천명하였다.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 사회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모란봉 악단의 출현이 그 첫 번째 상징이라면, 부인 리설주의 공개석상 등장, 김정은의 대중 지도의 형식 등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³⁷⁾ 과거 김일성의 죽음 이후와는 달리 3년상도 없었고, 김정일의 공식적인 장례일정을 마무리한 이후, 비록 유훈통치가 강조되긴 하였지만 당과 국가, 군대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달리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계승의 담론으로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제창하였다. 애국주의에 기댄 김정은 시대의 담론으로서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일의 권위에 기댄 승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의 충실한 계승이 천명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초기 슬로건은 자

³⁷⁾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문화정책논총』 31권 2호 (2017), 289~305쪽; 전영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국가안보와 전략』 21권 2호 (2021), 161~188쪽.

주와 사회주의, 그리고 선군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³⁸⁾ 이 과정은 북한의 계승자가 그러하듯이, 앞선 권력의 승계의 정당성과 변화없는 주체 혁명 전통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인민생활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가 등장한 것은 자연적인 것이었지만, 선군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주장한 것은 앞선 시기와는 다른 시대 정신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³⁹⁾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에 처음 등장하여, 2021년 제8차 당대회에는 새로운 시대 규정으로 격상되었다.⁴⁰⁾ 김정은의 최대 업적의 하나로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마감하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초기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나란히 병렬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민족제일주의의 계승으로서 국가제일주의를 위치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국가 제일주의는 민족에 앞서 국가를 호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지향이 남북관계나 통일보다는 ‘사회주의

38) 2018년 이후, 이 슬로건은 선군이 빠진 채, 자주와 사회주의의 길로 정리되었다.

39)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을 체제의 재건설로 분석한 논문으로는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23권 1호 (2020), 8-38쪽.

40)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다음 날인 2017 11월 30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다.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승리」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그리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라고 규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총화보고>,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정영철, 「북한의 통치사상, 권력구조」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 및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2021년 1월 14일).

국가, 북한'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 그의 입에서 남북관계 혹은 통일에 대한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기 '선대 수령들'의 유훈으로서 통일에 대한 언급, 그리고 2018년을 전후한 시기의 한반도 급변의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특히, 김일성 시대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이를 계승한 통일정책이 이어졌음과 비교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독자적인 통일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⁴²⁾ 1990년대 이래의 비정상적인 국가체제를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로 전환하고, 비대해진 군부를 정상적인 당-국가체제의 군으로 되돌리는 등의 활동은 모두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상화였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후순위였고, 2017년 핵무력이 완성된 이후에야 평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한반도 현상변경 정책이 실행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북한 체제의 재건설과 함께 국가를 정상화하고자 했던 김정은 시대의 '전략'을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³⁾ 즉, 민족보다는 국가를 우선한 정상화 전략으로서 '국가 제일

41) 전미영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의 '민족' 담론은 민족주의를 통치리더십의 윤리성, 정당성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이전시대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김일성-김정일의 유훈관철이 노선의 계승에 머물러 있으며, 특별한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에게 '민족'담론은 더 이상 힘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경제문제 해결이 당면과제로 주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성 우위의 담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전미영,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보』 43집 1호 (2018), 218-249쪽.

42) 김정은의 통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018년을 전후하여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언급이 부분적으로 존재했지만, 이 역시 앞선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과 비교하면, 당면의 남북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제8차 당대회에서는 기존의 '미제 침략군, 일본군국주의 재침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지지, 전 조선의 애국적 역량과의 통일전선 강화 등의 '남조선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주의'가 제창되었고,⁴⁴⁾ 비록 이것이 '민족 제일주의'와 호환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해도,⁴⁵⁾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에 우선적인 관심이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8차 당대회에서 공식화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였고, 이런 시대의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가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두 개 국가론의 등장과 새로운 질서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2월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두 개 국가론'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이어 1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한반도의 두 개 국가가 적대적인 교전상태에 있는 교전국가로 규정되었다. 남쪽의 '국경선'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침범은 주권 침범으로 간주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유사시 '남쪽 지역 전체를 평정'하겠다는 급진적인 발언을 추가하였다.⁴⁶⁾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그다음 날부터 <조선중앙방송>의 일기예보에서는 한반도 북쪽, 즉 북한 지역만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지도가 등장하였고, <조국통일3대헌장탑>의 철거, 그간 남북관계를 다루어왔던 통일전선부의 해체,⁴⁷⁾ 남북 해외 통일운동단체

43)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44)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각 분야의 변화 및 정상화에 대한 전략으로는 정영철 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세계정치 34』 (서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21).

45) 이지순은 북한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분석하면서, 북한에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언제나 자리바꿈이 가능한 이중언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이 모두는 '애국'을 공통의 수렴으로 가지는 것이다. 이지순, 「김정은시대 국가주의와 문화적 포퍼먼스」 『동아시아문화연구』 81집 (2020).

46) 김정은,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 20204.1.15)」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인 범민련 등의 해체, 그리고 최근에는 분단 역사에서 통일전선을 상징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 해체되었다.⁴⁸⁾ 또한, 그간 한 민족임을 주장해 왔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가 사실상 폐쇄되었고, 금수강산 등의 용어 등도 폐기되었다. 나아가 국가인 애국가마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수정하였다.

전원회의,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등에서의 선언에 따라 일사천리로 남북관계를 단아버리고, 두 개 국가로서의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다. 사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1991년 이후, 이미 국제적으로는 공식화된 것이라 볼 수 있고, 교전 국가라는 정의 역시 한국전쟁이 아직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과거와의 단절에 무게중심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유혼을 완전히 폐기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⁹⁾ 대표적으로 <조국통일3대헌장탑>은 김정일 시대에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이 고수해야 할 통일의 원칙과 방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철거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관련된 조치로서 통일 관련 조직 및 제도, 표현까지도 폐기함으로써 통일의 문제를 거시적인 법, 제도적 차원에서부터 일상적인 미시적 생활에서마저도 단절시키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민족해방

47) 해체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외무성과 통전부의 합동회의를 통해 외무성으로의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최선희 외무상 대적부문 일군들과 협의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1일.

48)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정식 해체」 『조선중앙통신』 2024년 3월 24일.

49) 북한의 정치 특성상 앞선 시대의 수령(들)의 업적을 폐기한다는 것은 선뜻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의 조치는 최소한 김정은의 권력 강화 정도와 권위가 앞선 시대의 수령의 후광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혁명'의 삭제 등을 통해 통일이 당면과제의 중심 지점이 아님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전체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금번 선언과 조치의 이면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을까?

첫째,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되었던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가 실상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는 좌절과 배신감 등이 강력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북한 입장에서 '인민생활 향상'의 최고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관리와 한반도 평화의 구축,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2018년과 같은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기회의 국면에서 결국 하노이 교착, 문재인 정부의 대미 종속에 따른 실행의 한계 등으로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였다.⁵¹⁾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정부가 지금과 같은 대미 종속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처럼 <흡수통일>, <체제붕괴> 혹은 <제도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현상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50) 이번 조치 이후, 김여정의 발표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여정의 담화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의 토로는 북한의 이번 선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를 충분히 상상하게 한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세지」 『로동신문』 2024년 1월 3일.

51) 이와 관련하여, 하노이 교착 이후, 김정은의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하노이 교착 당시, 기자회견에서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였고, 김정은은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정면돌파전'을 결심한 것이다.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2019. 4.12)」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것이다. 김정은의 발언 중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 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 하다는 표현은 결국 한국 정부의 자율성의 회복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 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⁵²⁾

둘째, 2018년 이후의 한반도의 급변과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과는 함께 국제적인 질서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판단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한 북한은⁵³⁾ 하노이 교착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신냉전의 조건에서 자신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⁵⁴⁾ 더욱이 라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52) 김정은,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53) 북한은 일찍부터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보고 있었다. 이미 2019년 최룡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비동맹 회의에서 공개연설을 통해 현재의 국제질서를 '새로운 냉전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였고, 김정은 역시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었다고 했으며, 이어 22년의 8기 6차 전원회의에서도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영철, 「남북 관계의 재개념화: 남북 특수관계론과 '통일역량' 강화의 요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 2023.9.18.).

54) 이와 관련, 김정은은 제재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2019.4.12)." 즉, 제재 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신냉전의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최근의 행보가 보여주듯 러시아 및 중국 등 사회주의 진영과의 외교 강화이며, 올해 들어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에 대한 순방외교 등의 강화를 통해 이를 실행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계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갈등하는 질서로 변모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입지를 반미 진영으로 확고하게 위치시키면서,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⁵⁵⁾ 여기에 남한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대북강경정책, 한미일 동맹의 강화 등은 최소한 당분간은 남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⁶⁾

셋째, 북한 사회 내부 질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 역시 전쟁 이후 세대 및 소위 말하는 장마당 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등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가 발생하였다.⁵⁷⁾ 특히 모란봉 악단 등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세대는 문화적으로 개방화되고 현대화된 소비 욕구를 표현하였고, 이들에게서는 과거와 같은 민족에 대한 강력한 애착(혹은 향수) 등은 거리가 먼 것이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남북의 대립과 갈등의 일상화 등을 경험하면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보다는 적대성이 더욱 낮익은 것이 되어버렸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능라도 ‘5.1 경기장’에서의 15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이라는 파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못한 상황에

55) 2023년 전승절 기념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 국방장관, 그리고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북한 방문은 최소한 동북아시아에서 북한-러시아-중국의 3각 협력체제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56) 이는 2019년 하노이 교착 이후,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취급하고, 제재 하에서의 경제건설을 제기한 ‘정면돌파전’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즉, 미국에 대해서도 선의가 아닌 힘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원칙을 결정한 것이다. 실제 8차 당대회에서 대미 정책의 핵심은 힘을 통해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북한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2008년 기준 5세 이상 인구 중 1980년대 이후의 출생자는 약 33%를 상회하고 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보자면, 과반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인구변천에 대해서는 정영철 외,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대한 배신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에의 집착보다는 당장의 경제생활 향상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전개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통일보다 더 가깝게 다가섰을 것이다.⁵⁸⁾ 즉, 북한의 세대 변화, 가치관의 변화, 눈앞에서 벌어진 남북관계의 파탄 등을 경험하면서 남북이 과연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의 연설 중 남한과는 '민족중흥의 길'을 같이 할 수 없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⁹⁾

결국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의 선언은 한편으로는 남북이 처한 구조적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2018년을 전후한 시기부터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냉혹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 사회의 변화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즉, '건드리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먼저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신들을 건드리면 '남조선

58)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장마당 세대' 개념을 통해 북한의 세대 간 갈등 및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정치, 사회, 준법 및 교육 의식 등은 낮고 경제의식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이들이 앞으로의 북한 사회변동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북한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의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채경희, 「북한 장마당 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권 1호 (2019), 321쪽.

59)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 등이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김정은을 통해 반영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북한의 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장마당 세대' '북한 내에서의 한류', '북한 문화의 변용' 등을 통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역시 탈북자 증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 장마당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이들의 변화의 동력으로서의 의미를 조명한 연구로서는 김기연, 『북한 사회 변화의 동력, 장마당 세대』 (서울: 패러다임북, 2023).

을 평정'할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당분간은 제각기 갈 길을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그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연대의 길이 시대적 한계를 다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과제에 마주하고 있다 할 것이다.

IV. '통일'의 토대로서 민족/민족주의의 약화 - 보편적 가치로서의 '통일'

1. 남북 '통일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북한의 이번 선언은 지금까지의 통일론에 대한 신중한 반성과 고찰을 요구한다. 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해 하나 된 국가의 창출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분단의 모순이 해결되었거나,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의 새로운 관계의 형성도 지난 정권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고 말았다. '세기의 만남'으로 칭해졌던 북미간 정상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교착상태로 귀결되었다. 그만큼 북미간의 불신의 구조가 깊고, 쉽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경우 지금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세상에 선포된 지 35년이 지났고, 지금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에 담겨있는 영토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상대방에 의해 근원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회복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졌다. 북한 역시 헌법 개정

을 통해 영토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아마도 두 국가로의 분리를 명확히 하는 영토조항을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남북한 사회 모두가 그때로부터 상당 부분 달라져 있다.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으며 '민족' 담론의 설득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⁶⁰⁾ 또한,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는 동반자국가 및 적대국가가 공존하는 모순적이면서, 중층적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세대와 정치적 지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¹⁾ 이 역시 세대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민족을 상상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된다.⁶²⁾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민족'을 둘러싼 관성화 된 담론과 당위성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갖출 수 없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주장은 단지 북한의 정치적 전략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을 던져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김정은의 발언 중 남한 사회가 '양키 문화에 혼탁되었'다는 지적은 남한 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통일의 상대인 북한이 생각하는 남한 사회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

60)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이미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대의 경우(19-29세), 그 비율은 3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김범수 외, 『2023 통일의식조사』, 31~33쪽.

61) 이우영·최순미,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현대북한연구』 22권 2호(2019), 87~121쪽.

62)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분단과 탈분단, 그리고 통일의 상상력 넓히기」 『북한학연구』 15권 1호 (2019), 37~64쪽.

한의 주장은 통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고, 최소한 미국에 대한 자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자, 문화적으로는 민족에 기반한 통일 지향적 문화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번의 선언을 통해, 북한 역시 자신들이 내세우는 연방제 방안을 포기하였다. 1980년의 연방제가 90년대를 경과하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바뀌었고,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공통의 성격을 갖는 '연합연방제'를 수용하였지만,⁶³⁾ 지금에 와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과거의 통일론으로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남북 모두 통일론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이미 지난 2018년의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이, 당면의 통일보다는 지금 당장의 '평화'와 변영이 더욱 현실적이고, 더욱 큰 설득력을 갖고 있다.⁶⁴⁾

2. 보편주의적 가치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흔히들 20세기는 민족/민족주의의 시대였다고 한다. 러시아 혁명 그리고 이어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함께, 수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민족해방과 부국강병을 꿈꾸었다. 한반도 역시 이 역사적 흐름에 함께하였다. 그러나 분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왔고, 냉전의 최전선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적대와 갈등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를 향한 민족적 감정을 분출하면서도 동시에 '부국강병'의 경쟁

63) 연합연방제에 대해서는 김은진, 『남북 연합연방제 통일론』 (서울: 리아트코리아, 2015).

64)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변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평화와 변영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을 강제당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고, 냉전도 막을 내렸다. 동서독과는 다르게 냉전의 붕괴와 함께 분단이 해소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는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민족'보다는 '탈민족'의 가치와 지구화의 이름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남한은 민족적 가치관과 멀어졌고, 북한 역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시장의 유입 및 강고했던 집단주의의 약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남북 모두 민족적 가치에 중심을 둔 '통일'에서 멀어져갔다. 특히, 남한은 개인의 자유와 경쟁이 강화되면서 집단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데로부터 멀어져갔고, 따라서 통일은 먼 미래의 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국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에게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⁵⁾ 북한 역시 김정은 세대 혹은 혁명의 3세대, 4세대는 민족적 가치보다는 당장의 경제발전을 통한 물질적 부의 확대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 소비 욕구의 강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김정은 시대의 '국가'의 부국강병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제일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남북한 사회의 변화는 민족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담론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출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민족적 가치가

6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과 남한(국가)과는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인에는 통일이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약 28%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남한(국가)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약 54%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통일에 대한 국가적인 목표와 개인적인 필요성 간의 괴리가 상당함을 말해주고 있다. 김범수 외, 『2023 통일의식조사』, 44쪽.

통일 문제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질적으로 남북의 통일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가치만을 앞세우는 담론은 효용성을 다 해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통일은 오히려 보편주의적 가치의 실현 혹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문제의 해결이라는 창의적인 상상력이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와 처지가 다르지만, 과거 키프로스의 통일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의 하나는 결국 현재의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삶의 현상을 변경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남)키프로스 주민들의 반발이었다.⁶⁶⁾ 단순히 키프로스의 '통일'에 대한 키프로스 민족주의만으로는 실제 통일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남과 북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물질적 삶의 향상, 정의와 연대, 평화와 공존 등의 보편주의적 가치가 결합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요원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한 모두에게 '민족주의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북한의 '두 개 국가론'에 담긴 의미에 대한 해석: 김정은의 '선 건설'의 부국강병론

이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선언은 지금까지의 민족/민족주의에 기댄 '통일론'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새로운 통일의 방도와 길을 찾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이 지금 당장 새로운 통일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통일을 책상의 서랍 속에 넣어버리고 당분간은 더 이상 꺼내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서, 북한의 이번 선언에 대한 배경과 그 이

⁶⁶⁾ 키프로스의 국민투표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김연철, 『협상의 전략』 (서울: 휴머니스트, 2016), 15장.

유를 살펴보았지만, 앞으로의 그 의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북한의 선언에 대해 과거 동-서독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워드거 프랑크가 38North에 기고한 글에 근거하여, 북한의 선언은 첫째, 그간의 김일성-김정일의 통일정책의 실패, 둘째, 민족담론에 대한 포기 및 남한 주도의 민족담론에 헤게모니를 상실하는 결과, 셋째, 결국 통일 문제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란 점이다.⁶⁷⁾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 국가로의 분리를 넘어 '두 개의 민족'을 공식화하고 자본주의 서독민족과 사회주의 동독민족으로의 분리, 동-서독의 분리에 따른 내독 관계에서의 분리⁶⁸⁾를 추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의 북한의 태도는 '두 개의 국가'로의 분리를 공식화한 것에 머무르고 있다. 즉, 여전히 '하나의 민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⁶⁹⁾ 더욱이 동-서독은 '두 개의 민족' 혹은 '두 개의 국가'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평화적인 공존은 더욱 강화해 왔다.⁷⁰⁾ 이와 비교하면, 현재의 남북

67) FRANK, RUEDIGER, "North Korea's New Unification Policy: Implications and Pitfalls," <<https://www.38north.org/2024/01/north-koreas-new-unification-policy-implications-and-pitfalls>>.

68) 서독의 경우, 내독부를 통한 '하나의 독일'에 근거한 대동독 정책을, 동독의 경우, 외무성을 통한 두 개의 독일에 근거한 대서독 정책을 추진하였다.

69)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김일성 민족'의 등장 등은 앞으로 민족 분리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점이기는 하다. 또한, 북한의 민족주의 논리가 '북한'지역만의 논리로 협소화되고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는 것도 향후 두 민족으로의 분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통일문제연구』 53호 (2010년 상반기호), 27~28쪽; 관련하여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동족관계의 부정, 동족개념의 제거는 남북의 관계 즉, '동족'이라는 것에 바탕을 둔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70) 동-서독의 교류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영철,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 (서울: 유니스토리, 2017), 8장.

은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지도 못했고, 국가보안법 등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군사적 대치는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동-서독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많지만, 지금의 선언과 조치가 동-서독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과거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1960년대의 ‘선건설’, 그리고 70년대의 ‘선평화’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게 뒤지고 있었던 경제 발전, 그리고 냉전의 한복판에서 남북의 체제 경쟁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통일보다는 당면의 경제발전에 우선적인 국가자원의 투입을 결정했고, 통일은 충분히 힘을 축적한 후에 추진하고자 했다. 이어 1970년대에는 세계적인 데탕트의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통일보다는 그러한 체제를 중심에 둔 ‘평화적인 경쟁’에 방점을 두었다.⁷¹⁾ 어느 경우이든,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민족에 대한 호명은 내부적으로 자신의 체제 정당성과 남북의 정통성 경쟁에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기표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현재의 김정은 체제가 처한 상황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다. 즉, 1990년대의 위기를 넘기면서, 그리고 김정은의 권력 승계의 시점에서 당면의 최고목표는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었고, 흐트러진 당-국가 체제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강력한 국방력의 우선적인 구축, 그리고 이에 바탕한 국제적인 협상, 남북관계의 회복을 꾀했던 것이다. 초기 김정은의 발언에서 ‘통일’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의 선언 이후,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 변화 역시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공존과 더불어 최고의 목표인 경제의 발전을 위한 주변 환경의 마련, 특히는 미국과의 대담판을 통한 환

71) 남북의 상호인정과 본격적인 체제경쟁의 선언은 1973년의 소위 ‘6.23 선언’이다.

경의 마련에 있었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당장의 목표와 진전시켜야 할 과제가 아니라 서울과 워싱턴을 디딤돌로 자신들의 경제발전을 보장받는 것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김정은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목표는 바로 인민생활 향상, 즉 경제발전이며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이를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통일' 문제는 아예 책상 서랍에 넣어버리고, 당면의 경제발전에 모든 국가적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김정은식의 부국강병의 전략 속에서 '통일'의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일성이 제시한 1955년의 2대 전략적 과제의 폐기이고, 김일성-김정일 시대까지 이어져 온 '민족/민족주의적 통일'에 대한 철회이자, 두 개 국가에 기초한 남북관계의 재정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냉전의 국제질서, 2018년 이후의 경험, 북한 내부의 달라진 분위기 등이 과거와의 단절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주의 담론 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내부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민족과 애국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V. 나가며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의 통일론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민족 중심의 통일론이 그 시대적 한계를 다했음을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함께 형성된 '남북의 특수관계론'도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현 정권에서 대북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욱이는 정권의 성향을 떠나 우리로서는 북한관 ‘두 개 국가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렵다.

객관적 현실을 놓고 본다면,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국가 vs 국가’의 관계로 놓고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의 법-제도적 현실을 놓고 보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장, 헌법의 영토조항 및 국가보안법 등이 문제로 제기될 것이며, 이를 수정하는 것은 남한 정치 및 국민적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자세를 지속하기도 어렵다. 남북의 문제는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구성과 재구성이 반복되는 것이며, 지난 시기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정권의 정책 지향과 주변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선언과 조치는 풀어야 할 아주 큰 숙제를 던져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에 바탕하여 우리의 의지와 희망을 결합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의 선언과 조치가 ‘두 개의 국가’ 그리고 교전 국가로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당장의 평화 유지와 공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숙제임을 보여준다. 당장의 통일이 어렵다면, 통일의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으로서 평화는 그 어떤 숙제보다 더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 중흥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거 박정희 시대의 ‘선건설’의 전략 속에서도 ‘민족 중흥의 길’은 줄기차게 주장되었다. 북한 역시 두 개 국가로의 분리를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민족 중흥의 길’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남한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발언에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음을 면밀

히 관찰해야 한다. 즉, <흡수통일>과 <체제붕괴>를 노리는 남한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의 불가를 선언하고 있고, 정전 상태의 '교전 국가'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변한다면, 언제든 다시금 남북의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열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서로의 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는 주장과⁷²⁾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⁷³⁾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은 역으로 자신들은 경제건설에 집중할 것이며, 남북이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한 도발, 공격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슬며시 끼어놓음으로써, 북한으로서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의지와 요구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물론, 미래의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평화적인 공존과 번영, 나아가서는 통일의 탄탄한 길을 놓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구조적 요인들을 잘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과학적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당장은 남북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힘들게 만들어 온 평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평화가 없다면, 그 어떤 다른 처방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 접수: 2024년 5월 2일 / 심사: 2024년 5월 29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72) 김여정,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2022.8.18.)」 『로동신문』 2022년 8월 19일.

73) 김정은,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 2024.1.15)」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참고문헌】

- 강철구, 『역사와 이데올로기』, 서울: 용의숲, 2006.
-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선전자료집』,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95.
- 김기연, 『북한 사회 변화의 동력, 장마당 세대』, 서울: 패러다임북, 2023.
- 김범수 외,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
-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파주: 아카넷, 2019.
- 김연철, 『협상의 전략』, 서울: 휴머니스트, 2016.
- 김은진, 『남북 연합연방제 통일론』, 서울: 리아트코리아, 2015.
- 이계환, 「북한의 민족론과 민족주의」 정수일 『21세기 민족주의』, 서울: 통일뉴스, 2010.
- 정영철 외,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정영철,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 서울: 유니스토리, 2017.
- 정영철 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세계정치 34』, 서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21.
-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파주: 돌베개, 2015.
- 아자 카트·알레산더 야곱슨, 유나영 옮김, 『민족』, 파주: 교유서가, 2020.
- 찰스 암스트롱, 김연철·이정우 옮김, 『북조선 탄생』, 파주: 서해문집, 2006.
- Hobsbawm, Eric J.,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 강혜석, 『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학위논문, 2017.
- 강혜석, 「북한 민족주의론의 원형과 정치적 동학(1945-1985)」 『북한연구학회보』 21권 2호, 2017, 119~154쪽.
- 강혜석,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 『다문화사회연구』 10권 1호, 2017, 65~96쪽.
-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24권 1호, 2021, 139~177쪽.

- 김종진, 「1950년대 북한 민족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태우, 「북한의 스탈린 민족 이론 수용과 이탈 과정」 『역사와 현실』 2002년 6월호, 256~285쪽.
- 박소혜,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와 전략』 22권 3호, 2022, 69~100쪽.
- 이우영·최순미, 「한국인의 북한이미지」 『현대북한연구』 22권 2호, 2019, 87~121쪽.
- 이지순, 「김정은시대 국가주의와 문화적 포퍼먼스」 『동아시아문화연구』 81집, 2020, 119~142쪽.
- 전미영, 「김정은시대 북한 민족주의: 담론·문화·정책」 『북한학보』 43집 1호, 2018, 218~249쪽.
- 전영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국가안보와 전략』 21권 2호, 2021, 161~188쪽.
- 정고은, 「북한 애국주의의 기원과 변용」,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현대북한연구』 4권 2호, 2001, 225~265쪽.
- 정영철,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민족개념의 정립과 민족주의의 재평가」 『문화과 사회』 16권 4호, 2003, 1,668~1,690쪽.
-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통일문제연구』 53호, 2010년 상반기호, 1~39쪽.
- 정영철,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문화정책논총』 31권 2호, 2017, 289~305쪽.
- 정영철, 「분단과 탈분단, 그리고 통일의 상상력 넓히기」 『북한학연구』 15권 1호, 2019, 37~64쪽.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23권 1호, 2020, 8~38쪽.
- 채경희, 「북한 장마당 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권 1호, 2019, 313~322쪽.
- 콜라코프스키, 「마르크스철학과 민족의 실체」, 임지현 옮김, 『민족문제와 맑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 Han, Hong-gu, "Wounded Nationalism: The Minsaengdan Incident and Kim Il Sung in Eastern Manchuri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 Stalin,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서울: 나라사랑, 1989.

- 김일성,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1936.2.2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조선의 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1943.9.15.)」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과와 과업에 관한 테제(1955.4)」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신년사(1991)」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91.8.1.)」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1960.10.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1986.1.3.)」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1994.10.16.)」 『김정일선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김정일선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세지」 『로동신문』 2024년 1월 3일.
- 김여정,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 『로동신문』 2022년 8월 19일.
- 김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2012년 4월 15일 연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 김정은,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2019.4.12.)」 『로동신문』 2019년 4월 13일.
- 김정은,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김정은,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 2024.1.15)」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로동신문,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승리」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정식 해체」 『조선중앙통신』 2024년 3월 24일.

조선중앙통신, 「최섉희 외무상 대적부문 일군들과 협의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1일.

정영철, 「북한의 통치사상, 권력구조」 『북한 제8차 당대회 평가 및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2021년 1월 14일.

정영철, 「남북 관계의 재개념화: 남북 특수관계론과 '통일역량' 강화의 요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 2023년 9월 18일.

정혜정, 「김정은 “통일 개념 자체를 제거” 지시에…北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탑’ 철거」 『중앙일보』 2024년 1월 2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103#home>>.

FRANK, RUEDIGER, “North Korea’s New Unification Policy: Implications and Pitfalls,” <<https://www.38north.org/2024/01/north-koreas-new-unification-policy-implications-and-pitfalls>>.

6.15 공동선언, 2000.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1.

North Korea's 'Two-State Theory'
: Centering on the Changing Concept of Nation/Nationalism

Chung, YoungChul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ogang University)

Abstract

At the end of last year, North Korea declared the separation of the two states — North and South Korea — through a plenary session of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This year,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ent beyond the separation of the two countries and declared that North and South Korea are belligerents. It also demolished the 'Three Charter of Fatherland Reunification' tower, calling it an 'ugly dog', which had been previously considered a golden statue. North Korea's actions mark the abandonment of its nation-centered unification theory, as well as the unification precepts of the Kim Il-sung-Kim Jong-il era.

Such actions of North Korea are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2018 have not yielded any results, but have instead led to a stalemate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a deterio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However, upon further analysis, it is evident that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North Korea's actions are rooted in a shift in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the concept of a 'nation' which used to encompass the entire Korean people, shifted to the concept of a 'state' with the emergence of the "Kim Il Sung nation" (following the death of Kim Il Sung), which later evolved into the 'state-first'

ideology in the Kim Jong Un era.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a 'nation' within North Korea implies the unification of the two meanings of 'nation' and 'state', an attempt that seems to have brought the idea of 'state' to the forefront.

It is believed that North Korea's move is aimed at scrapping the old ver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organizing them into a new paradigm. For the time being, it is expected that the 'unification' agenda will be pushed back in priority and all efforts will be focused on economic re-construction. This is reminiscent of the 'pre-construction' theory of Park Chung-hee. We must begin by ensuring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o not deteriorate further and that the peace we have worked so hard to build does not crumble.

Keywords: North Korea, Kim, Jong-un, Nation, Nationalism, State

정영철 (Chung, YoungChul)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정은 시대 기억의 정치”(2023), “구조적 종속과 자율성의 한계: 남북관계에 대한 고찰”(2022)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공저, 20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공저, 2019) 등이 있다.

기획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문요약

바이든 정부는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관계 차원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한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관리 문제로, 미국의 일관된 정책 목표는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 봉쇄였고 그 주요한 수단은 동맹이었다. 둘째, 미국의 북한-한반도 문제는 지역과 지구적 수준에서 그리고 지정학, 핵전략, 경제, 불량국가의 이념 등의 변수에 의해 규정되며 이들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 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고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순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연장이라 아닌, 그 어떤 국가도 국제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는 패권 불가능의 국제무질서/대공위시대의 도래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의지가 없는 미

국의 '적대적 방치'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이 지닌 동맹의 논리가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한편 한국의 인태전략 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일정한 약화가 불가피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적대적 방치'의 대안으로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이 진행하고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중심의 '평화공존'의 대항담론 기획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거래적 방치'의 전망을 검토한다.

주제어: 미국의 대 북한-한반도 정책, 이중 봉쇄, 대공위시대, 안보 딜레마, 한미동맹

I. 서론: 미국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의 초점은 북핵 문제였다. 출범 초기 바이든(Joe Biden) 정부는 전임 트럼프(Donald Trump)와 오바마(Barack Obama) 정부를 포함하여 전임 네 개의 행정부가 모두 북핵 문제의 해결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제3의 '잘 조율되고(calibrated) 실용적인 대북 접근'을 천명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 등의 유인을 제공하여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 기대 혹은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¹⁾

1)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는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 형태로 처음 공개되었다. The White House, "Press Gaggle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board Air Force One En Route Philadelphia, PA" (April 30,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1/04/30/press-gaggle-by-press-secretary-jen-psaki-a-board-air-force-one-en-route-philadelphia-pa/>>; John Hudson and Ellen Nakashima, "Biden Administration Forges New Path on North Korea Crisis in Wake of Trump

하지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힘에 의한 대응으로, 즉, ‘편승 전략’에서 ‘균형 전략’으로 선회했다. 북한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다극화와 신냉전으로 규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그간의 자발적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 유예를 깨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에서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선제적 핵 사용을 입법화하고 한·미(일)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배치 등에 군사력 시위로 맞서기 시작했다.²⁾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경고가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제기되었다.³⁾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2024년 위협분석 보고서는

and Obama Failures” *The Washington Post* (April 30,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biden-administration-forges-new-path-on-north-korea-crisis-in-wake-of-trump-and-obama-failures/2021/04/30/c8bef4f2-a9a9-11eb-b166-174b63ea6007_story.html>.

- 2)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미 정책을 김정은 시기 북한 국가전략 전반의 변화의 맥락에서 다루는 연구들은, 안경모,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한국정치연구』 제32집 1호 (2023), 165~195쪽; 이관세,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 박정진 외,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파주: 한울, 2024), 382~433쪽; 황지환,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77~110쪽. 북한의 선제적 핵사용 교리와 그 입법화에 대해서는 전봉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8호 (2022).
- 3) 한반도 핵억지의 안정성에 대한, 미국 민간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Adam Mount and Mirra Rapp-Hooper, “Nuclea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rvival* vol. 62, no. 1 (2020), pp.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에 이어 대량살상무기 증강을 통해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국가 수준에서의 네 번째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북한을 비롯한 이들 ‘적대 국가들(adversaries)의 오해’라는 단서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 상황을 인정한다.

종종 외국의 침략이나 확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행동은 적대 국가들에게 미국이 자신들을 봉쇄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오해는 확전 관리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⁴⁾

정치권 일각에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 전반이 실패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23년 10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의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롬니(Mitt Romney)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샤프츠(Brian Schatz) 상원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더 이상 도외시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위원장 밴 홀런(Christopher Van Hollen) 상원의원 역시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서 언론(VOA)이 논평을 요청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의 답은 없었다고 한다.⁵⁾

정책 환경은 더욱 악화하는 데도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기초는 변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

39-46.

4)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4), p. 5.

5) 이조은, 「미 상원의원들,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 실패...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미국의 소리(VOA)』 (2023년 10월 6일), <<https://www.voakorea.com/a/7298808.html>>.

을 제1의 교전 국가로 규정하며 기존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서 남북관계와 민족·통일관에 기반한 용어와 법제 및 기구들의 전면적 폐지를 명령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전쟁으로 확대되면 대한민국의 궤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위협했다.⁶⁾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4월 말로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⁷⁾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이 붕괴하는데도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제재에 대한 강조는 이어졌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미의 협상 채널은 완전히 단절되었는데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역사적 성취에 대한 선전은 넘쳐 나지만 그에 따른 북러 밀착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에 대한 해법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북한과의 군축 논의의 가능성이나 위협 감축을 위한 중간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⁸⁾

6)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한 국내외의 논쟁을 초래했다. 국내의 논쟁은 그 목적이 체제 보존인가 무력 통일인가에 집중되었고, 미국의 논쟁은 전쟁 위기의 정도에 관해서였다. 전자에 관한 간단한 정리는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322호: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5일; 후자의 논쟁을 촉발한 것은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u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January 11, 2024),

<<https://www.38north.org/2024/01/is-kim-jong-un-preparing-for-war/>>.

7) Timothy W Martin, “North Korea Will Soon Be Able to Flout Sanctions More Easily After Russian opposition, the United Nations panel goes dark, removing the global monitor on Pyongyang’s rules-busting behavior”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30, 2024), <<https://www.wsj.com/world/asia/north-korea-will-soon-be-able-to-flout-sanctions-more-easily-27595821>>.

8) 2024년 3월 미 국무부의 ‘대북고위관리’ 정박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The Impossible State)에 출연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대북 외교의 복원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외교적 언사’를 구사했지만, 확장억제와 동맹 결집의 성과에 대해서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등 역사적 성취의 ‘행복감(glow)’에 사로잡혀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CSIS,

왜 그런가?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미 정보 당국이 강조하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논문의 입론은, 역설적이지만, 미국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관계 차원의 대북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North Korean Question)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한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관리 문제이고, 한반도 문제(Korean Peninsula Question)는 다시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안보, 경제, 이념 등의 변수에 의해 규정되며 이들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왔다.⁹⁾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은 이정철이 지적하듯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를 기본으로 하였다.¹⁰⁾ 보다 거시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면, 차태서와 진재성이 강조하듯 북한은 서구의 문명/국제질서의 안티테제로서 야만이나 반주권국가, 비자유주의 불량(깡패)국가로 자리매김

Diplomacy or Crisis with DPRK in 2024? (March 22, 2024),

<<https://www.csis.org/podcasts/impossible-state/diplomacy-or-crisis-dprk-2024>>; 박승혁, 「국무부 군축 차관, 북한과 군축 논의 가능성에 “거부하지 않을 것”」 『미국의 소리(VOA)』 (2022년 10월 29일), <<https://www.voakorea.com/a/6810179.html>>; 김환용, 「미 NSC 당국자 “한반도 비핵화 향한 ‘중간 조치’ 고려할 수 있어”」 『미국의 소리(VOA)』 (2024년 3월 5일), <<https://www.voakorea.com/a/7512598.html>>.

9) 이해정, 「미국패권과 한반도 분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서울: 선인, 2016), 15~42쪽; 이해정, 「한반도 국제관계, 1972-2022: 시공간 복합체 시론」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1호 (2022), 1~47쪽.
10) 이정철,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한국정치연구』 제25집 1호 (2016), 221~245쪽.

해 왔다.¹¹⁾ 이에 따라, 미국의 실제 정책과 주류 담론은 북한의 예외적인 비합리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국제관계의 행위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고, 북한의 입장에서 핵 개발은 대미 관계에서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존재론적 인정투쟁의 성격을 띤다.¹²⁾

한국전쟁 기간 북진의 '전략적 실수'를 저지른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가장 일관된 정책은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 봉쇄'였고, 최우선적 관심 혹은 이익은 미국의 영향력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수단은 주한미군(의 영구한 주둔), 한미동맹이라는 (협력과 개입의) 기제였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나 2018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과정은 한반도의 정전/분단체제 및 한미동맹의 기반을 뒤흔들었다. 이런 경우, 구갑우의 한반도 평화-한미동맹-비핵화의 트릴레마 개념이 잘 포착하듯¹³⁾,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핵심적 과제이자 장애는 한미동맹의 전환 혹은 조정이었고, 미국의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최우선적 관심과 우

-
- 11) 전재성,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핵체제를 넘어: 불완전 주권성의 전개와 극복」,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1호 (2023), 43~80쪽; 전재성, 「북미관계의 권역이론적 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233~280쪽; 차태서,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 정책 패러다임 변동」, 『국제관계연구』 제28권 1호 (2023), 5~43쪽.
- 12)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1 (2000), pp. 111~132; 이해정, 「북한 예외주의의 대 현실주의」, 『창작과 비평』 제47권 3호 (2019), 406~434쪽;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 북한적 핵 개발의 이유와 김정은 정권의 핵 담론」, 『동향과 전망』 통권 99권 (2017), 83~121쪽; 댄가즌·구갑우, 「조선의 변화하는 핵 서사: 미국과의 언어게임을 통해 표현되는 인정투쟁」,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157~188쪽; 은용수, 「존재론적 안보론과 북미관계: 이론과 현상, 새롭게 보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111~155쪽; 윤성원, 「미국 대북담론 구조 연구: 대통령 화행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189~232쪽.
- 13) 구갑우,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2호 (2018), 137~169쪽.

려는 평화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기제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전쟁 위협에서 정상외교로 돌변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최대의 비판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인 일본과의 조율의 결여, 한미동맹의 약화였다.¹⁴⁾

한반도 문제에서 동맹을 통한 미국의 영구한 영향력 확보란 일관된 목적과 한반도 문제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입론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아래 2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성격을 미국의 총체적인 군사, 경제, 이념적 쇠퇴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의지가 없는 ‘적대적 방치’로 규정하고,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를 논한다. 3장에서는 ‘적대적 방치’의 대안으로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Frank Aum)이 진행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대항담론 기획과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검토한다. 전자가 미국 내의 비주류 정책 담론 수준의 대안으로 그 초점이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 한미동맹의 군사적 비대칭성에 따른 억지의 안정성에 대한 비판과 군비통제의 제안이라면, 후자는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현실적, 정치적 대안이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의 대북 정책은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밀리겠지만 그 성격은 독재와 민주주의의 이념적 대결 및 동맹을 중심으로 패권의 재건을 모색하는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협상은 물론 한미동맹의 관리도 거래적 성격이 강화되는 ‘거래적 방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14) 이해정, 「평화체제 관련 북·미·중 3장의 입장: 미국의 입장」, 서보혁 외,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9), 54-90쪽.

II.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1. ‘전략적 인내 2.0’인가?

바이든 정부의 ‘잘 조율된 실용적’ 대북 정책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grand bargain)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후자의 연장인 ‘전략적 인내 2.0’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¹⁵⁾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그 어떤 북·미 간 대화 채널도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오바마 정부처럼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서 외교에도 열려 있다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¹⁶⁾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분명 트럼프 정부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깝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잘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대북 협상 유무와 그 틀을 기준으로 ‘전략적 인내 2.0’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 파악을 돕기보다는 호도하는 측면이 크다. 우선 ‘전략적 인내’라는 명명 자체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행태가 변화된 다음에야 외교를 하겠다는 개입의 전제 조건,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대북 압박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한편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¹⁷⁾ ‘전략적 인내 2.0’은 오바마 정부의 실패보다 훨씬 심각한

15) Alexander Ward, Lara Seligman and Matt Berg, “Strategic Patience 2.0” *Politico* (October 4, 2022),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national-security-daily/2022/10/04/strategic-patience-2-0-00060273>>; 이인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30권 1호 (2023), 113~148쪽.

16) Changsop Pyon, “Strategic Patience or Back to Engagement? Obama’s Dilemma on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 7, no. 2 (2011), pp. 73-81.

17) Jong Kun Choi, “The Perils of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4 (2015), pp. 57-72.

바이든 정부의 실패를 희석하고, 그 차이를 만들어 낸 한반도-지역-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의 이념적 틀 등 대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오바마 정부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트럼프의 집권으로 이어진 주요한 원인인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대와 정치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다.¹⁸⁾ 하지만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었다. 또한 오바마의 위기는 코로나19와 경제-기후위기의 착종,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사망으로 불거진 인종주의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미중의 소위 '전략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의 전쟁 등 바이든 정부가 처한 '탈단극'의 '혼종위기'와 비할 바가 아니다.¹⁹⁾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역사적 비교의 기준은, 바이든 정부 자신의 명문화에 기초하더라도, 단순히 대북 협상의 틀이 아니라 탈냉전기의 클린턴(Bill Clinton), 부시(George W. Bush), 오바마, 트럼프 네 개 전임 정부 모두의 한반도 비핵화의 실패여야 한다. 애초 바이든 정부가 '잘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소개할 때 그 구체적 명문화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전임 네 개 행정부의 노력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은 일팔타결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18) 이해정,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파주: 한울, 2017), 185~261쪽.

19) 차태서, 『30년의 위기: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질서』(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4); 이해정, 「혼종위기의 세계와 미국(迷國)」 『창작과 비평』 제52권 제1호 (2024), 56~69쪽.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해외 배치 군대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것이다.²⁰⁾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하노이회담 결렬의 핵심 쟁점이었던 제재 해제가 아닌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거는 ‘강대강, 선대선’의 조건부 대결로 선회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무효화 하였지만, 바이든 정부 2년 차인 2022년 봄에서야 실제 ICBM 발사를 감행했고 그 이후 ‘강대강’의 정면 대결을 선언하며 선제적 핵무기 사용 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출범 당시에 이미, 비록 외교에 열려 있다고는 했음에도 북한이 내건 협상의 조건을 맞출 새로운 제안과 타협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이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정도 없는 ‘3무 정책’이다.²¹⁾

애초부터 실질적인 목적은 미국과 동맹, 미군의 안보 증진에 있었고 정책 협의의 대상은 동맹이었다. 북한이 군사력을 증가시킬수록, 동맹과의 협의는 강화되고 북미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멀어져 갔다. 즉,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의 실패가 아니라, 적어도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있었던 북한의 정책 전환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혹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재와 억지, 그리고 동맹 강화의 일방적인 정책을 지속한 데 있다.

²⁰⁾ The White House, “Press Gaggle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board Air Force One En Route Philadelphia, PA” (April 30, 2021).

²¹⁾ 이혜정,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김상기 외,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2), 81~130쪽.

2. ‘적대적 방치(Adversarial Neglect)’

본고는 ‘적대적 방치’가 ‘전략적 인내 2.0’보다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원래 의도와 북한에 대한 압박의 기초,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실패를 잘 포착해 내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복원이 최우선적 과제인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비확산체제(NPT)의 시효를 무기한으로 영구화(1995년)하는 과제를 배경으로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나서 제네바 합의(1994년)를 도출했던 클린턴 정부나 적어도 ‘핵 없는 세상’의 목표를 지구적인 핵 규범의 수사로 견지했던 오바마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핵군축 레짐을 깨고 핵군비 증강에 나선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초를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하노이 노딜 이후의 교착을 타개할 적극적인 대북 협상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반면에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경쟁에 동원할 의지는 분명했다. 협상/관여가 없는 대북 정책의 기초는 기존의 대북 압박,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이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적대 세력(adversaries)’의 일원으로 보고 기존의 제재 등 압박을 계속한 점은 분명하다. 바이든 정부 시기 미 정보 당국은 국가적 수준과 초국가적 수준의 두 가지 범주로 지구적 위협을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4대 위협국가’로 등재되어 있다.²²⁾ 미 정보 당국은 한반도 평화과정이 진행 중일 때도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았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019년 1월의 위협분석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 등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조건으로 하는 부분적

²²⁾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1), p. 4.

비핵화의 의지는 있지만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²³⁾ 바이든 정부가 ‘잘 조율된 실용적’ 대북 정책을 소개하기 직전인 2021년 4월 9일에 발표된 위협분석 보고서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부의 개입을 억지하는 궁극적 기제로 보고 있고, 현재 수준의 압박으로 그 기조는 “아마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²⁴⁾

북한이 핵 군비를 강화하는 목적은 2022년 이후 세 가지, 즉, 외부 개입의 억지, 재래식 전력 열세의 상쇄, 그리고 정치적 강압으로 정리되고 있다.²⁵⁾ 북한이 2022년에 ICBM 발사를 재개하고 선제 핵 사용 교리를 법제화한 이후,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는 더욱 강화되었다. 2023년 2월의 위협분석 보고서는 김정은이 정권 유지의 “궁극적 담보(the ultimate guarantor)”로 보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almost certain)”하다고 지적했다.²⁶⁾ 2024년 2월의 보고서는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거의 확실하게” 없다는 판단을 반복하면서,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서 핵 보유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²⁷⁾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24년 위협분석 보고서는 서문에서 간접적이지만 한반도에서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와 관련한 구체적 분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다. ICBM 발사

²³⁾ Coats, Daniel R,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2019), p. 27.

²⁴⁾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1), p. 4.

²⁵⁾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2), p. 4.

²⁶⁾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3), p. 5.

²⁷⁾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4), p. 21.

재개뿐 아니라 2021년 1월 천명한 무기 현대화 계획에 따른,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고체연료, 잠수함 발사, 초음속활강비행체 등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한미일의 결속에 대해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말 김정은은 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대표단과 회담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해방 순방에 나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회담 이후, 북한은 아마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양보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수품을 운송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한·미·일 삼각 협력의 강화에 대응하여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전쟁 위협의 수사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미사일 발사와 군사력 시위를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의 행동 변화를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맞서는 노력의 일환이다.²⁸⁾

북한은 미국의 분명한 위협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적 정책 대응의 대상은 전혀 아니었다.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국무부나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고위 관리가 아니라 백악관 대변인에 의해 발표된 것부터가 북한 문제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관리의 급도 낮아졌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비건(Stephen Biegun)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총괄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건의 후임으로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냈고 싱가포르 실무협상을 준비했던 성김(Sung Y. Kim)이 동아태 차관보 수준에서 '대북특별대사'로 임명되었고, 2023년 성김의 은퇴 이후

²⁸⁾ Ibid, pp. 21-22.

에는 현재 국무부 부차관보급인 정박(Jung H. Pak)이 ‘대북고위관리’를 맡고 있다.²⁹⁾

북한 문제의 정책적 후순위는 바이든 정부의 전략문건에서 보다 극명히 드러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트럼프의 대선 불복과 의사당 난입사태 등의 충격 속에서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통상 집권 2년 차에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3월 초에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의 위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탈냉전 단극 시대의 종언, 전복적 기술의 도전 등에 대응해서 산업정책과 동맹을 중심으로 미국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다.³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표가 그해 10월로 연기된 국가안보전략도 국제환경의 특징을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경쟁과 기술 발전의 전복적 효과,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초국적 도전이 착종된 것으로 보고, 미국이 대내적으로는 산업정책,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파트너들의 연합을 통해서 리더십을 복원할 것을 천명했다. 2022년 10월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등 대러 협력을 강화하고 핵 무력의 법제화 등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강대강’의 정면 대결을 분명히 한 이후였다. 하지만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인태지역 전략 부분에서 단 한 문장뿐이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

²⁹⁾ 김동현·김효정·김지연, 「한미일, 18일 서울서 북핵대표 협의...美 대표 교체 뒤 첫 개최(종합)」 『연합뉴스』 (2024년 1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118851504>>.

³⁰⁾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2021).

해 나갈 것이다.”³¹⁾

3. 국제무질서와 북한 문제의 재구성: 동맹의 논리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정책적 후순위로 밀린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다양하고 엄중한 지정학적, 초국적 도전에 있다. 탈냉전의 단극 구조는 깨어졌고 미국의 중산층은 붕괴되었으며, 트럼프의 대선 불복과 의사당 난입사태가 보여주듯 미국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권력 교체라는 기본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내부적으로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정치경제적 위기, 외부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가자 전쟁은 미국의 친이스라엘 일변도 중동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서구와 중러, 글로벌 사우스의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재의 국제무질서는 단순히 탈냉전 단극시대의 종언이 아니라 이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의 자본주의-제국주의 질서, 그리고 기후위기를 기준으로 보면, 인류문명의 위기가 착종된, 따라서 그 어떤 국가도 국제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패권 부재/불가능의 ‘혼종 위기’이다.³²⁾

³¹⁾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22), p. 38.

³²⁾ 차태서, 『30년의 위기』, 이혜정, 「혼종위기의 세계의 미국」;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가장 시사적이고 대표적인 연구로는 자유주의에 특화된 저널의 특집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도전” 권두 논문과 지구적 수준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론화 혹은 선전하던 대표적인 자유주의 이론가의 최근 입장을 참고하라. David A. Lake, Lisa L. Martin, and Thomas Risse, “Challenges to the Liberal Order: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no. 2 (2021), pp. 225-257; G. John Ikenberry,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Competition to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 문제와 연관해서 보면, 현재 한반도의 위기는 북핵과 안보 딜레마를 넘어서, 기존의 미소 간 ‘공포의 균형’을 떠받들고 있던 세력균형과 기술적, 제도적, 규범적 장치들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핵 시대’의 위기이며, 미국의 중·러와의 지정학적 경쟁의 위기이다. 전자에 대해서 미국,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 정부와 기존의 주류 외교 안보 엘리트들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를 후자의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핵 시대,’ 혹은 ‘제3의 핵 시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힘의 차원에서 중국의 핵 군비 증강으로 미·러 양자 경쟁보다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한 미·중·러 삼자 경쟁이 시작되었고,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새로운 핵 국가의 등장으로 이들 사이의 그리고 이들과 기존 핵 국가들 사이의 핵 역지가 과연 작동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센서와 인공지능 등의 발전이 공격과 방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 핵 역지의 안정성을 침식하고 있다. 한편 규범과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비확산보다 강력한 핵무기금지조약의 규범이 탄생한 반면, 기존의 미소 간의 핵 통제 레짐은 거의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다.³³⁾

냉전기 미소 간 역지의 한 축이었던 ABM 조약은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명분으로 탈퇴하면서 붕괴되었고, 이후 미국의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때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소극적 안전보장’의 제공을 거부

Shape Glob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vol. 100, no. 1 (2024), pp. 121-138.

³³⁾ Vipin Narang and Scott D. Sagan, eds., *The Fragile Balance of Terror: Deterrence in the New Nuclear Ag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22); Uri Friedman, “A Third Nuclear Age Is Upon Us: North Korea’s moves to develop tactical nuclear weapons show that the slope toward a new era is steepening” *The Atlantic* (August 2, 2021),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2/08/north-korea-kim-jong-un-third-nuclear-weapon-age/670993/>>.

한 채 핵을 동원한 예방전쟁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소위 ‘제2의 북핵 위기’의 배경이기도 했다.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는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과정을 좌초시키는 한편 냉전 종언의 상징이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지구적 핵 규범도 파괴하였다. 일 년 후 2020년 2월에는 핵태세보고서를 통해서 중·러와의 본격적인 핵 군비 경쟁을 천명했다. 바이든 자신은 오바마 정부 임기 말 부통령으로서 핵의 선제 불사용 원칙을 찬성하고 트럼프 정부의 핵 군비 증강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핵 군비 증강의 기초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중국의 핵 선제 불사용 협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³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고, 북한도 러시아와의 밀착을 배경으로 선제적 핵 사용 교리를 천명했다. 러시아는 2023년 초 미국과의 사이에 유일하게 남은, 2026년 만료 예정인 핵무기조약(New Start Treaty)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³⁵⁾ 푸틴과 김정은이 핵 규범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핵무기 사용과 독점 시도의 ‘원죄’를 지니고 있는 미국도 힘의 약화와 국내 정치적 양극화에 더해 최근의 핵질서 파괴의 한 주역으로서, 핵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

34) 핵 질서에 관한 부통령 바이든의 우려에 대해서는 Carnegie Endowment, “U.S. Vice President Joe Biden on Nuclear Security” (January 11, 2017), <<https://carnegieendowment.org/events/2017/01/us-vice-president-joe-biden-on-nuclear-security?lang=en>>; Reuters, “China urges largest nuclear states to negotiate a ‘no-first-use’ treaty” (February 28, 2024),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rges-un-define-roadmap-exempt-non-nuclear-states-nuclear-threat-state-2024-02-28/>>; Mitsuru Kurosawa, “Biden Administration’s Nuclear Posture Review: Analysis and Assessment”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vol. 6, no.1 (2023), pp. 312-326.

35) The Economist, “A new nuclear arms race looms It will be harder to stop than the contest of the cold war” (August, 29, 2023),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23/08/29/a-new-nuclear-arms-race-looms>>.

하지 못하고 있다.³⁶⁾ 북한과 직접 관련해서 보면, 2022년 10월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북한과의 군축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다음 날 국무부 대변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임을 강조하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³⁷⁾

북한에 대한 외교가 열려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일관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의 창을 닫고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화와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패이다. ‘적대적 방치’는 미국의 힘의 약화와 국제무질서로 인해서 북한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구조적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국제적 환경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좀 더 단순화하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패를 감수하고 확장억제의 강화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고는 바이든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 주류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전통적인 혹은 패권적인 동맹의 논리가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한다. 여기엔 동맹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소극적 혹은 부정적 논리와 동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적극적 논리가 모두 작동하고 있다. 북미 협상은 적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지체시키는 ‘2차적 효과’를 지닌다.³⁸⁾ 전쟁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협력

36) Bruce W. Jentleson, “Beyond the Rhetoric: A Globally Credible US Role for a ‘Rules-Based Order’”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6, no. 3, (2023), pp. 83-102; Kelso R. Anderson, Mark S. Bell and Chyenne Tretter, “The End of Inhibition? Why US Nonproliferation Policy Is Becoming Less Effectiv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6, no. 3 (2023), pp. 127-147.

37) 이경주, 「美 국무부 ‘대북 군축 협상론’ 일축…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 『서울신문』 (2022년 10월 30일),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2/10/30/20221030500079>>.

38)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김상기,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결국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요구를 적어도 일정하게 수용해야 하는데, 불량국가의 이념적 틀이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이나 제재 해제의 옵션을 제한한다.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안전 보장 요구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등 기존 한미동맹의 약화, 혹은 중립적으로 보자면 전환을 요구하는데, 이는 한국의 보수가 반대하는 바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정파를 떠나서 보더라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서울을 지키기 위해 과연 뉴욕이나 시애틀을 포기하겠냐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신뢰는 낮아지고, 독자적 핵무장의 옵션도 그동안의 금기에서 풀려났다.³⁹⁾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힘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패는 감수할 수 있어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떤 현상 변경과 특히 동맹의 약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동맹의 소극적 혹은 부정적 논리이다.

앞서 소개한 2023년 10월 미 상원 동아태 소위의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데 동의하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빅터 차(Victor Cha)의 다음과 같은 대답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과정을 좌초시킨 미국 주류의 동맹의 소극적 논리를 놀랍도록 솔직하게 보여준다.

그 외교의 실패에 참여했던 저도 동의합니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시절부터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해 왔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협상안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경제적 생존, 식량, 정치적 인정, 한반도 및 지역 평화 보장의 대가로 북한의 주요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해제하는 것이었고, 그 형식은 양자 또는 다자 6자 회담 등 다양했습니다. 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현대북한연구』 제26권 3호 (2023), 199~235쪽.

³⁹⁾ Andrew Yeo, “Can South Korea Trust the United Stat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6, no. 2 (2023), pp. 109-125.

지만, 이러한 기존의 협상은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협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And frankly, we’re at a loss as to what to pursue next”),**..... 회의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의 현 정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래나 그들이 진지한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 한반도에 주둔하는 우리 군대, 일본에 주둔하는 우리 군대들처럼, 우리가 포기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주요 교훈 중 하나는 협상의 방식이나 협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래가 북한이 원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강조는 필자)⁴⁰⁾

한편 ‘적대적 방치’를 추동하는 동맹의 적극적 논리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철의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틀에서 보자면, 불량국가의 이념적 규정인 핵 군축을 포함한 대북 협상의 길을 막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핵전략이 기존의 핵질서 보존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핵 군비 경쟁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면서 지정학에 핵전략이 복속 혹은 통합되었는데, 지정학 경쟁의 주요한 수단은 동맹이다. 하노이 노딜은 미국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동맹을 훼손하고 핵 규범을 약화시키는 ‘나쁜 거래’를 막은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선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자체는 여전하며, 오히려 증가할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도 커질 것이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도 종전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과정의 동력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노력하면

⁴⁰⁾ C-Span, Policy Advocates Testify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October 4, 2023), <<https://www.c-span.org/video/?530907-1/policy-advocates-testify-korean-peninsula-security>>.

서,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는 잠시 유예되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한국 대선에서 대북 강경노선과 동맹 강화, 적극적인 미국 편승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확장억제의 강화는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동맹의 ‘소극적 논리’ 또는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을 동시에 봉쇄하는 ‘이중 봉쇄’의 논리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한편, 동맹의 ‘적극적 논리’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주요한 필수적 조건이자 수단이 되었다.

미국의 과제는 어떻게 동맹의 비용과 편익 간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초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응하고 한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필수적인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북한 문제의 재구성은 한반도 안보 딜레마 등의 비용 혹은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를 감수하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랩-후퍼(Mira Rapp-Hoope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024년 3월 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세미나의 일환으로 빅터 차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의 성과로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강조하는 한편, 그 한계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핵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후자의 맥락에서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에서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간단계/조치(interim steps)’를 북한과의 대화에서 다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핵 동결과 군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등 한국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지만,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4월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

든 정부가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바꾸는 ‘중간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⁴¹⁾

Ⅲ. ‘적대적 방치’의 대안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도 아니고 정책 논쟁의 주요한 대상도 아니다. 미국의 주류 외교안보 엘리트들 사이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자 전쟁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제재와 확장억제,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의 역사적 성취와 같은 동맹 결집을 수단으로 북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적대적 방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현재 한미동맹의 대북 압박, 특히 군사적 차원의 압박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대북 강경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입장도 한미일 삼각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제기하지는 않는다.⁴²⁾

41) 서의동,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게 될 때」 『경향신문』 2024년 3월 20일,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202009025#c2b>>; 정영교, 「美 NSC 선임보좌관 “北과 비핵화 향한 ‘중간단계’ 논의 용의” [중앙일보-CSIS 포럼] 『중앙일보』 2024년 3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717#home>>; 김환용, 「한국 대통령실 “미국 북핵 협상 ‘중간단계’ 없다고 확인” 『미국의 소리(VOA)』 2024년 4월 29일, <<https://www.voakorea.com/a/7589112.html>>.

42) 일레로 트럼프 2.0의 정책 대안 연구(Project 2025)를 발표한 해리티지 재단의 설립자 풀너(Edwin Feulner)는 서울에서 개최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의 세미나에서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자리에서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적대적 방치에 대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 비주류 시각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정책 담론의 수준에서, 적대적 방치에 의한 한반도의 현 상태를 매우 불안정하고 위협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대안적 접근을 주장하는 비주류 평화 담론으로, 미국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이 진행하고 있는 평화공존 캠페인이 이를 대변하는 주요한 플랫폼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동맹을 중심으로 패권 복원을 시도하는 바이든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올해 말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변화의 전망이다.

1.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한반도에서 안보 딜레마의 유무,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대칭적 억지의 불안정성 여부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류의 전반적 찬성과 비주류 평화 담론의 비판이 충돌하는 논쟁의 '진앙지'이다. 2024년 1월 9일 미국평화연구소의 평화공존 캠페인(에세이 시리즈)을 시작하면서 프랭크 엄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고립, 군사적 억지, 경제 제재를 통한 압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 결과 한반도는 한순간의 실수로 비등점을 넘어 파국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이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워싱턴은 가시적이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안보를 개선하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북한과 모색해야 한다.⁴³⁾

곽민서, 「윤 대통령, 미 해리티지 재단 창립자 등 접견...한미동맹 발전 논의」 『연합뉴스』 2024년 5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153200001>>.

⁴³⁾ Frank Aum, "Exploring Peaceful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이러한 문제 제기는 김정은이 기존의 통일관과 남북 관계를 전복시킨 대한민국 주적론, 2국가론을 통해서 전쟁을 치를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칼린(Robert Carlin)과 헤커(Siegfried Hecker)의 1월 11일 '38 노스' 칼럼에 의해 한미 양국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이들은 1990년 이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 오던 북한이 2019년 이후 새로운 대외관계 노선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2021년 이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로 선회하여 2023년에는 마침내 '남조선 혁명전쟁'을 감수할 결심을 하여, 현재 한반도는 195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상태임에도 한·미는 억지와 북한 정권 종식의 최면에 걸려 그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⁴⁴⁾

김정은의 2국가론이 한국에서는 통일론과 대북 정책 논쟁과 함께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2국가론에 따른 북한 체제 변화의 기원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를 촉발한 반면⁴⁵⁾, 미국의 관심은 칼린과 헤커가 강조하는 김정은의 전략적 결심이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맞춰졌다.⁴⁶⁾ 이러한 관심은

and South Korea's prioritization of denuclearization above all else needs to change to fit the new reality" (January 8,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1/exploring-peaceful-coexistence-north-korea>>.

⁴⁴⁾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u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January 11, 2024), <<https://www.38north.org/2024/01/is-kim-jong-un-preparing-for-war/>>.

⁴⁵⁾ 관련 학술연구들은 이제 막 출간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9~53쪽; 이무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54~90쪽.

⁴⁶⁾ Sang-Hun Choe. "Is Kim Jong-un Really Planning an Attack 'This Time'?" *The New York Times* (January 21, 2024), <<https://www.nytimes.com/2024/01/21/world/asia/north-korea-nuclear-war.html>>; Nicholas Kristof, "As if We Didn't Have Enough to Frighten Us..." *The New York Times* (January 17, 2024), <<https://www.nytimes.com/>>

3월 램-후퍼의 ‘중간단계’ 발언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미국의 주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했다. 대표적으로 시드니 세일러(Sidney Seiler)는 4월 초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군비통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잠재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긴장완화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군사훈련과 확장억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double guessing)이다.⁴⁷⁾

램-후퍼의 ‘중간단계’는 사실 그가 바이든 정부에 입각하기 이전에 행한 한반도에서 핵 억지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의 맥락은 물론, 문제가 된 발언에서도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성과에 대한 강조 및 한반도에서 확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 채널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언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핵 동결과 군축 협상 제안이라기보다는 핵 억지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운용적 군비통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⁴⁸⁾

2024/01/17/opinion/north-korea-war.html>. ; Josh Rogin, “Yes,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war -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5, 2024),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4/01/25/north-korea-war-ukraine-gaza-russia-hamas/>>.

⁴⁷⁾ CSIS, Revisiting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Capital Cable #91, (April 4, 2024), <<https://www.csis.org/events/revisiting-us-policy-towards-north-korea-capital-cable-91>>.

⁴⁸⁾ Robert Jervis and Mira Rapp-Hooper,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on the

군축이 아닌 군비통제는 프랭크 엄의 평화공존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플랫폼에 등재된 에세이들은 내용 면에서 한미동맹의 억지 태세에 대한 비판과 제재의 틀을 벗어나는 다양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것들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의 에세이들은 한국전쟁 종식 주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운용적 군비통제를 다루고 있다. 그중 한 에세이의 저자인 마운트(Adam Mount)는 램-후퍼와 공저 작업을 하기도 했었다. 마운트와 램-후퍼는 2020년의 공저 논문에서 한미동맹과 북한의 군사력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핵무기를 조기에 사용할 구조적 유인을 지니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의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군사훈련과 대비태세, 중국을 통한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일관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⁴⁹⁾

현재 램-후퍼는 바이든 정부에서 인태전략 전반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관리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한때 비판했었던 한국의 참수 작전과 한미동맹의 억지 태세를 승인하고 있고, 마운트는 평화공존 캠페인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는 능력과 공격 시 군대를 통제하는 능력 모두에서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위기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할 유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도로 비대칭적인 억제 관계에서 안정성은 본질적으로 낮다..... 한미동맹은 김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선제 타격과 미사일 방어를 통해 미국과 한국

Korean Peninsula” *Foreign Affairs* vol. 97, no. 3 (2018), pp. 103-117; Mount and Rapp-Hooper, “Nuclea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김인욱·백승준, 「공포의 균형에서 신중함의 균형으로: 북미 간 핵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2호 (2023), 33-58쪽; 김영준, 「북핵 접근의 현실론과 한반도형 핵 군비통제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75-100쪽.

⁴⁹⁾ Mount and Rapp-Hooper, “Nuclea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에 대한 모든 피해를 막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한반도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 억제 관계를 벗어나거나 부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려는 유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동맹의 현재 방위 정책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을 조장한다.⁵⁰⁾

수킨(Lauren Sukin) 역시 비대칭적 억지 상황에서는 약자의 결의가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강자가 억지에 실패한다는 자신의 최근 연구에 기반하여 북한이 핵을 쓰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란 수사과 같은 간접적 레짐 체인지 메시지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안보 공약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세적인 수사와 훈련 등으로 북한과의 위기를 촉발해서는 안 되며, 핵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래식 군사력의 억지와 중국과의 군비통제 등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⁵¹⁾

판다(Ankit Panda)도 미국은 북한의 핵 통제 사령부에 대한 의도적, 기계적(kinetic)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면 위기 상황에서 북의 선제적 핵 사용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비록 9.19 군사합의를

⁵⁰⁾ Adam Mount, “Increasing Stability in a Deterrenc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Modest initiatives focused on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arsenal are the best way of moving beyond a fragile, unreliable standoff to a more stable peace” (March 4,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3/increasing-stability-deterrence-relationship-north-korea>>.

⁵¹⁾ Lauren Sukin, “Why Calls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Can Be Counterproductive: Instead, the United States should undercut North Korean resolve, while strengthening its regional alliances” (February 20,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2/why-calls-regime-change-north-korea-can-be-counterproductive>>; Abby Fando and Lauren Sukin, “The Disadvantage of Nuclear Superiority,” *Security Studies* vol. 32, no. 3 (2023), pp. 446-475; Sukin, Lauren and Toby Dalton, “Reducing Nuclear Salience: How to Reassure Northeast Asian All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4, no. 2 (2021), pp. 143-158.

폐기했음에도 그 논리는 남북의 재래식 전력 차원의 충돌이 핵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하고, 소수 인원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북미 대화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⁵²⁾

아인혼(Robert Einhorn)이 강조하듯, 이러한 논의의 대전제는 핵 무장한 북한과의 공존이고, 비핵화가 궁극적 목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의 즉각적인 과제는 투명성과 상호신뢰를 제고하여 오인과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인혼은 특정한 미사일 실험과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특정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금지, 9·19 군사합의의 신뢰 조치 복원, 상대 지도부 제거를 위한 선제공격 등의 수사 금지, 위협 감소를 위한 민군 대화 채널 등을 제안한다.⁵³⁾

2.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Transaction Neglect)’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특히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다. 트럼프 2.0은 미국 언론의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전 세계는 트럼프 2.0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비책(Trump proof)’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트럼프가

⁵²⁾ Ankit Panda, “How to Reduce Nuclear Ris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oexistence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require the proactive consideration of pragmatic risk reduction measures” (February 5,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2/how-reduce-nuclear-risks-between-unit-ed-states-and-north-korea>>.

⁵³⁾ Robert Einhorn,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and Diplomacy: A combination of deterrence and diplomacy is key to avoiding war and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anuary 29,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1/if-you-want-peace-prepare-war-and-diplomacy>>.

정상 수준에서 대북 협상을 다시 시도할 것인지, 최근 언론 인터뷰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가 직접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자 나라’ 한국이 동맹의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을 단행할 것인지, 트럼프 2.0 정부에 등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혹은 그런 가능성을 선전하는) 인물들이 시사하는 것처럼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에 나서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인지 등에 관한 관심이 높고, 윤석열 정부도 트럼프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⁵⁴⁾

재집권 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재임 시기에든 기존 미국 외교 전통에 반하는 트럼프 자신의 ‘이단적’ 수사와 실제 정책의 차이가 있었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전쟁 불사론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결국에는 하노이 노딜을 오가는 정책적 혼선이 발생했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트럼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등 트럼프와 미국 및 국제질서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한계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전망을 해보

⁵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 언론(Time)과의 인터뷰는 Eric Cortellessa, “How Far Trump Would Go” *Time* (April 30, 2024). <<https://time.com/6972021/donald-trump-2024-election-interview/>>. 한국의 관심과 우려 관련해서는 문병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필요한가」 『동아일보』 2024년 3월 18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318/124017085/1>>; 강병철, 「트럼프 “韓은 부국, 왜 우리가 지켜주나…우릴 제대로 대우하길”(종합2보)」 『연합뉴스』 2024년 5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1005752071>>; 김동현, 「트럼프 안보보좌관후보 “미군 韓주둔 불필요…인질로 뒤선 안돼”」 『연합뉴스』 2024년 5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82700071>>; Lee Hyo-jin, “Interview: ‘Trump’s possible return will be mixed bag for South Korea’” *Korea Times* (May 11, 2024),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5/113_374317.html>; Ahn Ho-you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hy we must stay the course,” *Korea Times* (May 14, 2024),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4/05/638_374502.html>; 김동현, 「잇단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정부, 트럼프측에 한국 입장 전달(종합)」 『연합뉴스』 2024년 5월 1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5001151071?section=politics/al>>.

면 트럼프 2.0의 대북 정책은 정책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뒤로 밀릴 것임에도, 그 성격은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독재의 이념적 공세나 동맹 기반의 패권 복원 노력은 북한과 관련해서나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나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관점에 의해서 상당히 약화, 퇴색되는 ‘거래적 방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며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 ‘스트롱맨’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이러한 그의 명예욕, 미국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자기에의 과대망상에 의해 추동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 트럼프 2.0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2024년 대선의 후유증과 주류 엘리트와 관료들의 반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 등으로, 트럼프 2.0에서 대북 정책이 최우선적 정책 과제가 될 가능성이나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트럼프 2.0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적 정책 과제가 되지 않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한 대선 후유증이다. 2020년 대선 직후 트럼프의 대선 불복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공화당 주류도 한때 트럼프 비판에 나서면서 그의 정치적 퇴장이 전망되기도 했었고, 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조기에 압승을 거두었다. 트럼프와 바이든 진영이 모두 상대를 미국 체제의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선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면 다시 불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든이 패배할 경우 바이든 자신의 불복은 없겠지만 바이든 진영이 트럼프의 승리를 기꺼이 수

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노이 노딜의 주요한 배경은 트럼프의 ‘해결사’ 역할을 하던 변호사 코언(Michael Cohen)이 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선 것이었다. ‘코언 청문회’는 트럼프와 미국 언론의 관심을 분산시켰고, 트럼프가 역사적 빅딜을 선전할 가능성도 그만큼 줄여버렸다. 2024년 대선의 후유증은 미국 정치의 측면에서나 트럼프 개인의 차원에서나 2019년 2월 ‘코언 청문회’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 등 사법부의 판단으로 대선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의 정치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바이든의 압승만이 대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감소를 동반한 경기 호황으로 여론의 지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작년 연말 이래 트럼프의 박빙 우위 구도는 고착된 상황이다. 게다가, 5월 초 뉴욕 타임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에게 앞서고 있다.⁵⁵⁾

트럼프의 재집권은 박빙의, 어쩌면 2016년처럼 일반 유권자 득표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득표의 우세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른 2024년 대선의 후유증은 심각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도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북한의 ICBM 개발 성공과 같은 북미 관계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한반도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보다 정책적 후순위일 것이다. ‘코언 청문회’로 인한 관심의 분산과 함께,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등 관료, 그리고 미국 주류 외

⁵⁵⁾ Nate Cohn, “Trump Leads in 5 Key States, as Young and Nonwhite Voters Express Discontent with Biden” *The New York Times* (May 13, 2024), <<https://www.nytimes.com/2024/05/13/us/politics/biden-trump-battleground-poll.html>>.

교안보 엘리트들의 전반적인 대북 협상 반대가 하노이 노딜의 주요 원인이었다.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불안정과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등의 주요 현안을 제치고 대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고, 설혹 그렇더라도 주류 정책 결정 집단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정의, 북한의 신고와 사찰 허용 등이 없는, 특히 한미 군사훈련 등에서의 양보나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절실히 원했던, 그럼으로써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주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제재 해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관료 집단 전체(deep state)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지구화 추창자들과 전쟁광들을 몰아낼 것을 다짐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패권적, 관료적 관성을 통제하며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설사 트럼프가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경험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미국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은 북한이 트럼프의 협상 제안을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북한은 핵/주권을 포기하는 협상은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설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며, 미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불량 국가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실패국가를 벗어날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2.0의 대북 관여에 적극 협력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을 바이든 정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것처럼, 2기 트럼프 정부도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와 ‘북한 비핵화’ 주장을 전면적으로 묵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2.0에서도 북한 문제가 방치될 가능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바이든 식의 ‘적대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정학, 핵

전략, 불량국가의 틀에서 비교를 해보면, 우선 지정학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과 추가 지원 반대, 그리고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다짐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나 민주주의 대 독재와 같은 하나의 틀로 묶는 바이든의 지정학을 수용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 핵 군비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군비 증강을 추진하면서도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 군사개입은 회피했고, 북한과의 핵 협상은 추진하면서도 이란 핵 합의는 붕괴시킨 바 있다. 푸틴, 시진핑과 김정은 등과의 협상을 자신했던 트럼프는 불량국가에 대한 미국 주류의 이념적 단죄를 공유하지 않으며,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점에서 주류와는 전혀 다르다. 트럼프 2.0의 정책을 전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연구(Project 2025)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동맹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북한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다음으로 국무부가 외교적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대상 혹은 미국의 위협이다.⁵⁶⁾

트럼프 2.0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북러 협력을 통제하고 한국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원하는,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의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북러 협력이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 외교의 주요 과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에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역사문제를 넘어 혹은 우회하여 한·일의 미국에 대한 협력을 제도화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치, 즉,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통제하며, 한·미·일

⁵⁶⁾ The Heritage Foundation, Project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2023), p. 94, 179.

을 엮어내려는 야심적 기획이었다. 이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랩-후퍼는 ‘영토 분쟁과 같은 한·일 협력을 가로막는 짜증나는 장애물(territorial irritant)’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협력의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의 인태전략을 총괄하는 캠퐸(Kurt Campbell)은 삼국 협력의 대상에 미국도 포함됨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우리는 미래의 협력을 위해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가둬놓아서(lock in), 미국이 인도태평양과 같이 중요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군대를 전지 배치하며 그 존재감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한다.⁵⁷⁾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바이든 정부의 최대 ‘트럼프 대비책’이기도 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내년 완료될 예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 4월에 시작했는데, 이 역시 ‘트럼프 대비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성공할 것인가? 굳이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더라도 오바마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처럼 한미의 기존 합의를 미국이 뒤집은 전례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트럼프의 압박에 대단히 취약할 것이다. 한편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는 트럼프 2.0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한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일정하게 인정하고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맹을 거래와 비용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 따라 한미일 협력의 이념적 기반은 상당히 침식될 것이고, 비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 압박은

⁵⁷⁾ The Brookings Institute, “The U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Summit: Uncorrected Transcript” (August 16, 2023).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3/08/fp_20230816_us_japan_rok_trilateral_transcript.pdf>.

더욱 거세질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위험감축 (de-risking)을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2.0이 전면적인 ‘신냉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묶여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이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도 있다.

IV. 결론: ‘우리’는 미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본고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 가지 시각에서 평가하고 그 대안을 검토해보았다. 첫째, 미국에게 북한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의 틀에서, 미국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관계 차원의 대북 정책은 없고 미국의 북한 문제는 한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관리 문제로, 미국의 일관된 정책 목표는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 봉쇄였고 그 주요한 수단은 동맹이었다. 둘째, 미국의 북한-한반도 문제는 지역과 지구적 수준에서 그리고 지정학, 핵전략, 경제, 불량국가의 이념 등의 변수에 의해 규정되며 이들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틀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순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연장이 아니라, 그 어떤 국가도 국제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는 패권 불가능의 국제무질서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의지가 없는 미국의 ‘적대적 방치’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구적 핵 규범의 리더십은 포기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경쟁에 핵전략을 복속시키고,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이중 봉쇄라는 전통적인 패권 정책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한편 한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협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일정한 약화가 불가피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제재와 억지, 동맹 중심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적대적 방치’는 미국의 정보당국과 미국평화연구소의 ‘평화공존’ 캠페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를 가져왔다.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이라면, 그 최소한의 대응책은 운용적 군비통제일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인태전략을 주도·관리하는 최고위급 관리의 한 사람인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램-후퍼도 ‘민간인’ 시절에 주장했던 바이다. 그러던 램-후퍼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한 한일의 영토와 성노예 등 역사문제를 우회하는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램-후퍼의 ‘변질’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자신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를 초래할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는 적극적인 방치의 산물임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바이든 2기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대북 강경책과 미국 편승의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지 않은 한,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한 ‘적대적 방치’의 조정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시사한다.

트럼프 2.0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이후 유증과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등 대내외적인 난제 속에서도 북한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여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 김정은은 하노이에서의 굴욕을 잊고 트럼프와의 새로운 담판에 나설 것인가? 설사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열릴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 조야의 반대는 물론 ‘북

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남쪽에서, 그리고 전역에서 '우리가 분열되고 평화 공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 풍선, 군사적 위협을 교환하고 있는데, 미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접수: 2024년 5월 20일 / 심사: 2024년 5월 31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참고문헌】

- 박정진 외,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파주: 한울, 2024.
- 이혜정, 「미국패권과 한반도 분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서울: 선인, 2016.
- 이혜정,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 파주: 한울, 2017.
- 차태서, 『30년의 위기: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질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4.
- Coats, Daniel R,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2019.
- Narang, Vipin and Scott D. Sagan, eds., *The Fragile Balance of Terror: Deterrence in the New Nuclear Ag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22.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1.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2.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3.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4.
- The Heritage Foundation, Project 2025: Presidential Transition Project,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2023.
-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2021.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22.
-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 북한적 핵 개발의 이유와 김정은 정권의 핵 담론」 『동향과 전망』 통권 99권, 2017, 83~121쪽.
- 구갑우,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trilemma)」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2호, 2018, 137~169쪽.
-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9~53쪽.

김상기,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현대북한연구』 제26권 3호, 2023, 199~235쪽.

김영준, 「북핵 접근의 현실론과 한반도형 핵 군비통제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75~100쪽.

김인욱·백승준, 「공포의 균형에서 신중함의 균형으로: 북미 간 핵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2호, 2023, 33~58쪽.

댄가즌·구갑우, 「조선의 변화하는 핵 서사: 미국과의 언어게임을 통해 표현되는 인정투쟁」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157~188쪽.

안경모,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한국정치연구』 제32집 1호, 2023, 165~195쪽.

윤성원, 「미국 대북담론 구조 연구: 대통령 화행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189~232쪽.

은용수, 「존재론적 안보론과 북미관계: 이론과 현상, 새롭게 보기」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111~155쪽.

이관세,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 박정진 외,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파주: 한울, 2024, 383~433쪽.

이무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 2024, 54~90쪽.

이정철, 「영변 '+ α ' 논란과 다른 수단로서의 외교: 하노이회담의 3대 쟁점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통권 107호, 2019, 259~295쪽.

이정철,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한국정치연구』 제25집 1호, 2016, 221~245쪽.

이재학,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 측면에서 본 워싱턴 선언의 정책·전략적 의미」 『국방연구』 제67권 1호, 2024, 91~114쪽.

이인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30권 1호, 2023, 113~148쪽.

이혜정, 「북한 예외주의의 대 현실주의」 『창작과 비평』 제47권 3호, 2019, 406~434쪽.

이혜정, 「평화체제 관련 북·미·중 3장의 입장: 미국의 입장」, 서보혁 외,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이혜정,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김상기 외,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이혜정, 「한반도 국제관계, 1972-2022: 시공간 복합체 시론」 『한국과 국제정치』 제 38권 1호, 2022, 1~47쪽.
- 이혜정, 「혼종위기의 세계와 미국(迷國)」 『창작과 비평』 제52권 제1호, 2024, 56~69쪽.
- 전봉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표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8호, 2022.
- 전재성,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핵체제를 넘어: 불완전 주권성의 전개와 극복」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1호, 2023, 43~80쪽.
- 차태서,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 정책 패러다임 변동」 『국제관계연구』 제28권 1호, 2023, 5~43쪽.
- 황지환,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4, 77~110쪽.
- Anderson, Kelso R., Mark S. Bell and Chyenne Tretter, “The End of Inhibition? Why US Nonproliferation Policy Is Becoming Less Effectiv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6, no. 3 (2023), pp. 127-147.
- Choi, Jong Kun, “The Perils of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8, no. 4 (2015), pp. 57-72.
- Einhorn, Robert, “The Growing DPRK Nuclear Threat and the U.S.-ROK Response” 『한국국가전략』 제21호, 2023, 7~34쪽.
- Fando, Abby and Laren Sukin, “The Diadvantage of Nuclear Superiority” *Security Studies* vol. 32, no. 3 (2023), pp. 446-475.
- Ikenberry, G. John,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Competition to Shape Glob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vol. 100, no. 1 (2024), pp. 121-138.
- Jentleson, Bruce W, “Beyond the Rhetoric: A Globally Credible US Role for a ‘Rules-Based Order’”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6, no. 3 (2023), pp. 83-102.
- Jervis, Robert and Mira Rapp-Hooper,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eign Affairs* vol. 97, no. 3 (2018), pp. 103-117.
- Kurosawa, Mitsuru, “Biden Administration’s Nuclear Posture Review: Analysis and Assessment”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vol. 6, no. 1 (2023), pp. 312-326.
- Lake, David A., Lisa L. Martin, and Thomas Risse, “Challenges to the Liberal Order:

- Reflection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no. 2 (2021), pp. 225-257.
- Mount, Adam, “The US and South Korea: The Trouble with Nuclear Assurance” *Survival* vol. 65, no. 2 (2023), pp. 123-140.
- Mount, Adam and Mirra Rapp-Hooper, “Nuclea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rvival* vol. 62, no. 1 (2020), pp. 39-46.
- Narang, Vipin and Ankit Panda, “North Korea: Risks of Escalation” *Survival* vol. 62, no. 1 (2020), pp. 47-54.
- Pyon, Changsoo, “Strategic Patience or Back to Engagement? Obama’s Dilemma on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 7, no. 2 (2011), pp. 73-81.
- Smith, Hazel,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1 (2000), pp. 111-132.
- Sukin, Lauren, “Credible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Can Backfire: Explaining Domest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Acquisi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4, no. 6 (2020), pp. 1011-1042.
- Sukin, Lauren and Toby Dalton, “Reducing Nuclear Salience: How to Reassure Northeast Asian All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4, no. 2 (2021), pp. 143-158.
- Yeo, Andrew, “Can South Korea Trust the United Stat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6, no. 2 (2023), pp. 109-125.
- 강병철, 「트럼프 “韓은 부국, 왜 우리가 지켜주나…우릴 제대로 대우하길”(종합2보)」 『연합뉴스』 2024년 5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1005752071>>.
- 김동현·김효정·김지연, 「한미일, 18일 서울서 북핵대표 협의…美 대표 교체 뒤 첫 개최(종합)」 『연합뉴스』 2024년 1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118851504>>.
- 김동현, 「트럼프 안보보좌관후보 “미군 韓주둔 불필요…인질로 뒤선 안돼」 『연합뉴스』 2024년 5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82700071>>.
- 김동현, 「잇단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정부, 트럼프측에 한국 입장 전달(종합)」 『연

- 합뉴스』 2024년 5월 1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5001151071?section=politics/all>>.
- 김환용, 「미 NSC 당국자 “한반도 비핵화 향한 ‘중간 조치’ 고려할 수 있어” 『미국의 소리(VOA)』 2024년 3월 5일,
 <<https://www.voakorea.com/a/7512598.html>>.
- 김환용, 「한국 대통령실 “미국 북핵 협상 ‘중간단계’ 없다고 확인” 『미국의 소리(VOA)』 2024년 4월 29일,
 <<https://www.voakorea.com/a/7589112.html>>.
- 곽민서, 「윤 대통령, 미 해리티지 재단 창립자 등 접견...한미동맹 발전 논의」 『연합뉴스』 2024년 5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153200001>>.
- 문병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필요한가」 『동아일보』 2024년 3월 18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318/124017085/1>>.
- 박승혁, 「국무부 군축 차관, 북한과 군축 논의 가능성에 “거부하지 않을 것” 『미국의 소리(VOA)』 2022년 10월 29일,
 <<https://www.voakorea.com/a/6810179.html>>.
- 서의동,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게 될 때」 『경향신문』 2024년 3월 20일,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202009025#c2b>>.
- 이경주, 「美 국무부 ‘대북 군축 협상론’ 일축...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 『서울신문』 2022년 10월 30일,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2/10/30/20221030500079>>.
- 이조은, 「미 상원의원들, 청문회서 “대북 정책 실패...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미국의 소리(VOA)』 2023년 10월 6일,
 <<https://www.voakorea.com/a/7298808.html>>.
- 정영교, 「美 NSC 선임보좌관 “北과 비핵화 향한 ‘중간단계’ 논의 용의” [중앙일보-CSIS 포럼] 『중앙일보』 2024년 3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717#home>>.
-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322호: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5일,
 <https://www.pf.or.kr/wpages/01-3_research_2.php?bbs_no=6689&bbs_code=10001&symode=view>.
- Ahn, Ho-young,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hy we must stay the course,” *Korea*

- Times*, May 14, 2024,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4/05/638_374502.html>.
- Aum, Frank, “Exploring Peaceful Coexistence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prioritization of denuclearization above all else needs to change to fit the new reality,” January 8,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1/exploring-peaceful-coexistence-north-korea>>.
- Carnegie Endowment, “U.S. Vice President Joe Biden on Nuclear Security” January 11, 2017,
<<https://carnegieendowment.org/events/2017/01/us-vice-president-joe-biden-on-nuclear-security?lang=en>>.
- Carlin, Robert L.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u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January 11, 2024,
<<https://www.38north.org/2024/01/is-kim-jong-un-preparing-for-war/>>.
- Choe, Sang-Hun, “Is Kim Jong-un Really Planning an Attack This Time?” *The New York Times*, January 21, 2024,
<<https://www.nytimes.com/2024/01/21/world/asia/north-korea-nuclear-war.html>>.
- Cohn, Nate, “Trump Leads in 5 Key States, as Young and Nonwhite Voters Express Discontent with Biden” *The New York Times*, May 13, 2024,
<<https://www.nytimes.com/2024/05/13/us/politics/biden-trump-battleground-poll.html>>.
- Cortellessa, Eric, “How Far Trump Would Go” *Time*, April 30, 2024,
<<https://time.com/6972021/donald-trump-2024-election-interview/>>.
- CSIS, Diplomacy or Crisis with DPRK in 2024? March 22, 2024,
<<https://www.csis.org/podcasts/impossible-state/diplomacy-or-crisis-dprk-2024>>.
- CSIS, Revisiting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Capital Cable #91, April 4, 2024,
<<https://www.csis.org/events/revisiting-us-policy-towards-north-korea-capital-cable-91>>.
- C-Span, Policy Advocates Testify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October 4, 2023,
<<https://www.c-span.org/video/?530907-1/policy-advocates-testify-korean-peninsula-security>>.
- Einhorn, Robert,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and Diplomacy: A combination

of deterrence and diplomacy is key to avoiding war and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anuary 29,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1/if-you-want-peace-prepare-war-and-diplomacy>>.

Friedman, Uri, “A Third Nuclear Age Is Upon Us: North Korea’s moves to develop tactical nuclear weapons show that the slope toward a new era is steepening” *The Atlantic*, August 2, 2021,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2/08/north-korea-kim-jong-un-third-nuclear-weapon-age/670993/>>.

Hudson, John and Ellen Nakashima, “Biden Administration Forges New Path on North Korea Crisis in Wake of Trump and Obama Failures” *The Washington Post*, April 30,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biden-administration-forges-new-path-on-north-korea-crisis-in-wake-of-trump-and-obama-failures/2021/04/30/c8bef4f2-a9a9-11eb-b166-174b63ea6007_story.html>.

Kristof, Nicholas, “As if We Didn’t Have Enough to Frighten Us...” *The New York Times*, January 17, 2024,
 <<https://www.nytimes.com/2024/01/17/opinion/north-korea-war.html>>.

Lee, Hyo-jin, “Interview: ‘Trump’s possible return will be mixed bag for South Korea’” *Korea Times*, May 11, 2024,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5/113_374317.html>.

Martin, Timothy W, “North Korea Will Soon Be Able to Flout Sanctions More Easily After Russian opposition, the United Nations panel goes dark, removing the global monitor on Pyongyang’s rules-busting behavior”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30, 2024,
 <<https://www.wsj.com/world/asia/north-korea-will-soon-be-able-to-flout-sanctions-more-easily-27595821>>.

Mount, Adam, “Increasing Stability in a Deterrenc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Modest initiatives focused on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arsenal are the best way of moving beyond a fragile, unreliable standoff to a more stable peace” March 4,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3/increasing-stability-deterrence-rel>

ationship-north-korea>.

Panda, Ankit, “How to Reduce Nuclear Ris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oexistence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require the proactive consideration of pragmatic risk reduction measures” February 5,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2/how-reduce-nuclear-risks-between-united-states-and-north-korea>>.

Reuters, “China urges largest nuclear states to negotiate a ‘no-first-use’ treaty” February 28, 2024,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rges-un-define-roadmap-exempt-non-nuclear-states-nuclear-threat-state-2024-02-28/>>.

Rogin, Josh, “Yes,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war –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5, 2024,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4/01/25/north-korea-war-ukraine-gaza-russia-hamas/>>.

Sukin, Lauren, “Why Calls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Can Be Counterproductive: Instead, the United States should undercut North Korean resolve, while strengthening its regional alliances” February 20,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2/why-calls-regime-change-north-korea-can-be-counterproductive>>.

The Economist, “A new nuclear arms race looms: It will be harder to stop than the contest of the cold war” August 29, 2023,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23/08/29/a-new-nuclear-arms-race-looms>>.

The Brookings Institute, “The U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Summit: Uncorrected Transcript” August 16, 2023,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23/08/fp_20230816_us_japan_rok_trilateral_transcript.pdf>.

The White House, “Press Gaggle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board Air Force One En Route Philadelphia, PA” April 30,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1/04/30/press-gaggle-by-press-secretary-jen-psaki-aboard-air-force-one-en-route-philadelphia-pa/>>.

Trofimov, Yaroslav, “The War in Ukraine Has Created a New ‘Axis of Evil’: Russia is turnign to Iran and North Korea for military supplies and diplomatic support” *Th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1, 2023,

<<https://www.wsj.com/world/the-war-in-ukraine-has-created-a-new-axis-of-evil-cd50a398>>.

Ward, Alexander, Lara Seligman and Matt Berg, “Strategic Patience 2.0” *Politico*, October 4, 2022,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national-security-daily/2022/10/04/strategic-patience-2-0-00060273>>.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Its Alternatives
: 'Adversarial Neglect' vs.
Peaceful Coexistence and Trump 2.0's 'Transactional Neglect'

Lee, Heajeong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examines its alternatives, drawing upon the following two propositions. First,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bilateral North Korea policy that deals with 'North Korea as it is'. Rather, the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or the North Korea Question has been that of double containment of the two Koreas through its alliance with South Korea. Second, the U.S.'s North Korea-Korean Peninsula Question has been constantly redefined at regional and global levels and by factors such as geopolitics, nuclear strategy and rogue state ideology. This paper characterizes the Biden administration's 'calibrated and practical' North Korea policy not as a mere extension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strategic patience', but as a policy of 'adversarial neglect.' The ostensible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neglected both because of the U.S. inability to prioritize the North Korean Question over the more pressing crises such as the wars in Ukraine and Gaza amid international disorder/interregnum, and because of the U.S. unwillingness to compromise its alliance systems with South Korea and Japan for the sake of making deals with North Korea. This paper

identifies two main alternatives to Biden's 'adversarial neglect.' One is a peaceful coexistence campaign focusing on operational arms control to alleviate the security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ther is the prospect of a 2nd Trump administration's 'transactional neglect' if Trump wins this year's U.S. presidential election.

Keywords: US Policy toward North Korea-Korean Peninsula, Double Containment, Interregnum, The Security Dilemma, The US-ROK Alliance

이혜정 (Lee, Heajeong)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은 '정치적 현상의 기원'으로, 군부 정치 개입의 기원을 탐구하기 시작해 미국 패권의 기원과 근대 국제관계의 기원으로 연구 지평을 넓혔고,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일반논문

북한의 38선 경비부대 창설과정과 제한전 구상

김선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문요약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6년 6월에 38선을 경비하기 위해 '38경비보안대'를 창설했다. 그 후 38경비보안대는 1947년 9~10월에 2개 대대로 증편되었고 1948년 1월과 8월에 각각 '38보안여단'과 '38경비여단'으로 개편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1949년 1~7월에 38경비여단을 3개 여단으로 증편했는데 그 이유는 1949년 초에 수립한 제한전 구상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1949년 8월에 북한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에게 강원도 삼척에 '해방구'를 창설하고 웅진반도를 부분 점령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제한전을 통해 미국의 개입여부와 남한의 전투력을 탐색하고 이를 계기로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 전면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1949년 5~8월에 38경비여단을 투입해 제한전을 개시했지만 소련은 미군과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38경비여단의 공격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9년 10월까지 제1·3경비여단을 투입해 웅진반도와 강원도에서 제한전 구상을 실행에 옮겼다. '1949년도 제한전 구상'의 핵심은 바로 김일성의 최측근이 지휘하는 38경비여단이었다. 제한전 결과 38경비여단이 웅진반도의 주요 고지를 점령함에 따라 북한군은 개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지리적·전술적 우위 아래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주제어: 소련군 제25군사령부, 38경비여단, 38선 충돌, 웅진반도, 스탈린, 슈티코프, 최현

I. 머리말

1945년 해방 당시 북위 38도선은 연합국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적 분할선이었다. 소련 극동군은 1945년 8월 9일 대일전을 시작했고 8월 24일 평양에 공정대(空挺隊)를 투입했다. 제25군의 지상군부대들은 북한 지역을 급속히 점령하고 극동군 사령관 메레츠코프(Kirill A. Meretskov) 원수의 명령에 따라 남하해 38선에 접근했다.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Ivan M. Chistyakov) 근위상장은 군단장들에게 증강된 병력을 차출해 38선을 넘어 퇴각하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라고 명령했다.¹⁾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지역을 점령한 이후 8월 27일에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경원선의 철도운행을 완전히 중지시켰다. 그리고 38선에 인접한 금천·신마·연천·평강·양양 등지에 경비부대를 배치해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모두 통제했다.²⁾ 또한 소련군사령부는 8월 27일부터 38선에 대한 경비임무를 전담했다. 그러나 38선 경비임무는 1946년부터 북한지역에 보안무력이 창설됨에 따라 점차 한국인들에게 이양되었고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공식 철수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한국인들이 담당했다.

38선 경비부대와 북한의 '1949년도 제한전(制限戰) 구상'은 남·북 간 군사충돌과 6·25전쟁의 직접적인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연구되었다. 이 주제는 주로 국방부에서 연구해왔다. 국방부는 38선 경비부대의 변화과정·편제·병력규모·지휘관을 해명했다. 38선 경비부대가 출현한 시점은 각각 1946년 중반과 1947년 7월로, 경비부대는 '38경비보안대, 38경비대, 38보안여단, 38경비여단'으로 개편되었다고 분석했다.³⁾ 사사키

1) 치스차코프, 「제25군의 전투행로」,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 (서울: 함성, 1989), 49쪽.

2)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서울: 선인, 2003), 54쪽.

하루타카와 장준익은 38선 경비부대의 변화과정과 편제를 연구했다. 두 연구자는 모두 38선 경비부대가 1947년 7월에 처음 조직되었고 '38(선)경비대, 38(선)보안여단, 38(선)경비여단'으로 개편되었다고 주장했다.⁴⁾

박명림은 북한정부가 1949년에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과 화전양면전략(和戰兩面戰略)에 입각해 부분공격과 부분점령을 시도했다고 분석했으며,⁵⁾ 양영조는 북한정부가 1949년 8~10월 동안 38선 경비부대의 우수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제한전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⁶⁾ 또한 정병준은 북한정부가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 개념에 입각해 웅진반도 점령과 삼척 해방구 설치를 계획했다고 분석했다.⁷⁾ 김광수는 1949년 5~8월 당시 38선 전투와 38경비여단의 전력을 분석한 뒤에 북한이 제한전을 구상한 배경 중 하나가 38경비여단의 월등한 전력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⁸⁾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38선 경비부대의 변화과정·편제·병력규모·지휘관 등이 일부 해명되었고 1949년도 북한의 제한전 구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8선 경비부대의 창설과정과 북한의 제한전 구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몇 가지 논쟁과 연구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38선 경비부대의 출현시점·편제·명칭·부대장에 대해서는 각 연구자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둘째, 북한정치세력이 38선 경비부대를 창설·증편하고 특정

3) 38선 경비부대에 관한 국방부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고 바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703~70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59~263쪽.

4)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中卷 (서울: 兵學社, 1977), 33~43쪽;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69~72쪽.

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서울: 나남, 1996), 116~132쪽.

6)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191~199쪽.

7)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06), 404~416쪽.

8)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85~92쪽.

인물을 지휘관으로 임명한 정치적·군사적 배경이 해명되지 않았다. 셋째, 38선 경비부대의 경비활동과 예하부대의 편제·관할지역이 밝혀지지 않았다. 넷째, 38선 경비부대의 편제·지휘관·주둔지·관할지역과 제한전 구상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견이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창설과정·편제·지휘관·경비활동 등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군사사와 정치사 중 한 분야에만 집중하거나 군사사와 정치사를 분절적으로 연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글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47년 말까지 38선 경비부대가 창설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경비부대의 출현시점·주요지휘관·예하부대와 명령계통·업무권한·경비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1948년 1월부터 1949년 10월까지 38선 경비부대의 증편과정과 북한의 제한전 구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48년 이후 38선 경비부대의 편제·지휘관·주둔지·관할구역을 새로 확인하고 이것이 북한의 제한전 구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II. 38경비보안대의 창설과 38선 경비활동

1. 38경비보안대의 창설과 지휘관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 38선 경비임무는 모두 소련군이 담당했다. 제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상장은 1945년 10월에 제25군의 예하부대에 38선 경비임무를 구체적으로 하달했고 이 명령에 따라 소련군부대는 38선 전

역에 경비초소를 설치했다. 경비초소의 위치는 당시 38선 경비를 담당했던 미국 측 대표단과 합의된 지형으로 선정되었다. 38선 이남 경계선의 경비임무는 미군이 담당했다. 그중 미군 제24군단 제32보병연대가 38선을 따라 서해에서 동해까지 경계선 경비임무를 담당했다.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의 지시로 38선에 경비초소가 설립되었고 38선 지점 남측에 약간의 중립지대가 남겨졌다.⁹⁾

38선에 대한 경비임무가 변화한 시점은 1946년 3월이다.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2월 8일에 북한지역의 임시중앙행정기관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2월 9일에 임시인민위원회 위원 선거가 실시되어 김일성(金日成)이 위원장, 김두봉(金斗奉)이 부위원장, 강량욱(康良煜)이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¹⁰⁾ 북한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관이 설립되자 북한정치세력들은 본격적으로 자체적인 보안무력을 창설하기 시작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3월 4일에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보안무력 창설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국경·38선·철도를 경비하기 위한 보안대 창설을 추진했다.¹¹⁾ 국경경비대·38경비보안대·철도경비대는 모두 북한의 경계지역과 기간시설을 경비하기 위해 행정기구 안에 만들어진 무력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가운데 국경경비대와 38경비보안대는 군대를 대신해서 남북 경계지역을 방어하는 준(准)군사기구의 성격을 띠었던 반면 철도경비대는 ‘중요산업시설 경비대’와 비슷하게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경찰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9) 정병준, 『한국전쟁』, 152쪽.

10)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생략),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 7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9), 594쪽.

11)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제5차 집행위원회 결정서(1946.3.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朝鮮共產黨文件資料集』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223쪽;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570쪽.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결정 이후 38선 경비를 목적으로 황해도 사리원에서 “38경비보안대(38警備保安隊)”가 창설되었다. 부대장은 김창봉(金昌奉)이 맡았다. 38경비보안대는 1946년 중반에 창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¹²⁾ 정확한 창설 시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1946년 6월 21일 이전에 창설된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한 북한군¹³⁾ 간부가 38경비대 전사로 처음 복무하기 시작한 시기가 1946년 6월 21일이기 때문이다.¹⁴⁾ 38경비보안대가 창설되면서 38선의 경비임무는 소련군과 38경비보안대가 공동으로 담당하기 시작했다.

북한정치세력이 1946년 6월에 38경비보안대를 창설한 것은 5월 7일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38선에서 반공세력의 침입과 ‘반동분자’의 월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보안간부와 경비대원을 38도선에 배치”함으로써 38선에 대한 정보사찰공작을 강화하고 ‘반동분자의 준동’을 차단하려고 계획했다. 보안국은 38경비보안대와 함께 각종 경비대를 조직해 육상과 해상의 경비활동을 강화했다.¹⁵⁾

38경비보안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保安局)의 지시를 받는 무장부대였다. 보안국 경비부는 경비과·철도과·수상과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경비과가 38경비보안대를 관할했다.¹⁶⁾ 경비보안대장 김창봉은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출신이다. 그는 1940년부터 소련군 제88

12)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571쪽.

13) 해방 이후 북한의 군대는 총사령부·민족보위성이 지휘하는 ‘인민군(人民軍)’과 내무국·내무성이 지휘하는 ‘내무군(內務軍)’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 북한군은 ‘인민군’을 뜻하며 38경비보안대·국경경비대·철도경비대는 내무군이다.

14) 서병화, 『幹部履歷書』 (평양: 민족보위성, 1949),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

15)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7.3)」 『자료집』 9권, 260쪽.

16)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7.3)」 『자료집』 9권, 236~237쪽.

독립보병여단에 있다가 해방 후에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연변분견대에 소속되어 강건, 최광, 박락권 등과 함께 연변으로 파견되었다.¹⁷⁾ 김창봉은 1946년에 연변에서 입북해 철도경비대 창설요원으로 투입되었다.¹⁸⁾ 그는 철도경비대의 창설작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자 38경비보안대장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38경비보안대의 병력은 기존 보안대원 중에서 차출해 충원했다. 총병력은 2,000여 명이었다.¹⁹⁾

38경비보안대의 상부기관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이었는데 1947년 2월 8일을 기점으로 변화했다. 북한정치세력은 이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개편해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설립했다.²⁰⁾ 이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으로 개편되었고, 이날부터 38경비보안대도 내무국이 관할하게 되었다.

38경비보안대장은 1947년 중반에 교체되었다. 지휘관이 교체된 이유는 1947년 5월 17일에 보안무력을 관할하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²¹⁾ 북한정치세력은 38경비보안대를 집단군총사령부의 예하에 두지 않고 계속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관할 아래 두었다. 내무국장은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부사령관 출신 박일우(朴一禹)였다.²²⁾ 38경비보안대장은 1947년 7월에 박일우와 함께 중국 연안(延安)에서 활동한 윤공흠(尹公欽)으로 교체되었다.²³⁾

17)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1992), 143~144쪽.

18)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22쪽.

19) 중앙일보특별취재반 편,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서울: 중앙일보사, 1993), 76~77쪽.

20)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사료집』 7권, 674쪽.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권, 91쪽.

22) 내무국장 박일우, 「제복 및 견장 등급규정에 관한 지시(1947.10.9)」 『사료집』 9권, 90쪽.

23) 중앙일보특별취재반 편,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76~77쪽.

윤공흠은 일본에서 타찌가와비행학교(立川飛行學校)를 졸업하고 2등 비행사 자격을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의열단(義烈團) 출신으로 1939년 중국 연안에서 항일군정대학을 졸업하고 해방 전까지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 연안분맹에서 활동했다.²⁴⁾ 그는 입북 후에도 독립동맹에서 활동하다가 1946년 2월 16일에 조선신민당(朝鮮新民黨)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²⁵⁾ 윤공흠은 1946년 8월 28일에 개최된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서열 21위에 올랐다. 그의 당서열은 25위에 오른 내무국장 박일우보다 높았다.²⁶⁾ 그 후 윤공흠은 1946년 12월부터 북조선로동당 평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했다.²⁷⁾

윤공흠의 해방 전후 경력을 보면 일제시기에는 군사간부보다 정치간부로 활동했으며 조선독립동맹의 고위간부였다. 그는 해방 후에도 주로당사업에 투입되어 신민당과 노동당에서 중앙위원을 역임한 고위급 당간부였다. 북조선로동당은 1946년 10월 21일부터 도당위원장의 공작배치와 이동문제를 중앙당 간부부에서 취급하고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비준했다.²⁸⁾ 따라서 평북도당 위원장 윤공흠을 내무국에 배치한 것은 노동당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를 38경비보안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내무국 간부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던 내무국장 박일우의 결정이다. 즉 노동당은 1947년 중반에 38경비보안대의 임무를 중요하게 판단해서 당서열 21위의 고위급 당간부를 경비보안대장으로 파견한 것이다. 당시 38경비보안대 외에 노동당 중앙위원이 배치된 부대는 한곳도 없었다. 노동당은 그만큼 38경비보안대를 중시했다.

24)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이하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303~304쪽.

25) 「조선신민당선언(1946.2.16)」 『사료집』 26권, 15~17쪽.

26)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 『사료집』 1권, 176쪽.

27) 「강계군 당단체의 사업정형에 대하여(1946.12.4)」 『사료집』 30권, 61~63쪽.

28) 「간부배치 및 이동에 관하여(1946.10.21)」 『사료집』 30권, 36~37쪽.

윤공흡은 비행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항공부대가 아닌 38경비보안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윤공흡처럼 병종경험이 없는 인물을 병종부대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관례는 창군 당시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 군사간부 배치의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가령 제1대 동해수상보안대장은 진국화(陳國華)였는데, 그는 중국국민당 중앙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의 용군 선진위원으로 활동한 인물로 한 번도 해상부대나 해양부문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²⁹⁾ 이 같은 간부배치방식은 창군 당시 군사간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북한정치세력은 38경비보안대장에 당중앙위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38경비보안대와 조·만국경경비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하사관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2개 경비대에 소속된 하사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되었고 몇 개의 훈련중대로 구성되었다.³⁰⁾

한편 북조선로동당은 38선 경비업무를 중요하게 취급해 1947년 하반기에 38경비보안대에 당단체를 신설했다. 당중앙 조직부는 1947년 11월 29일에 황해도당과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38 경계선 보안대 및 기마대 당조직에 대하여」라는 지시문을 하달했다. 조직부는 이 지시문에서 “경계선 보안대대와 기마중대들에는 당단체를 개별적으로 조직하고 도당부에 직속시킬 것”을 지시했다.³¹⁾ 38경비보안대에는 경비여단당위원회와 단위부대별 당단체가 조직되었다. 특히 38경비보안대 대원 중에는 노동

29)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125~126쪽; 강만길·성대경, 『인명사전』, 477쪽.

30) USAFIK, *ISNK(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No. 50 (1947.12.1~12.1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이하 생략),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이하 북한정보요약)』 2권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532쪽.

31) 조직부장 허가이, 「三八 경계선 보안대 및 기마대 당조직에 대하여(1947.11.29)」,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첩(이하 조직부 지시문첩)』 (평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4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1205.

당원이 많았다.³²⁾ 38경비보안대와 달리 북한군에는 노동당의 당단체가 설치되지 않았다.³³⁾

노동당이 38경비보안대의 당단체를 주둔지 도당부에 직속시킨 것은 38선 현지에서 당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노동당이 북한군에 없는 당단체를 38경비보안대에 설치한 것은 1947년 7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38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³⁴⁾ 노동당은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자 38경비보안대에 대한 당적 통제와 대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38경비보안대의 노동당원을 당단체에 소속시켜 이를 관철시키려고 구상한 것이다.

2. 38경비보안대의 증편과 38선 경비활동

38경비보안대는 소련군과 함께 38선에 설치된 경비초소를 관할했다. 1947년 4월에 제2차 38선 미·소 합동조사 과정에서 미군의 조사단원과 제7사단은 소련군 경비병력에 대한 종합정보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북측의 38선에는 총 43개소의 경비초소가 존재했다. 이 가운데 소련군 관할 초소가 25개, 38경비보안대 관할 초소가 9개, 소련·북한 공동 관할 초소가 8개, 미상이 1개소였다. 소련군의 관할 초소는 38경비보안대의 관할 초소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초병(哨兵)을 제외하고 38선에 배치된 병력은 소련군이 750명, 38경비보안대가 1,800명으로 총 2,550명이었다.

32) 김일성, 「38선경비대의 임무(1948.8.7)」 『김일성전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98쪽.

33) 「군대내 당조직에 대하여(1946.10.21)」 『사료집』 30권, 37쪽.

34) 예를 들어 1947년 7월에는 남한경찰 20여 명이 월경하고 소련군 2명이 사망하는 등 충돌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황해도 배천지역에서는 남·북 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132쪽.

하지만 실제 근무병력은 38경비보안대가 약 2.5~3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³⁵⁾ 1947년 4월 시점에 38선의 경비초소는 소련군이 관할하는 초소가 약 3배 많았지만, 38선 접경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오히려 38경비보안대가 소련군보다 약 2.5~3배 많았다. 그러므로 38경비보안대는 1947년 4월 시점에 이미 소련군을 대체해 실질적으로 38선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내무국이 설립된 이후 38경비보안대는 2개 대대로 증편되었다. 1947년 말 당시 38경비보안대는 '38경비보안 제7대대'와 '38경비보안 제9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내무국은 1947년 9~10월에 새로운 경비보안대를 조직해서 38선의 경비를 강화했다. 따라서 38경비보안대는 9~10월 중에 2개 대대로 증편된 것으로 보인다. 각 소대는 약 30명의 경비대원으로 편성되었고 군사지형에 따라 3~5km의 38선 접경지역을 담당했다. 소대는 3개 분대로 편성되었고 각 분대는 1~1.5km의 38선 접경지역을 담당했다.³⁶⁾

내무국은 1947년 9월 16일에 「사무한계에 관한 지시」를 하달해 38경비보안대의 활동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변경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내무국장 박일우와 검찰소장 장해우는 1947년 12월 23일에 기존의 사무한계를 수정한 「사무한계에 관한 지시」를 새로 하달했다. 지시는 도 내무부장, 각 대대장, 도 검찰소장에게 하달되었다. 이 지시에 따라 38경비보안대 제7·9대대의 명령계통이 확립되어 제7·9대대의 대대장은 내무국장에게 직속되었다. 도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대장이 도 내무부장의 지시를 받았고 그 밖의 사업은 횡적으로 연관관계를 취하도록 결정되었다. 38경비보안대의 경비구역은 38선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으로 지

35) 정병준, 『한국전쟁』, 155쪽.

36) USAFIK, *G-2 Weekly Summary*, No.120(1947.12.26~1948.1.2), 『북한정보요약』 2권, 557쪽.

정되었다. 경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보안행정은 종전대로 내무기관에서 집행하도록 결정되었다. 38선에서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경비구역 내에 있는 서·분서·분주소는 제7·9대대 대대장의 동원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단, 대대장은 사전·사후에 이를 도 내무부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38경비보안대 대대장은 경비상 주민, 우마차, 경비보조도구의 동원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면기관에 동원을 실시할 권한을 가졌고, 경비지역 안에 자위대를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었다. 38선에 관계된 모든 사건은 대대장이 경비지역 주둔 소련군과 협의해 처리했고 동시에 법적으로 처리할 사건은 도검찰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다. 38경비보안대 대대와 중대의 주둔지역에서 발생한 월경자(越境者)문제는 적발기관의 초심(初審)을 거쳐 경비보안대에서 취급했고, 대대와 중대가 주둔하지 않는 원거리지역에서만 내무기관, 철도보안대대, 수상보안대대에서 월경자문제를 취급했다.³⁷⁾

1947년 가을에 들어서 38경비보안대의 명령계통과 통제권이 강화된 것은 남북교역의 개시와 38선 통제권의 변화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은 38선 분할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7년 5월 말에 향후 2년간 남·북의 교역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역지점은 38선상에 있는 경기도 개풍군 토성리, 파주군 대원리, 포천군 양문리, 춘천 북쪽 등 4개 장소로 정해졌다. 특히 38선 접경지역인 개성 서북쪽 8km 지점과 동북쪽에 위치한 토성리·대원리는 서울과 가까워 교역량이 가장 많았다. 남한 교역업자들의 「교역증」은 육군본부에서 발급했는데 이는 전략물자의 유출을 감독하고 정보·무기의 반입과 반출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였다.³⁸⁾ 남

37) 「황해도내무부 사업에 대한 諸點(1947.5.23)」 『사료집』 9권, 392쪽.

38)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上卷, 480~481쪽.

북교역이 시작되자 북한정치세력도 38선을 넘나드는 사람·물자를 조사하고 북파되는 첩보원을 적발하기 위해 38경비보안대를 강화한 것이다.

남북교역과 함께 1947년 중반부터 북한지역의 38선 통제권이 변화했다. 1947년 늦은 봄, 내무국은 소련군으로부터 38선 통제권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인수작업은 소련 내무성 고문들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 그런데 5월 21일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시작되자 북한지역에서 월남민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월남민들을 차단하기 위해 인수일정이 앞당겨졌다.³⁹⁾ 이 같은 상황에서 38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947년 9~10월에 38경비보안대를 2개 대대로 증편한 것이다. 38경비보안대의 편제·위치·무기는 다음과 같다.

〈표 1〉 38경비보안대의 편제·위치·무기(1947.11)⁴⁰⁾

구분	담당지역	본부위치	예하부대	병력
제7대대	38선 서부지역	황해도 해주	제151중대, 제153중대, 제155중대	300명
제9대대	38선 동부지역	강원도 철원	제211중대(전곡), 철원·화천 각각 1개 중대	300명
무기	일본제 소총·경기관총, 소량의 소련제 슈파긴 기관단총(PPSH-41)			

이 군사정보는 주한미군 정보참모부가 1947년 11월까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38경비보안대 제7대대와 제9대대는 38선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2개 대대의 각 중대가 배치된 지역은 38선상의 주요거점지역이었다. 내무국장 박일우가 제9대대장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제9대대 예하에 “전곡211중대”가 배속된 것이 확인된다.⁴¹⁾

³⁹⁾ G-2 Weekly Summary, No.120(1947.12.26~1948.1.2), 『북한정보요약』 2권, 556쪽.

⁴⁰⁾ ISNK, No.48(1947.11.1~11.15), 『북한정보요약』 2권, 487쪽; ISNK, No.49(1947.11.15~11.30), 『북한정보요약』 2권, 500쪽.

38경비보안대의 배치방식은 38선에 있는 소련군 전술부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철원지역~연천지역의 38경비보안대의 배치방식은 그 지역에 있는 소련군 제3저격연대 제1대대의 배치방식과 유사했다. 이 같은 배치방식은 해주와 양양에 주둔한 38경비보안대에서도 동일했다.⁴²⁾ 38경비보안대는 38선에 있는 소련군 전술부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언제라도 소련군의 경비지역과 경비임무를 인수할 수 있었다.

1947년 5월 23일자 내무국의 황해도 내무부에 대한 검열결과는 38경비보안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당시 황해도지역 38선의 월경자는 한 달 평균 3,500여 명에 달했고, 1947년 2~3월 사이 남한경찰의 월경내습(越境來襲)이 188회, 미군의 월경이 43회 등 총 231회에 달했다. 또한 경비대원 납치사건도 6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38선 경비대원들의 생활은 열악했다. 경비대원들은 예전에 입던 헤진 겨울옷을 그대로 입었으며 구두가 없어 짚신을 신고 있었다. 게다가 밤에 추위를 막을 만한 시설도 없었고 식사장소와 취침장소도 없는 열악한 형편이었다. 또한 정치의식도 약해서 1947년 4월 25일까지 26명의 병사가 남한으로 도주했다.⁴³⁾

38경비보안대의 증편과 함께 38선 인근지역에 조직된 자위대(自衛隊)의 활동도 강화되었다. 원래 자위대는 38경비보안대가 부분적으로 통제하던 민간조직이다. 그러나 내무국은 1947년 7월에 38경비보안대에 38선 감시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후 38경비보안대는 자위대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그리고 내무국은 9월과 10월에 자위대를 강화하기 위해 38선의 지방인민위원회에 17~45세의 남성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38선 인근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대중집회를 통해

41) 내무국장 박일우, 「압수물품 반환에 관한 건(1948.3.17)」 『사료집』 9권, 444쪽.

42) ISNVK, No.50(1947.12.1~12.15), 『북한정보요약』 2권, 540쪽.

43) 「황해도내무부 사업에 대한 諸點(1947.5.23)」 『사료집』 9권, 391~392쪽.

자위대가 조직되었다. 자위대에 대한 감독과 훈련은 38선에 배치된 경비보안대가 직접 담당했으며 자위대의 조직·입대·감독은 지역에 배치된 38경비보안대의 소대가 담당했다. 자위대의 소대는 각각 10~15명으로 구성된 3개 분대로 구성되었고 경비보안대 분대장에게 직접 배속되었다. 자위대 소대원들은 모두 그 지역 출신이었지만 정치적 ‘반동분자들’은 자위대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자위대 소대원들은 마을의 정보제공자, 연락요원, 보안대원의 보조경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위대원들의 임무는 방첩활동과 비밀감시, 순찰·경비 시 보안대 보조, 지역주민에 대한 선전, 대남 정보활동이었다.⁴⁴⁾

Ⅲ. 38경비여단의 창설과 제한전 구상

1. 38경비여단의 창설과 증편

북한정치세력은 ‘조선인민군’이 공식 창설되기 직전인 1948년 1월에 38경비보안대를 ‘38보안여단’으로 개편했다.⁴⁵⁾ 여단본부는 황해도 사리원에 설치되었다.⁴⁶⁾ 38보안여단의 정확한 편제와 병력은 러시아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1948년 4월 8일 당시 38보안여단은 2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제7대대는 5개 중대로 편성되었고 총병력은 919명이었으며 제9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되었고 총병력은 731명이었다. 제7대대와 제9대대

44) *G-2 Weekly Summary*, No.120(1947.12.26~1948.1.2), 『북한정보요약』 2권, 557~558쪽.

45) 중앙일보특별취재반 편,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77쪽.

46)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33쪽.

의 본부는 각각 해주와 철원에 있었다. 38보안여단의 총병력은 1,650명으로 철도경비여단의 총병력 3,134명에 비하면 절반 규모였다. 이는 철도경비여단이 4개 대대로 완편된 반면에 38보안여단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개 대대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⁷⁾

북한정치세력은 1948년 7월부터 38보안여단을 증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 이유는 남북분단이 가시화되면서 그해 여름부터 38선의 무력충돌이 격화되었고 북한지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7월에 38선의 경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개 대대로 편성된 38보안여단의 병력을 보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향후의 정세변화에 따라 여단을 더 확편하거나 신규 여단을 창설하는 계획과 여단을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새로운 여단의 간부는 기존의 38보안여단에서 자체적으로 간부를 양성해 간부예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단의 우수한 군인들을 군사학교에 입학시켜 기술병중간부로 양성했다. 또한 여단 내에서 군사정치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모든 군인들의 군사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켰다.⁴⁸⁾

그 결과 북한정치세력은 1948년 8월에 38보안여단을 '38경비여단'으로 개편했다. 북한문헌에 따르면 최현(崔賢)이 보안간부훈련소 연대장으로 사업하다가 1948년 8월부터 "내무국 경비처 제3경비려단장"으로 복무했다.⁴⁹⁾ 제3경비여단의 경비지역은 '서부로부터 중부인 철원일대까지'였다.⁵⁰⁾ 북한정치세력은 38경비여단 창설에 앞서 38보안여단을 증편하기

47) 전현수 역, 『레베제프일기(1947~1948년)』 (서울: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06), 69쪽.

48) 김일성, 「38선경비대의 임무(1948.8.7)」 『김일성전집』 8권, 197~198쪽; 201~202쪽.

49)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35쪽.

50) 오찬홍, 『한생을 싸움의 길에서』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8), 61쪽. 이 책은 북한에서 발간된 최현의 전기다.

위해 진남포에 있던 내무국 독립여단 제2대대를 38보안여단으로 통합했다. 제2대대는 당시 내무군(內務軍) 중에 가장 훈련수준이 높은 부대였다. 제2대대는 1948년 7월 21일에 황해도 남천점에 도착해서 38보안여단에 편입되었다.⁵¹⁾

현재까지 확인된 기록을 종합해보면 38보안여단은 1948년 8월에 38경비여단으로 개편되었다. 최현에게 부여된 ‘제3경비여단장’이라는 직무명은 뒤에 경비여단이 2개 여단으로 확편된 이후에 붙여진 명칭이다. 처음 조직된 38경비여단의 본부도 38보안여단과 마찬가지로 황해도 사리원에 있었다. 여단 참모장은 38보안여단 제7대대장이었던 김성욱이 맡았다. 내무국은 진남포의 내무국 독립여단을 ‘제1독립여단’으로 불렀고 38경비여단을 ‘제2독립여단’으로 불렀다.⁵²⁾

38경비여단의 창설을 주도한 인물은 김일성이었다. 그는 강계에서 활동하던 최현을 평양에 불러 여단장으로 임명하고 남한 군·경에 맞서 38선을 보위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경비여단의 병력확보문제, 무장장비, 기구체계, 지휘관 임명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현은 경비여단 본부에 도착한 즉시 38선의 최전선에 배치된 초소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38경비여단은 창설 초기에 서부 해안지역부터 중부의 철원일대까지 38선 경비를 담당했다. 그러나 병력이 부족해 1개 소대·분대와 2~3명으로 구성된 초소가 각각 분산되어 넓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최현은 부임 직후 경비초소 사이에 공백지대가 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부 경비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대표적으로 38경비여단은 1949년 이른 봄까지 황해도 웅진군 국사봉 일대에 전기철조망을 설치하고 100m 간격으로 전등을 달았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지방의 당·인민위원회에

51) *G-2 Weekly Summary*, No.157(1948.9.10~9.17), 『북한정보요약』 4권, 249쪽.

52) *G-2 Weekly Summary*, No.157(1948.9.10~9.17), 『북한정보요약』 4권, 249~250쪽.

서 공급받았고,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을 동원했다.⁵³⁾

이와 함께 내무국은 1948년 8월 14일 38경비여단에 제8대대를 신설했다. 대대본부는 강원도 양양군 상평리의 구 탄광회사 자리에 설치되었다. 제8대대는 강원도·함경도·황해도의 지방보안대대에서 선발된 700명의 병력을 기간으로 신설되었다. 제8대대 예하에는 3개 중대가 있었는데, 제1중대는 양구에 주둔했고 제2중대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주둔했다.⁵⁴⁾

1948년 9월에 내무성이 창설된 직후 38경비여단의 편제와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표 2〉 38경비여단의 편제와 지휘관(1948.9)⁵⁵⁾

상급부대	하급부대	지휘관	중대
경비여단	여단본부(사리원)	여단장 최현 대좌	
제5대대	대대본부(사리원), 191중대(사리원), 193중대(사리원), 195중대(사리원)	대대장 리충익 소좌	3개
제6대대	대대본부(남천집), 171중대(남천집), 173중대(여현), 175중대(연백)	대대장 탁운도 소좌, 참모장 리민 총위	3개
제7대대	대대본부(해주), 151중대(해주 취야리), 153중대(해주 강정리), 155중대(업천), 157중대(소남리), 159중대(계정)	대대장 최춘삼 소좌, 참모장 홍현삼 총위, 후방 부대대장 리태빈 총위, 1과장 김윤벽 대위, 2과장 리철 대위, 151중대장 박영은 대위, 153중대장 김종호 대위, 155중대장 전상배 대위, 159중대장 리기은 대위	5개

53) 오찬홍, 『한생을 싸움의 길에서』, 21~23쪽, 61~63쪽.

54) *G-2 Weekly Summary*, No.157(1948.9.10~9.17), 『북한정보요약』 4권, 251쪽.

55) 다음 자료를 종합해서 작성했다. *G-2 Weekly Summary*, No.157(1948.9.10~9.17), 『북한정보요약』 4권, 252~253쪽; *G-2 Weekly Summary*, No.158(1948.9.17~9.24), 『북한정보요약』 4권, 289~290쪽, 294쪽.

상급부대	하급부대	지휘관	중대
제8대대	대대본부(양양 상평리), 1중대(양구), 2중대(기사문리)		2개
제9대대	대대본부(철원), 211중대(연천 전곡리), 212중대(화천), 213중대(인제), 214중대(양양)	대대장 김종환 소좌, 211중대장 송요근 총위, 212중대장 조판길 총위, 213중대장 천을 대위, 214중대장 신대식 총위	4개

5개 대대 중 제7·9대대는 38보안여단에 있던 부대이고 제6대대는 내무국 독립여단 제2대대의 후신이다. 제5대대와 제8대대는 38경비여단 창설 이후에 신설된 부대이다. 38경비여단의 예하부대 중 제6·7·8·9대대는 전투대대였고 제5대대는 여단의 예비대대였다.⁵⁶⁾

38경비여단의 지휘부를 살펴보면 여단장 최현은 항일연군 출신이다. 그는 제1사단 3연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48년 8월 초에 여단장으로 부임했다. 제5대대 참모장 리민은 진남포의 내무국 독립여단 제2대대 참모장을 역임했다. 제7대대 참모장 홍현삼은 만주 출신으로 해방 이후 중국공산당 동북민주연군에 참가했다. 입북 이후 황해도 연백군의 지방보안대에서 중대장을 맡았다. 제7대대 후방 부대대장 리태빈은 군단위의 지방보안대장 출신이고 제7대대 151중대장 박영은은 평북 군단위 지방보안대 중대장 출신이다. 제7대대 153중대장 김중호는 평양학원 졸업생으로 지방보안대 중대장을 역임했으며 제7대대 155중대장 전상배는 157중대 중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⁵⁷⁾

간부들의 경력을 분석해보면 최현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으로 ‘인민군 계통’에서 활동하다가 1948년 8월에 처음으로 ‘내무군계통’에 배치된 인물이다. 최현을 제외하고 제5대대·제7대대 참모장 리민·홍현삼, 부대대

⁵⁶⁾ G-2 Weekly Summary, No.158(1948.9.17~9.24), 『북한정보요약』 4권, 294쪽.

⁵⁷⁾ G-2 Weekly Summary, No.157(1948.9.10~9.17), 『북한정보요약』 4권, 252~253쪽.

장·중대장 리태빈·박영은·김종호·전상배 등 대대장 이하 간부는 대부분 해방 직후부터 북한지역의 보안대에서 활동하다가 ‘내무군계통’에서 지휘관으로 성장한 사람들로 채워졌다.

북한 지도부는 1948년 8월 말에 다시 한번 38경비여단의 증편을 계획했는데 증편을 주도한 인물도 김일성이었다. 김일성은 1948년 8월 27일에 김대홍(金大弘)과 내무국장 박일우를 불러 제1경비여단을 조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김대홍을 특정해서 당일부터 제1경비여단장으로 사임하라고 지시했다.⁵⁸⁾ 38경비여단의 증편계획에 따라 제9대대가 1948년 10월 4일에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연천군으로 이전했다.⁵⁹⁾

38경비여단이 1948년 10월에 주둔지를 이전한 또 다른 이유는 소련군의 철수 때문이었다. 그해 12월에는 소련군이 철수할 예정이었다. 소련군은 해방 직후부터 1948년까지 38선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온 무력이었다. 이들이 철수할 경우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임무는 38경비여단의 몫이었다. 이에 따라 38선에 있는 소련군의 경비임무를 인수하기 위해 38경비여단이 38선의 중심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또한 주둔지 이전은 북한군 보병부대의 38선 배치와도 관련 있다. 1948년 10월부터 북한군 보병부대가 38선 접경지역에서 철수하는 소련군을 대신해 경비초소를 인계받기 위해 38선으로 이동했다.⁶⁰⁾ 북한군 제1사단 3연대의 주둔지는 강원도 철원으로 예정되었다. 이에 따라 38경비여단 제9대대는 북한군에 부대시설을 내주고 38선에 있는 소련군 전초기지를 인수하기 위해 38선 접경지역 깊숙이 배치되었다. 북한군부대는 38경비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여단의 후방에 배치되었다.⁶¹⁾

58) 김일성, 「제1경비려단을 조직할데 대하여(1948.8.27)」 『김일성전집』 8권, 263~264쪽.

59) G-2 Weekly Summary, No.164(1948.10.29~11.5), 『북한정보요약』 4권, 501쪽.

60) G-2 Weekly Summary, No.162(1948.10.15~10.22), 『북한정보요약』 4권, 449쪽.

소련군의 철수가 38경비여단의 경비임무를 주도적 역할로 변화시켰다면, 38선 충돌의 격화는 38경비여단의 전투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38선의 월별 충돌횟수는 1949년 1~6월에 9~34회였는데 비해 7~9월에는 83~119회로 3배 이상 폭증했다.⁶²⁾ 소련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3배 이상 격화된 38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8경비여단의 증편이 반드시 필요했다.

북한 지도부는 1948년 12월에 소련군 철수가 임박하자 38경비여단의 증편에 착수했다. 김일성은 12월 9일 당시 38경비여단을 각각 3,600명 병력을 보유한 2개 여단으로 증편할 계획이었다. 38경비여단은 실제로 1949년 1월에 2개 여단으로 증편되었으나 전투능력이 떨어졌다. 북한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Terenty F. Shtykov)는 2월 3일에 증편된 2개 38경비여단의 전투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38선 충돌을 책임질 2개 경비여단에 훈련된 군인과 무기·탄환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모스크바에 2개 경비여단용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상수송연료가 없어 무기 수송은 2월 말로 연기되었다.⁶³⁾

하지만 38경비여단은 1949년 6월 말에도 여전히 2개 여단 규모였고 여단은 각각 6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각 부대는 전선을 따라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이 공격할 경우에 전력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없었다. 또한 여단에는 무기가 부족했고 보유한 무기 중 절반 이상은 일본제무기와 소련제무기가 뒤섞여 있었다. 게다가 일본제무기에 필요한 탄약은 재고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소련은 1949년 6월 말까지 38경비여단에 소련제무기를 지원할 예정이었다.⁶⁴⁾

61) *G-2 Weekly Summary*, No.162(1948.10.15~10.22), 『북한정보요약』 4권, 450쪽.

62) 정병준, 『한국전쟁』, 453쪽.

63)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 『한국전쟁사의 새로운연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407~409쪽.

기존의 38경비여단 외에 1949년 1월에 신편된 부대는 '38경비 제1여단'이다. 제1경비여단은 철원에 본부를 설치했고 예하대대를 철원·양양·연천에 배치했다. 그리고 기존에 38경비여단이 담당하던 경기도 연천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38선지역의 경비임무를 인수했다. 이때 사리원에 있던 기존의 38경비여단은 '38경비 제3여단'으로 개칭되었다. 제3경비여단은 철원 서쪽부터 서해안에 이르는 38선지역 경비를 담당했다. 그 후 내무성은 황해도 금천군 시변리에 '38경비 제7여단'을 창설했다. 제7경비여단은 철원부터 해주에 이르는 38선지역 경비를 맡았다. 제7경비여단 창설 이후 사리원의 제3경비여단은 황해도 벽성군 죽천으로 이동해 해주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38선 경비를 담당했다. 38경비여단의 후방에는 38선 무력충돌에 대비해 북한군부대가 배치되었다.⁶⁵⁾ 38경비여단은 1949년 6월 말에도 2개 여단 규모였으므로 제7경비여단의 창설시기는 7월로 추정된다.

〈표 3〉 38경비여단의 창설·경비지역 위치(1949.7)

구분	여단장	창설시기	38선 경비지역 (서해안~동해안)	본부 위치	본부 이동
제3여단	최현	1948.8	서해안 ~ 황해도 해주	황해도 벽성	사리원 → 벽성
제7여단	리익성	1949.7	황해도 해주 ~ 강원도 철원	황해도 금천	
제1여단	오백룡	1949.1	강원도 철원 ~ 동해안	강원도 철원	

1949년 7월까지 창설된 3개 38경비여단은 38선 전투를 책임질 수 있는

64)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서울: 에디터, 2003), 56쪽.

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권, 260~261쪽;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34쪽; 김일성, 『김일성전집』 8권, 264쪽.

병력·무기·탄환이 부족했지만, 1949년 7~12월 현재 내무성 직속 5개 경비여단 중에는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5개 경비여단의 총병력은 24,600명이었는데 38경비 제1·3·7여단이 5,300명·7,000명·5,300명으로 총 17,600명(71.5%)이었고, 국경경비 제2여단과 철도경비 제5여단이 각각 3,500명이었다.⁶⁶⁾ 북한 지도부는 38선 전투를 가장 중시해 5개 경비여단 병력 중 71.5%를 38경비여단에 배치했으며, 3개 38경비여단 중에도 용진반도 북쪽에 위치한 제3경비여단에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했다. 이 같은 배치는 ‘1949년도 제한전 구상’과 연관되어 있었다.

2. 38경비여단의 지휘관·배치와 제한전 구상

1948년 8월에 창설된 38경비여단은 1949년 7월에 이르러 3개 경비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1경비여단장은 오백룡(吳白龍), 제3경비여단장은 최현, 제7경비여단장은 리익성(李益星)이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⁶⁷⁾ 38경비여단의 정확한 명칭은 “내무국 경비처 제1경비여단·제3경비여단·제7경비여단”이다.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부기관의 명칭을 빼고 “제3경비려단”으로 불렀다.⁶⁸⁾

그런데 김일성의 저작에는 제1경비여단 창설 당시 여단장이 김대홍으로 기록되어 있다.⁶⁹⁾ 그 후 김대홍은 1949년 1월에 제1중앙군관학교 군사부교장으로 전임되었다.⁷⁰⁾ 김대홍의 후임은 알 수 없다. 오백룡이 내

66) 유동호 편역, 『주한 미 군사고문단 문서(반기보고서 1949.7~12)』 I (계룡: 육군 군사연구소, 2023), 8쪽.

67)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70~71쪽;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서울: 고려원, 1990), 155쪽.

68) 오찬홍, 『한생을 싸움의 길에서』, 140쪽.

69) 김일성, 「제1경비려단을 조직할데 대하여(1948.8.27)」 『김일성전집』 8권, 263~264쪽.

무성 경비국에서 여단장을 맡았던 것은 분명하다.⁷¹⁾ 그는 1949년 12월부터 “내무성 산하 38경비 제1여단장”으로 활동했다.⁷²⁾ 따라서 초대 제1경비여단장은 김대홍이며 2대 제1경비여단장은 알 수 없고 3대 제1경비여단장은 오백룡이다.

38경비여단장에 임명된 인물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이들의 해방 전후 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38경비여단 여단장의 경력⁷³⁾

직무	이름	해방 이전 경력	해방 이후 경력
제1 여단장 (1대)	김대홍 (金大弘)	1917년 평북 철산 출생. 1936년 만주에서 항일유격대 입대. 김책과 함께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에서 활동.	해방 직후 입북해 1946년 1월부터 평북 희천군 내무서 서장과 평북경비대 대장으로 활동.
제1 여단장 (3대)	오백룡 (吳白龍)	1914년 함북 회령 출생. 1933년 중국 연길현에서 항일유격대 입대. 1937년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김일성부대)에서 경위중대장으로 보천보전투 참전. 1939년 제1로군 제2방면군 제7연대장 역임. 1942년부터 보로실로프의 소련극동군 첩보부대에 배속되어 첩보활동.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함북 웅기상륙작전에 참전. 1946년 8월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창설에 참여. 1946년 10월부터 철도보안대 군사부대장 역임.

70)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20쪽.

71)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 47쪽.

72) 강만길·성대경, 『인명사전』, 283쪽.

73) 경력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대홍·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20쪽; 오백룡 [강만길·성대경, 『인명사전』, 283쪽; 林隱, 『北韓 金日成王朝秘史』 (서울: 한국양서, 1982), 126쪽; 김선호, 『조선인민군』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298쪽], 최현 [강만길·성대경, 『인명사전』, 509쪽;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69~370쪽; 김선호, 『조선인민군』, 453쪽], 리익철 [강만길·성대경, 『인명사전』, 361~362쪽; 김선호, 『조선인민군』, 328쪽; 454쪽].

직무	이름	해방 이전 경력	해방 이후 경력
제3 여단장	최현 (崔賢)	본명 최득권. 1907년 중국 훈춘현 출생. 1924년 항일운동에 참가. 고려공산청년회 가입. 1926년 연길감옥 투옥. 1932년 연길반일유격대 입대. 1936년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1사 제1연대장 역임. 1937년 보천보 전투 참전. 1938~1939년 제1로군 제2방면군 제2군 제4사 제13연대장과 제3방면군 제13연대장 역임. 1940년 소련 이동. 소련극동군 제88독립여단에서 제1대대 제1중대장 역임.	1945년 9월 김일성과 함께 원산으로 입북. 1946년 중순 보안간부훈련소 창설에 참여. 1948년 2월 북한군 제1사단 제3연대장 역임.
제7 여단장	리익성 (李益星)	1911년 함북 경성 출생. 중국 연길현 은진중학 졸업. 1935년 남경 혁명동지회 가담. 1936년 조선민족혁명당 입당. 1937년 남경 중앙육군군관학교 보병과 제10기 졸업. 1938년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강릉분교 한인반 소대장 역임.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에 참여해 제2구대장 역임. 1941년 화북으로 이동. 1942년부터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부지대장 역임. 1945년 초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 학생대대 제1중대장 역임.	1945년 11월 동북지역에 도착해 조선의용군 제5지대장 역임. 1946년 6월 입북. 1946년 8월부터 제2사단 참모장으로 활동. 1947년 8월 내무국 독립여단장으로 임명.

초대 제1경비여단장 김대홍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이며 김책(金策)과 함께 제3로군에서 활동했다. 3대 제1경비여단장 오백룡도 항일연군 출신이다. 그는 1937년부터 김일성부대에서 경위중대장·제7연대장으로 활동했다. 제3경비여단장 최현은 동북항일연군의 대표적인 유격대 지휘관이었다. 그는 1936년 3월부터 1940년 말까지 동북항일연군 제2군과 제1로군에서 연대장을 맡아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전개했다. 일제는 유격대 간부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최현은 제1로군 총사령관 양정우(楊靖宇)와 함께 최고 현상금 1만 엔이 내걸릴 만큼 거물급이었다.⁷⁴⁾

최현은 1948년 8월에 38경비여단장에 임명된 후에 1949년 5월의 송악산 전투를 비롯해 대표적인 38선 전투를 진두 지휘했다.⁷⁵⁾

제7경비여단장 리익성은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1937년에 중국에서 정규군관학교 보병과를 졸업한 인물이다. 그는 1942년부터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부지대장을 맡아 직접 부대를 지휘해서 대일전을 전개했다. 특히 리익성은 1943년부터 조선의용군에서 전개된 분파투쟁 당시 무정(武亭)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이다.⁷⁶⁾ 그는 해방 직후에도 동북지역에서 조선의용군 제5지대장과 동북인민자위군 연변군분구 참모장을 맡았다. 그는 2개 연대를 지휘해 연변지역에서 토비숙청전투를 전개했다.⁷⁷⁾

38경비여단의 여단장들은 모두 해방 전에 실전경험과 부대지휘경험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특히 최현은 여단장 중에서 해방 전에 실전경험이 가장 풍부했기 때문에 38선 충돌이 가장 빈번한 서해안~해주지역을 관할하는 제3경비여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들 중 최현과 오백룡은 김일성의 직계인물이었고, 리익성은 조선의용군 사령관 출신인 민족보위성 포병부상 무정과 정치적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결국 김일성은 38경비여단의 지휘관에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배치하고 무정과 밀접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의용군 출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했다.

38경비여단의 지휘부는 참모부, 문화부, 후방부로 구성되었다. 여단 직속부대는 정찰중대, 통신중대, 군의중대, 경비소대, 군악소대가 있었다. 경비여단의 병사들은 주로 경무기로 무장했다. 중대는 보병총, 기관

74)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224쪽.

75) 오찬홍, 『한생을 싸움의 길에서』, 78-86쪽.

76) 조선의용군의 분파투쟁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서울: 나남, 2001), 193-233쪽.

77)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편, 『해방초기의 연변』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0), 271-272쪽.

단총, 기관총으로 무장했고, 대대는 기동에 편리한 기관총, 82mm박격포, 45mm반전차포로 무장했다.⁷⁸⁾ 경비여단에는 보병대대와 함께 여단 직속으로 기병대(騎兵隊)도 배치되었다. 제3경비여단의 담당지역은 산이 많고 도로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기병대의 활동이 중시되었다. 제3경비여단 직속 기병대는 193필의 군마를 보유하고 있었고 군마훈련에 집중했다. 경비여단의 예하대대는 보병중대와 함께 직속으로 정찰소대와 중기중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비여단의 주둔지에는 반전차포진지와 방어진지가 구축되었다.⁷⁹⁾

38경비여단의 임무는 38선 지역에서 남한의 공격을 저지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으로 침입하는 ‘간첩·테러분자’와 월남하는 ‘반동분자’를 적발·체포하며, 38선을 오고가는 밀수업자 등 위법행위자를 단속하는 것이었다. 경비여단이 체포한 간첩들은 여단에서 취조를 받은 후 내무국에 이첩되었다. 경비여단은 주둔지역의 노동당·인민위원회·내무기관·자위대와 연계해 경비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주둔지역의 내무서·분주소와 긴밀히 연계해 내부에 잠입한 “불순적대분자”들을 적발했다. 경비여단의 예하부대는 남한의 군경이 도로를 따라 공격해올 것에 대비해 도로를 장악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었고 방어진지를 견고히 구축했다. 그리고 경비여단의 담당경비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경비초소는 중요고지, 철도, 도로분기점, 산능선, 오솔길을 비롯해 국군이 침입할만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초소 간의 거리가 멀고 초소에 배치된 경비대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초소 주변에 철도망을 설치하고 참호와 화점도 구축했다. 화점에는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비밀통로가 설치되었다.⁸⁰⁾

78) 김일성, 「제1경비려단을 조직할데 대하여(1948.8.27)」 『김일성전집』 8권, 264쪽.

79) 김일성, 「38선 경비근무를 강화하자(1948.9.22)」 『김일성전집』 8권, 303~311쪽.

80) 김일성, 「제1경비려단을 조직할데 대하여(1948.8.27)」 『김일성전집』 8권, 264~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8월부터 38경비여단에 기본인무인 경비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비사업은 38선에 있는 철도, 도로분기점, 적이 침입할 수 있는 지점과 중요고지를 점령하고 잠복감시와 순찰을 배합하도록 했다. 각 경비초소는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위장했다. 경비초소에 배치되는 경비대원들은 반드시 3명 이상 집단적으로 파견하고 개별적으로 다니거나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행동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비상소집훈련·강행군훈련·사격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지형에 대한 연구와 일상적인 전투준비를 강화하고, 군사정치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모든 군인들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⁸¹⁾

북한정부는 1949년에 들어서 38선 무력충돌이 준전시수준으로 격화되자 제3경비여단장 최현에게 남한의 무력침입을 철저히 저지하라는 특별명령을 하달했다. 1949년 1월만 해도 황해도 장풍군 영남면 용흥리의 빙고동 전투를 비롯해 몇 차례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으며 매일 총격과 포격이 오고갔다. 내각 수상 김일성은 최현에게 남한의 38선 침범을 철저히 분쇄하고 전투준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방어진지를 견고히 구축할 것, 전투역량을 방어진대의 주요방향에 집중할 것, 경비여단의 전체부대에 편제대로 병력을 충원하고 정량대로 탄약을 지급할 것, 저격수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것을 강조했다. 제3경비여단의 핵심 방어진역은 구암저수지였다. 아울러 38선에 근접해 주둔한 최전선부대를 신속히 지휘하기 위해 제3경비여단 본부를 38선에서 가까운 황해도 평산군 남천면 일대로 이전시켰다.⁸²⁾

268쪽.

81) 김일성, 「38선경비대의 임무(1948.8.7)」 『김일성전집』 8권, 198~202쪽.

82) 김일성, 「적들의 무장도발책동을 철저히 분쇄하자(1949.2.2)」 『김일성전집』 8권, 98~100쪽.

3개 경비여단 중 제7경비여단은 황해도 금천군에 배치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38선 충돌과 제한전에서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금천군은 38선 접경지대일 뿐만 아니라 평양·원산·서울 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모두 이 군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과 북 모두 금천군을 공격의 유리한 지점으로 삼기 위해 무력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제7경비여단은 금천군인민위원회로부터 일부 건물을 인수해 부대시설로 사용했고, 금천군에 있는 중학교 교사도 사용했다. 여단의 병영·식당·훈련장은 인근 농민들의 토지를 수용해 건설했다.⁸³⁾ 제7경비여단의 임무는 공격전이 아니라 평양·원산 방면에 대한 방어전이었다. 38경비여단은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38선을 따라 제3경비여단-제7경비여단-제1경비여단의 순서로 배치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 지도부는 1949년 6월에 38선 후방에 있던 북한군을 접경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평양방면의 경우 제1사단 제2연대·탱크대대·자주포대대가 황해도 남천점으로 이동하고, 제1사단 제1연대 제1대대가 사리원에서 남천점으로 전진 배치되며, 제1사단 기관총대대는 38경비여단의 제2선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원산방면의 경우 제3사단에서 제8대대를 포함한 2개 대대가 38선 접경지역으로 전진 배치될 예정이었다. 또한 탱크 10대로 편성된 탱크부대가 평양에서 원산 남쪽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 부대이동은 38선 경비를 보강하고 유사시 다른 북한군부대의 전진 배치를 위해 실시되었다.⁸⁴⁾ 북한 지도부는 38선 전투임무를 38경비여단에 전담시킨 상태에서 제한전 감행 시에 전력을 긴급히 증강하기 위해 북한군을 전진 배치한 것이다.

83) 김일성, 「일군들은 군대원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자(1949.9.21)」 『김일성전집』 8권, 193~198쪽.

84) 「슈티코프-비신스키(1949.6.22)」, 외무부 번역,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외교문서(보충문헌, 이하 보충문헌)』 (서울: 외무부, 1994), 37쪽.

38경비여단은 1949년 1월부터 38선전투를 완전히 전담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949년 1~9월 동안 38선 전체지역에서 432회의 ‘대북(對北) 침입’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정부의 군대와 경찰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격퇴한 것은 모두 “공화국 경비대”였다. 특히 1949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발생한 황해도 송악산전투에서 국군 제11연대와 격전을 벌인 부대와 7월에 강원도 양양에 침투한 호림부대 제5대대·제6대대를 격퇴한 부대도 “인민공화국 경비대”였다.⁸⁵⁾

3개 경비여단은 38선 경비임무와 38선 전투를 책임졌고 국군의 전력을 탐지하는 첩보활동도 수행했다. 그 후 내무성은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제3경비여단을 강화하기 위해 내무성 경비국 직속 기마대를 제3경비여단에 편입시켰다. 즉 중요도시에 배치되어 보안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해주 제1기마대와 철원 제5기마대를 제3경비여단에 배속했다.⁸⁶⁾ 각 38경비여단의 편제상 정원은 8,212명이었고 1개 여단은 6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38경비여단은 38선을 따라 서해안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240km의 경계선을 제1선에서 경비했다.⁸⁷⁾

38경비여단 부대원들의 소속과 명단이 들어있는 자료를 보면 예하부대의 구성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제1경비여단은 예하에 제1~6대대, 후방부, 문화부 등으로 편성되었고, 제3경비여단은 제1~6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120mm포대대, 직속 고사기관총소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제7여단은 제1~6대대, 직속 정찰중대, 직속 고사기관총소대 등으로 편성되었고, 여단본부에 문화처 청년사업부, 간부부, 행정경리과 등을 두고 있었다. 대대 예하에는 직속으로 중기중대, 반전차소대, 공병소대, 정찰

85) 「三八연선 무장충돌 조사결과에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사위원회 보고서(1949.10.8)」 『자료집』 6권, 321~326쪽.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권, 703~704쪽.

87)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 中卷, 34쪽.

소대, 경비분대 등이 편성되었다.⁸⁸⁾

〈그림 1〉 38경비여단의 전투부대와 기마대



*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

⁸⁸⁾ 다음 자료에 별첨된 “명단 및 통계”에 실린 부대원의 “현직명”을 참고했다. 내무성 제1처장 위대성, 『인민군 제2정치학교 학생취천에 대하여(11인반, 1950. 6.11)』 (평양: 내무성, 1950), NARA, RG 242, SA 2006, Box 16, Item 47.

북한 지도부가 1949년 7월까지 38경비여단을 3개 여단으로 증편한 것은 북한의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과 직결되어 있다. 1949년에 들어서 38선에서는 남북의 무력충돌이 격화되었다. 각 시기별 38선 충돌의 빈도를 살펴보면 1949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충돌의 빈도가 급격히 많아졌다. 이것은 38경비여단이 북한군의 지원 아래 ‘위력정찰과 견제’를 펼쳤기 때문이다. 38경비여단은 38선 경비라는 임무 외에도 북한군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차적 임무도 있었다. 북한군의 상황은 국군이 38선 경비임무 때문에 훈련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었다.⁸⁹⁾

북한 지도부가 경비여단을 증설한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이들의 제한전 구상 때문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1949년 3월 스탈린(Joseph V. Stalin)과 모스크바회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쟁준비의 핵심은 기계화부대·비행사단의 창설,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사단의 입북, 38선에서 제한전의 전개였다.⁹⁰⁾ 김일성은 8월 12일에 소련 대사 슈티코프에게 38선 이남지역인 강원도 삼척에 “해방구역”을 창설하는 구상을 제기했으며, 8월 14일에는 옹진반도를 일부 점령해서 38선의 경계선을 120km 단축하는 계획을 제시했다.⁹¹⁾

김일성은 삼척 해방구 창설과 옹진반도 부분 점령 등 제한전을 통해 미국의 개입여부와 남한의 저항강도를 탐색한 뒤에 상황이 호전되면 소련의 동의를 얻어 전면전(全面戰)을 펼칠 계획이었다. 삼척과 옹진은 지리·교통문제로 국군의 병력 전개와 통합적인 진술지휘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두 지역을 점령하면 상당한 규모의 국군 병력을 38선의 양쪽 극단에 묶어둠으로써 북한의 주공격방향(의정부-서울축선)에 대한 남한 측의

89)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中卷, 34쪽.

90) 외무부 번역, 『한국전 문서요약』(서울: 외무부, 1994), 5~6쪽, 11쪽.

91) 외무부 번역, 『한국전 문서요약』, 11쪽.

방어를 소홀하게 만들 수 있었다.⁹²⁾

38경비여단의 38선 경비지역을 구분해보면 제3경비여단은 서해안~해주, 제7경비여단은 해주~철원, 제1경비여단은 철원~동해안을 담당했다. 이 가운데 최현이 지휘하는 제3경비여단이 담당한 관할지역의 이남에 바로 웅진반도가 있었고, 오백룡이 지휘하는 제1경비여단이 담당한 관할지역의 이남에 삼척이 있었다. 따라서 '1949년도 제한전 구상'의 핵심은 김일성의 최측근이 지휘하는 38경비여단이었고, 38경비여단을 통한 제한전의 결과는 '1949년도 전면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였다.

북한 지도부는 1949년 5월부터 38경비여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38선에서 제한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제한전에 처음 투입된 부대는 최현이 지휘하는 제3경비여단이었다. 제3경비여단은 1949년 5월 26일에 기마대를 포함한 1,3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국사봉에서 웅진군 교정면 비파리까지 8km를 침공했다. 이어서 제3경비여단은 8월 4일에 다시 2개 대대와 76mm포·120mm박격포를 동원해 두락산 국사봉과 은파산·작산 일대를 침공했다. 이들은 은파산을 점령했다가 8월 8일 국군의 총반격으로 퇴각했다.⁹³⁾

또한 북한 지도부는 1949년 8월 초에 강원도지역에서도 38선 전투를 개시했다. 북한의 "국경경비대"는 8월 6일에 강원도지역에서 침공을 개시해 38선 이남지역을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주요 공격지점은 인제군 이남지역이었으며, 노동당은 이 전투에서 탄약·식사 공급과 참호 구축을 위해 인제군 주민 11,264명을 동원했다. 경비대는 진지를 고수하다가 8월 20일에 38선 이북지역으로 퇴각했다.⁹⁴⁾ 당시 서해안부터 동해안

92) 1949년 8월 북한의 웅진 부분점령과 삼척해방구 설치 구상은 다음을 참고 바람. 정병준, 『한국전쟁』, 404~416쪽.

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권, 508쪽, 516~517쪽.

94) 노동당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8월 6일 오전 4시부터 우리 공화

까지 38선 접경지역에 배치된 북한군부대는 모두 38경비여단의 후방에서 제2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⁹⁵⁾ 결국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웅진반도와 인제 이남지역을 공격한 부대는 모두 38경비여단이며, 제한전의 주력부대는 최현의 제3경비여단과 오백룡의 제1경비여단이었다. 이와 달리 리익성이 지휘하는 제7경비여단은 제한전 구상에서 평양·원산방면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아 공격전에서 제외되었다.

북한 지도부의 '1949년도 제한전 구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먼저 웅진반도를 점령하고 동쪽으로 진출해 개성지역까지 점령한다. 둘째, 만약 남한 군대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남쪽으로 계속 진격하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면 방어선을 1/3로 단축한 상태에서 경계선을 굳건히 방어한다.⁹⁶⁾ 무엇보다 북한 지도부는 제한전이 성공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은 웅진-개성지역을 점령한 후에 국제정세가 양호하면 남쪽으로 더 깊이 진격하려고 구상했고 2주 또는 2개월이면 남한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⁹⁷⁾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한전 구상을 다시 한번 실행에 옮겼다. 내무상 박일우는 1949년 10월 초에 제3경비여단장 최현에게 남측이 38선의 북쪽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2개 고지 중 하나를 탈환하라고 지시했다. 이 고지는 38선에서 1.5km 북쪽에 위치한 은파산

국 국경경비대 동무들은 꺾기하여 잠시간에 악당도배를 물리치고 남반부 일부 인민들을 해방시켜 8월 20일까지 진지 고수에 발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제30차 인제군 남면당위원회 회의록(1949.8.23.)」,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한국사학보』 제28호(2007), 138쪽에서 재인용.

95) 「슈티코프→비신스키(1949.6.22)」, 외무부 번역, 『보충문헌』, 37쪽.

96) 「툰킨→그로미코(1949.9.14)」, 외무부 번역,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외교문서(기본문헌, 이하 기본문헌)』 (서울: 외무부, 1994), 31쪽.

97) 「툰킨→비신스키(1949.9.3)」, 외무부 번역, 『보충문헌』, 41쪽.

이었다.⁹⁸⁾ 앞서 북한 지도부가 제1·7경비여단을 각각 5,300명으로 편성한 데 비해 제3경비여단을 7,000명으로 편성한 이유는 바로 웅진반도 부분 점령을 제한전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내무성의 지시에 따라 제3경비여단은 10월 14일에 제2·6대대와 1개 포병대대를 투입해 국군 제2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은파산을 공격했고, 은파산을 완전히 점령한 후 11월 15일까지 부대를 주둔시켰다.⁹⁹⁾

제3차 은파산전투 직후 북한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는 제3경비여단의 공격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소련지도부로부터 강력한 경고조치를 받았다.¹⁰⁰⁾ 그만큼 소련은 38선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38선에서 제한전을 감행했고, 1949년 11월 말에 이르러 1949년 내내 격전지였던 국사봉·292고지·은파산 등 웅진반도의 주요고지를 모두 장악했다. 38경비여단은 그 후 6·25전쟁 직전까지 계속해서 고지를 장악하게 되었다.¹⁰¹⁾

IV. 맺음말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6년 6월에 38선을 경비하기 위해 '38경비보안대'를 창설했으며 38경비보안대는 1947년 4월부터 소련군을 대체해 실질적

98) 「슈티코프→그로미코(1949.10.31)」, 외무부 번역, 『기본문헌』, 55쪽.

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권, 518~519쪽.

100) 그로미코는 슈티코프가 모스크바의 지시, 즉 38선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말라는 명령을 엄격히 이행하는 대신에 이 문제의 협의에 참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로미코→슈티코프(1949.11.20)」, 외무부 번역, 『기본문헌』, 57쪽.

101)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200쪽.

으로 38선 경비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가을에 남북교역이 재개되고 소련군이 38선 통제권을 인계하려하자 9·10월에 38경비보안대를 38경비보안대대(제7·9대대)로 증편했다. 그리고 북한군이 창설되기 직전인 1948년 1월 28일에 38경비보안대대를 '38보안여단'으로 개편했다. 북한정치세력은 1948년 여름부터 38선 충돌이 격화되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자 그해 8월에 38보안여단을 '38경비여단'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내무국 독립여단 제2대대를 38보안여단으로 통합하고 8월 14일에 강원도 양양에 제8대대를 신설했다.

북한 지도부는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철수하자 1949년 1월에 38경비여단을 2개 여단으로 증편했다. 사리원에 있던 기존의 38경비여단은 '38경비 제3여단'으로 개편되었고 강원도 철원에 '38경비 제1여단'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1949년 7월에 황해도 금천에 '38경비 제7여단'이 창설되었다. 38경비여단은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38선을 따라 제3경비여단-제7경비여단-제1경비여단의 순서로 배치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군은 여단의 후방에서 제2선을 경비했다.

북한 지도부가 1949년 1월부터 38경비여단을 3개 여단으로 증편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들이 1949년 초에 수립한 '제한전 구상'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1949년 8월에 소련대사 슈티코프에게 강원도 삼척에 '해방구'를 창설하는 구상과 옹진반도를 일부 점령해서 38선의 경계선을 120km 단축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일성은 삼척과 옹진반도의 제한전을 통해 미국의 개입여부와 남한의 저항강도를 탐색하고 이를 빌미로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 전면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1949년 5~8월에 38경비여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38선에서 제한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38경비여단은 2개 대대 이상을 투입해 옹진반도 이북지역과 강원도 인제군 등에서 38선 이남지역을 침공했다. 소련은 북한이 제한전 구상을 실행에 옮길 경우에 미군과 군사적 충

들을 우려해 38경비여단의 전면적 공격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9년 10월까지 제1·3경비여단을 투입해 옹진반도와 강원도에서 제한전을 전개했다. 전투결과 삼척의 해방구 창설은 실패했지만, 옹진반도에서는 1949년 내내 격전지였던 주요 고지를 11월 말에 모두 점령했으며 6·25전쟁 직전까지 계속해서 고지를 장악했다.

결국 북한 지도부의 '1949년도 제한전 구상'은 38경비여단의 증편을 통해 준비되었고 김일성의 최측근이 지휘한 38경비여단의 전투를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 이와 같은 제한전 구상은 전면전 계획에도 영향을 끼쳤다. 38경비여단이 38선 전투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북한군 주력부대는 전투임무에서 제외되어 38선의 제2전선과 후방에서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은 38경비여단이 옹진반도의 주요 고지를 차지함에 따라 6·25전쟁 개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지리적·전술적 우위 아래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 접수: 2024년 5월 2일 / 심사: 2024년 5월 28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참고문헌】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1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서울: 선인, 2003.
- 김선호,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 서울: 함성, 1989.
-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서울: 나남, 2001.
-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 林隱, 『北韓 金日成王朝秘史』, 서울: 한국양서, 1982.
- 장준의,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2006.
-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上卷·中卷, 서울: 兵學社, 1977.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서울: 고려원, 1990.
- 중앙일보특별취재반 편,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서울: 중앙일보사, 1993.
- 토르쿠노프 저,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서울: 에디터, 2003.
-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한국사학보』 제28호, 2007, 123~178쪽.
-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 『한국전쟁사의 새로운연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45~471쪽.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1·6·7·9·26·30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1988·1989·1990·1997·1998.
-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1945.8~1950.6)』 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 김일성, 『김일성전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지시문철』, 평양: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194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1205.
- 서병화, 『幹部履歷書』, 평양: 민족보위성, 1949,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
- 오찬홍, 『한생을 싸움의 길에서』,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8.
- 외무부 번역, 『한국전 문서요약』, 서울: 외무부, 1994.
- 외무부 번역,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외교문서(기본문헌)·(보충문헌)』, 서울: 외무부, 1994.
- 유동호 편역, 『주한 미 군사고문단 문서(반기보고서 1949.7~12)』 I, 계룡: 육군군사연구소, 2023.
-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 편, 『해방초기의 연변』,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2000.
-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승리』, 북경: 민족출판사, 1992.
- 최봉식, 『대성산혁명렬사릉』,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朝鮮共產黨文件資料集』,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4권,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North Korea's 38th Parallel Security Force and Limited War Plan before the Korean War

Kim, Seon-ho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Abstract

In June 1946,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created the "38th parallel Security Guard" with the goal of guarding the 38th parallel. Subsequently, the units guarding the 38th parallel were reorganized into the 38th parallel Security Guard Battalion in October 1947 and the 38th parallel Guards Brigade in August 1948. The North Korean leadership expanded the 38th parallel Guard Brigade to three brigades in January-July 1949. The reason behind this was the North Korean leadership's plans for a limited war in early 1949. In August 1949, Kim Il-sung suggested to the Soviet ambassador Shtykov, a plan to build a "liberated area" in Samcheok, Gangwon-do, and partially occupy the Ongjin Peninsula in Hwanghae-do. Through this plan, Kim Il-sung intended to acquire information about US intervention and the fighting potential of the South Korean army which earned Stalin's agreement on starting an all-out war.

Between May and August of 1949,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verthrew the 38th parallel Guard Brigade and began a limited war on the 38th parallel. However, Stalin did not approve of the 38th parallel Guard Brigade's attack, fearing a military clash with the US army. Despite the opposition from the Soviet Unio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rdered an attack on the 38th

parallel Guard Brigade in October 1949 to launch a limited war. As the 38th parallel Guard Brigade took charge of the 38th parallel, the North Korean Army was excluded from the combat mission and was able to prepare for a full-scale war. As the 38th parallel Guard Brigade occupied the main highlands of the Ongjin Peninsula at the start of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 Army was able to carry out attacks at a geographical advantage on the Western front.

Keywords: 25th Army Command of the Soviet Army, 38th parallel Guard Brigade, 38th parallel's local war, Ongjin Peninsula, J. V. Stalin, T. F. Shtykov, Choi Hyun

김선호 (Kim, Seon-ho)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관심주제는 북한 내무군의 형성과 6·25전쟁기 북한체제의 변화이다. 주요 연구로는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2020), 「북한의 서울점령기 인민군 원호사업과 군기기급헌납운동」(2022), 「북한군 초대 총참모장 강건의 삶과 활동」(2024) 등이 있다.

일반논문

“독일은 제2의 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한국전쟁의 그늘에서 서독 재무장에 반대하는
여성 평화 운동가의 활동

막스 알텐호펜 (튀빙겐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후 새로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한 릴리 베흐터(독일민주여성연맹)와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서독여성평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베흐터는 국제여성민주연맹의 서독 대표로서 전쟁 중에 북한을 방문한 후 유엔군의 북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강연 시리즈를 시작한 반면, 파스빈더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재무장에 반대하다가 여성 평화 협회를 설립하고 평화 대회를 조직했다. 두 여성에게 한국전쟁은 분단 독일의 상황을 전망할 수 있게 한, 활동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베흐터와 파스빈더는 정치적 배경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고 반공주의의 기치 아래 법적, 정치적 박해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여성 평화 운동가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젠더 관점에서 이중적으로 소외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 당시 서독 사회와 평화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141>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전략연구소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AKS-2021-SRI-2200002). 2023년 9월에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서 열린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글이다. 저자는 질문과 코멘트해주신 모든 학회 선생님들과 본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주제어: 서독, 한국전쟁, 재무장, 평화 운동, 모성 페미니즘, 릴리 베헤터, 클라라 마리 파스 빈더

I. 서론

표현주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는 1951년에 그린 ‘한국에 서의 학살(Massacre en Corée)’ 그림에 보면 왼쪽에 여성과 아이들, 오른쪽에는 총과 칼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보인다. ‘냉전의 게르니카’로 불리는 이 작품은 특히 미군들이 학살한 민간인을 주목하고 있는 반면 반전 메시지도 담고 있다.¹⁾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한국전쟁 동안 총 450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분쟁의 양 당사자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에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²⁾ 한국전쟁의 발발과 민간인 학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같은 분단국가인 독일에서는 최전선 상황이 비슷하게 여겨졌고 그에 따라 제3차 세계 대전에 대한 공포가 컸다. 그 결과로, 서독의 평화운동과 재무장에 대한 논의도 이 시기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

초기부터 다양한 단체가 전쟁과 재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

-
- 1) 노형석, 「피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빨갱이 그림’ 오해는 그만」 『한겨레』, 2021년 6월 29일. 한국의 피카소 인식에 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한다. 강은아, 「한국에서의 피카소 인식 변화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45 (2023), 111~141 쪽.
 - 2)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에 관해서 김동춘의 저서를 참조한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파주: 돌베개, 2000); 북한 지역에 대한 미공군의 폭격에 관해서 김태우의 저서를 참조한다.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파주: 창비, 2013); 한국전쟁 중에 여성과 아동에 관해서 이입하의 저서를 참조한다. 이입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한국전쟁과 젠더』 (파주: 서해문집, 2004).

중에 교회 단체, 노동조합, 개별 정당, 여성 단체의 대표들도 있었다.³⁾ 언뜻 보기에는 마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나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과 같은 남성들이 공개 토론을 주도했는데,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론 형성에 관여한 여성 평화 운동가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비슷한 시점에 한반도의 평화와 서독 재무장 반대 운동을 펼쳤던 릴리 베흐터(Lilly Wächter)와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Klara Marie Fassbinder)를 대표적인 인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여성은 서로 다른 전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치적 진영에서 목표를 추구했지만, 평화에 대한 생각과 항의 수단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 당시의 주요 여성 평화 단체의 대표로서 이 연구에서는 파스빈더와 베흐터에 집중할 것이다.

릴리 베흐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민주여성연맹(Demokratischer Frauenbund Deutschlands, DFD)에 가입하여 서독에서 의장으로 활동했다. 베흐터의 평화 활동과 서독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활동은 한국 전쟁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1951년 독일민주여성연맹의 대표로 국제여성민주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WIDF) 한국전쟁 진상조사단에 참여하여 유엔군이 북한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고하는 활동을 펼쳤다. 귀국 후 베흐터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연 시리즈를 통해 북한의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서독

3) 전반적인 서독 평화운동에 관해서 다음 책을 참조한다. Eckart Dietzfelbinger, *Die westdeutsche Friedensbewegung 1948 bis 1955: Die Protestaktionen gegen die Remilitaris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ahl-Rugenstein: Köln, 1984).

4) 예를 들어 재무장과 핵무장에 반대하는 시위에 관한 Lebendiges Museum(LeMO)의 기사에서 저자는 남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Andreas Grau and Markus Würz, Streit um die Wiederbewaffnung, *Lebendiges Museum Online, 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RL: <http://www.hdg.de/lemo/kapitel/geteiltes-deutschland-gruenderjahre/weg-nach-westen/streit-um-die-wiederbewaffnung.html>

지역 정부와 경찰은 베흐터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강연을 금지했고, 결국 그는 미군을 비방한 혐의로 슈투트가르트의 미군 점령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독의 여러 도시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동시에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은 미 점령군과 서독 정부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릴리 베흐터의 재판을 도구화했다.

반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이미 여성 및 평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그는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서독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 평화를 호소하고 재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 1951년에 뜻을 같이하는 여성들과 함께 벨베르트(Velbert)에서 ‘평화를 위한 여성과 어머니들의 회의’를 조직했고, 이후 서독여성평화운동(Westdeutsche Frauenfriedensbewegung, WFFB)을 설립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단체가 침투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서독 정부에서 서독여성평화운동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개별 행사는 금지되었다. 이후 파스빈더는 본 교육 아카데미의 교수 자격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서독의 나토 가입과 비상법 초안, 핵무장에 반대하는 등 평화를 위한 활동을 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전쟁 당시에 베흐터와 파스빈더가 어떻게 평화를 위한 캠페인과 재무장 반대 운동을 펼쳤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지자를 동원하기 위한 전략과 시위의 수사적 수단과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아데나워 정부의 반공주의 기치 아래 법적, 정치적 박해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또한 서독의 사회적 상황, 특히 많은 여성들의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베흐터의 경우 동독 정부로부터 도구화 되었기 때문에 동서독의 담론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 연구는 냉전에 대한 관점을 다양화하

여 평화사적인 관점에서 승자의 입장에서만 쓰여지지 않도록 이해하는데에 기여한다.⁵⁾

베흐터의 강연, 두 차례의 재판, 이후 독일민주여성연맹 캠페인에 대한 주요 자료는 베를린의 연방 문서 보관소(Bundesarchiv SAPMO)에서 관리번호 DY로 확인할 수 있다. 신문 보도는 동독의 일간지, 특히 독일민주여성연맹의 잡지 <오늘의 여성>(Die Frau von heu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스빈더의 사적인 편지와 텍스트 중 일부는 카셀에 있는 독일 여성운동 기록원(Archiv der deutschen Frauenbewegung, AddF)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서독여성평화운동의 저널인 <여성과 평화>(Frau und Frieden)도 포함되어 있다.⁶⁾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기록보관소 슈투트가르트(Landesarchiv Baden-Württemberg, Hauptstaatsarchiv Stuttgart, LABW HStAS)에는 서독의 (공산주의) 평화 및 대국민선문조사 운동에 대한 경찰의 조치를 보여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내무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평화 운동에 관한 브로셔와 포스터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구 문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냉전 기간 ‘여성 평화 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한 학술적 기여의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국제여성민주연맹에 대한 연구는 이탈리아, 영국 또는 쿠바의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연대라는 제목 아래 국제적 연결도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국제여성민주연맹과 ‘제3세계’의 관계, 그리고 한국 및 베트남과 같은 전쟁 지역에 대한 조사단 파견이다.⁷⁾ 한국

5) 이동기, 「평화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제106호 (2014), 31쪽.

6) 독일 여성 운동 기록원의 문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한다. Barbara Günther and Cornelia Wenzel, “Ungehobene Schätze: Die Frauenfriedensbewegung im Archiv,” Franziska Dunkel and Corinna Schneider, eds., *Frauen und Frieden? Zuschreibungen - Kämpfe - Verhinderungen* (Opladen: Budrich, 2015), pp. 145-154.

7) Yulia Gradszkova,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the Global South and the Cold War: Defending the Rights of Women of the 'Whole World'?*

학계에는 특히 김태우의 저서가 참고할 만하다. 그는 주로 영국 대표 모니카 펠턴(Monica Felton)과 덴마크 대표 카테 플레론(Kate Fleron)을 중심으로 조사단의 활동과 여성들의 생각과 심리까지 자세히 살펴봤지만 김청강의 서평에 따르면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관계를 잘 보여주지 못했다.⁸⁾ 반면, 김수지(Suzy Kim)의 저서에서 이러한 과정을 바라보는 북한 여성의 시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여성들이 동·서양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냉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성 페미니즘(maternal feminism)의 개념을 언급하기도 한다.⁹⁾ 모성 페미니즘은 ‘제3세계’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활동과 관련해서도 언급되며 서독 여성 평화 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¹⁰⁾

또한 감정의 역사 연구서를 참고하는 것은 유용해 보인다. 프랑크 비에스(Frank Biess)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서독인들의 두려움과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한 아테나워 정부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¹¹⁾ 동시에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다.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집단 학살은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통해 여성의 독립 평등화가 가능했다고 평가되었다.¹²⁾ 한국전쟁 당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최근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New York: Routledge, 2021).

- 8)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파주: 창비, 2021); 김청강, 「냉전의 ‘사이’를 탐구하다: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창비, 2021)>」 『여성과 역사』 35 (2021), 299~310쪽.
- 9) Suzy Kim, *Among Women Across Worlds: North Korea in the Global Cold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3), pp. 49-55.
- 10) Candace Johnson, “Responsibility, Affective Solidarity and Transnational Maternal Feminism” *Feminist Theory* vol. 22, no. 2 (July 2019), pp. 175-198.
- 11) Frank Biess, *Republik der Angst: Eine andere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Reinbek: Rowohlt, 2019).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적 범죄를 평화 추구를 위한 수사적 표현 도구로 사용하는 것, 특히 냉전 동·서측의 여성들이 이러한 폭력 범죄를 수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 외에 평화 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으로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운동을 도덕적, 문화적, 사회-조직적, 물질적, 인적 자원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이론으로서 서독의 평화운동에도 비슷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¹³⁾

이 글에서는 먼저 서독과 동독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과 그 배경, 그리고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재무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릴리 베히터라는 인물과 여성단체인 독일민주여성연맹, 그리고 그의 북한 파견 이후에 이뤄진 강연과 재판을 분석한다. 이어서 그의 유죄 판결 이후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의 시위와 선전 캠페인을 보겠다. 두 번째로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와 그의 개인적인 항의 서신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활동은 벨베르트에서 열린 회의와 서독여성평화운동의 창립으로 더욱 제도화되었다. 한국전쟁과 재무장, 정치적 박해와의 대결에 대한 파스빈더와 동지들의 견해는 서독여성평화운동의 간행물에서 찾을 수 있다. 피카소의 그림처럼 전쟁 중의 여성들은 피해자로만 주로 그려지는데, 실제로 같은 시기의 평화운동에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12) Vincent Streichhahn, “Einleitung: Krieg und Geschlecht im 20. Jahrhundert,” Vincent Streichhahn and Riccardo Altieri, eds., *Krieg und Geschlecht im 20. Jahrhundert: Interdisziplinäre Perspektiven zu Geschlechterfragen in der Kriegsforschung* (Bielefeld : Transcript, 2021), p. 17.

13)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 (May 1977), pp. 1212-1241.

II. 분단 독일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과 서독의 재무장 담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처음에는 독일 양쪽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 독일에서도 전쟁이 발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일었다. 불과 1년 전에 베를린 위기가 종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건국된 두 국가 간의 긴장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특히 적대적인 이미지와 상호 비난이 이러한 감정을 조장했다. 미하엘 렘케(Michael Lemke)에 따르면 동독에서는 국민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주의통일당 정부가 잠시 안정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인해 북한 국민들에 대한 연대의 감정과 공감이가 생겼다.¹⁴⁾ 동독 정부는 이를 이용해 국가, 지역, 기업 차원에서 모금 캠페인을 조직하고 대중을 동원했다.¹⁵⁾ 동독 지도부는 선전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한국전쟁의 참상과 연결시켰다. 중앙위원회는 캠페인에서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진 가혹성을 부각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로써 동독의 독일민주여성연맹 강연 시리즈도 선전의 틀 안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아래 참조).¹⁶⁾ 동시에 북한 주민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투사로 묘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침략자로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과 동일시되

14) 미카엘 렘케, 「일어나지 않은 전쟁: 지나간 전쟁경험과 분단 독일에서의 한국전쟁」, 김성보·한운석 편,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고양: 역사비평사, 2010), 123~124쪽.

15) 다음과 같은 기록원 문서에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Bundesarchiv (BArch), SAPMO, DY 31 / 822, Arbeitsplan des Korea-Hilfsausschusses zum Tag des amerikanischen Überfalls auf Korea, 22.06.1951; Bericht über die Hilfe des deutschen Volkes für Korea, 20.10.1951.

16) BArch, SAPMO, J IV 2/3/141, Protokoll Nr. 15 der Sitzung des Sekretariats der SED, September 28, 1950; 렘케, 「일어나지 않은 전쟁」, 125쪽 재인용.

기도 했다. 한 브로셔에는 “이승만은 물리나라, 아데나워는 물리나라”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램케는 모금 캠페인이 점차 관료화되면서 대중의 열정이 줄어들었다고 한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동독 정부는 함흥 재건에 참여하고 북한 고아와 학생들을 받아들여 1950년대에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더욱 진전되었다.¹⁸⁾

서독의 아데나워 정부는 분단된 독일에서 스탈린과 유사한 행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¹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국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²⁰⁾ 당시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해 식량 부족이 일어날 우려에 ‘사재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미래비관주의(Zukunftspessimismus)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자인 힐데 푸르빈(Hilde Purwin)을 인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예전에 어렵던 시절과 같았다. 설탕과 식용유, 각종 통조림, 양배추 자루까지 집으로 사 날랐다. 소문들이 무성했고, 배급제 같은 문제를 돌

17) 위의 논문, 128쪽.

18) 이유재, 「동서의 양진영에서: 남북한에 대한 동서독의 개발원조 1953-1963」, 김성보·한운석 편,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고양: 역사비평사, 2010), 2010, 182-210쪽.

19) Konrad Adenauer, *Erinnerungen*, vol. 1 (Stuttgart: DVA, 1965), p. 357; 한국전쟁과 재무장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할 때 파스빈더에게 특히 아데나워의 뉴욕타임스 인터뷰가 결정적이었다. Bonn Chief Calls for Defense Force - Asks West German Unit Equal to East Zone Police - Urges U.S. to Send More Troops, *New York Times*, August 18, 1950, p. 1, p. 7.

20) Hyuk Kang, *Was kann die Kirche für den Frieden tun? Der Koreakrieg im Jahr 1950* (Iudicium: München, 2022), p. 119.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서·동 베를린 신문의 보도에 관해서 최중호의 박사논문을 참조한다. Chungho Choe, “Der Ausbruch des Koreakrieges im Spiegel der Ost- und Westberliner Tageszeitungen” (Ph.D. dissertation, Freie Universität Berlin, 1968).

리싸고 감정충동이 일어났다.”²¹⁾ 사람들은 주로 식량 부족과 경제 불황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서독 지역과 베를린에서 독일인들의 반응과 소문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독일 주재 미국 고등판무관실(High Commissioner in Germany, HICOG) 정보국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식량 부족과 합리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독일에서 미군 철수 및 소련군의 공격과 침공에 대한 우려와 같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또한 독일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고 전쟁에 대비한 무기를 생산하거나 서독 군대를 창설한다는 소문도 떠돌았다.²²⁾ 한국 전쟁과 관련하여 전직 독일 나치 친위대 장군이 북한 측에 참여하거나 서독 자원 봉사자들이 남한 측에 군 복무를 위해 모집되었다는 소문도 퍼졌다. 후자는 나중에 서독여성평화운동 잡지 <여성과 평화>에서도 다루었다(제 IV 장 3절 참조). 미국 측이 특히 우려했던 것은 초기 패배 측, 남한 진영이 부산으로 밀려난 것이 독일 국민들에 의해 미국의 약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전쟁의 침략자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동독과 서독의 지지자들의 슬로건과 함께 반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²³⁾ 예를 들어, 서독의 많은 도시에는 “독

²¹⁾ Hilde Purwin, “Die Korea-Krise und der deutsche Verteidigungsbeitrag,” Karl Carstens and Friedrich Horst Wünsche, eds., *Die Korea-Krise als ordnungspolitische Herausforderung der deutschen Wirtschaftspolitik: Texte und Dokumente* (Stuttgart: G. Fischer 1986), p. 120. 인용문의 번역을 위해 다음의 논문을 참조했다. 렘케, 「일어나지 않은 전쟁」, 137쪽.

²²⁾ National Library of Korea, RG306, HICOG 28-S: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Rumors in West Germany following the Korean Outbreak, Bad Nauheim, August, 29, 1950.

²³⁾ 위의 자료. National Library of Korea, RG306, HICOG 34-S: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Further Study of Post-Korean Rumors in Germany, Bad Nauheim, August 29, 1950.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다. “미국은 선전

일과 한국에서, 양키는 집으로 돌아가라”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공산주의 조직이 붙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등판무관을 대신하여 지역 경찰이 제거했다.²⁴⁾

그러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재무장에 대한 요구와 담론도 함께 동반되었다. 물론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유럽 또는 서독 연방군 창설 계획이 있었지만, 한국전쟁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집권당인 기민당(Christdemokratische Union, CDU)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독일이 무방비와 비무장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선적으로 국경 경찰의 확대를 요구했다.²⁵⁾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아데나워의 요구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구스타프 하이네만은 재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서 내무부 장관직에서 사임했다. 또한,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의장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는 재무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비판했다.²⁶⁾

한국전쟁이 시작될 무렵 미국 정보국(US Information Agency)은 서독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는데, 대다수가 반대했다.

과 전쟁 준비를 통해 한국에서 전쟁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개시했다.”

²⁴⁾ LABW HStAS, EA 2/301 Bü 71, Schreiben der Polizeidirektion Heilbronn an das Innenministerium Baden-Württembergs, Nr. 44, August, 03, 1950; “Kommunistische Kuckuckseier in Westdeutschland: Moskaus neue Infiltrations-Taktik” / “Getarnte ‘Friedensgesellschaften’ und geschulte Hintergrundstrategen” *Süddeutsche Zeitung*, May 26, 1950; “US-Maßnahmen gegen kommunistische Propaganda” *Stuttgarter Zeitung*, August 17, 1950.

²⁵⁾ Hyung-Sik Choi, “Zur Frage der Rolle des Korea-Krieges bei der westdeutschen Wiederaufrüstungsdebatte und des Einflusses auf die prinzipielle Entscheidung für die Wiederaufrüstung im Kontext der Aktualisierung des Ost-West-Konfliktes” (Ph.D. dissertation,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1994), pp. 204–220.

²⁶⁾ *Ibid.*, pp. 221–229.

특히 성별에 따른 반대 비율은 여성에서 더 높았다. 블록 간 전쟁 발생 시 독일의 태도와 관련하여 서독 지역(베를린 제외)에서는 40% 이상이 서방과의 동맹에 찬성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비율로 서독의 국민들은 독일의 중립에 투표했지만,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독일 국민들 스스로 역시 독일의 중립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같은 조사 결과로 나왔다.²⁷⁾ 알렌스바흐(Allensbach)와 엠니드(Emnid)의 설문 조사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²⁸⁾

개인과 단체들도 정부의 재무장 계획에 대해 일찍부터 비판을 표명했다. 한편으로는 분단의 고착화를 우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장에 투자한다면 사회 복지가 외면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1950년대 서독의 평화 운동에는 다양한 단체 또는 개인 운동이 있었다. 여기에는 ‘오흐네 미히 운동(Ohne-mich-Bewegung)’, 1951년 대국민설문조사운동, 1955년 파울스키르헤 운동(Paulskirchen Bewegung) 등이 포함된다. 단체 또는 정당으로는 독일평화협회(Deutsche Friedensgesellschaft, DFG), 서독 평화위원회(Westdeutsche Friedenskonferenz, WFK), 평화를 위한 비상공동체(Notgemeinschaft für den Frieden), 국제반전봉사단(Internationale der Kriegsdienstgegnerschaft, IdK), 전독일인민당(Gesamtdeutsche Volkspartei, GVP) 등이 있었다.²⁹⁾ 여성 평화 운동은 주로 서독여성평화운동과 독일

²⁷⁾ National Library of Korea, RG306, HICOG 33: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Germans View the Korean Outbreak: Urban Opinions in Western Germany, Bad Nauheim, August, 23, 1950. 특히 다음의 인용을 보면 보고서 작성자의 젠더 관점이 반영되었다. “특정 군대 문제에 대해 남성의 의견이 여성의 의견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²⁸⁾ Choi, “Zur Frage der Rolle des Korea-Krieges bei der westdeutschen Wiederaufrüstungsdebatte,” pp. 287-291.

²⁹⁾ 앞의 인용된 Dietzfelbinger의 저서와 개별 평화운동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책을 참조한다. Michael Werner, *Die ‚Ohne-mich-Bewegung: Die bundesdeutsche Friedensbewegung im deutsch-deutschen Kalten Krieg, 1949-1955* (Münster:

민주여성연맹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단체와 운동에 소속된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예를 들어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는 서독여성평화운동 외에도 독일평화협회와 전독일인민당에서 활동했다.³⁰⁾

다양한 연구자들이 여성 평화 운동을 국제적으로, 특히 독일에서는 냉전의 차원에서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침투와 반공 정책이라는 이분법적 내러티브가 등장했다. 실제로 동독 정부는 서독 단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 운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동시에 아데나워의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정부 역시 편견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단체를 정부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탄압했다.³¹⁾ 이러한 단순한 서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이유 외에도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평화 운동에 참여하게 된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던 개별 행위자들의 차원을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과 동기가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은 다음 두 장에 등장하는 활동가 릴리 베흐터와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에게서 특히 잘 드러나는데, 이들은 개별적인 주도권을 갖고 정치적 집단 사이의 긴장 속에서 움직였다.

Monsenstein und Vannerdatt, 2006); Stefan Appelius, *Pazifismus in Westdeutschland: Die Deutsche Friedensgesellschaft 1945-1968*, vol. 1 (Aachen: Günter Mainz, 1991).

³⁰⁾ Hannecläre Baur and Günter Fölsing, eds., *Das politische Engagement des Christen heute: Zum 80. Geburtstag von Klara Marie Fassbinder* (Bonn: Bouvier, 1970).

³¹⁾ Jan Korte, *Instrument Antikommunismus: Der Sonderfall Bundesrepublik* (Berlin: Karl Dietz, 2009); Stefan Creuzberger and Dierk Hoffmann, ‘*Geistige Gefahr*’ und ‘*Immunisierung der Gesellschaft*’: *Antikommunismus und politische Kultur in der frühen Bundesrepublik* (München: De Gruyter, 2014).

Ⅲ. 릴리 베흐터 - 평화 운동에서 선전 캠페인까지

이 장에서는 평화 운동가 릴리 베흐터의 활동을 동서독에서 전개된 독일민주여성연맹 캠페인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먼저 베흐터와 독일민주여성연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다음, 한국에서의 미션과 이후 일련의 강연 및 체포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릴리 베흐터가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와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의 릴리 베흐터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도구화 과정을 분석한다.

1. 릴리 베흐터와 독일민주여성연맹

1947년 독일민주여성연맹이 설립되었을 때 이미 독일 전역을 대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나, 처음에는 서베를린을 제외한 서독 지역에서는 재단 설립이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8년 독일민주여성연맹의 첫 연방의회에는 80명의 대의원 중 40명의 서독 여성이 참석했다. 동독에서 독일민주여성연맹은 사회주의 대중 조직으로 빠르게 발전했던 반면,³²⁾ 서독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위한 준비로써 지역 단위로 개별 협회가 결성되었다가 1950년 4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협회가 설립되었고, 다른 연방 주에서도 협회가 설립되어 마침내 전국적인 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독일민주여성연맹은 이미 동부와 서부, 두 개의 다른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³³⁾ 1951년 8월 슈투트가르

³²⁾ Ursula Schröter, "Die DDR-Frauenorganisation im Rückblick," Ursula Schröder et al., eds., *Patriarchat in der DDR: Nachträgliche Entdeckungen in DFD-Dokumenten, DEFA-Dokumentarfilmen und soziologischen Befragungen* (Berlin: Karl Dietz 2009), pp. 11-62.

트에서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 창립 회의에서 릴리 베히터(Lilly Wächter)가 초대 회장으로, 그리고 게르다 베버(Gerda Weber)가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재무장에 반대하는 ‘슈투트가르트 플랫폼’이라는 팸플릿이 만들어졌다. “우리 여성과 어머니들은 재무장을 원하지 않는다. (...) 우리는 의무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하며 새롭게 설립되는 군대를 위해 우리의 남편, 아버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³⁴⁾ 이 슬로건은 이미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남성의 아내, 딸,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즉, 재군사화에 반대하는 독일민주여성연맹의 주요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민주여성연맹의 주요 활동은 서독의 여러 도시에서 재무장에 반대하는 행사와 시위를 계획하는 것이었다. 1951년 평화 회의 이후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 지부는 재무장 반대에 대한 전국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 활동을 집중했다. 예를 들어, 1951년 10월에는 수백 명의 회원들이 에센에 있는 크루프(Krupp) 공장에서 단 하루 만에 1만2천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50개의 출구에 서서 설문지를 배포했다. 독일민주여성연맹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98%가 군비 재무장에 반대하고 평화 조약에 찬성했지만, 여기에는 질문의 암시적인 성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에센 경찰은 참여한 여성 중 총 26명을 체포했다.³⁵⁾ 그 외에 대국민설문조사에 대한 독일민주여성연맹의 소규모 활동도 있었다.³⁶⁾

33) Ingeborg Nödinger, “Für Frieden und Gleichberechtigung: Der Demokratische Frauenbund Deutschland,” Florence Hervé, ed., *Geschichte der deutschen Frauenbewegung* (Köln: Pahl Rugenstein, 1990), pp. 208–209.

34) Wolfgang Kraushaar, *Die Protest-Chronik, 1949–1959*, vol. 1 (Hamburg: Rogner & Bernhard, 1996), p. 474.

35) *Ibid.*, p. 501; Nödinger, “Für Frieden und Gleichberechtigung,” p. 210.

36) 예를 들어 레온베르크(Leonberg)의 DFD는 현지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당시 카를스루에의 독일민주여성연맹 활동가 및 공산당 당원이었던 힐데 바그너(Hilde Wagner)는 여성 운동에 관한 지역 역사책에서 국민투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설문조사 용지를 압수하러 왔지만 만하임과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이 설문조사 용지를 압수한 후 찬성과 반대표로 분류된 설문용지를 확인했다.”³⁷⁾ 이처럼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역별로 다른 방식으로 대국민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판결문을 살펴보면 경찰과 법원이 여성 운동을 상대화하고 편하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한 활동가가 세계대전에서 친척을 잃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나서고 싶었지만 설문조사의 근본적인 정치적 함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다. 하일브론의 검찰은 재군사화에 반대하는 전단지 배포한 한 활동가와 관련하여 조사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특정 세력이 요구하는 재무장 반대 국민설문조사는 호소문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설문조사 결과를 선전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그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³⁸⁾

모임을 조직했지만 투표용지와 포스터를 경찰에 직접 압수당했다. LABW HStAS, EA 2/301 Bü 74, Schreiben der Direktion der Landespolizei Württemberg an das Innenministerium Württemberg-Baden: Illegale Volksbefragung, January 30, 1952.

³⁷⁾ Barbara Guttman, *Den weiblichen Einfluss geltend machen, Karlsruher Frauen in der Nachkriegszeit 1945-1955* (Karlsruhe: Badenia, 2000), p. 174. 이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내무부와 경찰이 국민투표에 대해 교환한 서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ABW HStAS, EA 2/301 Bü 74, Communiqué des Landesausschusses für die Volksbefragung in Württemberg Baden, June 1951, p. 2.

³⁸⁾ LABW HStAS, EA 2/301 Bü 74, Abschrift: Ausfertigung der Staatsanwaltschaft Heilbronn Nr. 4789/51: Anklagesache gegen G. Müller, May 30, 1952.

어떤 면에서 이 주장은 릴리 베흐터에 대한 법정 소송에서 나온 진술과 유사하다. 여성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부분은 재무장과 관련된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당했다.

그러나 항상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었고, 다른 행사장에서는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참가 여성들이 경찰에게 구타당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찰 조치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의 경우 기각되었다. 또한 소위 ‘아테나워 법령’에 따라 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KPD) 또는 자유 독일 청년단(Freie Deutsche Jugend, FDJ)과 같은 명백한 공산주의 협회 및 정당의 단원, 혹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독일민주여성연맹 회원도 공무원직에서 해고 될 수 있었다. 1951년 정치 기소가 재도입되고 국가 반역죄와 국가 위협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가는 독일민주여성연맹의 활동을 더욱 면밀히 감시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서독 정부는 독일민주여성연맹이 동독을 통해 오용되었다고 의심했지만, 사회학자 잉게보르그 뇌딩거(Ingeborg Nödinger)가 지적했듯이 독일민주여성연맹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에 가까웠지만 회원들이 특히 통일, 평화, 반군사주의에 전념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요구와 목표는 공산당의 스펙트럼 밖에 있었다. 서독 정부가 반공주의의 기치 아래 독일민주여성연맹을 박해한 것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³⁹⁾

반면, 당시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의 초대 비서였던 게르다 베버는 회고록에서 동독 지도부의 정치적, 재정적 통제에 대한 배경과 함께 자신의 직책에 대해 썼다. 1949년 11월에 동독 간부 학교를 졸업한 베버는 처음에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 집행위원회에서 독일민주여성연맹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가 창당된 후, 같은 해 6월 초에 그가 서독 파견을 자원했다. 서독을 방문하는 동안

³⁹⁾ Nödinger, “Für Frieden und Gleichberechtigung,” p. 212.

그는 다른 회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결국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⁴⁰⁾ 베버의 기억에 따르면, 전임 직원에 대한 자금 조달, 잡지 <오늘의 여성> 발행, 사무실 공간 임대 등이 모두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 즉, 동독 정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절차는 베버와 독일민주여성연맹의 동독 지부 재무 비서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⁴¹⁾ 이러한 재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 당시 논리로 아데나워 정부의 감시는 의의가 있었지만 개인 행위자의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달랐다고 지적할 수 있다.

릴리 베히터를 한국으로 파견하고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 의장에 임후보시킨 것도 베버와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 지도부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한다. 나치 시대에 베히터는 반(半)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하는 등 ‘인종적 박해’를 받았다. 부모님과 오빠를 포함한 많은 친척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라스타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에서 활동했다.⁴²⁾ 결국 베버와 카를스루에의 다른 독일민주여성연맹 회원은 베히터에게 국제여성민주연맹의 한국전쟁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베버는 회고록에서 베히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녀는 정치적인 지식과 관심이 많았고 다소 순진해 보였지만 상식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표자였다.”⁴³⁾ 베히터가 공산당이나 공산주의 계열의 단체가 아닌 사민

40) Herrmann and Gerda Weber, *Leben nach dem ‚Prinzip links‘: Erinnerungen aus fünf Jahrzehnten* (Berlin: Ch, Links 2006), pp. 77-78.

41) Ibid., p. 79.

42) 베히터의 가족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과 신문 기사를 참조한다. Friedrich Karl Kaul, *Ich sagte die Wahrheit: Lilly Wächter, ein Vorbild der deutschen Frauen im Kampf um den Frieden* (East Berlin: Dt. Frauenverlag, 1952), pp. 8-11; “In dieser Woche besuchte uns Lilly Wächter” *Frau von heute*, July 16, 1954.

43) Weber, *Leben nach dem Prinzip links*, p. 80.

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또한 외부로 하여금 독일민주여성연맹의 사회주의통일당이나 동독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 측에게도 편리했을 것이다.⁴⁴⁾

2. 국제여성민주연맹의 한국전쟁 진상조사단, 강연 시리즈 및 베흐터의 재판

국제여성민주연맹의 한국전쟁 진상조사단 자체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릴리 베흐터의 관련된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다.⁴⁵⁾ 한국전쟁 발발 후 독일민주여성연

⁴⁴⁾ 한국전쟁 조사단에 참여한 후 베흐터는 사민당에서 제명당했다. BArch, SAPMO, DY 31/1240, Lilly Wächter an den Ortsverein der SPD Rastatt, July 25, 1951. 이 서한에서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제명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명서에는 내가 ‘공산주의 평화 투사 위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적혀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DFD의 의장일 뿐이다.”라고 작성했다. 제명은 “사민당에서 일상이 되었다. (...) 사민당이 지도부로 인해 오래되고 자랑스러운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베흐터는 자신의 활동을 “니뮐러 목사, 하이네만 박사, 폰 브라키츠, 헨첼 장군, 뤼케 중위 등과 같은 대열에서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⁴⁵⁾ 국제여성민주연맹은 유엔에도 등록된 중요한 단체로 간주되었다. 1951년부터 1991년까지 동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대회는 약 4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2차대회에서 국제여성민주연맹은 인도, 버마, 말레이시아에 위원회를 파견하여 그 국가에서 여성의 상황과 권리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1949년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중국에서 제3차 대회가 열렸다. 특히 한국전쟁 중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베트남의 반식민지 투쟁에 대한 지지는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보복과 금지 조치로 이어졌다. Yulia Gradszkova,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the ‘Third World’ and the Global Cold War from the late-1950s to the mid-1960s” *Women’s History Review* vol. 29, no. 2 (August 2019), pp. 270-288; Susanne Hertrampf, *Zum Wohle der Menschheit: Feministisches Denken und Engagement internationaler Aktivistinnen 1945-1975* (Freiburg: Centaurus, 2006).

맹 협회가 소속된 국제여성민주연맹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전쟁의 영향을 다루기 위해 한반도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사단은 대부분 유럽 출신인 총 21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여성 위원들은 북한민주여성연맹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다.⁴⁶⁾ 그곳에서 여성들은 북한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전쟁 범죄가 자행된 장소나 집단 무덤이 있는 곳에 찾아갔다. 대부분의 경우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는 전쟁의 진행 과정에 따라 유엔군(미군) 및 남한군에 의해 벌어졌다. 조사단은 남한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군이나 중국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의 보고서는 처음부터 일방적이었고 정치적으로 북한이나 소련 블록의 대미 선전으로 읽힐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반공 성향이 강한 국가의 참가자들은 귀국 후 정치적 박해를 받기도 했다.⁴⁷⁾ 이 보고서는 일방적이지만 전쟁의 실제 사건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전쟁을 다룬 주제 중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여성과 아동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⁸⁾

46) 북한의 (국제적) 평화운동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조한다. 정용욱, 「6·25 전쟁~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 현실』 제91호 (2014), 285~315쪽.

47) Women's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War Atrocities Committed in Korea, ed., *We Accuse: Report of the Women's Investigation of Atrocities committed by USA and Syngman Rhee Troops in Korea* (East Berlin: WIDF, 1951).

48) 사실 확인을 위해 김태우의 논문을 참조한다. Taewoo Kim, "Frustrated Peace: Investigatory Activities by the Commission of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WIDF)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0, no. 1 (April 2020), pp. 83-112. 그러나 서독과 동독에서는 북한 교육부 장관 허정숙의 보고서가 담기고 북한 선전물과 유사한 국제여성민주연맹 브로셔에도 여성과 어머니에 초점을 맞춰 배포되었다. WIDF, ed., *Die Kinder Koreas rufen die Frauen der Welt*, (East Berlin: WIDF

독일로 돌아온 릴리 베흐터와 힐데 칸-로너는 독일 서부 및 동부 독일 민주여성연맹의 대표로서 여러 활동을 시작했다. 두 여성은 동서독의 연방의회, 정부 및 다양한 여성 단체에 공동 위원회 보고서를 보냈다.⁴⁹⁾ 또한 신문 인터뷰와 독일민주여성연맹 지역협회 강연 시리즈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경험과 위원회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두 여성은 함께 동베를린 독일민주여성연맹 본부 ‘여성의 집’(Haus der Frau)에서 강연을 시작했다.⁵⁰⁾ 그 후 힐데 칸-로너는 한국 원조위원회(Korea-Hilfsausschuss)와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의 지원을 받아 동독 전역 45개 지역에서 총 2만 7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진행했다.⁵¹⁾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강연 시리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초점을 맞춘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의 전반적인 전략에 부합했기 때문에 현지의 개별 여성 단체 및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력했다.

반면에 릴리 베흐터는 서독 당국에 의해 다른 강연이 갑작스럽게 금지되고 경찰이 그를 잠시 구금했기 때문에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의 본부가 있는 뒤셀도르프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하이델베르크와 루드비히스부르크에서 열린 두 번의 강연에만 참석할 수 있었다.⁵²⁾ 베흐터는 독일 민주여성연맹 동부의 이사에게 보낸 개인 서한에서 더위와 피곤한 기차 여행 등 강연 시리즈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강연 금지의 원인이 자신을 사회주의통일당 요원으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민

1951).

49) Erna Krahn-Lierse, *Kampf der Frau um ihre Freiheit und den Frieden: Materialsammlung zur Gegenwartskunde* (East Berlin: Volk und Wissen, 1953), pp. 134-135.

50) “Deutsche Frauen sahen Korea” *Neue Zeit*, June 08, 1951.

51) BArch, SAPMO, DY31/822, Bericht zur Auswertung der Korea-Kampagne des DFD, July 24, 1951.

52) “Lilly Wächter in Freiburg verhaftet” *Berliner Zeitung*, August 02, 1951.

당 지역 협회의 기사 때문이라고 말했다.⁵³⁾ 루드비히스부르크에서 두 번째 강연을 마친 후 베히터는 곧바로 슈투트가르트에서 체포되어 ‘독일 연합국 고등재판소 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⁵⁴⁾

검찰은 베히터를 ‘공산주의 선전 연설자’로 간주하고 ‘미군에 해로운 활동과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그의 강연 내용은 나치 정권 피해자 협회 (Vereinigung der Verfolgten des Naziregimes)의 주간지 <행동>(Die Tat)의 기사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⁵⁵⁾ 또한, 재판 문서와 특히 증인 심문을 통해 두 강연과 이에 대한 서독 국민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재판 문서에 따르면 베히터의 강연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그는 한반도 여행 과정과 북한에 대한 인상을 보고했다. 두 번째 부분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강연의 두 번째 부분이 대중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기소했다. 베히터는 미군과 유엔군이 각각 북한 여성과 어린이를 학대, 강간하고 살해한 잔인한 사례를 들며 자신이 직접 시찰한 대규모 무덤과 시체를 묘사했다. 강연에서 독일과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맥락에서 베히터의 발언을 보면 그의 의도는 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자는 것이었다.⁵⁶⁾ 또한, 강연장에는 “독일은

53) BArch, SAPMO, DY 31/1240, Brief von Lilly Wächter an Hilde Dohm, August 04, 1951.

54) Kraushaar, *Die Protest-Chronik*, pp. 479-480.

55) Lilly Wächter, “Ich war in Korea: Augenzeugenbericht der einzigen westdeutschen Frau, die bisher in Korea war” *Die Tat*, October 06, 1951, p. 1.

56) 베히터는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나는 서독의 여성과 어머니들에게 한국에서 미국인들이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교육하고 독일에서 같은 일을 저지르는 미국 전쟁광들에게 저항하도록 그들을 깨울 것이다.” “Deutsche Frauen sahen Korea” *Neue Zeit*, June 08, 1951;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히틀러 전쟁을 5년간 경험한 독일 여성으로서 알고 있는 전쟁의 참혹함보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

제2의 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걸려 있어 두 나라의 비교가 드러난다.

변호인은 베흐터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연의 청취자들이 베흐터의 진술을 독일 주둔 미군과 직접 연관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강연 내용의 사실 파악은 재판 자체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한편으로 (남성) 증인들은 발표에 대한 여성들의 ‘감정적’ 반응을 묘사했는데, 이는 베흐터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 공포에 대한 젠더적 이해를 뒷받침하기도 한다.⁵⁷⁾ 동시에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증인은 전쟁에서는 모든 종류의 범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베흐터의 설명을 믿었지만, 다른 증인들은 더 비판적이었고 과장되거나 일방적이라고 판단했다.⁵⁸⁾

로 아이들은 거의 지하 동굴에서만 살고 있다. 전국에 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여행하는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겨울에 어떻게 생활할까?” “Trumans organisierter Massenmord in Korea: IDFF-Studienkommission berichtet über Untersuchungen in Korea” *Berliner Zeitung*, June 13, 1951.

57) 재판 조서의 번역본이 기록원 문서 중에 있다. BArch, SAPMO, DY 31/1240, Büro des Sekretariats für gesamtdeutsche Fragen an Elli Schmidt (DFD): Prozessprotokoll Lilly Wächter, November 07, 1951, p. 71. 개인적으로 심리학에 관심이 있던 한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다. “나는 특히 여성들이 그 말을 믿는다는 인상을 몇 번 받았다.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주위에 앉아있던 남성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들이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을 보았다.”

58) 재판 조서 중에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증인 진술이 있다 (16쪽).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베흐터씨는 이러한 과도한 말을 통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설명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증인 진술도 있다(79쪽). “나는 5년간 군인으로 복무했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러시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들이 총에 맞는 것을 봤는데, 이런 일들을 한국에서 일어난 일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법원은 바흐터에게 징역 8개월과 1만 5천 마르크의 벌금을 선고했다. 항소 과정에서도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의 선전 캠페인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베흐터는 모금 캠페인(다음 절 참조)의 도움으로 조기 석방되었고 벌금도 납부했다.⁵⁹⁾ 이로 인해 재판은 릴리 베흐터의 강연 시리즈보다 독일민주여성연맹이 대중에게 의도한 내용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⁶⁰⁾

3.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의 시위 및 선전 활동

선고 전후로 ‘릴리 바흐터 변호위원회’와 독일민주여성연맹은 동서독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와 연대 활동을 조직했다. 예를 들어 체포된 다음 날 바로 바트 칸슈타트의 교도소 앞에서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 다음 날에는 ‘파시즘과 전쟁 희생자를 위한 국제 추모의 날’의 일환으로 나치 정권 피해자 협회가 주최한 집회에 3천 명의 사람들이 슈투트가르트에 다시 모여 릴리 베흐터의 석방을 요구했다.⁶¹⁾ 이러한 행동이 독일민주여성연맹이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게르트루드 스트로바흐(Gertrud Strohbach), 오스카 뮐러(Oskar Müller) 등 일부 공산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도구화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출연은 서독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요구와 관련을 지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릴리 베흐터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치 정권 피해자 협회와 같은 다른 단체들도 릴리 베흐터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었다.⁶²⁾ 일부 행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물대

59) Schröter, “Die DDR-Frauenorganisation im Rückblick,” p. 35.

60) Krahn-Lierse, *Kampf der Frau um ihre Freiheit und den Frieden*, pp. 134-135.

61) Kraushaar, *Die Protest-Chronik*, pp. 479-483.

포 사용과 같은 경찰의 조치로 인해 해체되었다.⁶³⁾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위해 독일민주여성연맹은 릴리 베흐터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 캠페인을 조직했다. 그의 변호인으로는 동독과 서독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른 재판에서도 동독의 유명 공산주의자들을 변호했던 프리드리히 칼 카울(Friedrich Karl Kaul)⁶⁴⁾ 영국의 ‘스타 변호사’ 데니스 프리트(Denis Pritt) 박사가 선임되었고 조사단의 영국 대표 모니카 펠튼도 증인으로 섭외되었다. 펠튼은 노동당 하원이었지만 한국전쟁의 참전을 반대하고 조사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베히터처럼 영국에서 차별을 견뎌야 했는데, 서독에 와서 여성 모임과 노동자 협의회에서 영국 노동자 계급에 대한 강연하기도 했다. 릴리 베흐터 외에도 공산당 부총재 리나 바이에르(Lina Weier)와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 사무총장인 게르다 베버도 펠튼의 서독 방문에 동행했다.⁶⁵⁾ 특히 이 항소는 사건의 국제화 및 강력한 선전적 이용으로 두드러진다. 이후 카울은 릴리 베흐터의 삶과 조사단 파견, 재판에 대해 동독 지도부에 맞게 재해석한 <나는 진실을 말했다>(Ich sagte die Wahrheit)를 집필했다.⁶⁶⁾ 재판의 주인공인 릴리 베흐터는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간접적인 발언만 한 반면, 카울은 베흐터의 입장에서 그의 배경과 동기를

62) Ibid., p. 583.

63) “Front gegen den Krieg wird stärker: Polizeiterrror gegen Lilly-Wächter-Kundgebung auch in Frankfurt am Main” *Neue Zeit*, February 02, 1952.

64) 카울의 다른 변호사 활동에 관해 다음 저서를 참조한다. Annette Roskopf, *Friedrich Karl Kaul: Anwalt im geteilten Deutschland 1906-1981* (Berlin: Nomos, 2002).

65) BArch, SAPMO, DY 31/1240, DFD-Ost: Bericht über die Kampagne während und nach der Berufungsverhandlung gegen Lilly Wächter, January 30, 1952. 펠튼에 관해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한다. 후지메 유키, 「모니카 펠튼과 국제여성민주연맹(WIDF) 한국전쟁 진상조사단」 『사회와역사』 제100호 (2013), 279~324쪽.

66) Kaul, *Ich sagte die Wahrheit*.

설명하고 동독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 그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카울의 역할을 통해 여성 평화 운동사에서도 남성의 중요한 역할이 보여진다. 그러나 그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봤을 때 베히터는 재판에 간접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는 또한 국제 항의 전보 시위와 같은 다양한 캠페인을 조직했다. DFD 의장 엘리 슈미트(Elli Schmidt)는 즉각적인 징역형과 벌금 해제를 요구했다. 동독의 다양한 간부, 과학자, 예술가들이 재판부에 전보를 보내 항의했다. 다른 나라 조사단 위원들과 공산주의 여성 단체들의 국제적인 연대 의사도 이어졌다. 슈투트가르트와 프랑크푸르트의 법원에 이 공동 항의 행동에 대해 총 300여 건의 전보를 접수되었다.⁶⁷⁾ 또한 동독 언론의 보도에서 릴리 베히터에 대해 ‘용기 있는’, ‘용감한’, ‘애국적인’과 같은 수식어를 찾아볼 수 있다. 언론은 베히터의 재판을 프랑스 공산주의자이자 평화 운동가인 레이몬드 디엔(Raymonde Dien)과 비교하기도 했다.⁶⁸⁾ 디엔은 1950년 인도차이나 전쟁에 프랑스 군인을 파병하는 것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프랑스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동독에서는 평화주의자로 칭송을 받으며 1951년 동베를린에서 열린 제3회 세계청년축제에 초청받는 등의 영예를 누렸다.⁶⁹⁾ 또한

67) BArch, SAPMO, DY 31/1240, Liste über Resolutionen und Protesttelegramme gegen Verhaftung von Lilly Wächter, October 15, 1951; Verteidigungsausschuss für Lilly Wächter: Presseinformation 5, October 05, 1951. Einige Kopien der Telegramme finden sich auch in den Unterlagen des DFD. Vgl. zur Medienberichterstattung u.a.: “Die friedliebende Welt verteidigt Lilly Wächter: Proteste aus China, Ungarn und Bulgarien” *Neues Deutschland*, November 25, 1951.

68) “Empörung über Terrorurteil gegen Lilly Wächter,” *Neues Deutschland*, October 06, 1951.

69)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유럽에아나(Europeana)에 있는 사진작가 에리히 휠레(Erich Höhle)와 에리히 폴(Erich Pohl)의 사진을 참조한다.

주로 미군과 미국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예를 들어 힐데 칸-로너는 <신독일>(Neues Deutschland)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한국의 과거를 살펴보고 독일과의 유사점을 그려보면, 미국이 일본 전범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새로운 전쟁 토대를 만든 것, 즉 서독에서도 미국인 전쟁 선동자들이 수행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며, 독일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완전히 분명해진다. 70)

카울은 특히 한국과 독일 주둔 미군에 관한 글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동독의 브로셔와 신문에는 어린이가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개하며 릴리 베흐터를 롤모델 여성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또 다른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반미 성명이 반복되었다. 71)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의 대부분이 적지않게 선전 목적으로 재작업되고 각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민주여성연맹은 선전의 성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독일민주여성연맹 잡지 <오늘의 여성>은 재판이 끝난 후 릴리 베흐터에 대한 두 편의 시를 출간하기도 했다. 72) 또한 독일민주여성연맹은 기부를 호소하는 다양한 브로셔와 엽서를 발행했다. 73)

세계 여성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언론의 표적 보도가 이루어졌

70) “Deutschland darf kein zweites Korea werden” *Neues Deutschland*, June 14, 1951.

71) Maria Fritsche, “Freie Diskussion: Eine Neubürgerin mahnt” *Berliner Zeitung*, April 18, 1952.

72) *Die Frau von heute* vol. 6, no. 46 (November 1951), p. 3. 작가는 비스도르프 출신의 E.K.로만 소개되었다. 1년 후, 이번에는 작가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시가 등장했다. Hedda Zinner, “Lilly Wächter” *Die Frau von heute* vol. 7, no. 11 (March 1952), p. 3.

73) BArch, SAPMO, DY 31/1240. ‘릴리 베흐터가 경고한다: 평화를 위해 싸워라’라는 문구가 적힌 엽서와 ‘코리아! 릴리 베흐터가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우표를 참조한다.

다. 예를 들어 1952년 3월 8일, <신독일>에는 릴리 베흐터의 재판에 대한 긴 기사가 실렸고 서독의 여러 도시에서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가 주최한 재무장 반대 시위에 대한 짧은 기사도 실렸다.⁷⁴⁾ 릴리 베흐터의 사진 외에도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쿠르트 짐머만(Kurt Zimmermann)이 ‘아미고 홈’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⁷⁵⁾ 동독 언론이 여성 운동, 평화 운동, 반미주의라는 주제를 릴리 베흐터라는 한 인물과 그의 재판과 밀접하게 연결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4. 활동에 대한 존중과 후기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후에도 베흐터는 독일민주여성연맹 서부에서 계속 활동했다. 1953년에는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⁷⁶⁾ 또한 그는 국제여성민주연맹의 국제적 차원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으며 부회장으로 선출된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 자격으로 ‘전쟁 반대, 군축 및 민족 간의 우정을 위한 세계 어머니 회의’와 같은 다양한 국제 회의에도 참석하여 다른 무엇보다 서독의 재무장에 대해 경고했다.⁷⁷⁾ 1954년 동독 주재 북한 대사 박길연은 릴리 베흐터와 동독의 북한 원조 위원회의 여러 회원들에게 북한의 1등급 훈장을 수여했다.⁷⁸⁾ 또한 동독의 여러 기관이 릴리 베흐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그 중에 인민

⁷⁴⁾ Kraushaar, *Die Protest-Chronik*, pp. 570-571.

⁷⁵⁾ “Westdeutsche Frauen beispielhaft im Friedenskampf” *Neues Deutschland*, March 08, 1952.

⁷⁶⁾ “Lilly Wächter wurde Vorsitzende” *Berliner Zeitung*, August 07, 1953.

⁷⁷⁾ “Weltkongress der Mütter einberufen” *Neues Deutschland*, November 05, 1954.

⁷⁸⁾ “Gruß und Dank des Volkes Koreas: Botschafter Pak Kil Jon überreichte deutschen Patrioten Auszeichnungen” *Neue Zeit*, May 30, 1954.

소유 기업 아부스 라이프치히(VEB Abus Leipzig)의 여성 여단과 베를린의 한 어린이집이 있었다.⁷⁹⁾ 이는 한편으로는 베흐터의 북한 조사단 참여에 대한 큰 감사를,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인으로서 동독 정권과 긴밀하게 얽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릴리 베흐터는 평화 운동뿐만 아니라 정치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는 서독에서 독일민주여성연맹이 금지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동독에서 그에 대한 보도도 줄어들었다. 1985년 서독 공산당 일간지 <우리의 신문>(Unsere Zeitung)에 실린 기사에는 미군 병영 앞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공산주의 평화 운동가 기젤라 슈프렐거-쇼흐(Gisela Sprenger-Schoch)와 릴리 베흐터의 재판을 비교한 내용이 실렸다. 기자는 당시 86세였던 베흐터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는 그가 별세하기 전 마지막으로 공개 증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도 베흐터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을 계속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그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한다.⁸⁰⁾ 서독의 공산주의 언론도 마지막까지 베흐터를 반미주의와 평화 운동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릴리 베흐터 재판은 1960~70년대 정치 재판의 선행자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6년 브뤼셀에서 열린 베트남 여성에 의한 미국의 전쟁 범죄에 관한 재판은 한국전쟁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베흐터 재판과 일부 유사점이 있다.⁸¹⁾ 그러나 1968년 운동을 전후로 좌파 운동이 강화되고 전

⁷⁹⁾ Vgl. BArch, Bild 183-19290-0001, April 22, 1953.

⁸⁰⁾ Hans Meister, “Es ist besser, ins Gefängnis zu gehen, als einen Krieg vorbereiten zu lassen: Im Frauengefängnis Gotteszell saß auch die Kriegsgegnerin Lilly Wächter” *Unsere Zeitung*, December 28, 1985.

⁸¹⁾ Donert, “From Communist Internationalism to Human Rights,” p. 333.

세계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상황에서 재판의 조짐은 1950년대 반공 지향적이었던 서독과는 달랐다. 국제여성민주연맹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여성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조사단을 파견했고, 여기에는 두 명의 독일 여성 평화 운동가도 다시 참여했다.⁸²⁾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에서도 국제 여성 평화 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³⁾

IV.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

- 서독 재무장에 반대하는 서독여성평화운동 평화 활동

이 장에서는 여성 평화 운동가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1890-1974)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파스빈더 개인이 진행했지만 실패했던 한국전쟁과 서독의 재무장 계획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파

82) 엘리 스타인만(Elly Steinmann)과 그릿 바이스버그(Grit Weisberg), 그리고 나중에 미라 폰 쾰만(Mira von Kühlmann)은 한 번은 국제여성민주연맹을 대표하여, 또 한 번은 베트남 여성연합(Union des femmes du Vietnam)의 초청을 받아 함께 베트남을 방문했다. Ingeborg Küster and Elly Steinmann, “Die Westdeutsche Frauenfriedensbewegung (WFFB)” in: Florence Hervé, ed., *Brot & Rosen: Geschichte und Perspektive der demokratischen Frauenbewegung*, Frankfurt am Main: Marxistische Blätter, 1979, p. 179. 196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대한 독일 여성 및 평화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Quinn Slobodian, “Guerrilla Mothers and Distant Doubles: West German Feminists Look at China and Vietnam, 1968-1982” *Zeithistorische Forschungen* vol. 12, no. 1 (May 2015), pp. 39-65.

83) Suzy Kim, “Crossing Borders: A Feminist History of Women Cross DMZ” *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 40, no. 1 (Winter 2016), pp. 133-156.

스빈더는 같은 생각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벨베르트에서 여성평화회의를 창립하면서 이들은 여러 곳에서 지역 행사를 조직했다. 그 중 특히 두 명의 활동가가 서독여성평화운동에 가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룬다. 다음으로 한국전쟁과 재무장에 관련하여 서독여성평화운동 잡지와 그 안에 사용된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파스빈더와 다른 서독여성평화운동 회원들이 견뎌야 했던 정치적 박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파스빈더의 개인적인 항의 운동과 벨베르트 여성 평화 회의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미 독일과 프랑스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나치 시대에도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며 동료와 학생들에게 나치 정권을 비판했다. 처음 파스빈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정치인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이것이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독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가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소련 간의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서독도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파스빈더는 다시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⁸⁴⁾ 처음에는 아데나워 총리와 연방의회, 교회 고위인사, 여성 단체 등에 개인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 한국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재무장에 관한 국민투표를 촉구했다.⁸⁵⁾ 국제여성민주연맹은 <우

⁸⁴⁾ Gisela Notz, “Das friedenspolitische Engagement von Klara Marie Fassbinder (1890-1974),” Detlef Bald and Wolfram Wette, eds., *Alternativen zur Wiederbewaffnung* (Essen: Klartext 2008), p. 161; Klara Marie Fassbinder, *Begegnungen und Entscheidungen: Blätter aus einem Lesebuch*, Darmstadt: Progress Verlag, 1961.

⁸⁵⁾ ‘세계 만국 어머니회’(WOMAN) 독일 분파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스빈더는

리는 고발한다》(*We Accuse*)라는 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형태의 항의 방식을 선택했다. 이후 아테나워에게 보낸 편지는 잡지 <여성과 평화>에서 다시 게재했다. 파스빈더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며, 나머지 본문에도 기독교 윤리에 대해 언급을 한다. 또한 글에서 아테나워의 인터뷰를 직접 언급한다.

이제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이 인터뷰를 다른 정치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 할 수는 없었을까? 러시아가 곧 공처럼 '반격'할 수 있다는 원자 폭탄에 대해 읽었는가? 우리는 한국과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신문에서 많은 악을 언급하고 있고, 언급되고 있는 동독 경찰에 대항할 서독 경찰(군대)의 설립에 대해 읽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독일 인 간의 동족상잔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쪽 또는 다른 쪽에서 원자폭탄과 유사하거나 어쩌면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⁸⁶⁾

공산주의와 분명한 거리를 둔 그는 한국전쟁은 양측 모두 폭력적으로 싸웠으며 “사람들을 끔찍한 죄악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⁸⁷⁾ 그는 또한 프랑스 신문에 보도된 양측의 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파스빈더는 국제 사회에 양측의 중재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유엔을 비롯한 기독교계가 한반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가? 대립하는 두 당사자의 말을 들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⁸⁸⁾

첫 번째 반응으로 자신의 계획을 밝힌다. 이 시점에서 그는 사민당 의장인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의 지원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AddF, NL-K-05; 50-4, Schreiben von Klara Marie Fassbinder an Vilma Mönckeberg, August 25, 1950, S. 1. Klara Marie Fassbinder, “Arbeit für den Frieden: Gestern, heute und morgen” *Frau und Frieden* vol. 1 (May 1952), p. 3.

⁸⁶⁾ Klara Marie Fassbinder, “Brief an den Bundeskanzler (21.08.1950)” *Frau und Frieden* vol. 1 (May 1952), p. 7.

⁸⁷⁾ Ibid., pp. 7-8.

⁸⁸⁾ Ibid., p. 8.

또한 그는 유엔에 직접 편지를 써서 특히 한국 어린이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유엔의 행동에 항의할 계획도 세웠다. 그는 또한 미국의 ‘팽창주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비판했다.⁸⁹⁾ 이처럼 파스빈더는 이 시기에 이미 기존의 서독 여성 단체들과는 다른 의견을 드러내고 있었다.⁹⁰⁾ 동시에 파스빈더는 한국전쟁이 독일 국민에게 끼친 큰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전쟁으로 인한 공포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험한 모든 일로 인해 정신적,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이미 새로운 공포가 다시 그들을 덮치고 있다. 미군 점령군이 이 공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 빼앗아간 것이다! 사람들은 점령군 때문에 안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 투표를 하면 과반수가 즉각 철수할 수 있을 텐데 - 유엔, 유럽평의회, 교회, 즉 새로운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⁹¹⁾

여기서 파스빈더는 독일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전쟁에 대한 심리적 공포를 표현했다. 독일민주여성연맹의 호소와는 달리, 파스빈더는 외교 정책과 사회 상황을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⁸⁹⁾ AddF, NL-K-05; 50-4, Schreiben von Klara Marie Fassbinder an Vilma Mönckeberg, August 25, 1950, p. 1.

⁹⁰⁾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함부르크에서 국제 협회의 독일 분파 ‘세계 만국 어머니회’는 5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 한국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 2) 미국의 간섭, 3) 핵폭탄 또는 수소폭탄 사용 가능성, 4) 독일과의 비교 가능성, 5) 유엔의 반응. 예를 들어, 한 직원은 유엔이 비공산주의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회는 계속되는 논의로 인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AddF, NL-K-05; 14-1, Schreiben von Vilma Mönckeberg an ihre Mitarbeiterinnen, July 14, 1950; Schreiben einer Mitarbeiterin (o.N.) an Mönckeberg, September 07, 1950.

⁹¹⁾ Fassbinder, “Brief an den Bundeskanzler,” p. 7.

있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동서독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항의 서한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한 파스빈더는 같은 생각을 가진 여성들과 힘을 합쳐 평화 대회를 조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헨리에트 뢰레(Henriette Rühle), 헬레네 베셀(Helene Wessel), 마리아 데쿠(Maria Deku)와 함께 1951년 10월 14일 벨베르트에서 서독 재무장에 반대하는 ‘평화를 위한 여성과 어머니들의 회의’를 조직했다. 파스빈더는 대회가 동독 지도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벨베르트의 비밀>(Das Geheimnis von Velbert)이라는 책자에서 대회 인적 구성, 강연 및 목표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설명한다. 파스빈더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수의 독일 여성들만 참가할 예정이었으며, 따라서 대회 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서독에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은 이미 195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자금 조달도 뢰레의 개인 기부금과 입장료로 미리 마련했다.⁹²⁾

오전에 초교파적 예배와 영가 “평화를 주소서”(Verleih uns Frieden gnädiglich) 합창단의 공연 후, 파스빈더는 대회의 시작과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로 대회를 열었다. 그런 다음 벨베르트 시장이 나와 대회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연설하고, 마지막으로 주최측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서 헨리에트 뢰레는 특히 점령에 따른 높은 비용과 재무장 가능성에 대해 비판했으며, 이는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아테나위 정부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평화 조약 체결을 간청했다. 마리아 데쿠는 강연에서 한국전쟁 동안 보여지는 모순되는 인권과 유엔 현장에 대해 언급했다.⁹³⁾ 마지막으로 파스빈더는 전쟁 포로들에 대

⁹²⁾ Klara Marie Fassbinder, *Das Geheimnis von Velbert* (Bonn: WFFB, 1951), pp. 5-7.

⁹³⁾ AddF, NL-K-05; 51-1, Lonny Terfloth, Referat über den Frauen-Friedenskongress vom 14.10.1951 in Velbert, pp. 3-4. 회의에 관해서서 다음 논문을 참조한다. Küster and Steinmann, “Die Westdeutsche Frauenfriedensbewegung (WFFB),” pp.

한 항의 서한과 석방, 그리고 “한국의 노숙자와 부모 없는 어린이들에 관한 결의안과 베르터 여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회의에 대해 보고한 론니 테르플로트(Lonny Terfloth)에 따르면, 파스빈더가 공산주의 조직과 자신을 날카롭게 분리했지만 릴리 베르터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뜻밖이었다.⁹⁴⁾

벨베르트 선언문에는 비무장화, 통일, ‘사회 재조직’ 외에 파스빈더의 노선과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몇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선언문의 끝부분인데, 아마도 관련된 모든 여성들과의 타협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동료 자매 여러분! (...)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통일된 조국 독일에서 다시 일하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 평화는 우리의 삶이므로 전쟁 후 6년이 지난 조국은 진정한 평화 조약을 이뤄야한다. 평화 속에서만 지난 두 차례 전쟁의 결과로 얻은 심각한 도덕적 손상을 치유할 수 있으며, 전쟁 준비는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우리와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어려운 사회 문제들은 평화 속에서만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재편은 국방을 위한 최고의 공헌이다. 독일의 비무장화는 국제적 이해와 균축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⁹⁵⁾

2. 서독여성평화운동의 설립, 활동 및 회원들

벨베르트 대회 이후, 파스빈더와 뜻을 같이하는 여성들은 지역적으로 조직된 평화 단체들의 포괄적인 전국 단체로 ‘서독 여성 평화 운동’(WFFB)

170-171.

⁹⁴⁾ AddF, NL-K-05; 51-1, Lonny Terfloth, Referat über den Frauen-Friedenskongress vom 14.10.1951 in Velbert, p. 5.

⁹⁵⁾ AddF, SK-51; 1, Manifest des Westdeutschen Frauenfriedenskongresses in Velbert, October 14, 1951.

을 설립했다. 서독의 여러 도시에서 여성들은 소규모 평화 회의를 조직하고 전국 단체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대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나 시 정부가 이에 반발하여 행사를 금지하기도 했다.⁹⁶⁾ 독일민주여성연맹과 마찬가지로 서독여성평화운동은 재무장 반대와 동·서독의 화해 및 통일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생명과 평화의 수호자로서” 사회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⁹⁷⁾ 기독교 부르주아라는 외피에도 불구하고 서독여성평화운동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성향을 가진 여성들을 하나로 모았다. 서독여성평화운동은 회비를 받지 않았으며, 자발적 지역 협력에 의존했다. 지역 실무 그룹에서 여성들은 강연, 회의, 정보 교환 및 전단지 캠페인을 조직했다. 주 차원에서 의장이 선출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회장단은 잡지 <여성과 평화>의 발행, 홍보, 국제협력을 담당했다.⁹⁸⁾

예를 들어, 1952년 2월 10일 괴팅겐에서 열린 여성 평화의 날에 초대된 파스빈더가 평화를 위한 교육을 강연한 적이 있다. 벨베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행사는 예배와 음악 반주와 함께 시작되고 끝에 토론도 이어졌다. 초대장의 첫 문장을 보면 이 모임의 지식인 지향을 엿볼 수 있는데 뒷부분은 독일민주여성연맹 브로셔의 내용과 대충 비슷하다.

호레이스는 2000년 전 한 시에서 ‘전쟁은 어머니에게 증오의 대상’이라고 썼다.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은 남편의 연인, 형제, 어린 아들을 빼앗기고 끊임없는 위협과 단절 또는 죽음에 노출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 전쟁이 그들의 집으로 직접 옮겨지기 전까지는. 전쟁은 가정의 난로부터 요람에 있는 아기와 등교하는 아이까지, 그들의 집이 무너질 때까지 그들을 괴롭혔

⁹⁶⁾ Ibid., pp. 13-14.

⁹⁷⁾ Notz, “Das friedenspolitische Engagement von Klara Marie Fassbinder,” p. 162.

⁹⁸⁾ Elke Nyssen, “Die Westdeutsche Frauenfriedensbewegung” *Feministische Studien* vol. 3, no. 2 (November 1984), p. 69.

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여성이 등장했다. 전 세계 모든 어머니들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⁹⁹⁾

주최 측이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는 독일민주여성연맹 또는 서독여성평화운동의 간행물과 일부 유사점이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평화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새로운 여성’에 대한 언급도 흥미롭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파스빈더 자신의 전기와도 일맥상통한다.¹⁰⁰⁾ 엘케 니센(Elke Nyssen)이 1984년에 실시한 두 차례의 서독여성평화운동 활동가 인터뷰는 여성들이 왜 서독여성평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K.I.라는 이니셜을 가진 여성은 십대 때 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했으며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¹⁰¹⁾ 인터뷰에서 그는 서독여성평화운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셨을 수도 있다. 당신이 여자인데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여성 평화 운동을 해보라고 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독일민주여성연맹에 계셨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나도 역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이 속한 곳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¹⁰²⁾

⁹⁹⁾ AddF, NL-P-27; 2-3, Einladung zum Frauen-Friedenstag in Göttingen: ‚Die Frau und der Friede‘, February 10, 1952.

¹⁰⁰⁾ Fassbinder, *Begegnungen und Entscheidungen*, p. 59.

¹⁰¹⁾ 서독여성평화운동의 활동가인 잉게보르크 퀴스터(Ingeborg Küster)와 엘리 슈타인만(Elly Steinmann)도 비슷한 동기를 회고하는데,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üster and Steinmann, “Die Westdeutsche Frauenfriedensbewegung (WFFB),” pp. 172-173.

¹⁰²⁾ Nyssen, “Die Westdeutsche Frauenfriedensbewegung,” p. 74.

그는 원래 정치적으로 좌파에 가까웠고 남편 역시 공산주의자로서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했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민주여성 연맹이 아닌 서독여성평화운동을 선택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남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평화 단체는 젊은 여성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여성 평화 단체는 여성이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남성이 신경 쓰지 않은 곳에서 정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회원 모집을 위해 그는 주로 교사나 비서와 같은 특정 직업군의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려고 했다.¹⁰³⁾

T.H.라는 이니셜을 가진 활동가는 파스빈더에 대해 “평화를 위한 끈기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혼과 이혼, 낙태법과 같은 여성 단체의 다른 중요한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¹⁰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파스빈더 자신은 이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3. 한국 전쟁 관련 보도

잡지 <여성과 평화>에 서독여성평화운동 회원들은 인본주의, 평화주의, 반파시즘을 주제로 한 기사를 게재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재무장, 정치적 박해, 긴급 법률을 다루고 자신의 시위, 회의 또는 항의 요청에 대한 보고를 다루었다. 파스빈더 외에도 잉게보르그 퀴스터(Ingeborg

¹⁰³⁾ Ibid., p. 75

¹⁰⁴⁾ Ibid., p. 72.

Küster), 엘리 슈타인만(Elly Steinmann), 마리아 데쿠(Maria Deku), 에르나 힌츠-본트론(Erna Hinz-Vonthron)이 상임 기고자로 참여했다.¹⁰⁵⁾ 저자들은 세 편의 글에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사용된 수사를 살펴보면 독일민주여성연맹 간행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내러티브가 강조된다. 1952년 창간호에는 한국전쟁에서 후베르트 쿠헨베커(Hubert Kuchenbecker)라는 독일인 외인 군속이 사망했다는 짧은 뉴스가 실려 있다. 기사 말미에는 재무장과 관련하여 “독일인 어머니, 일반 조약이 당신의 아들에게 하멜른 지역의 뱀에서 온 후베르트 쿠헨베커와 같은 운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문장이 있다.¹⁰⁶⁾

‘한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글에서 저자 마리아 쉥크(Maria Schenk)는 뉴스나 신문에 등장하는 한국인 (고아) 아동의 사진에 사용된 표현을 살펴본다. 그는 ‘굶주린’ 또는 ‘누더기’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아이들을 묘사하고 곧 발생할 혹은 이미 발생한 죽음을 지적한다. 그의 수사는 특히 한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그림은 아이들을 태운 소 마차이다. 구멍을 통해 희미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작은 곱슬 머리를 한 아이들이 뺨뺨하게 들어차 앉아 있고, 일부는 울고 일부는 두려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아주 작고 동글동글하며 어린 강아지처럼 뒹굴고 있다. (...) 하지만 어머니들은 어디 있을까?” 이 글은 또한 “지금은 한국의 아이들이지만, 내일은 또다시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나 러시아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며 마무리된다.¹⁰⁷⁾ 두 기사 모두에서 언급된 어머니와 자녀는 독자들

¹⁰⁵⁾ Nyssen, “Die Westdeutsche Frauenfriedensbewegung,” p. 69. 회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 책자에 찾을 수 있다. AddF, SK-51; 7, o.V.: Was ist, was will, was tut die WFFB, ca. 1952.

¹⁰⁶⁾ “Soll es dir auch so ergehen deutsche Mutter” *Frau und Frieden*, vol. 1 (May 1952). 프랑크 비에스의 저서에서 외국 (프랑스) 군단에 강제 징집될 가능성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두려움을 묘사된다. Biess, *Republik der Angst*, pp. 85-91.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과 비교한 표현에는 저자의 오리엔탈리즘적 표현이 또한 묻어 있지만 아이들의 귀여움이 공감을 일으킨다.

세 번째 짧은 기사는 한국전쟁의 종전에 대한 것이다. 기사 맨 위에는 불타는 폐허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간호하는 어머니의 그림이 있다. 그리고 이어 “이 황폐한 땅의 모든 고통이 어머니의 아름다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얼굴은 오늘도 웃을 수 있을까?”¹⁰⁸⁾라고 쓰며, 이승만을 언급하며 평화 협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동독 언론처럼 아데나워와 이승만을 비교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계 평화에 대한 희망으로 기사를 끝낸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주로 독일에서 평화 운동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한국 행위자들은 객관화되고 일반적으로 소외된다.

4. 정치적 박해 및 침투 시도

<여성과 평화>에는 파스빈더 자신을 포함한 서독여성평화운동 회원들의 법적, 정치적 박해에 대한 보고서도 여러 번 수록되어 있다. 잘 알려진 재판에서 파스빈더는 1955년 공산주의 단체와의 연루 의혹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본 교육 대학교에서 일반 퇴임식도 거치지 않고 조기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재판의 한 핵심 증인이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었다.¹⁰⁹⁾ 다른 여성들도 가택 수색과 경찰의 감시, 명예 훼손을 견뎌야 했다. 이레네 스토르(Irene Stöhr)와 다

¹⁰⁷⁾ Maria Schenk, “Kinder in Korea” *Frau und Frieden*, vol. 6 (September 1952), p. 4.

¹⁰⁸⁾ “In Korea schweigen die Waffen” *Frau und Frieden*, vol. 8 (August 1953), p. 1.

¹⁰⁹⁾ Diether Posser, *Anwalt im Kalten Krieg: Deutsche Geschichte in politischen Prozessen 1951-1968* (Bonn: Nomos, 2000), pp. 55-78.

른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박해는 서독 정부의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소련 지역을 탈출하여 엄격한 반공주의자로 여겨지던 연방전독일문제부(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여성부서 담당 공무원 마리아 함펠(Maria Hampel)은 개인으로서 서독여성평화운동과 파스빈더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함펠에 따르면 파스빈더는 “정치적 열광주의자였으며 공산주의의 위협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목적에 악용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함펠 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기민당의 개별 여성 의원들은 파스빈더에 대해 우스꽝스럽고 위협적이라는 모순된 적(敵) 이미지를 구축했다. 파스빈더의 “순진한 감정적인 동기”와 “왜곡된 기독교적 사고 방식”은 많은 여성들을 설득하는 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파스빈더의 평화주의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공산주의자들에 비해 ‘전형적’이고 무해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반면, ‘광신주의’(Fanatismus) 고발은 공산주의자에 대한 비판과 매우 유사하게 여겼다.¹¹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릴리 베흐터를 비롯한 독일민주여성연맹 활동가들을 상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심지어 함펠은 파스빈더와 서독여성평화운동이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독여성평화운동에 요원을 침투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¹¹¹⁾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서독여성평화운동 내부에서도 “엄청난 작전 능력을 갖춘” 독일민주여성연맹 회원들의 침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뷔르템베르크-호헨촐레른(Württemberg-Hohenzollern) 지

110) Irene Stoehr, “Friedensklärchens Feindinnen: Klara-Maria Fassbinder und das antikommunistische Frauennetzwerk” Julia Paulus & Eva-Maria Silies & Kerstin Wolff, eds., *Zeitgeschichte als Geschlechtergeschichte: Neue Perspektiven auf die Bundesrepublik* (Frankfurt am Main: Campus, 2012), pp. 77-79.

111) *Ibid.*, p. 86.

역 위원장인 케테 폰 하겐(Käthe von Hagen)은 서독여성평화운동이 절대적으로 비당파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 회의에서 “K.(공산주의자)나 그렇게 간주되는 여성도, 독일민주여성연맹 회원도 우리와 함께 지역 협의를 이끌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¹¹²⁾ 그 이전에도 독일민주여성연맹 회원들이 다른 여성 단체에 침투하기 위해 가명으로 지역 행사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¹³⁾ 회원들을 행사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버스를 대절했던 독일민주여성연맹의 이러한 침투 시도는 벨베르트에서 열린 여성 평화 회의와 관련하여 논의되기도 했다. 독일민주여성연맹 사무총장 게르다 베버의 연설은 모든 주최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당초 계획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돌이켜보면 파스빈더는 다른 여성 단체와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된다.¹¹⁴⁾ 행사 방문객뿐만 아니라 서독여성평화운동 회원에게도 참여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침투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독일민주여성연맹의 지속적인 침투 시도와 서독여성평화운동 회원들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955년까지 서독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계속했다. 파스빈더는 평화 운동가로서의 활동도 포기하지 않고 국제 무대로 활동을 더욱 넓혔다. 그는 핵무기 반대와 동서독 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했다. 예를 들어, 1955년 4월 서독 평화 운동 회의에서 핵의 위험성에 대해 연설했고, 1958년

112) 이 편지의 인용은 앞펠리우스의 저서에서 찾을 수 있다. Brief von Klara Marie Fassbinder an Hildegard Bonte, February 28, 1953. Appellius, *Pazifismus in Westdeutschland*, p. 303, 재인용. 독일민주여성연맹 회원들은 자체 구조를 참조하여 서독여성평화운동 내부에 공산주의자가 침투할 가능성을 관찰했다.

113) AddF, NL-K-05; 51-1, Schreiben von (Unbekannter Verfasser) an Vilma Mönckeberg, November 09, 1951.

114) AddF, NL-K-05; 51-1, Schreiben von Ilse Wilbert an Vilma Mönckeberg, November 02, 1951.

에는 ‘연방공화국 핵무장 반대 상설 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국제 평화 회의에서 강연을 하고 서독 평화 운동과 독일 문제에 대해 연설했다. 115)

V. 결론

새로 건립된 독일 연방 공화국에서는 일찍부터 한국전쟁으로 인한 재무장 문제가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가 활동했는데, 그 중에는 여성 평화 단체도 있었다. 여성들은 재무장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조직하고 평화를 위한 시위를 했다. 참고한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단체는 젊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 글에서는 당시 두 개의 대규모 여성 평화 단체를 이끌었던 릴리 베흐터(독일민주여성연맹)와 클라라 마리 파스빈더(서독여성평화운동)의 사례를 통해 한국전쟁과 재무장 문제에 대한 두 단체의 담론, 시위의 내용과 수사, 이후 서독 당국의 명예훼손과 박해에 대해 살펴봤다.

두 명의 행위자는 정치적으로 직접 활동하지 않았지만 동시대 사건에 관심이 많았고, 과거 1·2차 세계대전의 전쟁 경험에 영향을 받았다. 베흐터에 비해 파스빈더는 이미 학문적으로 여성 운동과 프랑스-독일 화해에 오랜 기간 관여해 왔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두 여성은 각각 좌파와 기독교 보수 여성 평화 운동에 활동하기 시작했고 거의 동시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베흐터와 파스빈더는 모두 조직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지만, 베흐터의 경우 자신의 지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통제를

115) Kraushaar, *Die Protest-Chronik*, p. 1276, pp. 1925-1926, pp. 2007-2008, p. 2177.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항의의 형태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베흐터는 강연 시리즈를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신문과 적극적으로 인터뷰했다. 내용 면에서도 그는 국제여성민주연맹의 한국전쟁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신문사에 전달하고 강연에서 발표했다. 반면에 파스빈더는 처음에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낼 때 그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없었다. 1951년 가을 벨베르트 회의가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 후 국내외 평화 회의에서 연사로 더 활발하게 참여했다.

독일민주여성연맹과 서독여성평화운동은 수사적으로 전쟁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한국과 독일을 비교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여성들의 폭력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이를 한국 여성들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기사나 강연을 실었다. 독일민주여성연맹의 경우 예상대로 반미주의와 반제국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서독여성평화운동은 이러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지식인적인 측면과 함께 보다 전반적인 평화 사상을 펼쳤다. 또한 파스빈더와 서독여성평화운동은 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테나워 정부도 비판하고 동독과의 교류를 모색하며, 다른 기독교 여성 단체 및 서독 정치인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베흐터와 파스빈더는 각각 서독과 미국 정부와 사법부의 격전에 휘말리게 되었다. 강연은 금지되었고 두 여성 모두 기소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치적 소외는 아테나워 정부가 추구한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으로 독일민주여성연맹 동부지부의 영향력이 평화운동에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 서독 정부의 감시는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재무장, 서방 통합, 반공주의와 같은 아테나워 정부의 중요한 지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기에 지속적인 박해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은 평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서독 평화 운동의 여성 활동가들을 살펴보면 개

인적, 정치적, 젠더적 관점 등 평화 운동의 다양한 차원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강조하는 모성 페미니즘의 수사적 표현은 독일뿐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모성적 연대를 불러 일으켰다. 냉전 이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내러티브는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도 전쟁에서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¹¹⁶⁾

■ 접수: 2024년 5월 2일 / 심사: 2024년 5월 30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¹¹⁶⁾ 역사 속의 다양한 갈등과 전쟁에 성폭력에 관해서 하이네만의 저서를 참조한다. Elizabeth D. Heinema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Zones: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Era of Human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1).

【참고문헌】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파주: 돌베개, 2000.
-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파주: 창비, 2013.
-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파주: 창비, 2021.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한국전쟁과 젠더』, 파주: 서해문집, 2004.
- Appelius, Stefan, *Pazifismus in Westdeutschland: Die Deutsche Friedensgesellschaft 1945-1968*, vol. 1, Aachen: Günter Mainz, 1991.
- Baur, Hannecläre & Fölsing, Günter, eds., *Das politische Engagement des Christen heute: Zum 80. Geburtstag von Klara Marie Fassbinder*, Bonn: Bouvier, 1970.
- Biess, Frank, *Republik der Angst: Eine andere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Reinbek: Rowohlt 2019.
- Carstens, Karl & Wünsche, Friedrich Horst eds., *Die Korea-Krise als ordnungspolitische Herausforderung der deutschen Wirtschaftspolitik: Texte und Dokumente*, Stuttgart: G. Fischer 1986.
- Creuzberger, Stefan & Hoffmann, Dierk, 'Geistige Gefahr' und 'Immunsierung der Gesellschaft': *Antikommunismus und politische Kultur in der frühen Bundesrepublik*, München: De Gruyter, 2014.
- Dietzfelbinger, Eckart, *Die westdeutsche Friedensbewegung 1948 bis 1955: Die Protestaktionen gegen die Remilitaris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öln: Pahl-Rugenstein, 1984.
- Fassbinder, Klara Marie, *Das Geheimnis von Velbert*, Bonn: WFFB, 1951.
- Gradskova, Yulia,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the Global South and the Cold War: Defending the Rights of Women of the 'Whole World'?*, New York: Routledge, 2021.
- Guttman, Barbara, *Den weiblichen Einfluss geltend machen. Karlsruher Frauen in der Nachkriegszeit 1945-1955*, Karlsruhe: Badenia, 2000.
- Heineman, Elizabeth D., *Sexual Violence in Conflict Zones: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Era of Human Righ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1.
- Hertrampf, Susanne, *Zum Wohle der Menschheit: Feministisches Denken und*

- Engagement internationaler Aktivistinnen 1945-1975*, Freiburg: Centaurus 2006.
- Kang, Hyuk, *Was kann die Kirche für den Frieden tun? Der Koreakrieg im Jahr 1950*, Iudicium: München, 2022.
- Kaul, Friedrich Karl, *Ich sagte die Wahrheit: Lilly Wächter, ein Vorbild der deutschen Frauen im Kampf um den Frieden*, Berlin: Dt. Frauenverlag, 1952.
- Kim, Suzy, *Among Women Across Worlds: North Korea in the Global Cold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3.
- Korte, Jan, *Instrument Antikommunismus: Der Sonderfall Bundesrepublik*, Berlin: Karl Dietz, 2009.
- Krahn-Lierse, Erna, *Kampf der Frau um ihre Freiheit und den Frieden: Materialsammlung zur Gegenwartskunde*, Berlin: Volk und Wissen, 1953.
- Kraushaar, Wolfgang, *Die Protest-Chronik, 1949-1959*, vol. 1, Hamburg: Rogner & Bernhard, 1996.
- Roskopf, Annette, *Friedrich Karl Kaul: Anwalt im geteilten Deutschland 1906-1981*, Berlin: Nomos, 2002.
- Weber, Hermann & Gerda, *Leben nach dem ‚Prinzip links‘: Erinnerungen aus fünf Jahrzehnten*, Berlin: Ch, Links, 2006.
- Werner, Michael, *Die ‚Ohne-mich‘-Bewegung: Die bundesdeutsche Friedensbewegung im deutsch-deutschen Kalten Krieg, 1949-1955*, Münster: Monsenstein und Vannerdatt, 2006.
- WIDF, ed., *Die Kinder Koreas rufen die Frauen der Welt*, East Berlin: WIDF, 1951.
- Women's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War Atrocities Committed in Korea, ed., *We Accuse: Report of the Women's Investigation of Atrocities committed by USA and Syngman Rhee Troops in Korea*, East Berlin: WIDF, 1951.
- 강은아, 「한국에서의 피카소 인식 변화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5호, 2023, 111~141쪽.
- 미카엘 램케, 「일어나지 않은 전쟁: 지나간 전쟁경험과 분단 독일에서의 한국전쟁」, 김성보·한운석 편,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고양: 역사비평사, 2010, 119~145쪽.
- 이동기, 「평화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 제106호, 2014, 16~36쪽.

- 이유재, 「동서의 양진영에서: 남북한에 대한 동서독의 개발원조 1953-1963」, 김성보·한운석 편,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고양: 역사비평사, 2010, 182~210쪽.
- 정용욱, 「6·25 전쟁~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 현실』 제91호, 2014, 285~315쪽.
- 후지메 유키, 「모니카 펠튼과 국제여성민주연맹(WIDF) 한국전쟁 진상조사단」 『사회와역사』 제100호, 2013, 279~324쪽.
- Choe, Chungho, “Der Ausbruch des Koreakrieges im Spiegel der Ost- und Westberliner Tageszeitungen” (Ph.D. dissertation, Freie Universität Berlin, 1968).
- Choi, Hyung-Sik, “Zur Frage der Rolle des Korea-Krieges bei der westdeutschen Wiederaufrüstungsdebatte und des Einflusses auf die prinzipielle Entscheidung für die Wiederaufrüstung im Kontext der Aktualisierung des Ost-West-Konfliktes” (Ph.D. dissertation,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1994).
- Donert, Celia, “From Communist Internationalism to Human Rights. Gender, Violence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Mission to North Korea, 1951”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vol. 25, no. 2 (2016), pp. 313-333.
- Gradskova, Yulia,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the “Third World” and the Global Cold War from the late-1950s to the mid-1960s” *Women’s History Review* vol. 29, no. 2 (2019), pp. 270-288.
- Günther, Barbara & Wenzel, Comelia, “Ungehobene Schätze: Die Frauenfriedensbewegung im Archiv” Dunkel, Franziska & Schneider, Corinna, eds., *Frauen und Frieden? Zuschreibungen - Kämpfe - Verhinderungen*, Opladen: Budrich (2015), pp. 145-154.
- Johnson, Candace, “Responsibility, Affective Solidarity and Transnational Maternal Feminism” *Feminist Theory* vol. 22, no. 2 (2019), pp. 175-198.
- Kim, Taewoo, “Frustrated Peace: Investigatory Activities by the Commission of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 (WIDF)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0, no. 1 (2020), pp. 83-112.
- McCarthy, John D. & Zald, Mayer N.,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 (1977), pp. 1212-1241.
- Nödinger, Ingeborg, “Für Frieden und Gleichberechtigung: Der Demokratische Frauenbund Deutschland” Hervé, Florence, ed., *Geschichte der deutschen Frauenbewegung*, Köln: Pahl Rugenstein, 1990, pp. 208-209.
- Notz, Gisela, “Das friedenspolitische Engagement von Klara Marie Fassbinder (1890-1974)” Bald, Detlef & Wette, Wolfram, eds., *Alternativen zur Wiederbewaffnung*, Essen: Klartext, 2008, pp. 155-169.
- Nyssen, Elke, “Die Westdeutsche Frauenfriedensbewegung” *Feministische Studien* vol. 3, no. 2 (1984), pp. 66-77.
- Schröter, Ursula, “Die DDR-Frauenorganisation im Rückblick” Schröder, Ursula & Ullrich, Renate & Ferchland, Rainer, eds., *Patriarchat in der DDR: Nachträgliche Entdeckungen in DFD-Dokumenten, DEFA-Dokumentarfilmen und soziologischen Befragungen*, Berlin: Karl Dietz, 2009, pp. 11-62.
- Stoehr, Irene, “Friedensklärchens Feindinnen: Klara-Maria Fassbinder und das antikommunistische Frauennetzwerk” Paulus, Julia & Silies, Eva-Maria & Wolff, Kerstin, eds., *Zeitgeschichte als Geschlechtergeschichte: Neue Perspektiven auf die Bundesrepublik*, Frankfurt am Main: Campus, 2012, pp. 77-79.
- Streichhahn, Vincent, “Einleitung: Krieg und Geschlecht im 20. Jahrhundert” Streichhahn, Vincent & Altieri, Riccardo, eds., *Krieg und Geschlecht im 20. Jahrhundert: Interdisziplinäre Perspektiven zu Geschlechterfragen in der Kriegsforschung*, Bielefeld: Transcript, 2021, pp. 11-21.

국립중앙도서관, RG306, HICOG 28-S; RG306, HICOG 34-S

독일 여성 운동 기록원: AddF, NL-K-05

베를린의 연방 문서 보관소: BArch, SAPMO, DY31/822; DY 31/1240; J IV 2/3/14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기록보관소 슈투트가르트: LABW HStAS, EA 2/301

한겨레

Berliner Zeitung

Die Tat

Die Frau von heute

Frau und Frieden

Neue Zeit

Neues Deutschland

New York Times

Stuttgarter Zeitung

Süddeutsche Zeitung

Unsere Zeitung

“Deutschland darf kein zweites Korea werden”

: Women Peace Activists' Struggles against West German Rearmament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Max Altenhofen (University of Tübingen)

Abstract

This article takes a closer look on the two female peace activists Lilly Wächter (DFD) and Klara Marie Fassbinder (WFFB) in the newly established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t the start of the Korean War. Wächter visited North Korea as a West German delegate of a socialist international women's group and after her return began a lecture series on massacres by the UN-troops against North Korean civilians. On the other hand, Fassbinder initially protested as an individual against the rearmament, before she founded a women's peace association and organized peace congresses. For both women, the Korean War represented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ir struggles, as it was seen as a prospect of the situation in a divided Germany. While Wächter and Fassbinder had different political standpoints, both stood in opposition to the Adenauer government and faced judicial and political persecution under the banner of anti-communism. This led to a double marginalization of female peace activists, firstly as political opponents, and secondly, as women. The research also contribute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West German society and peace activism during the Korean War.

Keywords: West Germany, Korean War, Rearmament, Peace Activism, Maternal Feminism, Lilly Wächter, Klara Marie Fassbinder

막스 알텐호펜 (Max Altenhofen)

현재 튀빙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펠로우로 있고 올 9월부터 성균관대 사학과에서 강의할 것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독관계사, 개발사, 환경사와 평화사이다.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서독의 대한 기술원조, 1960·80년대』를 독어로 집필 중이다.

일반논문

1953~195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김도민 (강원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1950년대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활동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이 남한과 미국 측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글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중감위의 조직 구성, 절차규정 등과 중감위의 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8월 1일 중감위 제1차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성립'했으며, 1953년 8월 24일 중감위는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955년 9월 중감위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만 단행됐으며, 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들은 모두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하면서도,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193>

* 이 논문은 202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공동연구: 한반도 정전체제의 형성·변동과 평화기획)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 또한 이 글은 2023년 11월 한반도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학술회의 토론과 논문 심사에서 중요한 비판과 제안을 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본인의 부족함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정은 “변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1957년 6월, 미국은 중감위 활동을 규정한 정전협정 관련 조항의 일부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의 보루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서 정전협정의 수호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중감위의 임시 철수는 가능하지만, 정전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 중감위를 해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로서 중감위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이러한 관점은, 미국의 일부 관료들과 ‘공명’하기도 했다.

주제어: 중립국감독위원회, 정전협정, 정전체제, 한국전쟁, 한반도 평화,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미국, 북한

I. 머리말

이 글은 1950년대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이하 중감위) 활동의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남한과 미국 측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글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중감위의 조직 구성, 절차규정 등과 중감위의 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중감위의 활동과 중단에 대한 연구는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먼저 진행됐다. 가장 먼저 1999년 황인수(In Soo Hwang)가 한미관계사의 맥락에서 중감위의 활동이 중단되는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이 논문은 미국자료인 *FRUS*, RG 85, RG 59, 아이젠하워대통령도서관(DDE Library) 등 1차사료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이 중감위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후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 시기 미국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은 중감위의 활동 중단과 한국군 현대화라는 목표는 동일했으나,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및 유엔사가 대립했음을 밝혀주었다. 미 국무부는 공산 측과 협상을 진행하며 국제적 '절차'를 따르고자 했으나, 유엔사와 미 국방부는 일방적인 활동정지라는 방식을 주장했다. 나아가 이 논문은 중감위의 활동 중단이 정전협정을 부정(Denuciation)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설명했다.¹⁾

국내에서는 박태균이 2003년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의 맥락에서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중감위의 활동을 규정한 13항 2목과 관련하여 논란이 진행됐음에도, 왜 1957년 별다른 논란 없이 실행이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었다. 박태균은 자료상 확인되진 않지만, 195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이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감축과 관련된 정책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1957년 실행에서는 ‘정전협정 일부 조항의 무효선언’이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았다.²⁾

김보영은 박사학위논문(2008년)에 기반하여 2016년 출간한 『전쟁과 휴전』에서 휴전협상의 예비회담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감위가 처음으로 제시되는 과정과 중감위 구성을 둘러싼 논의과정을 밝혔다. 이 책에 따르

1) In Soo Hwang,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ecurity Relationship, 1953-1960: Great Power and Small State* (London: the Degree of Ph. D.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College London, 1999). 특히 이 논문의 제3장 3절인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Denuci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의 149~171쪽을 참조.

2)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60호 (2003), 51~52쪽.

면, 1951년 7월 3일 마오쩌둥은 “중국 측의 휴전협상 전략 기본 원칙” 다섯 가지를 스탈린에게 보내 의견을 구했다. 여기에 네 번째로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이 처음으로 등장했다.³⁾ 스탈린은 이 제안에 대해 “네번째 제안인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은 먼저 제기하지 말고, 만약 미군 측이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면 유엔은 전쟁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그때 대신 중립국감독위 설치를 제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⁴⁾ 또한 이 책은 1952년 중감위 구성에서 중립국으로서 소련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공산 측과 이에 반대하는 유엔군 측의 협상의 과정 및 그 귀결 또한 자세히 실증했다.⁵⁾

2010년대 이후 중감위의 구성원인 체코슬로바키아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2013년 바브린소바 주자나(VAVRINCOVA ZUZANA)는 석사학위 논문 「50년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관계 연구」에서 ‘체코공화국 군역사서고 및 외교부서고 자료’를 활용하여 체코슬로바키아 중감위 구성원이 북한에 입국하여 활동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밝혔다.⁶⁾ 연구논문은 아니지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3년 펴낸

3)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56쪽.

4) 김보영, 위의 책, 57쪽.

5) 김보영, 위의 책, 193~210쪽. 김명섭은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의 제5장 ‘시간: 정화 및 정전을 어떻게 실현하고 지속할 것인가?’의 제2절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책은 황인수, 박태균, 김보영 등의 앞선 연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중감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 또한 김정훈은 「6·25전쟁 정전회담 시기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에 관한 연구」(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의 제4장에 ‘제3의제(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 설치) 기본주제 논의와 일괄타결안 논의’ 부분에서 참모장교 회의를 중심으로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6) 바브린소바 주자나(VAVRINCOVA ZUZANA), 「50년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석사학위는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감독위원단이 본 정전 후 남과 북, 1953~1956』은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감독위원단이 남긴 사진자료를 제공해준다.⁷⁾ 또한 최근에는 1950년대 남한에서 펼쳐진 ‘적성감위 축출운동’을 분석함으로써, 당대 한국인의 동유럽 인식을 밝힌 연구도 제출됐다.⁸⁾

이처럼 한미관계사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중 일부의 활동과 이에 대한 남한사회를 분석한 연구들이 제출됐으나 중감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은 아직까지 거의 연구되지 못했다. 정전위원회 수석대표 특별고문을 역임한 이문항은 2001년 저서에서 북한의 1950년대 중감위 관련 인식과 대응을 간략히 언급했다.⁹⁾ 앞서 살펴본 황인수 논문도 북한 『로동신문』의 기사 2~3건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뿐이었다.

이에 이 글은 먼저,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처음 활동을 시작할 당시의 중감위의 내부 규정과 시찰소조의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중감위 본회의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중감위가 당시 생산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본회의 요지기록」(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UMMARY RECORD OF THE PLENARY MEETING, 이하 국문 명만 표기)을 처음으로 활용했다.¹⁰⁾

문, 2013).

- 7) 서울역사박물관,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감독위원단이 본 정전 후 남과 북, 1953~1956』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3).
- 8) 양준석은 “중립국감시위원단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있어서 재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강준만, 오제연의 연구 등이 1950년대 남한에서 펼쳐진 ‘적성감위 축출운동’을 “관계데모”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한국인의 대규모 시위는 반공에 기반한 자발적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6.25전쟁 이후 한국의 동유럽 인식: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42-2호 (2019), 223~224·246쪽.
- 9)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198·203쪽.
- 10) 중감위가 생산한 ‘회의록’ 1종과 그 산하의 중립국시찰소조가 생산한 문서는 기

다음으로, 북한이 중감위의 활동과 축소(철회), 그리고 정전협정 일부 조항 무효화 등에 대하여 전개한 구체적인 대응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감위에 대한 남한과 미국 측 인식은 그들이 생산한 자료에 입각하여 그 전모가 대부분 밝혀졌다. 그런데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은 정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은 “위반행위 조사를 자주 거부”했다거나 “유엔사가 감시소조와 중감위의 사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선전을 퍼부었”다는 언급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¹¹⁾ 이 글은 북한과 소련이 당대 생산한 자료에 입각하여, 북한이 어떠한 인식과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공식 문헌인 『로동신문』뿐 아니라 그 이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1950년대 북한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를 활용했다.¹²⁾ 이 일지 자료를 통해, 중감위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와 북·중 측이 지명한 중감위 위원 간에 이견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1950년대 한반도 정전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일부 행위자들이 제시한 주장과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했다. 이 글이 최

동소조들의 보고, 소조들의 일반적보고(의약 식료품 등), 중립국시찰소조들의 일보 및 월보의 분석, 중립국시찰소조들에 보내는 기타문건 지시 및 제의 등 5종이 있었다. 「중립국감독위원회 제23차 본회의 요지기록」(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UMMARY RECORD OF THE 23ST PLENARY MEETING). 현재 중감위가 생산한 문서 중에서 중감위 본회의 회의록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중감위 본회의 회의록은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문서군(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인 Recrod Group 554에 포함되어 있다.

11) 이문향, 앞의 책, 198·203쪽.

12) 『북한관계사료집 73-76(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4)』

근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적대와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을 벗어나 평화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1953년 8월,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의 시작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로 이루어지는 지리적 규정” 및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라는 두 개의 감시 기구를 설치했다.¹³⁾ 정전협정문은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에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감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정했다.¹⁴⁾ 즉 정전협정에는 제2조 “다. 중립국감독위원회”라는 제목하에 제36항부터 제50항까지, 중감위의 기본적인 조직과 활동 등이 규정됐다. 중감위의 임무는 첫째 “국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하는 것(제13항 ㄷ목)과 둘째 “국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제13항 ㄹ목)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감위는 한반도 정전과 관련하여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제28항)해야 했다. 나아가 정전협정은 중감위에 한반도 정전과 평

13) 김보영, 「1960년대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체제」 『역사와현실』 50호 (2003), 165쪽.

14) 정전협정문은 다음을 참고했다. 김보영, 『전쟁과 휴전』, 427~494쪽. 「정전 60년, 과거·현재·미래: 2013년 전쟁기념관 정전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학술회의 일시: 2013년 6월 27일), 139~152쪽. 1953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동아일보』는 1면에 『휴전협정전문』이라는 제목하에 총 5차례 나누어 보도했다. 『동아일보』 1953.07.30.~08.01, 1면.

화를 위한 능동적인 감시의 임무를 부여했다. 이는 정전협정 제42항 ㄷ목에서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¹⁵⁾

이러한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중감위는 유엔군 측이 지명한 중립국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의 각 1명과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대표 각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중감위 본부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됐으며 그 산하에 20개의 중립국시찰소조(NNIT,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 이하 시찰소조)를 두었다.¹⁶⁾ 20개의 시찰소조는 10개의 ‘이동소조’와 10개의 ‘고정소조’로서 구성됐다. 전자는 판문점 본부에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하여 시찰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후자는 고정적으로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과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의 “각 출입항에” 5개씩 “주재”하며 시찰 임무를 수행했다. 북한 지역에는 제1소조(신의주), 제2소조(청진), 제3소조(홍남), 제4소조(만포), 제5소조(신안주)가, 남한 지역에는 제6소조(인천), 제7소조(대구), 제8소조(부산), 제9소조(강릉), 제10소조(군산)가 각각 설치됐다.¹⁷⁾

15) 제42항 ㄷ목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특점(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6) 정전협정문의 40항 ㄱ목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 1953.08.02., 1면

1953년 8월 1일 토요일 15시, 판문점 임시 본부에서 제1차 중감위 본회의가 열렸다. 의장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레스(Bures) 장군이었으며, 위원은 스웨덴의 구랍선(Grafstroem), 폴란드의 왕그로브쓰끼(Wagrowski), 스위스의 리네르(Rihner) 장군 등이었다. 첫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군사정전위원회 각 수석위원들에 의한 중감위의 수석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각자 취임사를 밝혔으며, 회의에서 사용할 번역용어를 결정했다. 당분간 각 위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의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¹⁸⁾ 이러한 제1차 중감위의 활동에 대해 북한의 『로동신문』은 “조선 정전 중립국감독위원회 성립”이라고 보도했다.¹⁹⁾

곧바로 중감위는 제2차 본회의부터 ‘절차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정전협정 ‘제42항 ㄴ목’의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여러 차례 제안과 논의를 거쳐 최종 절차규정은 1953년 8월 19일 열린 제16차 중감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총 8조(제1조 총칙, 제2조 회의, 제3조 의정, 제4조 투표, 제5조 기록과 언어, 제6조 비서처, 제7조 시찰소조, 제8조 기타) 33항으로 규정됐다. 이 절차규정은 중감위 활동의 범위가 정전협정의 범위 내에서 할 것과 “공동 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만약 중감위 회의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안건이 있을 시 “표결은 다수결”로 하기로 규정했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에 대한 표결 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규정했다.²⁰⁾ 제16차 본회의에서 이 절차규정은 “일치 가결로서 통과”됐으며 “1953년 8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었다.²¹⁾

17) 「중립국감독위원회 제21차 본회의록 요지」.

18)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차 본회의 요지기록」. 이후에는 1주일 간격으로 의장을 역임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19) 『로동신문』 1953.08.03., 3면. 남한의 한 신문은 “중립국감시위 1일부터 업무개시”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1953.08.03., 03면.

20)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6차 본회의 요지기록」.

해당 절차규정은 제7조에서 모든 중립국시찰소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시찰소조는 각 지역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고정시찰소조’와 군정위의 요청에 의해 감시를 진행하기 위해 파견되는 ‘이동시찰소조(Mobile Inspection Teams, MIT:S)’로 구성됐다. 1953년 8월 18일 중감위 본회의는 중감위 “전체 소조”가 다음날인 8월 19일부터 “자기 사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²²⁾ 특히 1953년 8월 21일 열린 제18차 중감위 본회의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 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이동소조라는 임시조직 관련 내부절차를 규정하는 “지시”를 채택했다.²³⁾

1953년 8월 22일, 군사정전위원회가 거제도, 영등포, 임진강 다리에 각각 이동소조를 파견해주길 중감위에 요청했다. 이에 1953년 8월 24일 열린 제20차 중감위 본회의에서 각지에 파견할 이동소조를 구성했다. 1개 이동소조는 4개국 군관이 각각 2명(총 8명)이 포함됐으며, 통역, 무전수, 연락원, 의무보조원(10명 내외) 등으로 구성됐다.²⁴⁾ 1955년 3월 북한 주재 체코슬로바키아 대사 시코라가 중감위에 자국의 인원이 108명 파견되어 있었다는 언급과 중감위 4개국의 실제 소조 배치 인원이 동등한 점을 고려하면, 중감위의 전체 규모는 4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리고 1953년 8월 27일 제22차 중감위 본회의에서는 시찰소조에 보내는 보충지시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²⁶⁾

21)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6차 본회의 요지기록」.

22)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5차 본회의 요지기록」.

23) 「중립국감독위원회 제18차 본회의 요지기록」.

24) 「중립국감독위원회 제20차 본회의 요지기록」.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С.П. Суздальев)의 일지(1955년 2월 28일~3월 11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북한관계사료집 73).

26) 보충지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호, 중립국시찰소조의 보고는 매 24시간에 일차 발송하며 매번의 시찰 후마다 발송하지 않는다.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 및 감시는 일부분은 현지를 직접 시찰하여야 하며 일부분은 각방 사령부

1953년 8월 29일 제23차 중감위 본회의에서는 중감위가 생산하는 문건 보고 및 무전문 중에서 군정위에 보고할 문건이 논의됐다. 이 회의는 ‘고정 소조들의 무전문’ ‘기동 소조들의 보고’ ‘중감위 회의록’은 보고하지만, 소조들의 일반적 보고(의약 식료품 등), 시찰소조들의 일보 및 월보의 분석, 시찰소조들에 보내는 기타문건 지시 및 제의 등은 군정위에 제출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²⁷⁾

이처럼 1953년 8월 1일 중감위는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약 한달 동안 관련 조직, 절차규정, 인원, 보고 방법 관련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시찰소조의 활동도 시작됐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 중감위 회의에서 일부 논쟁이 존재했으나, 대부분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Ⅲ. 1955~56년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의 축소·철수와 북한의 ‘임시적’ 동의

미국은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부터” 중감위 및 감시소조의 활동에

에서 보내온 문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각 중립국시찰소조는 반드시 문건중의 숫자가 사실과 부합되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호,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다른 지시가 있을때까지 보신용 무기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권총 같은 것) 제16호, 각 중립국시찰소조 또는 그 성원은 공보를 발표하거나 또는 기자와 접견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다. 제17호, 각 중립국시찰소조는 초보적 지시 제3 또는 제4 목에 의한 기지에서 교체 또는 룬환 이외의 장비와 물자에 대하여 질문할 권한이 없다. 제18호, 정전협정에 의하여 각 중립국시찰소조는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에만 서명할 것이며 만약 현지 당국이 문건에 서명을 요구하면 각 중립국시찰소조는 서명할 권한이 없다고 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제23차 본회의 요지기록」.

27) 「중립국감독위원회 제23차 본회의 요지기록」.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²⁸⁾ 1954년 6월 11일 유엔군사령관은 중감위가 “유엔군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감위는 “철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이 스위스와 스웨덴의 자진철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미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²⁹⁾

그런데 미국의 자진철수 ‘유도’ 견해가 제기되기보다 먼저 스위스와 스웨덴이 철수를 요청했다. 1954년 4월 14일, 스위스와 스웨덴의 해외 공관장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중감위에 관한 비망록을 중국과 미국에 제출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영국과 프랑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도 알렸다. 스위스와 스웨덴이 철수를 요청한 이유는 첫째 “적당한 기간 내에 한국 정치회담이 개최되어 자신들의 임무”는 “종료”될 것이라 예상했으며, 둘째 중감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³⁰⁾ 특히 스위스 공사는 애초에 파견될 때부터 중감위에 자신들의 대표를 “무기한 남겨둘 용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동 위원단이 해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³¹⁾ 스위스와 스웨덴이 철수를 요청하고, 미국이 추동한 중감위 시찰소조의 철수 문제에 대하여 남한 정부는 “정전협정의 내용에 의거하여 1954년 5월 개최된 제네바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중감위의 철수를 주장”했다.³²⁾

1954년 8월 3일 공개적으로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는 “미국은 조선에 있는 중립국한국휴전감시위원단을 종결시키는 데 찬성하는 바”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덜레스는 기자회견에서 중감위의 폴란드 및 체코슬로

28)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파주: 창비, 2006), 147쪽.

29) 박태균, 위의 책, 148쪽.

30) 「스위스와 스웨덴의 중립국감시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미 국무부의 전달 사항」 (1954년 4월 16일), 『IX. 1954년 3월 1일~1954년 12월 31일 : 정전협정 이후 미국과 한국의 관계』,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31) 『조선일보』 1954.04.18., 1면.

32)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148쪽.

바키아 대표가 “휴전협정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가 북한에서의 “정상적인 감시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동 위원단 해체를 희망하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³³⁾

북한은 중감위의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 위원들이 이북 지역에서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상’이라고 반박했다.³⁴⁾ 외려 북한은 미국 측이 중감위 “사업을 횡포하게 간섭 저에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³⁵⁾ 이미 1954년 5월 22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측 리상조 중장은 스웨덴과 스위스 위원의 정전협정 수정 제의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³⁶⁾

1954년 8월 3일, 북한은 미국 국무장관의 공개적인 중감위 ‘종료’ 주장에 강하게 비판했다. 1954년 8월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중감위를 “폐지”하려는 미국 지배층들의 흥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³⁷⁾

미국 지배층들은 제네바 회의에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합의의 도달을 적극 방해하고 심지어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 상태로 이전시키기 위한 우리 측 제안까지를 거부하고 나서 조선 정전협정을 파괴하려는 그들의 흥책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더욱 파렴치하게 가고 있다. (…) 텔레스의 이와 같은 언명은 유엔군 통제 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최근 미국의 조종 하에 리승만 도당들이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일련의 범죄적이며 도발적인 행동들이 미국 지배층들의 계획적인 책동이 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

33) 『조선일보』 1954.08.06., 1면.

34) 『로동신문』 1954.04.16., 4면.

35) 『로동신문』 1954.04.23., 3면.

36) 『로동신문』 1954.05.25., 3면.

37) 『로동신문』 1954.08.21., 2면.

미국 국무장관 딜레스는 마치 조선 정전협정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해당 조항들은 능히 분리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듯이 독단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중립국감독위원회에 관한 조항들은 정전협정의 다른 모든 조항들과 함께 조선 정전협정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비법적 파괴는 정전협정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딜레스까지도 포함한 미국 지배층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엄중한 후과까지도 타산하면서 미국 지배층들이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기도는 조선에서 새로운 군사 모험을 발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책동과 병행되고 있다. (…)

딜레스는 자기들이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파괴하며 위반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취소하려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종 일관하게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조중측에 대한 어떠한 무근거한 비방도 미국 지배층들이 조선 정전을 파괴하려는 책동을 은폐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북조선에서 조중측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어떠한 룬환이나 교체든지 모두 지정된 출입항을 경유하여 중립국시찰소조들의 감독 하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과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정확하고 상세한 보고를 시찰소조에 제출하였다. (…)(밑줄은 인용자)

이러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파괴하려 하며,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중감위의 활동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의 반대성명 발표 4일 후인 8월 2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관련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내세운 주장처럼, 정전협정은 “파괴되거나 폐기되어서는 안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38) 『로동신문』 1954.08.27., 3면.

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중감위가 “완전한 자유와 충분한 편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보도를 자주 내보냈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은 “조선으로부터 철거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일부 부대가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후방 출입항 신의주를 거쳐 귀국”하는 것에 대해 “4개국 대표로써 구성되어 있는 중립국시찰소조 인원들이” 북한과 중국 측이 “제공한 충분한 편의의 결과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 사업은 아무 지장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³⁹⁾

1954년 12월 23일 유엔군 측 수석 위원 카터 소장은 55년 1월 1일부터 군산, 서울 및 강릉 비행장에 대한 사용 정지를 통고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30일 카터는 1955년 1월 1일부터 남한의 군산과 강릉 2개 출입항 시설의 사용 정지를 통고했다.⁴⁰⁾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통고에, 스위스 정부는 1955년 1월 27일 중감위의 군대 수를 삭감하는 것의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각서를 미국과 중국에 주재하는 스위스 외교관을 통해 전달했다.⁴¹⁾ 또한 동일한 날짜에 스웨덴 정부도 미국과 중국에 비슷한 내용의 각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1955년 2월 7일, 북한 주재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는 스웨덴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전달한 각서를 북한 남일 외무상을 만나는 자리에서 전달하면서 “조선 동지들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라자레프는 남일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기록했다.⁴²⁾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대

39) 『로동신문』 1954.09.19., 3면.

40) 『로동신문』 1955.01.07., 3면.

41) 『경향신문』 1955.01.29., 1면.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의 일지(1955년 1월 26일~2월 16일)」(1955년 2월 7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북한관계사료집 73).

답하였다. 중립국위원회의 청산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것은 휴전협정의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항의와 관련하여 논쟁을 전개한다. 그들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의 유용성을 증명할 생각이다.

그러나 중립국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협정에 손상을 주지 않으므로 구성원의 일부 감축(남은 구성원들이 감독 기능을 계속 수행)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방안으로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 몇몇 지점들에서 위원회 구성원을 일시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점들이 철거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이 구성원들이 동 지점들에서 감독기능을 재개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이 답변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은 중감위의 “청산”은 정전협정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정전협정에 “손상”을 주지 않는 중감위 구성원 수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미국은 남쪽에 파견된 시찰소조의 사용 정지를 통고함과 동시에 정전협정 제13항의 ㄷ, ㄹ 목 폐지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55년 1월 31일, 유엔군사령관 헐은 미국 국방부에 이 조항의 폐지를 건의했다.⁴³⁾

이처럼 1955년 1월 1일부터 유엔군 측이 남조선 지역 출입항 시설의 사용 정지를 통고하자, 1955년 1월 21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북한, 중국 대표들이 모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중감위 폴란드 위원인 크르쉐멘 장군은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북조선의 2개 지점(신의주와 홍남)을 제외시키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그는 “주도권을 발휘하여 위원회 활동의 중단 제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⁴⁴⁾ 1955년 2월 23일에도 크르쉐멘 장군

43)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150쪽.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의 일지(1955년 1월 26일~2월 16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은 “위원회의 사업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스위스와 스웨덴의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재차 개진했다. 이에 1955년 2월 24일, 남일은 주북한 주재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를 만난 자리에서 “흥분”하면서 폴란드 크르쉐멘 장군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⁴⁵⁾

이후에도 주북한 폴란드 대사의 증언에 따르면, 중감위 폴란드 위원 크르쉐멘은 “스웨덴인 및 스위스인들, 그리고 미국인들과 위원회의 해산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크르쉐멘은 “서방과 민주진영 나라들의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 이와 같은 유형의 국제적 중립기관이 비효과적이라는 선전자료를 미국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에서의 중립국위원회 활동이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이었음이 강조된 공동선언을 미국, 스웨덴, 스위스인들과 함께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북한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는 이러한 중감위 폴란드 위원의 견해는 “미국인들이 위원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온갖 구실을 찾으면서 이를 해산시키려는 적극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현 시기에” “위원회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폴란드 대사에게 “지적”했다. 이에 폴란드 대사도 동의하면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 크르쉐멘 위원에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크르쉐멘 위원이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폴란드 대사는 최대한 크르쉐멘이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게끔 만들겠다고 수즈달레프에게 답변했다.⁴⁶⁾

의 일지 1.」.

-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임시대리대사 라자레프의 일지(1955년 1월 26일~2월 16일)」(1955년 2월 24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5년 3월 12일~4월 16일)」(1955년 3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1955년 5월 3일, 중감위는 남북 출입항 네 군데(남: 강릉, 대구, 북: 청진, 흥남)에 위치한 시찰소조의 철수 요청에 대한 서한을 군정위에 제출했다. 1955년 8월 29일, 군정위는 중감위의 축소 제안 서한에 대하여 “1955년 8월 3일 부 서한에서 수정된 건의를 동 위원회가 즉시 실시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에 통지합니다”라는 회답서한 발송했다.⁴⁷⁾ 이로써 1955년 9월 5일 24시 기준으로 청진, 흥남, 대구, 강릉 4개 시찰소조는 활동이 정지됐다. 또한 신의주, 만포, 신안주, 인천, 부산, 군산의 6개 출입항에 배치된 기존의 고정소조의 인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 출입항에는 폴란드 또는 체코슬로바키야 중 1명의 조원과 스위스 또는 스웨덴 측 조원 1명으로 구성된 소조를 배치하기로 했다.⁴⁸⁾

북한 지도부는 시찰소조의 축소에는 동의했으나, 이것이 중감위의 ‘해산’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리고 정전협정이 변경된 것도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정전협정을 둘러싸고 이를 지키려는 북한 측과 이를 해체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대비하며 비판의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로동신문』 1면에 실린 「조선 정전협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아래와 같은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정전은 조선에서의 평화를 유지하며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 될 뿐만 아니라 아세아와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유지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체 조선 인민들과 평화 애호적 전세계 인민들은 한결같이 조선에서의 정전이 공고화되며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할 것을 념원하고 있다. (...)

미국측은 이미 철저히 폭로 규탄된지 오래인 황당무계한 주장들과 허구 날조한 《사건》들을 들고 나오면서 마치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무능》하며 《무능》하다고 해버리면서 심지어는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해산》시키

47) 『로동신문』 1955.08.31, 3면.

48) 『로동신문』 1955.09.14, 4면.

자고 공공연히 자기들의 흥모를 드러내 놓고 있다. (...) 조선 정전에서 아직 응당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새 전쟁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미국 호전 분자들 에게 있어서는 조선 정전협정 특히 새로운 증강 병력 무장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규정이 심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 정전협정의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남조선 각 출입 항구들에서 조선 정전 감시의 권한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들이 그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의 관리들과 리승만 도당이 리승만 괴뢰 군대를 가일층 확대시키며 켓트기와 기타 악랄한 살육 무기로 그를 무장시킬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지금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에 착수한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조선 정전협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제로서 조선 인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협정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조인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이며 조선 정전의 공고화와 조선에서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유익한 기구**이며 전 세계의 공정한 인 사들이 모두 지지하고 있는 **평화의 기구**이다.

조선 정전협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표현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정전협정을 파괴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취소하려는 일체 음모와 책동들은 앞으로도 조선 인민과 전 세계의 평화 역량 앞에서 엄중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⁴⁹⁾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북한은 중감위가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유익한 기구”, 즉 “평화의 기구”임을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시기와 맥락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 내의 한 관료도 중감위가 ‘평화의 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53년 12월 31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정치회의의 미국 측 부대표이던 케

49) 『로동신문』 1955.09.01. 1면.

네스 영(Kenneth T. Young Jr.)은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에서 “최종적인 어떤 형태의 유엔 참관인 그룹이나 중립국감독위원회(NNSC)가 안전조절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⁰⁾

그럼에도 1955년 9월, 중감위 감시소조의 정지와 대폭적인 규모 축소가 단행됐다. 나아가 1955년 8월 29일 군정위 미국 측 수석위원 파크스 소장은 중감위에 보내는 서한에서 중감위 “해산”만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⁵¹⁾ 그리고 스웨덴 외상 오스텐 운덴은 중감위 개편안에 대한 제안을 관련 국가들에게 제출했다.

1955년 11월 17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는 스웨덴 외무상 운덴이 소련 대사에게 통보한 중감위 개편안의 내용을 남일에게 전달했다.⁵²⁾ 1955년 12월 22일 남일은 이바노프를 만난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스웨덴이 제기하고 있는 중립국위원회의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외무성의 의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중립국위원회에 대한 기존 협정의 수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하역지 점들에 배치된 감독그룹들의 인원수를 감축하는 데 대해서만은 양보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협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⁵³⁾ 이는 앞서 북한이 밝혀온 대로, 정전협정의 변경

50) 물론 영은 중감위가 “적어도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동북아시아의 붉은 중국을 관찰하고 조사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이점도 제시했다. 「한국 정치회담 부대표(영)가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51) 『로동신문』 1955.09.02. 4면.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5년 11월 3일~11월 22일)」(1955년 11월 17일),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56년 초에 남한에 알려지기로는 서전은 서서에 대하여 한국의 중립국감시단으로부터 동시적으로 철회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석간) 1956.04.19., 1면.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5년 11월 3일~11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원의 축소만 가능하다는 입장과 동일했다. 이바노프는 김일성을 만난 자리에서 소련은 “스웨덴 외무장관 운텐이 제기한 중립국위원회 개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⁵⁴⁾

1956년 5월 1일 스위스와 스웨덴은 남북한 지역에 있는 시찰소조를 한 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956년 5월 4일, 유엔참전국 16개국은 중립위의 활동을 공동경비구역에만 한정하자는, 즉 남북에 파견된 시찰소조의 전부 철수를 주장하는 발표를 했다. 최종적으로 1956년 5월 31일, 70차 군정위 유엔군 측 가드 장군은 시찰소조 활동의 실패를 선언했으며, 남한 내 모든 소조 활동의 정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⁵⁵⁾

유엔군 측의 갑작스러운 철수 요청 통고에 따라, 중립위는 긴급하게 본회의를 소집해야 했다. 유엔군이 철수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제시한 데 대해, 중립위 4개국 위원 모두 분노했다. 결국 1956년 6월 5일, 중립위 제257차 회의에서는 ‘전체 6개 소조들을 출입항들로부터 철수시키는 데 동의하도록 건의하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의 제출을 결정했다.⁵⁶⁾ 이로써 남북한 출입항에 존재하던 모든 시찰소조는 철수했으며, 활동도 중단됐다.

북한은 미국 측의 일방적 조치는 완전히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시찰소조의 철수는 “림시적” 또는 “잠정적”일 뿐 정전협정의 “변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956년 6월 10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남북 조선의 각 특정한 출입항의 시찰 소조를 잠정적으로 철수함

일지 1』.

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6년 1월 20일~1월 30일)」(1956년 1월 20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55)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149~150쪽.

56) 「중립국감독위원회 제257차 본회의 요지기록」.

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미국측이 조선 정전협정의 파괴를 이와 같이 계속 추구하는 것은 남조선 군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원자 무기를 포함한 현대적 무기를 남조선 경내에 대량적으로 반입하여 그를 장비시킴으로써 조선에서 새로운 류혈적 전쟁을 재발시키려는 데 있다. (…)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자기의 제의에서 정전 쌍방이 시찰 소조의 철수 문제에 관하여 공통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직권은 **변경되지 않으며** 시찰 소조의 철수는 오직 **립시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일치하게 채택한 이 제의는 동 위원회에 참가한 각국이 조선 정전협정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직권을 수호하려는 립장을 명백히 표시한 것이다. (…)

조선 정전협정과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시찰 소조의 지위와 직권을 수호하려는 조중측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립장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합법적 활동을 파괴하려는 미국측에 의하여 또 다시 거부되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조선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정전협정은 미국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법적 직권도 미국측의 일방적 행위로 인하여 **결코 변경될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제기한 바와 같이 중립국 시찰 소조가 남북 조선의 특정한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한 것은 다만 **립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다시 시찰 소조를 특정한 출입항에 파견할 전적인 권한이 있다.

조선 정전협정의 일방인 미국과 기타 연합 국군 각국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전협정에 규정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직권을 존중할 전적 책임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조선 정전협정의 파괴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전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⁵⁷⁾(밑줄)

57) 『로동신문』 1956.06.11., 2면. 이 시점에 북한은 이미 미국이 원자 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미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뉴욕(New Look)정책의 시행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반입’하고자 했으며, 실제 1958년 1월 배치했다. 박태균, 「잘못 끼운 첫 단추—이승

및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북한은 중감위 시찰소조의 철수가 임시적임을 분명히 하려 했다. 이에 따라 『로동신문』은 “립시적” 혹은 “잠정적” “철수”임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은 중감위 시찰소조가 철수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다음과 같이 “립시” 또는 “잠정”이라는 단어를 기사 제목에 명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중립국 시찰 소조들에게 그들의 사업을 중지하고 립시 철수할 것을 지시」⁵⁸⁾

「신의주 출입항에서 립시적으로 철수하는 중립국 시찰 분조 성원들이 현지 당국과 지방 인민들의 열렬한 환송리에 현지를 출발」⁵⁹⁾

「만포 및 신안주 출입항의 중립국 시찰 분조 성원들 립시적 철수 사업 완료」⁶⁰⁾

「군사 정전 위원회 조 증측 수석 위원 정국록 소장이 남북조선의 각 특정한 출입항으로부터 잠정적으로 철수하여 온 중립국 시찰 소조 성원들을 위하여 초대연」⁶¹⁾(밑줄은 인용자)

만-아이젠하워원 정부의 갈등」 『역사비평』 86호 (2009); 김민식,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군사』 117호 (2022), 244쪽.

58) 『로동신문』 1956.06.10., 3면.

59) 『로동신문』 1956.06.13., 4면.

60) 『로동신문』 1956.06.13., 4면.

61) 『로동신문』 1956.06.17., 3면.

IV. 1957년 유엔군의 정전협정 일부 조항 무효화 선언과 북한의 ‘반발’

1956년 6월 이후 중감위는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 더 이상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감위의 판문점 본부는 남북한의 군사물자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1957년 1월 미국은 「NSC 5702」 문서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감축과 한국군 감축을 위해 “무기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은 새로운 무기 도입을 위해서는 정전협정 조항 중 중감위의 활동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무효화할 필요가 있었다.⁶²⁾ 1957년 3월 19일, 미육군 참모총장 테일러는 “나는 한국에 있는 유엔군에게 현대무기를 공급하도록 부단히 건의”했으며, 이러한 건의가 채택되려면 정전협정 제13항이 “무시”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⁶³⁾ 그동안 정전협정 수정에 반대해온 미국 국무부도 1957년 4월 2일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가 미국이 휴전을 ‘진적으로’ 무효화하기는 원치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태도 변화를 시사했다.⁶⁴⁾

북한은 미국이 정전협정 개정을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리라 예상하고 대비책 마련에 고심했다. 정전협정 개정에 대해 북한 외무상 남일은 주북한 소련 대사 푸자노프에게 “2개의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첫째 군정위 북한 대표 정국록 장군은 “남조선과 북조선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한, 이 군대들이 현대적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의 일정한 개정과 관련하여 미국인들 및 정전위원회

62)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155쪽.

63) 『경향신문』 1957.02.21., 1면.

64) 『동아일보』 1957.04.04., 1면.

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상을 시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외무상 남일은 “신무기 도입 허용이 향후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고, 민주적 토대에서 북조선과 남조선을 통일하는 작업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정전협정 제13항 개정 제안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남일은 “미국인들의 진정한 목적은 조선에서의 휴전 파기, 이들이 세계의 여타 지역들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긴장상황의 조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미군의 남조선에 대한 실질적 점령상태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과업과 중립국위원단 폴란드 대표와 체코슬로바키아대표의 과업은 미국인들의 그와 같은 그리고 그와 유사한 제안을 폭로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⁶⁵⁾

1957년 6월 4일 남일은 푸자노프에게 미국의 정전협정 제13항 개정 시도와 관련하여 “일치된 단일의 견해”에 도달하기 위해 “6월 하반기에 중립국감시위원단과 군사정전위원회의 중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조선 대표들이 참여하고, 중국,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대사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에서 갖자는 제안”을 했다.⁶⁶⁾ 푸자노프는 이 제안을 수락했으며 6월 11일 남일은 북한 외무성에서 관련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비공식회의”를 17일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⁶⁷⁾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6일~5월 29일)」(1957년 5월 29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북한관계사료집 74).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6일~5월 29일)」(1957년 6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6일~5월 29일)」(1957년 6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예정대로 1957년 6월 17일 북한 외무성에서 “남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체코사회주의공화국 대사, 폴란드인민공화국 대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체코사회주의공화국 및 폴란드인민공화국 대표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휴전협정, 특히 협정문 제13항을 개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협정의 엄정한 준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조선 및 중국 측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미국 집권자들과 리승만 도당의 날조가 가지는 선동적 성격을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폭로하며, 이와 같은 날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린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향후 미국이 정전협정 13항의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북한 외무성이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단 대표들과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⁶⁸⁾

19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회의에서 유엔군 측 리첸버그 장군은 정전협정 조항 중 13항 ㄱ목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⁶⁹⁾ 이러한 유엔군 측의 선언에 대해 군사정전위원회의 북한과 중국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조항의 일방적 포기는 국제법의 엄중한 위반”이며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신형 무기를 반입하기 위한 계획적 책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⁷⁰⁾ 특히 “정전협정은 평화의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⁷¹⁾

그런데 북한은 자신을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평화애호세력이라고 주장

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6일~5월 29일)」(1957년 6월 17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69)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152~153쪽;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46~48쪽.

70) 『로동신문』 1957.06.28., 3면.

71) 『로동신문』 1957.06.23., 5면.

하면서 정전협정 변경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러한 반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폴란드인민공화국 대사 세들레츠키는 주북한 주재 소련대사 푸자노프에게 밝혔다. 1957년 5월 28일 주북한 주재 폴란드 대사는 중국 대사와 대담했던 내용을 푸자노프에게 언급했다. 그는 중국 대사는 “북조선으로 제트기가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미국인들의 신무기 반입 제의를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폴란드 대사도 같은 생각이라고 푸자노프에게 말했다.⁷²⁾

결국 1957년 6월 29일 이후부터 유엔군과 북·중 측이 중감위에 제출하는 보고 항목은 상이해졌다. 북한과 중국은 유엔 측의 제13항 ㄱ목의 무효화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군사인원의 도착 및 리거와 작전물자의 교체에 관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측의 보고(정전협정 제13항 ㄷ목 및 ㄱ목)”를 중감위에 제출했다. 반면, 유엔군 측은 “군사인원의 도착 및 리거에 관한 국제연합군 측의 보고(정전협정 제13항 ㄷ목)”만을 제출했다.⁷³⁾

V. 맺음말

1953년 8월 1일, 중감위는 제1차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성립’했다. 그리고 1953년 8월 24일 중감위의 절차규정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955년 9월 중감위 시찰소조의 사업은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6일~5월 29일)」(1957년 5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73) 「중립국감독위원회 제326차 본회의 일부전문기록」.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 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 들은 모두 출입향으로부터 철수됐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했으나,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정은 “변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1957년 6월, 미국은 중감위 활동을 규정 한 제13항 2목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정전협정은 평화의 보루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서 정전협정의 수호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중감위의 임시 철수는 가능하지만, 정전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구인 중감위를 해체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물론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정위 북한 측 정국록 장군은 정전협정의 변경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중감위의 활동을 축소, 철수 그리고 정전협정 일부 무효화를 밀고 나갔으나, 미 국무부 관료 중 일부는 중감위가 ‘평화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 주장의 맥락은 다르더라도, 북한과 미국의 행위자는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기구로서 중감위의 필요성에 ‘공명’하기도 했다.

1953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시기에 중감위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도 전에 조직의 축소와 철수 그리고 관련 정전협정 조항의 무효화를 겪어야 했다. 북한과 미국 모두 군비를 증강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중감위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기구로서 충실히 기능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안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중감위는 공산 측이 남쪽을 방문하고자 할 때, 남한과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개체’였다. 예를 들어 1956년 주북한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는 남일에게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나 중립국위원회 건

물에 미국 및 남조선측 대표들을 초청하여 무엇인가 유명한 예술영화의 관람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다.⁷⁴⁾ 또한 이바노프는 남일에게 북한에 주재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기자그룹이 남조선을 방문할 가능성”을 찾기 위해 “중립국위원회의 스웨덴 대표와 스위스 대표들을 이용할 수 없는”지 문의하기도 했다.⁷⁵⁾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감위 역할이 중요함은, 1950년대 활동했던 중감위 구성원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56년 6월 21일, 중감위 본회의에서 폴란드 위원 오르쓰끼 공사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은 송별사를 남겼다.⁷⁶⁾

무엇보다도 우리는 1950-1953년에 이곳에서 발생하였으며 세계의 다른 부분으로 파급될 위험성이 있었던 그러한 새로운 불행의 방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호상 입장을 이해하기에 노력하였으며 우리의 견해들을 결코 호상 강요하려 하지 않았으며 우려 전체에게 접수될수 있을 그러한 해결책을 받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만일 내가 세계상의 한국에 대하여 조금도 비관함이 없이 보다 광명한 장래를 굳게 믿으면서 나의 고국 파란(폴란드_인용자)으로 돌아가려한다면 이는 내가 이곳에서 모든 민족들과 그리고 모든 나라의 정직한 인민들은 나 자신의 나라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보다 나은 장래를 염원하고 있다는 많은 생생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본 위원회 내외에서 인민들은 그들의 언어와 신념에 관계없이 함께 평화롭게 또 협력하여 살 수 있으며 사업할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밑줄은 인용자)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6년 3월 30일~4월 18일)」(1956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북한관계사료집 73).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 (1956년 3월 30일~4월 18일)」, 위의 책.

76) 「중립국감독위원회 제261차 본회의 일부전문기록」.

또한 1953년 중감위 스위스 멤버였던 톨랑 파르베는 6·25전쟁 발발 51년을 맞아 2001년 방영된 「KBS 스페셜: 비무장지대의 이방인들—중립국감독위원회」(2001.06.24.)에서 “사람들이 싸누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무섭다” “각자가 필용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전(反戰) 평화를 호소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넘는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는 미중갈등의 격화와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 지속, 그리고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쟁 등이 진행중이다. 또한 한반도에는 정전협정이 만들고자 했던 전쟁의 위협을 낮추고 평화를 향한 길보다는, 한미일 동맹과 북중, 북소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 가면서 적대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2018년 남북한이 합의했던 ‘9.19군사합의’는 2023년 북한의 파기선언과 2024년 6월 남한의 합의에 대한 전체 효력 정지안 발효를 거치며 현재 무력화된 상황이다.⁷⁷⁾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교전국관계”로 새롭게 정의했다.⁷⁸⁾ 2024년 6월 남한은 대북전단을, 북한은 오물풍선을 각기 상대방을 향해 투하하고 있으며, 다시 대북확성기가 가동되었다.

이처럼 남북한의 적대성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한반도 정전과 평화를 위해 중감위의 스위스와 스웨덴 위원들이 판문점을 지키고 있다. 비록 그 영향력은 매우 축소되었지만, 이들 존재 자체가 가지는 한반도 전쟁 억제의 효과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정전과 평화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변화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중감위

77) 「확성기 방송에 군사훈련도...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달라지는 것」 『BBC NEWS 코리아』 2024년 6월 4일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gg4y81evvo>>.

78)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1호 (2024), 45쪽.

의 활동과 이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의 대응 양상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감위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양상을 다루면서도, 동시기 또다른 정전협정의 중요한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관계는 어떠했는지 함께 조망하지 못했다. 둘째 1950년대 내내 정전협정 준수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1960년대에도 지속됐는지, 나아가 1973년 북한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자 주장할 때 어떠한 논리적 연속과 변화가 발생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⁷⁹⁾ 셋째, 자료의 확장과 수집이 필요하다. 먼저 이 글에서 검토하지 못했던 북한 관련 다른 자료 등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 중감위 당사자들이 생산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접수: 2024년 5월 2일 / 심사: 2024년 6월 4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⁷⁹⁾ 이보미,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한국 배제의 시원」 『세계정치』, 20호 (2014).

【참고문헌】

-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 5·18에서 8·15까지』, 파주: 창비, 2006.
-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서울: 소화, 2001.
-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1호, 2024, 45쪽.
- 김보영, 「1960년대 군사정전위원회와 ‘정전체제」 『역사와현실』 50호, 2003, 165쪽.
- 김정훈, 「6·25전쟁 정전회담 시기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석사학위논문, 2023, 72~103쪽.
- 바브린소바 주자나(VAVRINCOVA ZUZANA), 「50년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해 본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국제학한국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1~73쪽.
-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60호, 2003, 46~52쪽.
- 박태균, 「잘못 끼운 첫 단추—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 『역사비평』 86호, 2009, 86~112쪽.
- 양준석, 「6.25전쟁 이후 한국의 동유럽 인식: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42-2호, 2019, 223~246쪽.
- 김민식,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군사』 117호, 2022, 224쪽.
- 이보미, 「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한국 배제의 시원」 『세계정치』 20호, 2014, 85~108쪽.
- Hwang, In Soo,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ecurity Relationship, 1953-1960: Great Power and Small Stat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1999, pp. 149-171.

『로동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BBC NEWS 코리아』

「KBS 스페셜: 비무장지대의 이방인들—중립국감독위원회」(2001.06.24)

『북한관계사료집 7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북한관계사료집 7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2)』

『북한관계사료집 7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3)』

『북한관계사료집 7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4)』

「한국정치회담 부대표(영)가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중립국감독위원회 본회의 요지기록」(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SUMMARY RECORD OF THE PLENARY MEETING)(제1차~제326차)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and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Activities from 1953 to 1957

Kim, Do-M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detailed development process of the activities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established with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the 1950s, and in particular, North Korea's response to it. While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erceptions and respons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activities of the NNSC, including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dural regulations.

North Korea defended the Armistice Agreement, emphasizing that it was a peace-loving force, and criticized the United States of trying to destroy the agreement.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argued that the NNSC is an organiz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ed the stance that although they can temporarily withdraw from the NNSC, they cannot disband or change it. This was based on the judgment that the NNSC is inseparable from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protect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estingly, some actors in the United States 'resonated' with the idea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as an organization to protec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ence its necessity as emphasized by North Korea.

Keywords: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NNSC), Armistice Agreement, Armistice System, Korean Wa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witzerland, Sweden, Czechoslovakia, Poland, United States, North Korea

김도민 (Kim, Do-Min)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며, 주로 남북한의 냉전외교사, 중립·비동맹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2023), 「1950년대 중립주의의 발흥과 남·북한의 반응」(2022), 「미군정기 아동노동법규와 미성년자노동보호법」(2020) 등이 있다.

일반논문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가입론의 대두*

류기현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유엔 가입을 실제 실현한 1991년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엔 가입을 추진한 시기가 1950년대 중·후반이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이라는 대규모 대중운동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유엔 단독 가입을 적극 시도했다. 1955년 5년 만에 신생독립국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이 대폭 증가한 점, 1956년 일본의 유엔 가입은 한국 정부가 유엔 가입 운동을 전개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유엔총회 논의 과정에서 소련이 최초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을 제기했고, 동시가입론은 표결에서는 부결되었으나 중립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가입 운동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논리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지지를 받기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확인했다. 소련이 처음 제기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주장은 '두 개의 한국'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229>

* 이 글은 2023년 9월 22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최한 <동맹 속의 냉전과 발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박사논문 「1953~1971년 유엔의 한반도 분단 관리 구조의 형성과 전개」(2024) 2장 1절 서술에 반영되었다. 학술대회 당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옥창준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논문의 보완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 위원께 감사드린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수정 사항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논의의 역사적 기원 중 하나가 되었다.

주제어: 유엔 가입, 남북관계, 한미관계, 두 개의 한국, 중립국 외교, 통일

I. 머리말

유엔(UN) 가입은 1948년 이래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 중 하나였다. 1945년 창설된 유엔은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에 따라 유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그것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평화애호국(peace-loving states)에게 회원 자격을 개방했다.¹⁾ 냉전으로 유엔의 활동이 많은 한계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유엔은 그 전신 격인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며 세계 대부분의 주권 국가를 포괄하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 자리 잡았다.²⁾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주권 국가로 공인받는 것을 의미했고, 북한과 체제 정통성 경쟁을 벌여야 했던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유엔 가입을 간절히 원했다.³⁾ 특히 1948년

1)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조.

2) 1955년 시점 세계에는 대략 90개 내외의 주권 국가들이 있었고, 이들 중 84%에 해당하는 76개국이 유엔 회원국이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한 직후인 1961년에는 주권 국가의 수가 110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유엔 회원국은 104개국이었다. 유엔 회원국의 수의 변화는 유엔 공식 웹사이트 (<https://www.un.org/en/about-us/growth-in-un-membership>), 전 세계 국가 수의 변화는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number-of-countries> 참조.

3) 본고는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한국’을 주로 사용하되, 문장의 맥락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남한’을 혼용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으로 표기하되, 북한이 스스로를 ‘조선’ 또는 ‘북조선’으로 칭했으므로, 북한이나

제3차 유엔총회 195(III) 결의안을 근거로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주장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유엔 가입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⁴⁾

한국 정부는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더불어 유엔에 가입하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유엔 가입을 시도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초로 유엔 가입을 신청한 1949년부터 1991년 이전까지 “단독명의로 5회, 우방국 주도로 5회 가입을 시도”할 정도로 정력적으로 유엔 가입을 추진했다.⁵⁾ 1960년대까지 한국 정부는 스스로를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소련이 사용한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는 ‘조선’을 그대로 살렸다.

- 4) 실제 195호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이 선거를 감시한 지역” 즉 38선 이남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한 정부를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전국정부(national government)로 규정하고자 했던 미국의 입장을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나온 일종의 타협적 문구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 결의안의 모호성을 활용해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선전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승만 정부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지속되었다. 신승욱, 「1·2차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활동과 그 귀결(1948~1950년)」(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9~10쪽.
- 5) 「한·유엔 관계」,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un-ko/wpge/m_5294/contents.do) 참조. 신규회원국의 가입은 안보리의 권고를 받아 총회가 표결로 결정한다. 여기서 “단독명의로 5회” 신청은 한국 정부가 유엔본부에 직접 가입을 신청한 1949년, 1951년, 1961년, 1975년 7월과 9월의 사례를 지칭한다. 다만 “우방국 주도의 5회 가입 시도”의 경우, 우방국이 총회에 한국 가입 결의안을 통과시킨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안보리에서 한국 가입안을 제기한 사례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외무부가 1977년 작성한 「남북한 유엔 가입 문제 처리 연혁」에 따르면 1977년까지 안보리에서 한국 가입 문제가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사례는 네 차례(1949년 4월, 1955년 12월, 1957년 9월, 1958년 12월)이며, 미국 등 우방국 주도로 총회에 한국의 가입을 승인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네 차례(1949년 11월, 1950년 12월, 1957년 2월, 1957년 10월)이다.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안보리나 총회에서 한국 가입 문제가 의제로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 외무부 국제

규정하며 유엔 단독 가입을 추진했지만, 1973년 ‘6.23 선언’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동반 가입 또한 용인한다는 정책으로 전환했다.⁶⁾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련의 거부권 행사, 남북한 동시 가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 등으로 한국의 유엔 가입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고, 한국과 소련·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1991년 9월에 이르러서야 북한이 160번째, 남한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처럼 유엔 가입 문제는 한국 외교사 및 남북한 체제 경쟁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의 배경과 과정, 그것이 갖는 외교적·국제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제정치학계나 국제법학계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가능하게 한 당대의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유엔 가입 이후 달라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통일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며 정책적 제언을 내놓는 글이 주종을 이룬다.⁷⁾ 최근 국립외교원은 1991년 남북한 동시 가입 과정에 직접 관여

기구조약국 국제연합과, 「남북한 유엔 가입문제 처리 연혁」 『한국의 UN 가입 문제, 197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 0097954) 참조.

- 6)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및 국제 기구 동시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천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관계 수립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다수 회원국이 원하고 통일에 장애 안되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반대 않아」 『동아일보』 1973년 6월 23일.
- 7)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의 구체적 과정을 정리한 글로는 최우순, 『한국의 유엔 외교에 관한 연구: 남북한 동시가입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등 다수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 밖에 유엔 가입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글로 유병화, 「남북한 UN가입과 한국 통일의 법적 문제」 『통일문제연구』 제3권 3호 (1991); 강성학, 「유엔가입과 한국외교」 『국제정치논총』 제41권 4호 (2001); 신각수, 「유엔 가입 30년과 새로운 30년: 국제평화와 정의를 위한 한국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1호 (2022) 등이 있다.

한 원로 외교관들의 구술을 정리한 자료집을 출간했다.⁸⁾

위 연구들은 1991년 남북한 유엔 가입이라는 사건을 탈냉전 및 북방정책의 맥락 속에서 잘 정리했지만, 1949년~1991년 기간 이루어진 한국의 가입 시도는 1991년 가입의 단순한 배경으로 처리했을 뿐 여기에 독자적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미·소 대립으로 한국의 유엔 가입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했으며, 이 시기의 유엔 가입 시도는 실패의 연속이었음을 지적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1년 이전 가입 시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를 요한다. 첫째, 유엔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가입을 시도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외교적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엔 가입을 시도하는 배경에 깔린 국내정치적·외교적 고려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91년 이전 한국의 유엔 가입 시도를 단순히 외교 실패의 역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북한 동시 가입의 역사적 기원이 형성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1973년 6.23 선언을 기점으로 남북 동시 가입을 공식 수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국제 사회에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주장이 나왔고, 특히 이러한 주장이 1950년대 중·후반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유엔 가입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냉전의 적대국인 소련을 통해 처음 등장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본고는 1991년 이전 한국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를 역사적으로 의미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운동을 살펴본다. 유엔 가입을 실제 실현한 1991년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가

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남북한 UN 동시가입』 (서울: 선인, 2021).

가장 적극적·대대적으로 유엔 가입을 추진한 시기가 1950년대 중·후반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이라는 대규모의 대중운동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유엔 가입을 적극 시도했다. 1956년 여름부터 1957년 초까지 전개된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을 통해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가입을 청원하는 약 1천만 명 국민들의 서명을 수집하여 유엔 본부로 발송하는 등 매우 공세적으로 유엔 가입을 추진했다. 1950년대 이후에도 유엔 가입 시도는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일반적인 외교 교섭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대중운동까지 전개하며 유엔 가입을 추구한 것은 이 시기가 유일하다.⁹⁾

그러나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은 한국의 유엔 가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실 이승만 정부 또한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엔 가입이 실제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유엔 가입을 위한 적극적 제스처를 취한 배경에는 1950년대 중·후반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 또한 이 운동은 소련으로부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주장이라는,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제안을 낳는 역설적 효과를 낳았으며, 한국 정부의 ‘유일 합법성’ 논리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만을 확인했다.

한국 외교의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했듯이, 이 시기 한국의 유엔 외교 또한 미국에 많은 부분 의지하여 진행되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자유 진영’의 지도국이었던 미국의 의중이 한국의 유엔 가입 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본고는 한미관계의 맥락 속에서 한국의 유엔 가

9) 1986년 전두환 정부는 유엔 가입을 위한 민간 외교 차원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각계의 국내 인사” 및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국 인사들”로 유엔가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실제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가입 추진위 설치 검토」 『조선일보』 1986년 11월 16일.

입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도 함께 살펴본다.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추진 운동에 대해서는 김도민의 간략한 언급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¹⁰⁾ 또한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이 같은 시기에 등장한 소련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과 어떤 관계인지 주목한 연구 또한 없다.¹¹⁾ 한국 외무부가 10년 단위로 출간한 공식 외교사는 유엔 가입 시도의 전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했다.¹²⁾ 그러나 1950년대 중·후반 한국의 적극적인 유엔 가입 시도의 배경과 의미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고, 1950년대 후반 소련의 동시가입론에 대해서도 당대에 편찬된 『외무행정 10년』(1959), 1990년에 출간된 『한국외교 40년』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¹³⁾

주요 자료로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사료를 활용했다. 먼저 미국 메릴

10)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14~115쪽.

11)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조수룡은 1957년 소련의 남북한 동시가입론이 1960년 8월 북한의 연방제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수룡, 「연방제 제안의 형성 - 1950년대 소련의 ‘두 개의 조선’론과 북한의 대응 -」 『남북관계사 연구의 모색: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제안』, 한국역사연구회 남북관계사연구반·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21 사업단 공동주최 학술회의(2021년 12월 11일).

12) 외무부, 『外務行政의 十年』(서울: 외무부, 1959); 『한국외교 30년: 1948-1978』(서울: 외무부, 1979); 『한국외교 40년: 1948-1988』(서울: 외무부, 1990);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50년: 1948-1998』(서울: 외교통상부, 1999); 『한국외교 60년』(서울: 외교통상부, 2009).

13) 『한국외교 40년』은 외무부 발간 공식 외교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1957년 소련의 동시가입 주장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나름의 평가까지 덧붙였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당시 안보리에서의 토의과정에서 소련 수석대표 소볼레프 대사는 UN의 보편성의 원칙과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소련의 남·북한 동시 가입을 권고하는 수정안을 지지해 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으며, 이는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소련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252쪽) 이러한 서술은 출간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소련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랜드 National Archives II 소장 미 국무부 문서철(RG 59)의 한국 내정문서철(795 시리즈) 및 재외공관 문서철(RG 84) 중 서울대사관(Seoul Embassy) 문서를 활용했다. 한국 자료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집 출간한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의 신문 자료를 활용했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소장 1950년대 후반 유엔총회 관련 문서철을 활용했다.

II. 1956~1957년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한국이 처음 유엔 가입을 시도한 것은 1949년이다. 정부 수립 직후 한국은 1949년 1월 19일 고창일 외무장관 서리 명의로 유엔 가입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¹⁴⁾ 한국의 첫 번째 가입 신청은 안보리에서 찬성 9표, 반대 2표를 얻었지만 반대표 중 한 표가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표였던 관계로 가입은 좌절되었다.¹⁵⁾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도 외무상 박헌영 명의로 가입 신청을 제출했으나 안보리에서 2대 9로 부결되었다. 1949년 11월 4차 유엔총회는 한국이 현장 4조에 따른 유엔 가입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안보리에 한국 가입 신청의 재심을 요구하는 296(IV)호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질적인 결과는 얻어내지 못했다.¹⁶⁾

14) 1955년 이전 한국의 유엔 가입 과정은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249~250쪽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15) 1945~1964년까지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 6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65년부터 현재까지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었다. 회원국 가입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안보리 이사국이 11개국이던 시기에 안보리의 모든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7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가 필요했다.

1951년 12월 한국 정부는 장면 국무총리 명의로 사무총장에게 유엔 가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다시 발송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고, 1955년까지 한국의 가입 문제는 유엔총회나 안보리에서 본격적인 논의 없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안보리에서 소련의 거부권을 넘어설 방법을 찾지 않는 한 한국의 유엔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국내외의 지배적인 전망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 가입에는 실패했으나 1949년에 유엔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인 국제보건기구(WHO)에 가입하면서 뉴욕 유엔 본부에 상주 옵저버(Observer) 대표부를 설치할 자격을 얻었고, 뉴욕 옵저버 대표부를 기반으로 유엔 외교를 전개했다.¹⁷⁾ 그러나 한국은 유엔 정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분단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엔총회에서 열린 ‘한국 문제(Korean Question)’ 토의에 참가하려면 회원국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초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현장을 준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가가 가입하는 유엔에서 계속 소외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커다란 외교적 약점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1956년 초부터 강력한 유엔 가입 의사를 밝히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56년 3월 조정환 외무장관은 덜레스(John F. Dulles) 미 국무장관에게 각서를 보내 한국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일 합법 정부인 만큼 미국이 한국의 가입을 다시 한번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¹⁸⁾ 1956년 7월에는 주미대사 양유찬이 국무부

16) “The Problem of Ad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1960.9), 『한국의 유엔가입문제 연구서(study paper) 1957-60』,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31.13, 등록번호 907.

17) 북한은 1973년 5월 WHO에 가입하면서 뉴욕 유엔본부에 옵저버 대표부를 설치했다.

18) “Aide-Memoire” (1956년 3월 27일), 『유엔총회대표단 임명, 제9-11차, 1954-56』,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31.12, 등록번호 157.

극동 담당 차관보 로버트슨(Walter Robertson)을 만나 유엔 가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1956년 여름부터 연말까지 한국 관료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에 한국의 유엔 가입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했다.¹⁹⁾

왜 1956년이라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유엔 가입 공세에 나섰을까? 첫째, 1955년 10차 유엔총회에서 16개국이 새롭게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유엔 헌장 4조가 제시한 조건을 갖춘 국가들은 모두 회원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냉전의 격화에 따라 회원국 가입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1950년 9월 인도네시아가 가입한 이래 5년 동안 한 국가도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자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 양측이 패키지 딜(package deal) 같은 정치적 해결책을 동원하여 회원국 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양 진영의 합의하에 1955년 12월 8일 10차 총회는 “통일 문제”가 없는 18개 신청국의 가입 신청을 검토해줄 것을 안보리에 요청하는 918(X)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즉 남·북한, 남·북베트남, 동·서독 등 정치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분단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 신청국 전부를 일괄 가입시키자는 방안이었다. 18개국 중 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본, 대만이 거부권을 행사한 몽골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국가들의 가입이 성사되며 유엔 회원국은 60개국에서 단숨에 76개국으로 증가했다.²⁰⁾ 안보리에서 18개국 가입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 직전 대만 대

19) “Memorandum of Conversation” (1956.7.2.), RG 59,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 General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1952-66, Korea, Entry 5224, box 1, Korea, Membership in the UN.

20) 1955년 몽골 가입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만이 1971년 중국대표권의 변경으로 유엔을 탈퇴할 때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사례였다. 대만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몽골(몽골인민공화국은) 중국(중화

표는 한국과 남베트남의 가입 신청도 검토해달라는 기습적인 발의를 제기했지만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²¹⁾

이처럼 16개국이 정치적 타협으로 유엔에 일괄 가입한 사실은 한국 정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차 유엔총회가 끝난 직후 『조선일보』는 “우리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는 국회는 어떠한 열의를 보였으며 재외 사절들은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시급히 올바른 외교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등 한국이 유엔 가입에서 소외된 데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했다.²²⁾ 5년간 지속된 신규 회원국 가입의 교착 상태가 해소됨으로써 한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유엔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둘째, 일본이 1956년에는 유엔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했다. 일본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은 1955년부터 소련과의 국교 회복을 위한 강화협상을 시작했다. 1955년 12월 10차 유엔총회가 일본을 포함한 18개국 일괄가입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몽골 가입에 대한 대만의 거부권 행사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안보리에서 일본의 유엔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소련이 일본과 강화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1956년 11차 총회에서는 일본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민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관철시켰다. Hsiao-Ting Lin, *Taiwan, the United States, and the Hidden History of the Cold War in Asia : Divided Allies* (London: Routledge, 2022), pp. 131-132.

21) Ibid. 린샤오팅은 이 당시 대만의 한국·남베트남 가입 요청은 몽골 가입에 대한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고 분석했다. 즉 18개국 일괄가입안이 진영 간의 합의로 총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몽골 가입을 거부하는 것에 정당한 명분이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한국과 남베트남 가입에 대한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거부권 사용을 위한 도덕적 명분 쌓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22) 「유엔총회에 반영된 우리 외교실상」 『조선일보』 1955년 12월 25일.

고 있었다.²³⁾

반일주의를 핵심 통치 이념 중 하나로 삼은 이승만 정권은 일본의 유엔 가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이미 1955년 초부터 이승만 정권은 하토야마 내각이 소련과의 강화협상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교류, 북한과의 민간 교류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자 관제 시위를 통해 “용공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1955년 8월에는 대일통상 및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본과 각을 세웠다.²⁴⁾ 이승만 정권은 일본의 ‘침략성’과 ‘용공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안보 위협을 줄기차게 강조했다. 그러한 이승만 정권의 논리 속에서 한국이 가입하지 못한 유엔에 일본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56년 4월 조정환이 주한 미대사관 측에 “미국이 일본의 유엔 가입을 추진하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로 한국 가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국 정부는 일본의 유엔 가입 동향을 민감한 시선으로 관찰했다.²⁵⁾ 1956년 10월 일본과 소련의 전쟁상태를 공식 종결하는 일·소공동선언의 발표로 일본의 유엔 가입이 목전에 다가오자, 11월 한국은 타이베이(臺北) 주재 대사를 통해 대만 정부에 일본 가입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뜻을

23) Sayuri Guthrie-Shimizu,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1945-1960.”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1: Orig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261; 「임병직이 이승만에게」 (1955년 12월 15일),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617쪽; 「소, 국교재개시엔 일의 유엔가입 지지」 『조선일보』 1956년 5월 19일.

24) 오오타 오사무 지음,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옮김,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서울: 선인, 2008), 162~163쪽.

25) “U.S.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1956.4.4.),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6-58, Entry CGR 56-63, Box 2, 312: ROK Membership in UN, 1957-5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코드: AUS003_06_02C0067).

이루지 못했다.²⁶⁾

이러한 배경에서 추동된 이승만 정권의 유엔 가입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56년 7월부터 1957년 초까지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전개된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이다.²⁷⁾ 유엔 가입을 위해 전국민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한 것은 1991년 유엔 가입이 실현되기 전까지 이때가 유일무이한 사례다.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은 국회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1956년 7월 16일에 열린 국회 정기회의에서 국회 외무위원장을 맡은 자유당의 박영출 의원은 유엔 가입을 위해 전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²⁸⁾

일본은 거의 거족적인 운동을 1년 전부터 전개해 가지고 그자들 자신의 판단으로나 대략 국제 외교가들의 정통된 이야기는 아마 금년 제11회 유엔 총회 일본 유엔가입은 실행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일본이 대한민국보다도 유엔에 가입이 먼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꿈에서라도 이것을 상기한다고 하면 실로 비분강개를 금할 수 없겠습니다. (중략) 우리 국회로서는 무슨 문제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 놓고도 대

26) “Telegram from Rankin to Amembassy Seoul” (1956.11.6.),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6-58, Entry CGR 56-63, Box 2, 320.1: US-ROK Relations, 1956-5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코드: AUS003_06_02C0090). 1956년 10월 일소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12월 비준서 교환까지 완료되면서 소련과 일본은 정식으로 국교를 회복했다. 비준서 교환 직후인 12월 18일 일본은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다만 일소공동선언에서 계속 교섭하기로 한 ‘북방영토(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다.

27) 유엔가입추진운동에 대해서는 김도민이 박사논문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김도민은 유엔가입운동이 1956년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전개된 것이라고 보았으나, 정·부통령 선거는 5월 15일에 치러졌고, 본격적인 유엔가입운동은 7월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5.15 선거가 유엔가입운동의 직접적인 동력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114쪽.

28) 「제2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6년 7월 16일), 6~8쪽.

한민국은 일본보다도 (중략) 우리가 먼저 유엔에 가입을 보아야 할 것으로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를 결심하고 해나가야 할 줄 압니다. (중략) 유엔가입 국민운동 촉진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의장단 또 각 파 대표로 임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에 대한 구상을 해서 국민 각계각층을 망라한 강력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임무를 수행시키도록 부탁해 보자는 이 생각이올시다. (강조는 인용자)

만약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유엔에 가입하게 된다면 “실로 비분강개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박영철의 발언은 반일주의의 실천으로서 유엔가입운동이 갖는 의미를 직설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외무위원회 결의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유엔가입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조직이 구성되었다. 먼저 1956년 7월 20일 윤치영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가입촉진 국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국조직의 결성을 준비했다.²⁹⁾ 8월 8일에는 유엔가입추진 전국위원회가 공식 결성되었는데, 전국추진위원장에는 국회의장 이기붕, 부위원장에는 조병옥, 윤치영, 조경규, 홍성수, 임영신 등이 선임되었다.³⁰⁾ 이승만 정권의 2인자였던 이기붕을 비롯해 위원장·부위원장에 선임된 인사들의 면면은 유엔 가입 운동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큰 관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운동이 강력한 관제 운동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엔가입추진 전국위원회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계몽선전 활동, 강연 등도 계획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1천만명 서명운동’이었다. 1천만 국민의 서명을 받아 11차 유엔총회에 참석할 한국 대표를 통해 유엔에 전달한다는 계획이었다. 전국위원회는 서명운동의 원활한

29) 「위원장에 윤씨」 『동아일보』 1956년 7월 21일.

30) 「유엔가입추진위결성 -본격화할 거족적인 국민운동-」 『동아일보』 1956년 8월 8일.

진행을 위해 1956년 8월 말~9월 각 도에 위원회를 결성하고 군·면 지부 결성도 추진했다. 전국위원회는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서명운동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군중집회 장소 및 동·이장, 통·반장 조직 등의 기층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명을 수집하게 했다.³¹⁾

전국적인 관제 운동의 결과 한국 정부는 11차 유엔총회에 유엔 가입을 호소하는 천만 명의 서명을 보낼 수 있었다. 1956년 12월 20일 한국 정부는 뉴욕의 유엔 본부로 천만 국민의 서명을 담은 유엔 가입 진정서를 전달하였는데,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진정서를 전달하는 데만 12대 이상의 트럭이 동원되었다.³²⁾

이승만 정권은 다가올 11차 총회에서 한국 유엔 가입의 가능성이 있으며,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이 그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운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1956년 8월 11일 유엔 주재 대사 임병직은 귀국 담화에서 “한국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대단히 증대”되었으며, 소련의 거부권이라는 방해 요소가 있지만 “기술적인 면, 도의적인 의무관계 및 합법적인 수속 등 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유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³³⁾ 그는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국적인 국민운동”이 “유엔 가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을 호평했다.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첫째,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표를 획득하면 안보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56년 11월 양유찬은 로버트슨을 만난 자리에서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표를 획득하면 안보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회의 압도적 여론으로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하자

31) 「군면지부결성 유엔가입위지시」 『동아일보』 1956년 9월 14일; 「전국적 서명운동 『유엔』 가입추진위서 25일부터」 『동아일보』 1956년 9월 21일.

32) 「한국가입진정서 제출」 『조선일보』 1956년 12월 22일.

33) 「유엔가입가능성 증대 각 우방은 우리 입장 이해」 『조선일보』 1956년 8월 12일.

고 주장했다.³⁴⁾ 둘째, 한국은 신희원국 가입의 기본 규정인 현장 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1956년 7월 국회가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을 처음 발의하는 자리에서 박영종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탄생되었고 유엔에서 승인한 나라이고 유엔에서 수호한 나라”인 만큼 한국과 유엔 간에는 다른 국가와 구분되는 특수 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국은 회원국 가입을 위해 안보리 결정을 요구하는 현장 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사실 신희원국 가입만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한국만의 고유한 주장은 아니었고, 1946년 이래 호주 및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³⁶⁾ 그러나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유엔 현장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미국 또한 거부권의 무력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³⁷⁾ 소련의 거부권 무력화는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미국 자신의 거부권 무력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당

34) “Japanese Property Claims in Korea; and (2) Republic of Korea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1956.11.6.), RG 59,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 General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1952-66, Korea, Entry 5224, box 1, Korea, Membership in the UN.

35) 「제22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6년 7월 16일), 15쪽.

36) 호주는 신희원국 가입에 대해서만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건너뛰는 방안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또한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리에서 상임·비상임이사국 구분관계 없이 7표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Problem of Ad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1960.9), 『한국의 유엔가입문제 연구서 (study paper) 1957-60』,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31.13, 등록번호 907.

37) “Paper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Planning Staff, Bureau of United Nations Affair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United Nations Affairs, Volume III, pp. 151-155.

시의 주요 언론들 또한 유엔가입운동의 취지는 환영하면서도 “유엔 가입의 현실적 방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의문을 표했다.³⁸⁾ 「한국의 유엔 가입은 가능한가」라는 글을 『한국일보』에 발표하여 유엔 가입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외무부 정무국 3등서기관 신동영이 파면 처분을 당한 일도 있었다.³⁹⁾

이처럼 현실적으로 안보리에서 소련의 거부권을 넘을 방법이 없는 한 한국의 유엔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승만 정권의 고위층 또한 대외적 언설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유엔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56년 10월 초 이승만의 사설 고문이자 한국 정부의 유엔 외교에도 광범위하게 개입했던 올리버(Robert T. Oliver)는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실 나는 우리 모두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엔총회에서 “가능한 한 많은 표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⁴⁰⁾

올리버의 언급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승만 정권의 현실적인 목표는 유엔 가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내 서방 진영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여 세계 여론이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한다는 상징적인 결의안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1950년대까지 유엔에서 소련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10개국에 채 되지 않은 반면, 미국은 영연방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견고한 수적 우위를 구축한 상황이었다.⁴¹⁾ 1956년~1957년 국면에서 유엔 가입 문제는 북한과의 경쟁에서

38) 「「유엔」 가입운동과 현실적인 목표」 『조선일보』 1956년 9월 15일.

39) 「불만한 배짱 신동영」 『경향신문』 1956년 8월 29일.

40) 「올리버가 이승만에게」 (1956년 10월 2일),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396쪽.

유일합법성 확보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반일주의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승만 정권의 핵심적 통치 이데올로기와의도 연결되었다. 이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유엔 가입과 관련한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관제 운동으로 여론을 동원한 다음 유엔총회 내 서방 진영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활용해 결의안을 얻어냄으로써 최소한 상징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⁴²⁾

Ⅲ.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의 역설적 귀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론의 등장

그런데 한국의 유엔 가입 노력에 키를 쥐고 있었던 미국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북한, 중국, 북베트남, 몽골 등의 가입을 양보하지 않는 한 소련이 한국 가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⁴³⁾ 1956년 3월 조정환의 각서에 대해 덜레스는 미국이 한국 가입을

41) 1950년대 20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의 라틴아메리카 블록은 유엔에서 정치, 안보 문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미국 및 서방 진영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미국이 유엔총회의 표대결에서 소련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었다. "Paper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Planning Staff, Bureau of United Nations Affair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United Nations Affairs, Volume III*, pp. 118-126.

42) '한국 문제가 유엔에 처음 상정된 1947년 이래 1955년 10차 총회 때까지 서방 진영의 '한국 문제' 결의안은 항상 7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유엔가입 운동 직전 1955년 10차 총회의 경우 60개국 중 44개국의 찬성(73%)을 받았다.

43) "Japanese Property Claims in Korea; and (2) Republic of Korea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1956.11.6.), RG 59,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 General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1952-66, Korea, Entry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나 한국의 빠른 가입은 소련의 존재로 쉽지 않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보냈다.⁴⁴⁾ 195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유엔 가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미국은 1955년 10차 총회의 결과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10차 총회 당시 18개국의 일괄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회원국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나 남베트남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의 가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⁴⁵⁾ 즉 거부권 행사로 유엔 내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분단 국가의 가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회원국의 견해였다. 한국의 가입 추진은 미국으로서는 일정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미국은 총회 결의안을 통해 한국과 남베트남의 가입 자격을 재확인하는 조치는 두 국가의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의 정도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⁴⁶⁾

11차 총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57년 1월 중순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한국과 남베트남의 가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회원국의 예상 표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국의 가입 문제를 총회에 상정할 경우

5224, box 1, Korea, Membership in the UN.

44) "United States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6-58, Entry CGR 56-63, Box 2, 312: ROK Membership in UN, 1957-58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참조코드: AUS003_06_02C0067)

45) "Position Paper Prepared in the Bureau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ffairs for the Delegation to the Eleven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1956,11.2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United Nations and General International Matters, Volume XI, pp. 479-483.

46) Ibid.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3분의 2 찬성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⁴⁷⁾ 미 국무부는 뉴욕의 유엔총회 대표단에 대해 한국의 유엔 가입을 호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총회 특별정치위원회(Special Political Committee)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⁴⁸⁾ 1월 23일부터 특별정치위원회는 한국과 남베트남의 가입 검토를 안보리에 요청하는 13개국 공동결의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⁴⁹⁾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1월 24일 특별정치위원회에서 소련이 남·북한과 남·북베트남의 동시 가입을 제안한 것이다. 소련은 이 국가들의 동시 가입이 분단 국가들간 상호 접촉과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소련의 유엔대사 소볼레프(Arkady Alexandrovich Sobolev)가 발언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⁵⁰⁾

조선과 베트남에는 상이한 정치·경제 구조를 지닌 두 개의 별개 국가들(two separate states)이 존재한다. (중략) 조선과 베트남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지역의 분단 국가들이 각각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47) 남베트남의 경우 한국보다 지지표가 약간 낮은 수준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Telegram from the Mission at the United Nation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7.1.1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United Nations and General International Matters, Volume XI*, pp. 488-489.

48) “Telegram from Dulles to Newyork Gadel” (1957.1.16.),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6-58, Entry CGR 56-63, Box 2, 312: ROK Membership in UN, 1957-58.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참조코드: AUS003_06_02C0067).

49) 13개국은 호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프랑스,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필리핀, 영국, 미국이다. “Membership Application for Korean and Viet-Nam” (1957.1.24.), RG 59,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 General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1952-66, Korea, Entry 5224, box 1, Korea, Membership in the UN.

50) “A/SPC/SR.18”, General Assembly, 11th session, official records, Special Political Committee, 18th meeting, Thursday, 24 January 1957, New York.

다른 방법으로, 특히 강대국 정치(power politics)가 개입된다면 현재의 분단은 불가피하게 영구화될 것이며 긴장도 증대될 것이다. 조선이나 베트남의 어느 한쪽만 가입시킨다면 유엔은 동등한 권리에 입각한 통일의 기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조선과 베트남의 가입을 검토할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South Korea), 그리고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남베트남(South Viet-Nam)의 동시 가입을 검토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 국가들은 상호 접촉을 실행하고 관계 회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 국가들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접근은 현장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한다. (후략) (강조는 인용자)

유엔 동시 가입 제안은 소련의 기존 입장을 감안하면 커다란 입장 전환이었다. 그간 소련은 한국의 유엔 단독 가입 시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국 점령 당국이 세운 괴뢰 정부”라며 가입 자격이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⁵¹⁾ 소련은 분단국가의 가입은 “분단을 영속화시키고 평화통일에 지장을 준다”며 남·북한의 유엔 가입 또한 통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소볼레프가 북한·북베트남에 대해서는 각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베트남민주공화국”으로 정식 국호를 호칭한 반면 대한민국·베트남공화국은 “남조선”과 “남베트남”이라고 호칭하며 온도차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두 개의 별개 국가들”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기존 입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소련의 남북한 동시 가입 제안은 ‘두 개의 조선(한국)’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련은 흐루쇼프(Nikita Sergeyevich Khrushchev) 집권 이후 대외적으로 ‘평화공존’을 표방하며 자본주의 진영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했다. 분단 국가들을 대하는 소련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는

51) “The Problem of Ad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1960.9), 『한국의 유엔가입문제 연구서(study paper) 1957-60』,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31.13, 등록번호 907.

데, 소련은 1955년 9월 동독과 상호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서독과도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며 ‘두 개의 독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⁵²⁾ 이미 ‘두 개의 독일’을 인정한 소련은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허락된다면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를 자임하는 남한 정부는 당연히 동시 가입을 수용하지 않았다. 유엔총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뉴욕을 방문한 조경규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유엔 가입 문제에 있어 소위 ‘보따리 흥정’의 일부가 되거나 그러한 흥정을 절대로 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⁵³⁾

소련의 우방인 북한의 속내는 보다 복잡했다. 소련의 동시 가입안은 ‘하나의 조선’을 내세운 북한의 입장과는 충돌한다는 점에서 북소 관계에 폭발력 있는 사안이 될 가능성이 컸다. 북한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소련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시 가입안이 나온 3일 뒤인 1957년 1월 27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소련의 제안이 “남북의 접근과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⁵⁴⁾ 그러면서도 사설은 동시 가입안이 ‘하나의 조선’ 논리에 배치되는 것임을 의식한 듯 소련의 제안이 ‘두 개의 조선’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인민이 자기 손으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도록 함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몇 달 후인 1957년 5월 북한 외무성 참사 전동

52) 이리에 아키라 책임 편집, 이동기·조행복·전지현 옮김, 『하버드-C.H. 베크 세계사: 1945 이후 서로 의존하는 세계』 (서울: 민음사, 2018) 85~93쪽; 김동혁, 「냉전기 소련과 서독의 통상 관계 발전과 독일 통일, 1953~1985」 『역사비평』 133호 (2020), 96~101쪽 참조.

53) 『보따리흥정』 절대 불수락』 『동아일보』 1957년 2월 1일.

54) 「조선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유익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57년 1월 27일.

혁은 소련대사관 참사관 쉘스테리코프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합법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일하므로 유엔 동시 가입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⁵⁵⁾ 동시 가입안은 남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무척 불편하고 불온한 주장이었다.

이처럼 당사자인 남·북한은 모두 소련의 동시 가입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소련이 안건을 제기한 유엔 특별정치위원회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반향이 있었다. 1957년 1월 28일에는 인도와 시리아가 남·북한과 남·북베트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규 가입신청국들의 가입을 검토해 달라고 안보리에 요청하는 합동 결의안을 제시했다.⁵⁶⁾ 이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거부당하면 소련의 동시 가입안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립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또한 동시 가입 제안에 공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방 진영의 일부 국가들 또한 인도-시리아 안에 동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⁵⁷⁾ 한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유엔 가입 운동이 오히려 남북한 동시 가입안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응을 불러왔고, 그에 대한 유엔 내 각국의 반응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1957년 1월 30일 특별정치위원회는 안보리에 한국과 남베트남의 가입 검토만을 주장하는 서방측의 13개국 결의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고, 소련의 동시가입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서방 진영의 견고한 수적 우위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한국 정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찬성

55) 조수룡, 「연방제 제안의 형성」, 6쪽.

56) "Korean and Vietnamese Membership" (1957.1.28.), RG 59,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 General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1952-66, Korea, Entry 5224, box 1, Korea, Membership in the UN.

57) Ibid.

과 반대가 각각 45표·8표였는데 기권표가 찬성표의 절반에 가까운 22표가 나온 것이다. 당시까지 유엔에서 이루어진 한국 관련 표결에서 전례 없는 사례였다. 특별정치위원회를 통과한 한국·남베트남 가입 결의안은 2월 28일 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1017(XI)호 결의안으로 확정되었지만, 이때도 찬성 40, 반대 8, 기권 16이라는 결과가 나왔다.⁵⁸⁾ 표결 직전까지 한국 정부는 3분의 2 득표를 자신했고, 미국 또한 그와 비슷한 수준의 득표를 예상했지만 두 나라의 자신감과는 무색하게 80개 회원국 중 절반 정도만 한국의 단독 가입을 지지한 것이다.⁵⁹⁾ 이는 한국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논리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남·북한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련의 동시 가입안에 공명하는 국가들이 나타나는 등, 유엔 가입 추진 운동까지 전개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언론 또한 이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경향신문』은 한국의 유엔 가입 노력은 “세계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구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권표가 발생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외교적 노력의 부족을 질타했다.⁶⁰⁾

한국 정부는 유엔 가입 표결 결과에 충격을 받았고, ‘유일 합법성’ 논리를 지키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하기 위해서는 중립국 외교가 필

58) 「한국은 가입자격있다」 『조선일보』 1957년 3월 2일. 특별정치위원회와 총회 본회의 총 투표수 차이는 특별정치위원회에서는 표결에 참가한 국가들이 총회 본회의 투표에서는 불참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59) “Telegram from Dulles to Seoul and Tokyo” (1957.1.17.),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6-58, Entry CGR 56-63, Box 2, 312: ROK Membership in UN, 1957-5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코드: AUS003_06_02C0067).

60) 「유엔총회의 표결과 외교강화의 요청」 『경향신문』 1957년 2월 2일.

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특별정치위원회 표결 직후 조정환 외무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외국의 국민들과 친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다”며 중립국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⁶¹⁾ 이미 1956년 양유찬 주미대사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순방하며 대미외교 일변도를 벗어나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조정환의 중립국 외교 선언 이후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친선사절단을 파견하여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이에 1957년 3월~5월에는 남베트남 공사 최덕신이 이끄는 동남아시아 사절단이, 5월~6월에는 김정렬이 이끄는 중동·아프리카 사절단이 파견되었다.⁶²⁾

그간 이승만 정부는 미수교국이 주일대사에게 주한대사를 겸임시키는 방식의 수교를 제의할 경우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 또한 이승만 정부의 반일적 태도 때문이었으나, 1959년 3월 이승만 정부는 처음으로 주일 스웨덴 대사의 주한겸임공사 발령을 수용하고 국교를 수립했다.⁶³⁾ 한국에 별도 공관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립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기존의 외교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유엔 가입 추진 과정에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체감한 결과였다.

11차 총회가 한국 가입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의 가입은 실현되지 못했다. 1017호 결의안에 따라 공은 안보리로 넘어갔지만, 1957년 9월 9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소련은 또다시 한국 단독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957년 10월 25일 12차 유엔총회는 한국과 남베트남이 유엔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하지 못했음에 유감을 표하고 두 국가의 유엔 가입 자격

61)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116쪽.

62) 위의 글, 116~118쪽.

63) 「서전과 공사교환」 『조선일보』 1959년 3월 12일. 한국은 김유택 주영대사를 스웨덴 겸임공사로 발령했다.

을 다시 확인하는 1144(XII)호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의 가입 추진 동력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되었다.

1958년 13차 총회에서도 한국은 가입 문제를 총회 의제로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총회에서 한국 가입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경우 “소련의 대응책을 야기”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위상만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의 시도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⁶⁴⁾ 즉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를 제기하면 소련은 또다시 남북한 동시 가입론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유엔 회원국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예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총회 의제로 제기가 불가능하다면 안보리에서라도 가입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미국은 1958년 12월 9일 영국, 프랑스, 일본과 더불어 안보리에 한국 가입 문제를 제기했으나 예상대로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했다.⁶⁵⁾ 1959년 14차 총회에도 한국은 가입 문제를 총회 의제를 제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미국은 1958년의 2.4 파동, 1959년의 조봉암 사형 등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장담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⁶⁶⁾ 중립주의 성향의 신생독립국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유엔 내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미국이 굳이 위험을 떠안고 한국의 가입을 추진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64) Telegram from Secstate WashDC(Herter) to Seoul” (1958.9.17.),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6-58, Entry CGR 56-63, Box 2, 312: ROK Membership in UN, 1957-5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코드: AUS003_06_02C0067).

65) “Telegram from Herter to Saigon and Seoul” (1958.12.10.), RG 84, Korea, Seoul Embassy, General Records, 1953-55 Series.

66) “Korean Question at the 14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1959.8), 『유엔총회, 제14차, 1959.9.15.~12.13.』,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31.2, 등록번호 160.

IV. 맺음말

1950년대 중·후반 한국의 적극적인 유엔 가입 시도는 성과보다는 상처를 남겼다. 한국 외교 당국이 자신한 총회의 3분의 2 득표에 실패했을뿐더러, 남북한 동시가입안의 등장이라는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만난 것이다. 반공주의와 더불어 반일주의를 국민 동원과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한 이승만 정부는 일본의 유엔 가입 움직임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했고, 그 결과가 유엔 가입 추진 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이었다. 한국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유엔 단독 가입을 통해 자신의 ‘유일 합법성’을 실체화·제도화하는 것이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한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외교적 승리를 쟁취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소련의 남북한 동시초청안 등장 이후 미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 시도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국제적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거나, 동시 가입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1991년 남·북한 동시 가입이 실현되기 전까지 안보리에서는 한국 가입 문제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지만, 1957년을 마지막으로 전체 회원국이 집결한 총회에서는 한국의 유엔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유엔 가입 운동은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논리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했고, 이는 한국 정부가 결국 북한과의 장기적 공존 및 북한의 국가적 실체를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임을 예견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유엔 단독 가입 시도가 좌절된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냉전 구조 속에서 발생한 외교 실패의 사례였지만, 동시에 한국이 ‘두 개의 한국’

의 현실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계기로도 작동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통일 정책 변화는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과 ‘두 개의 한국’ 논의의 역사적 위치를 다시 묻게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말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남·통일 정책 관련 기구들의 전면적 개편을 지시했다.⁶⁷⁾ 분단 고착화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오랫동안 반대했고, 냉전 이후에도 ‘하나의 조선’ 논리를 강하게 고수했으며,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웠던 북한의 전통적 입장에서 이탈을 선언한 것이다.⁶⁸⁾ 북한의 “두 적대 국가” 선언이 북한의 대남·통일 정책의 근본적·비가역적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경색된 한반도 주변 질서에 대한 상황적 대응인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북한의 “두 적대 국가” 담론이 향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1950년대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두 개의 한국’ 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 접수: 2024년 5월 13일 / 심사: 2024년 5월 29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67) 이무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7권 1호 (2024), 55쪽.

68) 본고가 서술한 대로 북한은 소련이 처음 동시가입안을 제기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표했고, 1973년 6.23 선언으로 남한이 남북 동시 가입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이후에도 남북이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면 단일의식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은 1990년~1991년 남한과 소련·중국의 관계 개선으로 남한의 가입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된 후에야 동시 가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1991년 남북한 동시가입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에 대해서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남북한 UN 동시가입』에 수록된 당시 외교관들의 증언을 참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남북한 UN 동시가입』, 서울: 선인, 2021.
- 오오타 오사무 지음,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옮김,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서울: 선인, 2008.
- 외무부, 『外務行政의 十年』, 서울: 외무부, 1959.
-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1948-1978』, 서울: 외무부, 1979.
-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48-1988』, 서울: 외무부, 1990.
-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50년: 1948-1998』, 서울: 외교통상부, 1999.
-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서울: 외교통상부, 2009.
- 이리에 아키라 책임 편집, 이동기·조행복·전지현 옮김, 『하버드-C.H. 베크 세계사: 1945 이후 서로 의존하는 세계』, 서울: 민음사, 2018.
- Lin, Hsiao-Ting, *Taiwan, the United States, and the Hidden History of the Cold War in Asia : Divided Allies*, London: Routledge, 2022.
- 강성학, 「유엔가입과 한국외교」 『국제정치논총』 제41권 4호, 2001, 71-90쪽.
-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278쪽.
- 김동혁, 「냉전기 소련과 서독의 통상 관계 발전과 독일 통일, 1953~1985」 『역사비평』 133호, 2020, 93~121쪽.
- 류기현, 『1953~1971년 유엔의 한반도 분단 관리 구조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1~322쪽.
- 신각수, 「유엔 가입 30년과 새로운 30년: 국제평화와 정의를 위한 한국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1호, 2022, 1~11쪽.
- 신승욱, 「1·2차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활동과 그 귀결(1948~1950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1~79쪽.
- 유병화, 「남북한 UN가입과 한국 통일의 법적 문제」 『통일문제연구』 제3권 3호, 1991, 24~51쪽.
- 이무철,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7권 1호, 2024, 54~90쪽.

조수룡, 「연방제 제안의 형성 - 1950년대 소련의 '두 개의 조선'론과 북한의 대응 -」
『남북관계사 연구의 모색: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제안』, 한국역사연구회
남북관계사연구반·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21 사업단 공동주최 학술회의,
2021년 12월 11일, 1~12쪽.

최우순, 『한국의 유엔 외교에 관한 연구: 남북한 동시가임을 중심으로』, 조선대학
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1~116쪽.

Guthrie-Shimizu, Sayuri,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1945-1960."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1: Orig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244-265.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로동신문』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국회속기록』

『한국의 유엔가입문제 연구서(study paper) 1957-60』,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분류번
호 731.13, 등록번호 907.

『유엔총회대표단 임명, 제9-11차, 1954-56』,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31.12,
등록번호 157.

『유엔총회, 제14차, 1959.9.15.~12.13.』,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31.2, 등록
번호 16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RG 59,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 - General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ountry
Director for Korea, 1952-66, Korea, Entry 5224, box 1, Korea, Membership in
the UN.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6-58, Entry CGR 56-63,
Box 2, 312: ROK Membership in UN, 1957-58.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6-58, Entry CGR 56-63,
Box 2, 320.1: US-ROK Relations, 1956-58.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s Attempt for UN Membership and the Origins of Simultaneous UN Membership of Two Koreas in the Late 1950s

Ryu, Kee-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eriod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ost actively pursued UN membership was the mid-to-late 1950s. The Rhee administration made vigorous efforts to join the UN by combining a large-scale public campaign known as the “UN Membership Promotion Movement” with diplomatic endeavors. The significant increase in UN member states, particularly newly independent countries in 1955, and Japan’s entry into the UN in 1956 acted as major driving forces behi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ampaign for UN membership. However, during discussions at the UN General Assembly, the Soviet Union first proposed the simultaneous admission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to the UN. Although this proposal was rejected in a UN vote, it gained considerable support from many countries, including neutral nations. Paradoxically, through its UN membership campaign, the Rhee administration confirmed that its asser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ole legitimacy” was difficult to garner universal support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oviet Union’s initial proposal for the simultaneous admission of both Koreas became one of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wo Koreas” discourse.

Keywords: UN Membership, Inter-Korean Relations, US-South Korean Relations, Two Koreas, Diplomacy with Neutral Nations, Reunification

류기현 (Ryu, Kee-hyun)

서울대 역사학부와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현대사, 냉전사, 남북 관계사 등이 주 연구 분야이며, 최근에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역사적 구성 과정을 제도사·기구사적 차원에서 규명하는데 관심이 있다. 주요 논저로 「1953-1971년 유엔의 한반도 분단 관리 구조의 형성과 전개」(2024), 「1950-60년대 판문점 개방과 남북한 체제 선전」(2022), 「한국전쟁기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북한 현지 조사와 북한 연구의 태동: 『북한-소련 위성국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2020) 등이 있다.

일반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민사회의 실태*

: 재구성된 시민사회지표(CSI)를 중심으로

전순영 (송실평화통일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19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북한에서의 시민사회 형성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는 국제적 시민연대인 CIVICUS의 '시민사회지표'를 북한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정의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시민사회지표의 네 가지 영역인 환경, 구조, 가치, 영향의 측면에서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는 시민사회 형성에 강력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위기 해결의 실패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불가역적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 시민사회 형성 실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은 대중적 의식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북한 시장이 공론장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비교적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북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구조와 환경 수준은 열악하지만, 가치와 영향 면에서는 시민사회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주제어: 북한 시민사회, CIVICUS 시민사회지표, 북한 시장화, 일상의 저항, 한류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261>

* 이 논문은 2023~2024년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밖의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행위, 조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¹⁾을 의미한다. 시민사회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국제기구의 개발프로젝트를 통하여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표로는 ‘국제비영리단체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ICNPO)’와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 CSI)’가 대표적이다. 세계적 시민사회네트워크 CIVICUS²⁾는 그 중 시민사회지표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연구조사를 실시해왔는데, 현재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³⁾

북한에 과연 시민사회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북한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특징적 요소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 CIVICUS의 시민사회지표 개념을 토대로 북한의 시민사회 실태를 분석하고자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1) Volkart F. Heinrich, “Assessing and Strengthening Civil Society Worldwide.” *CIVICUS Civil Society Index Paper Series* vol. 2/1 (2004), p.1.

2) CIVICUS(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는 1993년도에 창립되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본부를 둔 국제 시민사회연합기관으로, 175개국 15,000여 시민단체와 개인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다. 창립 이래 전 세계 시민사회운동 연례 보고서 발간 및 유엔과 각국 정부를 상대로 시민참여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이남섭, 「한국 ODA의 시민사회 협력정책과 시민사회지표의 활용」 『국제개발협력』 3 (2012), 66쪽.

통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CIVICUS가 제시한 시민사회 개념은 실제로 북한 출신자들이 경험한 집단적 시민행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사회정치적 작용을 이해하는 틀이 될 수 있다.

II. 선행연구

북한의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을 다룬 연구로는 안청시·김근식의 논문, 장경섭의 논문, 김명수의 논문 등이 있고, 북한의 시장화와 국제적 개입을 전제로 한 북한 시민사회 형성 시나리오를 제시한 우평균의 논문이 있다.⁴⁾ 다음으로, 북한의 이른바 ‘준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공식조직의 역할을 분석하고 사회변혁의 주도세력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있는데, 직업총동맹, 청년동맹 등이 그 분석대상이 되었다.⁵⁾ 한승완은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변혁 과정에서 당의 지도에 종속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재분화했던 준시민사회가 중요한 작용을 했음에 주목

4) 안청시·김근식,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 『사회과학과정정책연구』 제16권 3호 (1996); 장경섭,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 이차의식, 이차 경제, 이차 사회」 『현상과인식』 제18권 4호 (1995); 김명수,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국가·시민사회 상호작용 모델」 『민족과문화』 제4권 (1996); 우평균, 「동유럽 공산체제 해체와 북한체제 붕괴의 연관성」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2014).

5) 권오윤, 「북한의 변화추진 가능세력으로서 직업총동맹의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2호 (2005); 김중수,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동유럽 사례와 비교」 『평화학연구』 제131권 1호 (2010).

하면서, 북한체제 역시 소수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저항적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넓은 의미의 준시민사회의 재분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세 번째 유형으로는 북한의 시민사회 요소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북한 도시의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거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를 분석하고 남북한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⁷⁾ 장세훈은 청진, 신의주, 혜산 등 지방 대도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적 관계망이 활성화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흐름이 불가역적이라고 진단한다. 김병연의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사유권, 경쟁, 성과급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끼치며,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 추이를 분석한 연구들에 이어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나왔다.⁸⁾ 주(Joo)의 논문은 북한 시장에서의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s) 관행이 비공식경제 영역에서 정치화되는 현상을 관찰하였고 란코프 외

6) 한승완, 「국가사회주의의 시민사회론 재고」 『사회와철학』 28호 (2014).

7)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2호 (2005); 김병연, 「북한이탈주민의 비공식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 『비교경제연구』 제25권 1호 (2018).

8) Hyung-min Joo, “Hidden Transcripts in Marketplaces: Politicized Discourses in the North Korean Shadow Economy” *The Pacific Review*, vol. 27/1 (2014); Andrei Nikolaevich Lankov, In-ok Kwak and Choong-Bin Cho, “The Organizational Life: Daily Surveillance and Daily Resistance in Nor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2/2 (2012); Alexander Dukalskis and Junhyoung Lee, “Everyday Nationalism and Authoritarian Rule: A Case Study of North Korea” *Nationalities Papers* 48/6 (2020); Alexander Dukalskis and Hyung-Min Joo, “Everyday Authoritarianism in North Korea” *Europe-Asia Studies* 73/2 (2021); Justin V. Hastings, Daniel Wertz, & Andrew Yeo, *Market activities & the building blocks of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Washington: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February 2021).

(Lankov et al.)의 논문은 당국의 일상적 감시 속에서도 저항이 일상화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과 그 함의를 조망하였다. 듀칼스키스(Dukalskis)의 논문들은 북한 정부가 일상 수준까지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와 식량난으로 정권의 권위와 신뢰수준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았다. 헤이스팅스(Hastings), 베르츠(Wertz), 여(Yeo)의 연구는 탈북민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공적 영역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이 주로 북한 시민사회의 존재 가능성과 그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CIVICUS의 시민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의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북한 시민사회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연구 결과를 시민사회지표의 환경, 구조, 가치, 영향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외부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파악하고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북한 시민사회의 실태 분석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1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적 내용분석법(qualitative content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북한 사회에서의 시민사회 형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서구권 기준으로 개발된 시민사회지표를 자유로운 시민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 개발을 위해 북한 출신 연구자들을 포함한 연구진의 논의에 따라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취사선택하고, 필요시 보완 또는 추가하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지표의 네 가지 차원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표 1〉 CSI 네 가지 차원의 적용에 따른 인터뷰 질문 구성

	시민사회지표(CSI)	북한사회	인터뷰 질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정부의 통제 및 규제, 정부와의 의사소통) • 시장과의 관계(시민단체 주관 활동에의 기업의 참여,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정부의 통제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후원기관, 정보데이터뱅크, 자원봉사센터 등) • 단체(지리적) 분포 • 시민참여(주요 단체의 회원 참여,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 의사결정(지도자 대표성) • 자원(재정안정도) • 네트워크(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 참여, 시민단체들 간의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모임의 결성과 유지 가능성 • 시민참여의 형태(끼리끼리, 알쌈, 지하교회 등, 허용되지 않은 사적 공동체) • 의사결정(지도자, 지식인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모임이 가능했습니까? •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누구와 공유하셨습니까? • 비공식적 끼리끼리, 알쌈 관계에서의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시민단체 내부 투명성,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 • 비폭력성(사회적 갈등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해결(당국의 통제와 억압에 맞서는 공동 항의) • 자본주의 추구 및 외 부문물 유입에 따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단속과 통제에 맞서는 우발적·집단적 저항에 참여하거나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 해결 • 평등성(인종차별적 단체들의 존재와 지위, 양성평등, 경제적 빈곤 해소) • 민주주의(사회 전반의 민주화) • 환경보호, 관용(사회적 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의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문물에 얼마나 노출되었습니까? 그에 따른 가치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 대한 영향(각종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정부 책임성 제고) • 시장에 대한 영향(기업 책임성 제고) •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시민 대상 공공캠페인, 시민 교육,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 강화, 사회적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 대한 영향(각종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불만의 일상화, 대중의 의식 변화 현상이 당국의 방침이나 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북한 시민사회 요소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유의표집과 눈덩이표집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실태(요소 및 가능성) 분석에 부합되는 경험을 한 사람,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대도시 주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탈북민 단체 채팅방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고, 본 연구에 동참하기 원하는 대상자의 문의가 오면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상기 시민사회 요소를 경험한 여부와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재북 당시 교육수준과 직업, 연령대, 출신 또는 주요 활동지역을 골고루 고려하되, 특정지역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다양한 도시와 지방 출신을 선별하였다. 총 1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였으며 5~6명으로 구성된 2개의 포커스 그룹을 형성하

고, 보안을 위한 연구참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 특성

참여자	그룹	성별	출신지역	연령대	학력	탈북년도
A	FGI-1	여	평남 순천	50대	대졸	2010
B		여	평남 순천	50대	전졸	2018
C		여	함남 함흥	20대	전졸	2017
D		여	함남 함흥	50대	대졸	2015
E		남	양강도 혜산	50대	대졸	2014
F	FGI-2	여	평남 평성	50대	대졸	2015
G		여	평남 평성	50대	전졸	2015
H		여	함북 청진	50대	고졸	2019
I		여	함북 김책	70대	전졸	2019
J		남	평양	60대	대졸	2003
K		남	평양	50대	고졸	2015
M	단독	남	함북 청진	20대	고졸	2018
N	단독	남	양강도 혜산	60대	대졸	2017
O	단독	남	함남 함흥	40대	대졸	2019
P	단독	여	자강도 만포	40대	전졸	2019
Q	단독	여	함남 단천	50대	대졸	2018
S	단독	남	양강도 혜산	50대	대졸	2019
T	단독	여	평양	40대	석사	2017
U	단독Zoom	남	황남 해주	30대	고졸	2016

3. 자료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진행 과정, 익명성 보장과 자료 분석을 위한 녹음 및 녹취록 작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표명한 참여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1회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로 추가 확인을 하였고, 포커스 그룹의 경우 2시간~2시간 20분, 단독면담은 50분~1시간 1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연구진은 사전에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거나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사전동의에 의거하여 녹음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2월 20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윤리 지침을 구성했고 이를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3위원회(IRB)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P01-202402-01-025).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 시민사회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재북 당시 일상의 불평불만 공유, 외부문물 소비, 종교 경험 등에 따른 의식의 변화에 대한 탈북민의 구술이 연구 수행의 기초 필수자료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 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보호와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및 외부 유출 방지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신변노출을 꺼리거나 기타 사정으로 요청하는 경우 단독면담을 실시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중단 의사를 표명할 경우 즉각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인터뷰 녹취록에서 발언자 이름은 일련의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고, 녹취록과 녹음 파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 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폐기할 것을 서약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탈북민의 경험을 실증 분석하여 북한 시민사회 실태를 네 가지 측면(환경, 구조, 영향, 가치)에서 파악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1920년대부터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분류하고

정보의 빈도와 분포도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된 내용분석 기법은 주로 양적 방법론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양적 내용분석은 텍스트 요소의 다양한 의미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⁹⁾ 이는 하나의 범주에 텍스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식으로 복잡성을 현저히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전 텍스트에 담겨 있는 정보 자료를 토대로 연구과제에 답을 얻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이 개발되기 시작했다.¹⁰⁾ 질적 내용분석의 목적은 연구현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는 것으로,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유사한 의미를 갖는 범주로 분류, 제시하는 것이다.¹¹⁾

본 연구는 북한의 시민사회 구성요소를 경험한 것으로 추측되는 북한 이탈주민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크리펜도르프(Klaus Krippendorff)가 제안한 질적 내용분석 절차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¹²⁾ 이 절차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텍스트 전체에 대한 심층이해 단계이다. 연구자는 원자료를 3회 이상 숙독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북한 시민사회 요소와 어떤 관계가 있고 맥락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검토했다. 두 번째는 유의미한 진술 찾기 단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구술을 내용상 관련된 문장들끼리 묶되, 북한 시민사회 요소와 연관된 유의미한 문장 집합체의 의미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명명을

⁹⁾ Philipp Mayring, *Qualitative Inhaltsanalyse* (Beltz-Psychologie Verl. Union, 1991).

¹⁰⁾ Ibid.; Hsiu-Fang Hsieh & Sarah 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5/9 (2005); Jochen Gläser & Grit Laudel, *Experteninterviews und qualitative Inhaltsanalyse* (Springer-Verlag, 2010).

¹¹⁾ Francesca Moretti et al., "A standardized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focus group discussions from different countri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 82/3 (2011).

¹²⁾ Klaus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2003).

시도했다. 세 번째는 범주화 단계이다. 연구자는 구성된 의미를 개념화한 후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재결집하여 범주로 구성했다.

IV. 연구 결과

2차에 걸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8건의 단독 인터뷰 녹음파일은 텍스트로 변환된 다음, 녹음파일과의 대조를 거쳐 총 283페이지 분량으로 전사되었다. 유사성을 지닌 문장들끼리 묶고 이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분류해 나가는 귀납적 범주화 과정을 거쳐 4개의 상위 범주와 7개의 하위 범주, 21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표 3).

〈표 3〉 상위 및 하위 범주, 의미 단위 분석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환경	정부의 통제 및 규제	철저한 감시와 고발 체계 및 연좌제
		짚은 시장 검열과 단속
		군복무 장기화로 청년층의 저항 가능성 차단
		공개처형 등으로 죽음의 공포 극대화
구조	자발적 모임의 가능성	허용되지 않은 자발적 모임은 유지 불가능
	시민 참여의 형태	공동이익을 위한 연대(알쌈)의 보편화
		신뢰관계 내에서의 불평불만 공유
		한류 소비 등 불법행위를 위한 조직화
		사적 수준에 제한된 극비리의 종교 전파
지식인의 역할	지식인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은 잠재적 수준	
가치	저항과 항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개적 저항과 동조
		법 일꾼에 대한 반감과 증오

		수동적·회피적 저항
		은닉 대본의 관행
		정책에 반하는 외화 선호 현상
	의식 변화	자본주의 가치의 내재화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체제 불신 확산
		한류 보급에 의한 각성과 개인주의화
		지역·세대·계층별 의식 분극화
영향	정부에 대한 영향	소요와 폭동 가능성을 우려한 정책적 철회 및 완화
		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법 제정과 이행

1. 정부의 통제 및 규제 환경

1) 철저한 감시와 고발 체계 및 연좌제

연구참여자들은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 체계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극도로 억압하고 있으며, 주된 수단은 연좌제 처벌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가족 중 1명이라도 반정부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연루되고 그 사실이 감시자에 의해 고발될 경우, 부모와 자녀, 일가친척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처벌받거나 불이익과 피해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감시체계가 다 있어요. 당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보위부 쪽으로 있고 보안소도 다 있는데. 보위부의 정보원이라는 게 있고, 담당 보위원이 대체로 1천 명을 봐요. 500명부터 천 명인데 정보원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이니까 40명당(감시하는) 정보원이라는 게 있어. 정보원이라는 건 스파이라고 봐요. 스파이가 한 명씩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보위원이나 같아. 이 사람 외에 협조원이라는 게 또 있어. 정보원 하나에 비례해서 2명, 3명(협조원) 있어. 이 사람들이 다 당 기관에도 있어. 당기관끼리 감시하는 것도 있고 군부도 있고. 사회가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놔. (참 0)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친인척, 부모형제, 내 가족, 진짜 소중한 가족이 나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P)

2) 잦은 시장 검열과 단속

시장은 강력한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다. 북한당국은 2003년 종합시장법을 제정한 이래, 시장을 불시 단속하고 물품을 몰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면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한국 상품이 유통되는 등, 시장이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영상물과 출판물을 검열하고 발각 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전원들이 써비 차를 강제로 세워서, 그러면 증명서를 검열하지, 그 검열하는 명목으로 장삿짐을 다 회수하고 그랬어요. (참 B)

국경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장마당에 앉아서 공업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소위 순찰대라 하는 것들이, 국민들은 막 장사를 한다고 시장에 앉았는데도 쫓는 거예요. 그러면 공업품을 막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뛰어요. (참 Q)

3) 군복무 장기화로 청년층의 저항 가능성 차단

북한 정부는 특히 저항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 세대를 10년 군복무를 통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통제한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대학생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주요 대학교들 뒤편이나 지하에 탱크 부대를 배치했다는 증언도 있었다(참 O).

중학교 졸업에서부터 28세~30세 전까지 이 연령대가 반기를 들 수 있는데, 이렇게 (피) 끄는 나이는 다 군사복무를 하게 돼 있어요. 군대는 다 차단되니까. 거기 가면 완전히 세뇌도 되잖아요? 젊은 아이들을 다 묶어놔서. 군대가 감옥과 같아요. 진짜 (북한은) 군사복무 연한을 안 줄일 거야. (참 O)

4) 공개처형 등으로 죽음의 공포 극대화

이러한 정부의 통제력을 최대치로 강화시키는 것은 극한의 공포이다. 교화형이나 단련형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수감 시의 구타와 폭력은 피할 길이 없다. 또한 사태의 초기에 주동자를 가려내어 공개처형 등의 엄벌에 처함으로써 공포를 학습시킨다.

인간 심리상 야, 이렇게 하자 해도 한 사람이 맞아서 피 나오게 되면 피하잖아요? 나도 죽겠구나,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적게, 머리 쳐든 자들은 쳐갈기되 일반 사람들은 다 (공포로) 교양, 아주 묘하게. 북한에서 공개 처형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보면 피 터지고 하는 게 공포감을, (주는데) 간부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야. 북한에서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참 O)

그 사람이 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머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학교에 들어가면 대형 (수령) 초상화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것을 하룻밤에 가서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우리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총살해 버렸잖아요. (참 B)

이와 같은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당국의 공포정치는 여전히 자국민을 통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 체계, 연좌제, 공개처형, 시장 단속과 규제로 인해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구조

1) 허용되지 않는 자발적 모임은 유지 불가능

북한에서 소수일지라도 자발적 모임은 반체제 조직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초기부터 분쇄 대상으로 간주된다. 독서, 취미, 운동, 학연, 종교 등을 기반으로 허용되지 않은 자발적 모임이 결성될 수는 있으나 지속되기 어렵고, 비밀리에 유지하다가 발각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다.

3명 이상 못 모여요. 3명이 모여 앉아서 술 먹으면 그 다음에 감시를, 첫째로 당위원회에서도 하고 보위부에서도 하고. (참 N)

여기로 말하면 동아리, 그쪽에서 말하면 친목회 같은 거, 북한은 우선 절대로 친목회라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돼요. 북청에 성동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애들 6명이 무슨 회를 만들었는데, 그 애들이 대학도 군대도 못가고 몽땅 농촌으로 보내졌어요. (참 Q)

이처럼 북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발적 모임은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장기협회사 축구협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취미 모임이나 독서회 등 학생들의 학습 동아리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동창회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에 의해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관계와 같은 정실’¹³⁾ 관계를 이용하여 그룹을 형성하는

¹³⁾ 1974년에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될 당시의 명칭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었으며, 2013년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일부 재개정되었다. ‘10대 원칙’의 영향력과 위상은 북한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일사상체계 제9조는 강한 조직규율을 강조하면서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 등의 정실관계

것은 반당적인 종파행위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양해진 시민 참여의 형태

(1) 공동이익을 위한 연대(알쌈)의 보편화

북한에서 시민 참여의 형태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끼리끼리, 알쌈 문화이다. 알쌈이란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유착된 관계를 뜻하는 은어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정권, 사법기관, 당 간부들 간 인맥이 생겨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그 관계 내에서 기밀누설, 뇌물수수, 청탁 등의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연루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탈북 권유와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차잡이하면서, 행방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다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 편안하죠. (중략) 북한말로 알쌈 문화가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그냥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는 서로 같은 동계 업종인들끼리 (생기죠). 왜? 똑같은 피해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을 통제하는 비사회주의 그루빠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같은 동종업계끼리 뭉치는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참 A)

책임 비서나 나를 이끌어주던 간부들이 다 너는 여기서 못 산다, 다시 북직도 못 하겠는데 형제들이 다 한국 갔는데 너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간부들 자체가 그냥 그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고 충성을 해야 사니까 그러지, 이제는

에 의거한 간부들의 개별행위를 묵과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쪼먹는 반당적 요소로 지목한다.

조직적 통제도 이제는 그냥 형식이 되고 말았고, 그렇게 된 지 오래요. (참 S)

알쌈 문화 확산의 배경에는 간부층의 충성심 약화와 일탈이 있다.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간부들의 일탈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이른바 ‘자본주의적 병폐’가 국가기관에 내재화됨으로써 북한체제 유지의 핵심 이데올로기의 실효성을 당-국가 스스로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¹⁴⁾

(2) 신뢰관계 내에서의 불평불만 공유

끼리끼리, 알쌈과 같은 비공식적 유착은 비록 반정부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 안에서 체제에 대한 불평불만을 공유하는 사회적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 속에서도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확산되는 데는 끼리끼리 문화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은 못하지만 자기 가족끼리는 (하쵸). 이렇게 술 마시면서도 말하는 데, 그것도 또 일단 비밀리에 해요. 누구한테 노출 안 시키죠. 그렇게 되니까 푹푹 뭉쳐 있어요. 가족끼리는 이렇게 하는데 남은 믿지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테 이렇게 말했다가 믿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니까. (참 N)

예전에 장사하기 전에는 친척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였잖아요. 근데 일단 장사 세상이 되면서부터 친척보다도 자기 형제보다도 제일 가까운 게 장사 대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 대방들과 사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시집에 대한 그런 거, 좀 이야기하다가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참 F)

¹⁴⁾ 김명수,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국가-시민사회 상호작용 모델」 『민족과문화』 4 (1996), 510쪽.

(3) 한류 소비 등 불법행위를 위한 조직화

한국 드라마 시청은 그 자체로 인식 전환의 효과가 있지만, 불법영상물 유통과 소비를 위해 시민 참여 공간이 마련되고 조직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류 문화는 꼭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2명이라든가 3명, 여러 명이 조직성을 띠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혼자서 이걸 중국에 와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연루 관계들이 많지, 이렇게 하면서 범죄로 볼 때 조직 공범 수준에 도달했어요. (참 U)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디자인은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영화를 보는 거예요. 한국 영화를 한 사람이 사서 보면 비싸기 때문에 서로 돈을 모아요. 한국 영화를 사야 되면 파는 사람도 물색해야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하시장 네트워크가 확산이 돼요. (참 A)

(4) 사적 수준에 제한된 극비리의 종교 전파

종교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북한에서 지하교회의 존재 여부는 논란이 되어왔다. 3명 이상의 자발적 비공식적 모임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종교적 모임이 유지·존속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으로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탓에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 또는 선교사들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상존한다. 연구참여자 중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기독교를 접하고 비밀리에 신앙을 갖게 됐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장백 거쳐서 연길현 지방에서 목사가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연구자들이 돈 벌러 들어오잖아요. 온 사람들을 계몽을 시켜서 전도하

고 하나님을 알려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그때 나한테 알려줄 때 벌써 12년 전에 알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앞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무슨 일을 잡든지 선과 악을 가를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나중에 알고보니) 십계명에 대한 걸 쪽 다 나한테 가르쳤더라고. (참 S)

3) 지식인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은 잠재적 수준

연구참여자 19명 중 9명은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이었으나, 지식인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 사람은 없었다.

대학생들이 시대를 변화시킨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세상인데요. 물론 정말 쿠바 혁명이 같은 그런 혁명가들이 북한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사회예요. (참 Q)

연구참여자 T는 “대학생이 20명 있으면 그 안에 청년동맹 스파이 있고, 당위원회 스파이, 보위부 스파이, 보안원 스파이 다 있어서, 불만 공유도 못하고 뭉치질 못한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청년층과 대학생에 대한 고도의 통제와 감시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가치

1) 저항과 항의

(1)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개적 저항과 동조

북한 정부가 1990년대 식량위기를 수습한 이후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

제를 회복하려 하자 생존위기에 내몰린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시도했다. 시장의 부를 흡수하기 위한 자릿세 부과, 불시순찰, 판매물품 몰수 등의 통제조치에 주민들이 우발적·집단적으로 저항하는 현상은 보편적이었다. 무리한 불법행위 단속은 그전까지 국가에 순응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아서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순천 시당 책임비서가 금산동에 있는 시장을 옮기라고 했어요. 원래 있던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정된 장소에서 장사를 다 잘하고 했는데, 그걸 다 없애 치우고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니깐 사람들이 다 화가 났죠. 누군가 시당 책임비서 이름을 큰 팻말에다 써서 “○○○ 타도하자” 하고 시장 한가운데 세웠어요. 순천시에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다 자기 필체 내라고 했어요. 근데 끝내 못 잡았어요. 사람들이 그거 쓰면서, 속 시원하다, 그렇죠. 누가 했는지 진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요. (참 B)

북한 사람들이 뼈라를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첫눈 오는 날 뼈라가 짝 깔렸는데 제목이 “사회주의의 락후성에 대해”라고 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썼어요. 다 손으로 써서 100장을 평성시장에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평성이 막 뒤집혔어요. (참 F)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항의와 동조, 자살, 살인, 현수막 게시, 동상 방화, 낙서, 뼈라 살포 등 다양한 저항 사례를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개적 저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가 심정적으로 동조했다고 진술했다. 중요한 변화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팻말이나 낙서, 뼈라를 통한 저항, 그리고 그에 대한 보편적 공감은 시민 연대 의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법 일꾼에 대한 반감과 증오

보안원, 순찰대를 비롯하여 단속을 강제하는 법 일꾼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과 증오는 매우 커서, 악질 보안원을 해임시키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등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각 가정에서 물품이나 인원을 차출하는 일을 맡은 인민반장의 경우, 주민들의 항의와 비협조로 인해 인민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다.

저는 행방으로 길가에서 차잡이하면서 1차적으로 단속했던 보안원들에 대한 원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후로도, 어쨌든 일반 민간인들의 장사는 다 안전원들이 단속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가장 1차적으로 피해 본 것도 안전원이고 미워하는 것도 안전원이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이 전쟁만 일어나면 저 안전원부터 싸 죽인다 하고요. (참 A)

한 번은 또 그 시 보안서에 올빠시라고 소문난 보안원이 있었어요. 예술 영화에서 악독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 이름이 올빠시예요. 그래서 그 보안원을 우리는 올빠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보안원을 막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막 불만이 반발심이 막 있었는데, 집에 가던 중간에 누가 살해했어요, 보안원을. 그러니까 그 반항심이 있던 중에 한 사람이겠죠. (참 B)

(3) 수동적·회피적 저항

또 다른 저항의 형태는 무관심이나 책임 기피, 충성심 외해 등의 수동적 반항이다. 과거에는 명절이나 국가적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면, 이제는 강요되지 않은 한 충성 행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정부가 핵을 개발하든 미사일을 쏘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내 가족이 먹고 살아가야 되고 내 가족이 굶지 말아야 되고 내 가족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

서 정부하고 일단 담을 쌓고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인공위성 올라갔다 뭐 하나 좀 터지고 행사랑 마지 못해서, 그 강아지 모가지 끌려가듯 끌려나가서 행사 겨우 참가하지만 절대 호응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격해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참 P)

이따금씩 뭐 행사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참가를 안 해요. 경축 보고 대회라든가, 무슨 수령님 서거 몇 돌씩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사람들이 안 와요. 옛날에는 그 꽃다발 증정을 하잖아요. 보천보 기념탑에 올라가서 또는 영생탑에 가서 꽃다발 증정을 하는 것도 (이제는) 이것도 올라 안 가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2천 원을 내든지 중국 돈 5원 내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충성심을 그냥 평가를 한다니까. 그게 완전히 형식화된 그런 거예요. (참 S)

자살이나 탈북 등의 수동적 저항 양상은 제도적 억압이라는 북한의 현실에 대립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도피하는 회피 저항(avoidance protest)으로 분류될 수 있다.¹⁵⁾ 그러나 체제 변혁 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회피성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저항의 동력이 상실되고 북한 내부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4)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¹⁶⁾의 관행

농담이나 야유, 조소, 은유적 표현과 같이 사적인 관계에서 은밀하게 확산되고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저항적 발화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은닉 대본은 북한 주민 사이에 일상화된 관행으로 관찰된다. 스코

15) 제임스 스코트는 피지배계급의 하부정치를 분석하면서 저항의 한 형태로 수동적인 회피 저항을 언급하였다. James Scott,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5), p. 245.

16) 권력자의 시선을 피해 피지배자들이 막후에서 구사하는 언어, 몸짓, 관행에 대한 스코트의 용어이다.

트(James Scott)에 의하면 집단적 은닉 대본은 발화점을 만나면 폭발적 반란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¹⁷⁾

옛날에 불평불만을 입으로 뱉지 못하던 거를 이젠 그냥 장난으로, 농담, 북한에서는 농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맨날 내래, 맨날, 이런 식으로요. (참 P)

북한 선전에 “장군님께서서는 쥐기밥(주먹밥)에 쪽잠을 자시면서,” 이런 계장마당에서 똑같이 회화가 돼요. “야, 너 쪽잠에 쥐기밥을 먹어야 돈 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습우화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런 형식으로 하고요. (참 A)

(5) 정책에 반하는 외화 선호 현상

고난의 행군기 이후 일반 주민이든 간부계층이든, 필요한 물자는 모두 장마당을 통해 조달되었고, 상당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돈주들이 나타났다. 그러자 북한 정부는 2009년 5차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축적된 개인 자산을 일시에 몰수하려 했으나, 이 조치는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¹⁸⁾ 당국의 정책에 배신감을 느낀 주민들 간에는 달러화와 위안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그래도 좀 머리가 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외화벌이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달러가 중하고 달러가 영구불멸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최근에 달러를 못 쓰게 한다고 1년 전에 또 지금 한창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도 사람

¹⁷⁾ James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90), pp. 202-203.

¹⁸⁾ 북한 정부는 2009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2010년 3월 18일 계획재정부장 박남기를 총살형에 처했다.

들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참 J)

2019년도에 탈북한 연구참여자 I는 당국에서 내화를 쓰도록 종용함에 따라 평양시의 경우 “이제 일체 다 북한 돈을 쓰려고 하며 중국 돈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달러화와 위안화, 엔화 등이 더 널리 쓰이고 있음을 인정했다.

2) 의식 변화

(1) 자본주의 가치의 내재화

배급제의 붕괴에 따른 시장화로 ‘낮에는 사회주의, 밤에는 자본주의’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돈이 최고’라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각자도생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널리 퍼졌다. 또한 다양한 외국 상품들이 들어오고 소비자로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기대 수준은 올라가는데 충족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도 누적되었다.

북한이 이제는 완전히 돈 만능주의가 박혀 있어. 제가 말하자는 건 이거예요. 옛날에는 돈, 돈 하면 돈벌레다, 이렇게 창피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여기 사람들 못지않게, 자본주의 사람들 못지않게 돈에 대한 중요성, 가치관을 너무 잘 알아. (참 O)

욕구는 높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돈 있으니까, 돈 버니까. 대게도 먹고 싶고, 고래 상어 지느러미, 딸기도 먹고 싶고 포도도 먹고 싶어요. 내가 버는 수입에서 그거를 다 탕진하면서 하니까 수입은 줄어들고 내라는 건 많고 욕구는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P)

(2)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체제 불신 확산

재일 교포나 중국 사업자들과의 교류, 중국 러시아 등 외화벌이를 위한 외국체류, 2000년대 남북교류에 따른 한류 확산, 라디오 등 외부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이 자국 체제를 타국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내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외국에 나가서, 인터넷 보면서, 아, 내가 살던 세상은 이런데 남들은 이렇게 보고 있네? 그리고 이런 세상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왜곡을 할까? (참 T)

애가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넓은 산꼭대기에 올라간대요. 거기서 계속 남한 방송을 듣는데 산꼭대기에 약초 채취하러 가면서 듣는데요. 그 애가 저한테 “왜 통일이 안 되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는 통일을 원하는 것 같지만 통일은 남조선이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아요. 북한이 종교 말살 책동을 하는 게 다 뜻이 있어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참 I)

(3) 한류 보급에 의한 각성과 개인주의화

시장을 통해 중국과 한국 등 외국 영상물이 담긴 매체들이 널리 보급된 것도 대중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같은 한국어를 쓰는 동족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대한 충격이었다. 남한에 비하면 자신들은 마치 “개돼지, 짐승”과 같이 살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참 D, O).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도 외부문화를 차단하려는 당국의 시도에 대한 저항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영화를 그래도 좀 많이 보는데 한국 영화는 또 달라요. 모든 게 좀 비슷하고. 그러다나니까 중국 영화 봐도 북한 사회하고 대비해 보면 불평이 많아지지. 근데 한국 영화 보면 사람이 얼이 나가는 거야. 왜? 같은 동족이 너무 뛰어나니까. (중략)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 생활을 다루고 친구 생활을 다루고 사회생활이 흐르는 걸 보니까 내가 짐승이나 돼지로구나 (느꼈어요). (참 O)

한국 영화 보니까, 처음에 막 좋아서 알판을 빌려다가 보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통제하지? 여기에 대응하러니까 커튼 가리고 개를 풀어놓고 이런 소소한 대응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반사회적인 의식이 싹트는 거죠. (참 A)

당국이 필사적으로 외부사조 유입을 막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통로가 이처럼 다양한 탓에 그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인차는 있겠으나 대체로 외부문물과의 접촉은 일방적인 북한 사상교육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세대·계층별 의식 분극화

북한 시민사회 형성의 또 다른 요인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다.¹⁹⁾ 도시는 시장이 발달하고 외부문화가 더 빠르게 유입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의식격차를 지적한다.

한류 문화도 초기에 국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평양부터 들어갔

¹⁹⁾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도시화율은 2020년 62.4%, 2023년 63.2%, 2024년 63.5%로 꾸준히 상승했다.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dctChart.do?jsessionid=TB2p7oJm172do8fCa6qfz9Lzn20XSe8tlgwEDa0hEWqj1hfdnUVahks0uJZy8an6.STAT_WAS1_servlet_engine1?num=5&listNm=%EC%9D%B8%EA%B5%AC&menuId=M_01_02>.

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짝 전파돼 나갔거든요. 신의주나 회령이나 이렇게 국경을 낀 사람들은 평양 못지않게 더 강하면 강하지. 농촌 부락들이라든가 황해남도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사실은 그냥 충성밖에 모르지. (참 S)

일반적으로 유학 갔다든가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외국 갔다 와서 보는 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머리 변화가 지금은 높은 수준에서 놀아요. 간부는 또 다 아니까. 어쨌든 북한 땅에서 중앙당 가족들이나 그 계층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만한 수준의 부모들이 놀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참 I)

이처럼 지역뿐 아니라 세대별, 계층별로도 의식의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변화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의식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못 봤다’(참 U)에서부터 ‘절반쯤’(참 P), 그리고 ‘80%(참 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청년층의 경우, 정치적 무관심과 개인주의적 가치 추구 경향은 비교적 뚜렷했지만, 개인적 배경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통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요. 굳이 했다면, 통일했을 때 누구한테 제일 이득일 거냐, 통일이 됐을 때 저희는 뭔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항상 못 사니까. (참 C)

저희 나이 또래들은, 보면 90년생부터 98년생까지는 우리도 더 올라가서 더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좀 한국처럼 즐기면서 살자,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자유라는 말은 몰랐지만, 그냥 자유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아침 저녁 무슨 노예처럼 사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부모 손에서 정말 통제받으며 산 아이들은 아무리 저와 친구이고 술 먹을 때 먹어도, 그냥 국가에다 충성하고 충실하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참 M)

계층별 인식도 차이가 있다. “상층은 당의 혜택을 받고 편안히 살고 있

는데 만약 세상이 바뀌게 되면 처지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대로 계속 고수해야 된다는 자각이 많다”(참 F)는 응답도 있었고, “그네들도 좀 먹고 사는지는 몰라도 밑의 사람들 단속해가지고 살아야 돼서 너무 힘들고 불안해하고 있다”(참 K)는 시각도 있었다. 고위층 출신의 연구참여자 T의 경우, “엘리트라고 해봐야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최대한 얼음장을 걷고 있다”면서 김정은과 엘리트 계층을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4. 정부에 대한 영향

주민들의 의식 변화 흐름은 북한 당국의 대응과 방침에도 영향을 미쳤다. 월급만으로 생계가 곤란한 간부층의 충성심 약화와 이탈은 상부로부터의 지시를 부분적으로 무력화시켰다. 기강의 와해를 간파한 북한 정부의 대응은 ‘한편으로는 풀어주고, 한편으로는 조이는’ 것이었다. 즉,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법제도를 정비하여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1) 소요와 폭동 가능성을 우려한 정책 철회 및 완화

배급을 주지 못하는 국가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그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소요와 폭동을 두려워하는 북한 당국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봐줄 것으로 암묵적 합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잡아가면 사회가 유지를 못해요. 감옥이 넘쳐나요. 그리고 법관들 자체가 힘들어해요. 간부들끼리 모이면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 정도는 간부들도 말을 해요. 지금 완화가 된 거는 북한이 완화시키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북한 사회 현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 Q)

2) 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과 이행

북한 정부의 대응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조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대폭 강화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에 이어 ‘남조선 말투’ 사용을 막기 위한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을 제정한 것이다.

한류는 무조건 쳐 갈기라, 무조건 단속해서 뿌리 뽑으라, 나올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중략) 한마디로 불씨가 무서운 거야. 북한은 불길이 무서운 거 아니야. 불길은 이제 늦은 거고, 불씨가 무서우니까. 그 불씨를 애초에 차단 못하면 정권이 유지 못하니까. (참 O)

연구참여자들 중 여러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 시청의 영향으로 언어, 옷차림, 머리모양 등을 모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사상교양 강화의 주된 대상은 젊은 층임을 알 수 있다.²⁰⁾ 법제도의 강화는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그만큼 ‘반동사상문화’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북한 시민사회의 실태에 대한 탈북민의 관점을 파악하

²⁰⁾ BBC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미성년자인 중학생 2명이 불법영상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일가족을 추방했다는 내용의 내부 학습제강 영상이 공개되었다. 「북한, 한국 드라마 유포한 중학생에 수감 채우고 12년형...전례없는 처벌 강화」 『BBC NEWS 코리아』 (온라인), 2024년 1월 16일, <<https://www.bbc.com/korean/news-67931606>>.

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구체적 일반성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모종의 징후를 보여주는 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 측면에서 북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는 시민사회 형성에 강력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강제력, 설득, 상징조작과 같은 권력 수단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장기 군복무로 혁명의 ‘불씨’를 차단하는가 하면, 공개처형이라는 극한 공포의 심리적 지배로 집단행위로서의 저항 조직화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하버마스(J. Habermas)에 의하면 자율성과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이 시민사회의 일차적 특성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당·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시민사회, 또는 스코바이자(M. Skovajsa)의 정의에 의한 ‘준시민사회’(semi-civil society)²¹⁾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둘째, 구조 측면에서 자발적 모임은 유지 불가능하지만, 시민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알쌈’으로 알려진 상업집단, 친족집단, 직업집단 등을 포함하여 “국가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집단들”²²⁾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문화와 관련된 영역에서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함의한다. 북한 시장은 상인들 간, 특히 동종업계 상인들 간에 구체적 신뢰(specific trust)²³⁾ 또는 특수

21) 스코바이자에 의하면 ‘준시민사회’는 공산주의 국가의 공인된 조직으로 국가의 지배도구 역할을 했으나 체제전환 이후에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사회로 변환된 조직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북한의 직업동맹, 농민동맹, 청년동맹, 여성동맹 등의 대중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Marek Skovajsa, “Independent and Broader Civil Society in East-Central European Democratization” *Taiwan Journal of Democracy*, vol. 4/2 (2008), pp. 47~73.

22) Richard Madsen, “The public sphere, civil society and moral community: A research agenda for contemporary China studies” *Modern China*, vol. 19/2 (1993), pp. 183-198.

23) J David Lewis & Andrew Weigert,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vol. 63/4

신뢰(particularized trust)²⁴⁾가 구축되는 장을 제공하였다. 비록 혈연관계나 내집단을 초월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일반 신뢰(generalized trust)²⁵⁾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에게 공동체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신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적 맥락(가족주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변천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식인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체제변혁세력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과거 김정일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에서 지식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데 경계심을 갖고, 지식인의 사상적 동요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북한의 지식인은 체제수호세력 집단으로만 기능해 왔고 현재로서는 과거 동유럽 지식인들에게서 발견된 다른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은 채, 잠재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그러나 북한이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한 학력 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인지능력 향상은 당-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현실 간의 괴리를 인식하고 체제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다.²⁷⁾ 지식인 계층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는 북한 시민사회의 태동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1985), pp. 967-985.

24) Toshio Yamagishi & Midori Yamagishi,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vol. 18 (1994), pp. 129-166.

25) 야마기시 부부(Yamagishi & Yamagishi, 1994)는 신뢰의 범위에 따라 '특수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 신뢰(generalized trust)'를 구분하고 타인 또는 인간 일반에 대한 정보나 지식에 기초하여 상대가 신뢰할 만한 행동 경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일반 신뢰라고 칭하였다.

26) 전미영, 「사회변혁기 북한 지식인의 역할과 정치의식: 북한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1998~2008)」 『통일과평화』 제3권 1호 (2011), 336쪽.

27) 김명수,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국가-시민사회 상호작용 모델」, 512~513쪽.

셋째,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저항의 일상화와 가치관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일탈행위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공통적인 행위 양식이 되면 그것은 일탈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²⁸⁾ 일상적 저항의 목표는 지배체제 변화나 전복이라기보다 체제 내 생존 영위 및 불이익의 최소화이다. 생존을 위한 우발적 저항은 지배체제를 수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지만, 특정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사회변화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복하거나 숙청당하기 때문에, 분단구조가 저항의 정치사회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 사회는 머튼(Merton)이 정의한 아노미(anomie) 상태, 즉 일상 상황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불일치하는 긴장 상태로 볼 수 있다.²⁹⁾ 사람들의 의식은 불가역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권위주의 정부는 그에 맞는 제도적 변혁을 시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가치관 추구는 식량난 이후 출생한 세대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계층별로는 엘리트 계층, 공간적으로는 북중,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 가운데 두드러진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은 그 변화의 추세가 이미 시장경제 제도가 뿌리를 내린 남한 사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³⁰⁾

넷째, 영향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의 생존 위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북한 정부의 권위와 신뢰는 추락했고, 이로 인해 시장 통제 및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은 일정 수준에서 용인되고 있다. 정책적 철회·완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으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제정한 것으로 볼

28)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 연구』 제7권 1호 (2011), 45쪽.

29)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Simon and Schuster, 1968).

30) 이용희, 「북한 시장화가 주민 가치관 변화에 미친 영향」 『통일전략』 제20권 1호 (2020), 65쪽.

때 북한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의 신민성(臣民性)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2009년 화폐개혁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통제 불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폭동이나 반란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인뿐 아니라 간부계층에서도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권위주의 정부는 시장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여 공포에 의한 지배를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 시민사회 형성 실태에 대한 탈북민의 관점은 대중적 의식변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연구참여자들은 라디오, 한국 영화 등 미디어 보급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요구를 제기하며 자율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부정보 유입의 지속과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 시장이 공론장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북한 사회에는 친족 및 상업관계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비공식적 공동체와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 당국의 검열이 강화될수록 이에 맞서는 기술적 수단도 진화하며, 그것이 유통되는 연결망은 시장을 통해 형성된다. 다수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수가 알게 되는 상황은 비공식 담론의 공론화를 의미한다. 결국 북한의 장래는 지도자나 지배층이 아닌, 북한 사람들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자각하고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 북한 시민사회 형성과 발전의 핵심이다. 북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구조와 환경 수준은 열악하지만, 가치와 영향 면에서는 시민사회의 맹아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참고문헌】

- 하버마스, 위르겐,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2001.
- Gläser, J., & Laudel, G. *Experteninterviews und qualitative Inhaltsanalyse*, Springer-Verlag, 2010.
- Hastings, J. V., Wertz, D., & Yeo, A., *Market activities & the building blocks of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Washington: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021.
-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2003.
- Mayring, P., *Qualitative inhaltsanalyse*, Beltz-Psychologie Verl. Union, 1991.
- Merton, R.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Simon and Schuster, 1968.
- Scott, J.,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5.
- Scott, J.,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90.
- 권오윤, 「북한의 변화추진 가능세력으로서 직업총동맹의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2호, 2005, 29~51쪽.
- 김명수,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과 북한사회의 변동: 국가-시민사회 상호작용 모델」 『민족과문화』 제4권, 1996, 491~519쪽.
- 김병연, 「북한이탈주민의 비공식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 『비교경제연구』 제25권 1호, 2018, 1~28쪽.
- 김종수,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동유럽 사례와 비교」 『평화학연구』 제131권 1호, 2010, 105~126쪽.
- 안청시·김근식,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 『사회과학과정책연구』 제16권 3호, 1996, 137~161쪽.
- 우평균, 「동유럽 공산체제 해체와 북한체제 붕괴의 연관성」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2014, 35~56쪽.
- 이남섭, 「한국 ODA의 시민사회 협력정책과 시민사회지표의 활용」 『국제개발협력』

- 제3권, 2012, 55~69쪽.
- 이용희, 「북한 시장화가 주민 가치관 변화에 미친 영향」 『통일전략』 제20권 1호, 2020, 33~74쪽.
- 장경섭,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 이차 의식, 이차 경제, 이차 사회」 『현상과인식』 제18권 4호, 1995, 133~156쪽.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2호, 2005, 100~134쪽.
- 전미영, 「사회변혁기 북한 지식인의 역할과 정치의식: 북한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1998~2008)」 『통일과평화』 제3권 1호, 2011, 301~344쪽.
- 조정아,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북한학연구』 제7권 1호, 2011, 25~74쪽.
- 한승완, 「국가사회주의의 시민사회론 재고」 『사회와철학』 28호, 2014, 347~376쪽.
- Dukalskis, A., & Lee, Junhyoung, "Everyday Nationalism and Authoritarian Rule: A Case Study of North Korea" *Nationalities Papers* 48/6 (2020), pp. 1052-1068.
- Dukalskis, A., & Joo, Hyung-Min, "Everyday Authoritarianism in North Korea" *Europe-Asia Studies* 73/2 (2021), pp. 364-386.
- Heinrich, V. F. "Assessing and Strengthening Civil Society Worldwide" *CIVICUS Civil Society Index Paper Series* vol. 2/1 (2004), pp. 1-56.
- Hsieh, H. F., & Shannon, S. E.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5/9 (2005), pp. 1277-1288.
- Joo, Hyung-min, "Hidden Transcripts in Marketplaces: Politicized Discourses in the North Korean Shadow Economy" *The Pacific Review*, vol. 27/1 (2014), pp. 49-71.
- Lankov, A. N., Kwak, In-ok, & Cho, Choong-Bin, "The Organizational Life: Daily Surveillance and Daily Resistance in Nor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2/2 (2012), pp. 193-214.
- Lewis, J. D., & Weigert, A.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vol. 63/4 (1985), pp. 967-985.
- Madsen, R. "The public sphere, civil society and moral community: A research agenda for contemporary China studies" *Modern China*, vol. 19/2 (1993), pp. 183-198.
- Moretti, F., van Vliet, L., Bensing, J., Deledda, G., Mazzi, M., Rimondini, M., et al. "A standardized approach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focus group

discussions from different countri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 82/3 (2011), pp. 420-428.

Skovajsa, Marek. “Independent and Broader Civil Society in East-Central European Democratization” *Taiwan Journal of Democracy*, vol. 4/2 (2008), pp. 47-73.

Yamagishi, T., & Yamagishi, M.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vol. 18 (1994), pp. 129-166.

「북한통계 주요지표: 북한 도시화율」 『통계청 홈페이지』 (온라인), 2024년,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jsessionid=TB2p7oJm172do8fCa6qfz9Lzn20XSe8tlgwEDa0hEWqj1hfdnUVahks0uJZy8an6.STAT_WAS1_servlet_engine1?num=5&listNm=%EC%9D%B8%EA%B5%AC&menuId=M_01_02>.

한상미, 「북한, 한국 드라마 유포한 중학생에 수감 채우고 12년형…전례없는 처벌 강화」 『BBC뉴스 코리아』 (온라인), 2024년 1월 16일,

<<https://www.bbc.com/korean/news-67931606>>.

North Korean defectors' Perspectives on the State of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reconstructed Civil Society Index (CSI)

Jeon, Sun-young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civil society formation in North Korea as experienced by the research participa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19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dividual elements that make up civil society were defined by reconstructing the 'Civil Society Index (CSI)' of CIVICUS, an international civic alliance to sui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where the interview content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four dimensions of CSI: environment, structure, values, and impact. This study employed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interviews. The results show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trol and regulation are acting as a strong impediment to the formation of civil society. However, coupled with the inflow of external information and the state's failure to resolve the food crisis, trust i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has been declining, and changes in North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have reached an irreversible level. North Korean defectors' perspectives on the current state of civil society formation in North Korea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hanging public consciousnes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n market evolving into a public sphere is predicted to be

relatively high. Although the structure and environment for forming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seem to be unfavorable, significant changes are being observed in terms of values and impact at a level that can be seen as sprouts of civil society.

Keywords: North Korean civil society, CIVICUS Civil Society Index (CSI),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everyday resistance, Hallyu (Korean Wave)

전순영 (Jeon, Sun-young)

승실평화통일연구원의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와 북한』(2024), 『남북의 통합과 인문적 시야』(2021), 주요 논문으로 「한국 개신교계 대북 민간교류협력의 방향성 제안: SDGs 이행을 중심으로」(2022), 「탈북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과 지원방향」(2023) 등이 있다.

일반논문

독일 통일 여론의 변화와 세대*

: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일을 이뤘는가?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독일에서도 시기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변하고,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있었을까? 독일 사회에서도 통일에 대한 여론이 변화했으며 세대 간 차이도 존재했다. 이 글은 독일에서 통일 여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최근 한국의 통일 여론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 의견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먼저 서독에서는 냉전적 긴장과 대립이 심했던 1960년대 안보 위협이 커지자 통일보다 평화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안보 위협이 해소되고 경제 불황이 발생하자 경제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었다. 다음으로 1990년대 통일된 독일에서는 통일이 가져올 이익이나 부담에 대한 여론, 통일 독일 정체성에 대한 여론에서 젊은 세대의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즉, 독일에서도 안보 위협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론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세대 간 의견차이가 커지는 시기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최근 3년간 통일 여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면서 민족주의적 통일 인식은 감소하고,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했고 여기에 세대 간,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이익이나 통일의 부담에 대해서는 세대차이보다는 소득 수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299>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상세한 심사 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준과 이념 성향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여론의 변화와 세대 간 차이는 독일의 1960년대와 같은 외적인 안보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독일 통일, 여론의 우선순위, 통일의 이익, 지역 정체성, 세대 차이

I. 서론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학술적, 정치적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만 특징적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흐름이자 보편적 현상인지 논의가 이어지며, 해외의 세대에 관한 연구와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한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¹⁾

세대 문제와 세대 간 차이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의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자 20대와 30대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일반 국민도 남북관계에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었지만,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이 멀어지는 모습이 뚜렷했다.

2023년 현재 20~30대의 28.2%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1.2%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30의 39.3%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원주: 개마고원, 2022);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9); 바비 더피, 이영래 역, 『세대 감각: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는 법』 (서울: 어크로스, 2022); 진 트웬지 지음, 이정민 역, 『제너레이션: 세대를 무엇인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23).

그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20대의 42.9%, 30대의 45.9%만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해 다른 세대에 비해 협력 인식이 낮았으며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20대가 29.3%, 30대는 25.2%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²⁾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의견 차이의 특징은 무엇이며,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 의견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통일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높던 2018년과 낮아진 2023년을 비교해 MZ 세대의 통일의식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연구에서는 2018년에는 MZ 세대들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만족하는 경우에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 경향을 보였고, 다른 세대들의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통일 필요성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23년에는 소득 수준이 높고, 정치성향이 중도인 MZ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는 경제 상황과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기성세대는 정치성향에 따라 통일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³⁾

통일에 대한 견해는 경제, 소득,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역 차원의 국가 간 대립, 경쟁, 위협과 같은 지정학적 상황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세대 간 인식의 변화 역시 단기적인 특정 세대의 특성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더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산물이지 않을까? 즉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국내적인 정치,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지 국제적인 지정학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지, ‘세대변화’는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의 산물인지 보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2) 김병로, 「북한에 대한 인식」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79~84쪽;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33쪽.

3) 김성희,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191~193쪽.

최근의 통일 인식 변화와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독일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처럼 냉전으로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도 세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독일에서 세대 문제가 주목받은 것은 통일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00년대였다. 먼저, 한편으로 ‘세대 간의 투쟁’을 강조하며 구세대와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흐름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독일만의 정치적 문제로 보기보다 고용, 노동 불안정성 문제 등 유럽의 젊은 세대가 경험 중인 좀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는 흐름도 있었다.⁴⁾

독일에서 세대 문제를 독일만의 정치적 문제로 보았건, 더욱 일반적인 범 유럽적 사회현상으로 이해했건, 독일은 통일이라는 거시적인 지정학적 변화를 이룬 ‘이후에’ 다시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와 격차의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이었다.

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부상한 세대론은 통일이라는 거시적,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사회 내부의 세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통일 여론 변화, 특히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식 차이의 원인을 이해해 보는 것이다.

독일과 한국 사회는 냉전 갈등으로 분단되었다는 역사적 유사성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하지만 독일이 유럽 지역 전반의 화해, 동서독 통일, 유럽 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간 반면,

4) 전상진,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독일 세대논쟁의 88만 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1호 (2010), 127~150쪽.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국가 간 경쟁이 지속되며 화해, 통일, 지역 협력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변화 과정은 현재와 미래의 남북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사례는 통일 이전인 1950~60년대 냉전 시기의 여론 변화뿐 아니라 통일 과정인 1990~2000년대의 여론, 나아가 통일 이후인 2010~2020년대의 여론 변화까지 약 70년간의 긴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거시적인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한국은, 독일 사례를 통해 통일 과정 전체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 변화가 뚜렷해진 오늘날, 한국의 경험을 독일 사례에 반추해 봄으로써 이를 단기적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독일 통일 과정을 두 시기로 나누어 여론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냉전 시기인 1950~60년대 서독의 통일 여론을 분석함으로써 냉전 초기 서독과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 통일 정책 변화가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1990~2000년대에 통일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의 통일 여론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통일을 이룬 후 어떤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각 쟁점에 대해 정치, 세대, 성별 등에 여론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연구는 한국의 최근 여론 변화에서 세대, 이념, 정치, 소득, 주변국 인식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독일의 통일 여론 변화가 한국 사회의 최근 변화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려 한다.

II. 동방정책 전후의 통일 여론: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와 데탕트 필요성의 대두

독일의 여론 변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살펴봐야 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4강에 의해 분할 점령된 독일은 미·소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1949년에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서독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담당하에서 서유럽의 경제 복원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독에 대해서는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대립 정책을 취했다. 동독 정부는 소련 관리하에서 동유럽 국가들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었고, 1950년대에는 동서독과 동·서 유럽 간의 분단이 점차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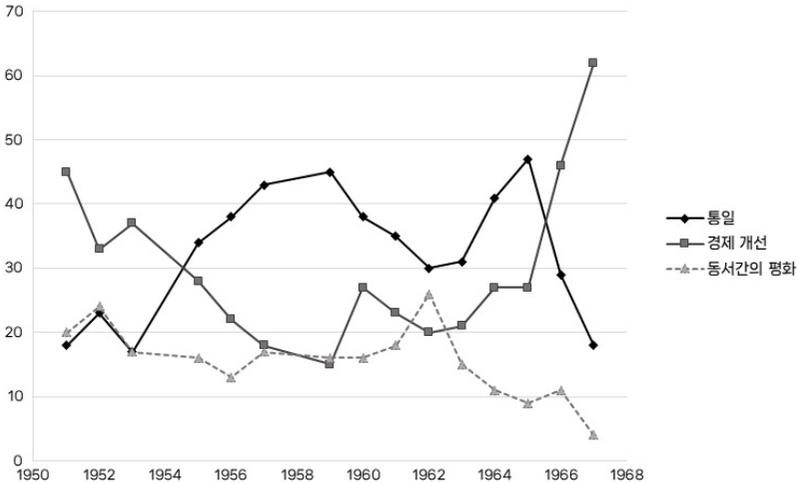
유럽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동서독 분단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독일인들의 통일, 지정학 문제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론조사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한 여론조사 자료는 어렵듯이 동서독 분단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1950~60년대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보이는 것처럼 1950년 서독에서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에서 재건하기 위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점차 경제가 개선되던 1950년대 내내 통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점차 상승했다(1952년 20% → 1959년 45%). 이는 단순히 경제보다 통일이 더 중요해졌다는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당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정부(1949~1963)가 동독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분단을 인정하지 않고서 2차 세계대전으로 상실한 독일의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를 지지하는 통일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1950~60년대 독일의 통일, 평화, 경제 관련 여론의 변화



* 출처: Institute for Demoskopie Allensbach (1967), *Wiedervereinigung und die Verhältnisse in Ostdeutschland*, p. 1.

그런데 1960년대 초반부터 여론의 변화가 나타났다. 1961년 8월 베를린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 독일의 분단은 더 분명하게 현실화되었고 동서독 간의 교류나 이동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베를린 장벽의 설치로 독일의 분단이 비로소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의견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독 정부의 방침을 따른 통일이 당장은 쉽

지 않고 냉전과 분단이 현실화되었으며, 통일은 장기적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1961년에는 소련이 핵실험을 실시했고, 1962년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는 등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사이의 냉전 갈등과 위협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안보 위협과 갈등이 고조된 1962년에 동서독의 통일이 중요하다는 여론은 하락하고 동서 간의 평화가 우선이라는 여론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잘 알려진 신동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데탕트 외교였다. 안보 위기를 겪은 이후 서독 정부는 동독, 소련, 동유럽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동서독 간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민간·경제 교류를 지속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긴장 완화를 우선 시하고 교류협력을 시작하자 통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다시 상승하는 한편, 평화가 우선한다는 여론은 다시 하락했다.

그런데 거대한 지정학적 긴장을 겪은 독일이 데탕트를 통해 우선 큰 긴장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하자,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분단을 해소하는 과제가 다소 장기적인 과제로 여겨지며 통일의 우선성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것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소 이후에는 평화의 필요성도 마찬가지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거시적·지정학적 과제의 시급성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신 물가, 임금, 주거, 일자리, 실업 문제 등 문제를 해결해 경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급격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서독은 1966년 이전 시기의 고도성장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⁵⁾ 1966년부터는 경제 상황

5)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5), 140쪽.

개선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950~60년대 독일의 사례는 서독에서 통일 정책이 서방 정책에서 동방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장기적인 교류협력 정책이 등장하는 과정, 통일 여론과 평화 여론의 상호 관계, 그리고 긴장을 완화해 동서독 관계가 안정되자 국내의 경제 문제의 우선성이 커지는 모습 등 오늘날 한국의 여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여러 참고점을 제공해 준다.

즉, 경제가 호황이고 힘에 의한 우위 정책을 취하던 아테나워 정부 시기에는 통일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고, 베를린 장벽의 수립, 쿠바 미사일 위기과 같은 안보 위협이 고조되자 평화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으며, 안보 위협이 해소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평화와 통일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경제의 우선순위가 상승했다. 통일, 평화, 경제의 우선순위는 안보 상황, 정책 환경의 변화, 경제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했던 것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동방정책이 추진되기 직전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독일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1952년부터 1959년까지의 여론 변화에 따르면, 독일의 분단이 현실화되고 유럽 차원의 동·서 냉전이 심화되던 당시 독일 시민들은 독일 통일보다 소련과의 안보 갈등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 소련과의 안보 갈등과 독일 통일 중 더 중요한 문제는?

조사시기	1952. 7	1953. 7	1954. 10.	1958. 1	1959. 4
안보	51	52	59	53	55
통일	33	36	27	33	30
미응답	16	12	14	14	15

* 출처: Allensbach(1967), p.20.

또한, 다음의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독일 시민들은 본격적인 동방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도 동독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으며 2차 세계대전 영토 상실을 인정하고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오데르나이세(Oder-Neisse) 선을 국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아 아데나워 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6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국경과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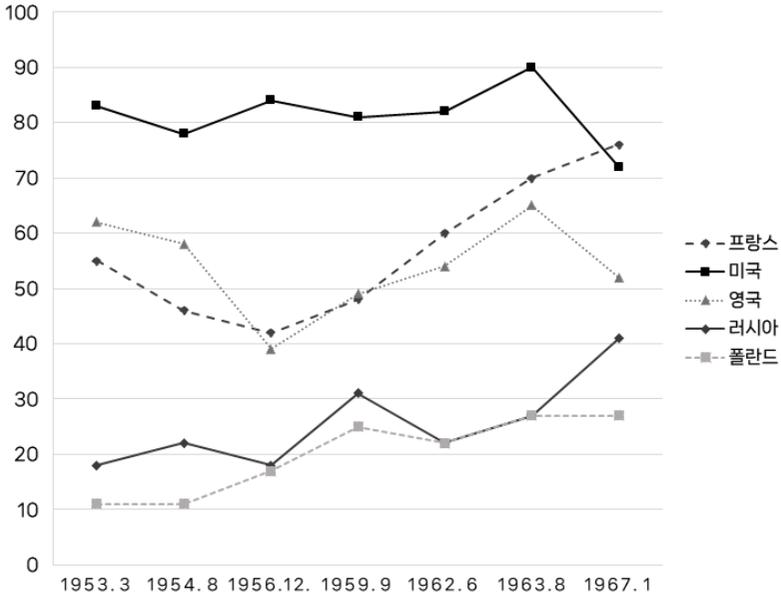
<표 2> 동독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야 하나?

	1955. 12	1958. 11	1964. 1.	1964. 4	1967. 3
불인정	62	63	69	70	54
인정	9	12	11	9	20
모름	29	25	20	21	26

* 출처: Allensbach(1967), p.27.

동방정책 직전의 서독 여론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주변국 간 협력 인식의 변화 과정이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보이듯이 독일의 외교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 중요성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동서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아데나워 정부가 교체되는 1962-63년 전후 국제협력 인식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국 중 유럽 내 협력의 중요성, 특히 프랑스와의 협력 필요성이 점차 증가했고, 동서 분단 문제를 푸는 데 소련과도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림 2〉 독일은 가급적이면 다음 중 어떤 나라들과 협력해야 하는가?



* 출처: Allensbach(1967), pp.49-50.

결국,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 동방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의 여론 변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냉전 초기 아데나워 정부에서 서유럽 우선의 독일 정책이 추진된 배경의 여론(동독 불인정, 분단 및 영토 상실 불인정)이 확인되며, 베를린 장벽 설치와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지정학적 위기와 안보위협 문제를 소련 및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직접 풀고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증가했다.

이런 여론 변화가 바로 동방정책이 추진된 배경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독일의 외교 정책은 다소 방향을 전환해 분단이 영구화되기 전에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하려는 인식이

등장했다. 1972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정부는 모스크바 조약, 베를린 4강 합의, 동서독 기본조약 등을 체결했고, 동서독 및 동·서 유럽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동서독 간 단절이 회복되어 교류협력이 지속되었다.

동방정책의 결과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주민들의 교류와 같은 시급한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도입되자, 역설적이게도 통일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졌다.

특히 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들이 낮아지자 1978년에 서독 국회는 독일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 실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즉, 서독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분단의 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반공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고, 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에 참여 준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교육의 가치와 지향이 점차 변화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1978년의 독일 문제에 대한 서독 교육부의 교육 지침(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1978. 11. 23)이다.⁶⁾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하고 동서독 교류협력은 지속하는 한편,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을 지속하며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교육으로나마 독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한 셈이다.

1970년대 후반에도 서독은 지속적인 안보 위협을 겪었고 세계적인 냉전도 지속되었다. 즉, 70년대 후반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배치하며 군비를 증강하자 안보 위협을 느끼고, 소련과

6) 김학재, 「독일의 통일 교육 사례」, 원광대학교 시민교육사업단,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 교육』 (파주: 양서원, 2021), 80~81쪽.

군축 대화를 지속하되 핵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서독과 서유럽에 핵 무기를 배치한다는 ‘이중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소련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1979년 12월 아프간을 침공했으며, 이로써 미·소 관계는 악화되고 미국은 전략무기협정(SALT II) 비준을 유보하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도 불참했다. 1980년 폴란드에서 자유 노조 설립 시위가 시작되었고, 1981년 레이건(Ronald Reagan)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 강경 정책을 취한 것도 미·소 관계 악화와 경쟁 지속의 요인이 되었다.⁷⁾ 냉전의 종식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나 가시화되었다.

서독의 냉전 시기 여론 변화는 한국의 통일 여론 변화를 이해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서독에서도 대결적인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큰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안보 위기가 해소되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등 지정학적, 경제 환경의 변화가 ‘통일’과 ‘평화’, ‘경제문제’에 대한 여론의 우선순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런 변화를 인식하는 국민의 ‘주변국 협력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정책의 방향도 변화시켰다.

이 중 1961년 베를린 장벽 수립,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미·소 간의 외교와 대화는 주로 초강대국 간 냉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변화는 외부의 강대국 간 냉전과 긴장해소 노력이 서독의 정책과 여론 모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유럽 지향적 정책으로부터 동유럽과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동방정책으로의 전환은 서독 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프랑스, 영국뿐 아니라 소련과도 직접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 여론의 변화는 주변국 정세 변화에 대한 서독 정부와 국민의 판단이

7)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218~219쪽.

상호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1966년 경제 불황의 경우는 온전히 서독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보기 어렵지만 주로 서독 내부의 경제 상황 변화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 개선 문제로 여론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것은 당장의 시급한 안보 위협 해소와 경제 불황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여론의 변화 모두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통일’, ‘평화’,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미·중 간 경쟁과 안보 위협, 국내 정책의 변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과 여론의 변화, 그리고 주변국 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복합적으로 확인해 상호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Ⅲ. 통일과 유럽 통합:

동·서 차이에서 세대 차이가 된 통일 과정과 결과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통일 이후 독일에서 경험한 여론의 변화와 그 특징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동방정책이 추진된 약 20년 후 독일은 여러 안보 위협과 위기를 거쳐 실제로 통일을 이루었다. 이런 통일 과정에서 독일 시민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통일의 어떤 문제들이 여론의 주요 관심사였을까? 통일의 장단점, 통일의 이익과 부담, 통일과 정체성의 문제, 동독 체제에 대한 인식, 주변국에 대한 인식들에 세대 간, 정치적 차이는 없었을까? 20년간 교류협력이 진행된 이후에 통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거시적인 지정학적 변화이고 큰 사회변화였다. 그리고 통일의 여러 쟁점과 측면에 대해 다양한 여론의 차이가 나타났다.

잘 알려진 것처럼, 통일 초기에는 긍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만프레드 쿠홀러(Manfred Kuechler)의 통일 직후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통일에 대한 지지는 78% 수준이었고, 이는 점차 상승해서 동서독 간 공식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에는 85%에 달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높은 긍정적 여론이 있던 통일 초기에도 나이에 따라(서독 주민 중 34세 이상 78%, 34세 미만은 67%)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기민당 지지 81%, 사민당 지지 72%)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서독 주민들보다 동독 주민들의 긍정적 응답은 더 높았다. 동독 주민들은 나이와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90% 이상이 기쁘다고 응답했다. (34세 이상 92%, 34세 미만 90% 기민당 95% 사민당 93%).

통일 과정에서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 문제는 통일의 실질적 부담에 대한 것으로서, 한 여론조사는 “서독 주민들이 어느 정도 희생할 준비되어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물었다. 조사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기민당 지지층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⁸⁾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여론이 훨씬 많았는데, 통일의 부담에 대해서는 통일을 추진한 정당의 지지층, 그리고 주요 지지층이었던 세대의 여론이 더 높았던 것이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세대 간, 젠더 간, 지역 간, 혹은 정치적 의견 차이가 있었을까? 독일 통일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좀 더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독일 일반사회조사(1991~2018)와 퓨리서치센터

⁸⁾ Kuechler, Manfred, “Road to German Unity: Mass Sentiment in East and West Germany”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56, No. 1 (Spring, 1992), pp. 57-61.

(Pew Research Center)의 통일 20주년 특별 여론조사 등이 있다.

먼저 통일 직후인 1991년과 20년 후인 2009년에 통일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퓨리서치센터의 특집 보고서를 보면, 1991년에는 서독 주민의 79%, 동독 주민의 89%가 통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20년 후인 2009년에도 여전히 구 서독 주민들의 77%, 구 동독 주민들의 81%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⁹⁾ 통일이 좋은 것이라는 기본적인 쟁점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18~29세) 통일 결과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젊은 세대의 85~86%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이는 오히려 50대 이상보다(서독 77%, 동독 79%)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다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1989-90년 통일 과정과 속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일 과정과 속도가 적절했는지는 ‘통일을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응답(50%)과 ‘너무 빨리 이뤄졌다’라는 의견(46%)이 반반이었다. 그런데 1991년 당시 여성들의 경우(58%) 남성들(47%)에 비해 다소 빨리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상황이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독인들의 67%가 통일로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동독의 63%는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통일 결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유지되는 가운데, 세대 간, 남녀 간, 동서독 주민 간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렇듯,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몇몇 여론조사들을 통해 독일 통일 이후 통일 자체, 통일의 결과, 통일 과정, 주변국 관계와 안보 환경, 민족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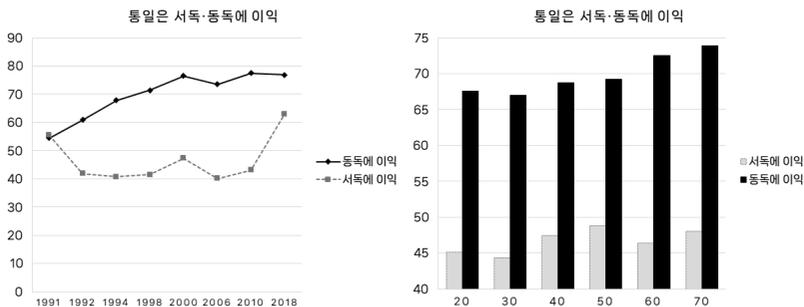
⁹⁾ The Pew Global Attitude Project, “Two decades after the wall’s fall: End of communism cheered but now with more reservations”, (Washington, D.C. 2009), p. 45.

성과 지역 정체성의 분야에서 세대, 지역, 성별에 따른 차이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의견 차이의 양상과 변화 과정을 좀 더 일관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적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독일 일반사회조사 (ALLBUS/GGSS) 자료다.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자료를 제공하는 이 설문 조사 자료에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 통일에 대한 10여 개의 설문 문항 자료를 포함한다. 이 자료를 ‘통일의 이익’, ‘통일의 부담’, ‘통일과 정치·사회적 변화’, 그리고 ‘통일과 정체성 변화’라는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먼저 통일 직후 독일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면, 통일이 가져온 이익에 대해서는 동서독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독일 일반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다음 <그림 3>에서 보이듯이, 통일이 서독과 동독 중 어느 편에 더 이익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독

<그림 3> 통일이 동·서독에 이익이라는 의견의 연도별, 세대별 변화



* 출처: German General Social Survey (1980-2018)¹⁰⁾

10) 그림 3부터 그림 6까지의 자료들에서 왼쪽의 그래프에는 시기에 따른 여론의

에 이익이라는 의견보다 동독이 더 이익이라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서독이 이익이라는 의견 역시 1990년대에 비하면 2010년 이후에 점차 상승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를 띠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대별 차이의 경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통일이 ‘동독에 이익’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40~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다른 젊은 세대보다 통일이 서독에도 이익이라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심화된 동서독 상호 체제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첫 10년간 서독이 동독에 상당한 지원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 이후 삶의 조건이 향상될 것이라는 동독의 기대와 동독 역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서독의 인식을 상호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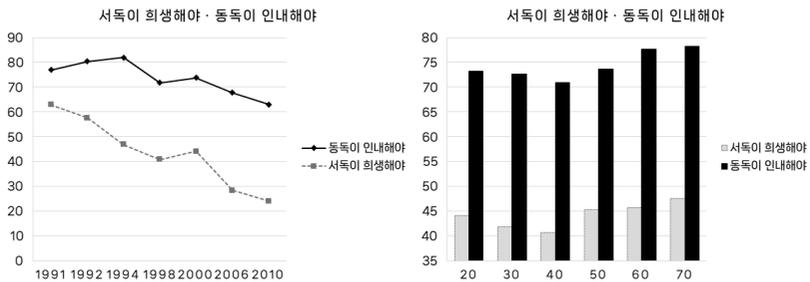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서독이 더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과 동독이 더 인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그림 4>에서 보이듯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의 추세를 보면 “서독이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은 통일 직후에는 높았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동독이 더 인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통일 초기에 높았다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노력에 대한 인식은 첫 10년이 지난 이후에 점차 사라져간 것을 알 수 있다.

단 여기에 약간의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되는데,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서독이 더 희생해야 한다는 질문과 동독이 더 인내해야 한다는 질문 모두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변화를, 오른쪽 그래프에는 각 응답에 대한 1991~2018년 전 기간의 자료를 세대별로 나누어 긍정 답변 비율을 표시하였다.

높아졌다. 20~30대도 긍정 응답이 가장 낮은 40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의견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양측의 희생과 인내에 대한 인식은 줄어들었으며 사회경제적 조건이 더 안정된 세대에서 희생과 부담에 대한 인식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서독의 희생과 동독의 인내에 대한 시기별, 세대별 의견 차이



* 출처: German General Social Survey (1980-2018)

통일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컸던 만큼, 통일 이후 기대와 다른 현실과 당장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서독 주민의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은 여타 조사들에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서독지역 주민들에게서 통일 이후 동서독이 함께 성장하고 있고, 큰 차이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만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했다. 구동독 지역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두 지역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다. 하지만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동서독이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만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했다(서독 주민 : 2010년 36%→2014년 41%, 동독 주민 2002년 6%→2014년 23%). 지역 간 발전 차이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었던 셈이다.¹¹⁾

11) Winkler, Gunnar,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Vereinigung 1989 vis 2016*

다음으로 독일 통일이 동독의 체제 전환 과정이었기 때문에 동독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들이 있다. 동독의 어려움에 대한 독일 사회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동독 주민들이 “과거에 슈타지(Stasi, 동독 비밀경찰)에서 일했는지에 관해 묻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질문과 “동독에 대한 체제전환 압력이 너무 크다”라는 질문이 있다. 슈타지에서 일한 과거를 그만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고(1991년 33%→2018년 67%),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청년층에서도 이런 견해에 공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들은 과거청산 문제가 통일 초기에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40~50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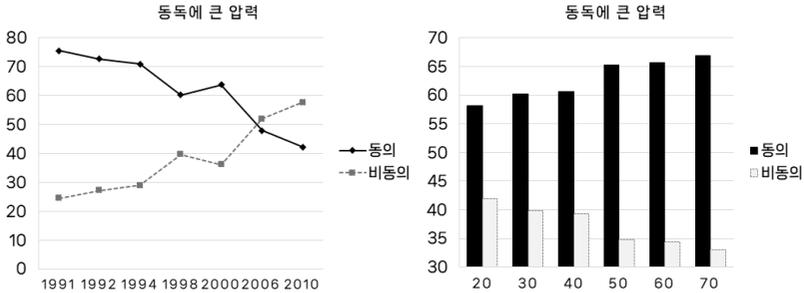
그리고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체제 전환 과정이 동독에 너무 큰 압력”이라는 의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큰 압력이라는 의견은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체제전환이 동독에 큰 압력이라는 의견에 더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주의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잘못 이행되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60대 57%, 70대 61%). 과거의 사회주의를 경험한 중장년층일수록 부정적 경험에 따른 우려나 상당 기간 지속되는 지역적 차이에 대한 인식, 러시아와의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과거의 서독, 동독 정체성이 아닌 통일된 독일 정체성이 커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Bernau, 2016) pp. 46-54. 그림 1.11 “독일통일에 대한 생각”, 그림 1.18 “삶의 영역에서 더 나아진 것과 나빠진 것” 참조.

〈그림 5〉 체제전환은 동독에 큰 압력이라는 의견에 대한 시기별, 세대별 의견 변화



* 출처: German General Social Survey (1980-2018)

독일 통일이 유럽 통합과 함께 이루어졌고, 특히 2004년 유럽 확대 과정에서 동유럽 통합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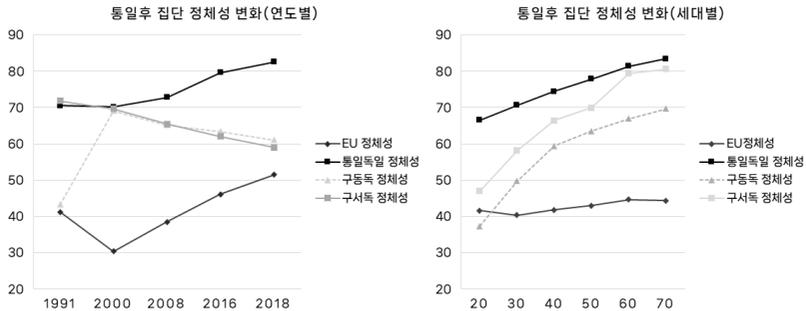
이런 과정이 반영되어 독일 이외의 대부분 유럽국가는 ‘자국 민족 정체성’을 지녔다는 응답이 77~90% 정도로 ‘유럽’ 정체성보다 훨씬 높은 것에 비해, 독일 시민들은 1/3 정도인 33%가 유럽 정체성을 믿는 특징이 있다(서독 35%, 동독 25%).¹²⁾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통일 독일 정체성과 통합된 유럽 지역 정체성에도 동서독 주민들 간, 세대 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 일반사회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그림 6〉에서 보이듯이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 독일 정체성과 함께 EU 정체성이 커지고, 구 동·서독 정체성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나

12) 독일 다음으로 ‘유럽 정체성’ 응답 비율이 높은 건 프랑스 23%, 스페인 15%, 이탈리아 12%, 영국 7%, 슬로바키아 13% 순으로, 독일 시민들의 유럽 정체성이 프랑스보다도 약 10%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The Pew Global Attitude Project, “Two decades after the wall’s fall: End of communism cheered but now with more reservations”, p.58.

이가 많을수록 독일 정체성이나 EU 정체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집단 정체성에 대한 동일시가 더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림 6〉 통일 이후 독일의 시기별, 세대별 집단 정체성 변화



* 출처: German General Social Survey (1980-2018)

2017년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동서독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앞선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는 다소 다른, 서로의 다양한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동질성이 커졌는가 하는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50% 정도가 긍정 응답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긍정적(14~44세) 답변(60~65%)을 보였고 60세 이상의 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답변을 보였다. 장년층은 통일 당시 30대였던 이들로서 동·서독 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여전히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젊은 세대들은 통일 당시 17세 미만으로서 통일이 이뤄지고 사회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들로서 옛 동서독 경험보다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의 경험과 정체성이 더 길었던 세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¹³⁾

지금까지의 독일 사회조사 자료의 통일 이후 여론 변화를 정리하자면, ‘통일의 이익’, ‘통일의 부담’, ‘통일과 정치·사회적 변화’, 그리고 ‘통일과 정체성 변화’라는 분야에서 모두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독일의 통일은 전반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독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라는 의견이 높아졌다. 하지만 통일 직후 동서독의 이익, 희생, 인내의 비대칭성과 균형에 대한 여론 차이가 있었고 동서독 격차를 완화하면서도 독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가야 하는 압력 아래에서 동서독 주민들 간, 세대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더 안정된 중장년 세대가 통일 전반에 관한 관심을 지속하면서 젊은 세대보다 동독의 어려움에 더 공감했고, 통일 독일 정체성과 EU 정체성 또한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이후 지정학 인식 및 주변국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통일된 독일은 더 평화로운 지역 환경을 만들어 냈을까? 독일 시민들은 통일 이후 가까운 주변 국가인 프랑스(47%), 미국(37%), 영국(17%)과 먼저 우호적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1950년대의 국제협력 인식보다 프랑스와의 협력 인식이 더 증가했고, 영국과의 협력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인들은 다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27%), 이라크(21%), 러시아(19%)로부터 지정학적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¹⁴⁾ 통일된 독일은 주변국들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고, 통합된 유럽의 정체성을 고양시킨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협은 좀 더 멀어진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¹³⁾ McCarthy, Niall, “German Unity? Share of respondents who find that the east and west have grown to become one nation” (Statista 2017).

¹⁴⁾ The Pew Global Attitude Project, “Two decades after the wall’s fall: End of communism cheered but now with more reservations,” pp.65-66.

즉 독일은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약 70년에 걸친 통일 과정을 통해 지정학적 안보 위협의 갈등선을, 분단된 베를린 내부에 있던 동서독 국경 장벽에서 통합된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경계선으로 이동시킨 셈이다.

독일 통일은 여전히 성공적인가? 마지막까지 남은 문제는 지역 간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약 90년간 동서독 간의 1인당 소득과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컸던 기간은 통일 직전 10년인 1980대부터 통일 당시인 90년이였다. 하지만 이 차이는 통일 10년 후인 2000년부터 다시 줄어들며 최근에는 동독 지역의 소득과 기대수명이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확인된다.¹⁵⁾

2019년의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통일은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90%가 긍정 답변을 하여 여전히 통일 자체에는 긍정적 여론이 대다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동서독 주민들 모두 삶의 만족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⁶⁾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는 국제질서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은 동서독뿐 아니라 동·서유럽 및 국제 사회와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국제 협력 수준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민족주의 경향도 상승했고, 구동독 지역에서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AfD의 지지가 높아지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이다.¹⁷⁾

15) Ibid. p. 27.

16) Pew Research Center, “European Public Opinion Three Decades After the Fall of Communism” (2019), p. 13.

17) 이러한 지역 차이는 사실 2차대전 이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고, 냉전 시기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통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 직후 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지역 간 차이가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이에 따라 지역 간에 경제적 행동 방식, 노동 참여, 젠더 역할 등을

결국 독일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통일이란, 한 민족국가의 영토 내부에 형성된 외부로부터의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해 외부로 옮겨 멀어지게 하는 매우 장기적인 국가간 관계의 변화 과정인 동시에, 한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지역, 세대, 정치적 차이나 내부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통합해야 하는 지속적인 국내 통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에 정리하였듯이, 독일 통일 과정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이 서로 교체되며 정책 방향이 전환된 긴 과정이었다. 아데나워 시기에는 서독의 국제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NATO와 서유럽 통합에 기반한 힘의 정치를 추구했던 시기이고, 서유럽 통합 기반이 형성되며 서유럽 우위가 확보되며 동-서 갈등이 심화되자 브란트 정부와 슈미트(Helmut Schmidt) 정부는 긴장완화를 위한 동방정책을 추구했다. 동-서 유럽의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이 지속되다가 서유럽의 우위가 더 분명해졌을 때 동독에서는 민주적 개혁이 일어났고 콜(Helmut Kohl) 정부는 서독 체제로의 통일을 추진했다. 통일 이후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슈뢰더(Gerhard Schröder) 정부는 독일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동유럽 통합을 추진했으며, 메르켈(Angela Merkel) 정부는 유럽 통합 확대를 안정된 독일을 중도 보수 지향으로 이끌어 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내 AfD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자 솔츠(Olaf Scholz) 정부는 국내에선 우익 포퓰리즘을 완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의 정부는 각각 전임 정부가 취했던 정책이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때 다른 방향의 정책을 취했으며, 서방정책은 자국

포함한 행동 양식의 차이들이 수렴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Becker, Sascha O. et al. "The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of Germany: Rethinking a Natural Experiment Interpretation of the Enduring Effects of Communism" *IZA Discussion Paper* No. 13032 (2020), pp. 27-28.

과 서유럽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 동방정책은 주변국과의 격차가 지나친 갈등과 단절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서독 진보-보수 정부들의 정책 방향 전환은 완고한 보수로부터 급진적인 진보로까지 변화 폭이 다소 컸고 논란도 컸지만,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이후의 정책 전환은 대체로 중도 진보-중도 보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 독일 통일 정책의 변화 과정

총리	통일 정책 방향	서유럽의 성장, 동서관계	미국과의 관계
아데나워	완고한 서방정책	서유럽-동유럽의 기초 형성	의존적, 지도적
키징어	긴장완화 동방정책	서유럽의 성장-동유럽 성장	의존적, 자율적
브란트-슈미트	공존협력 동방정책	서유럽의 성장과 우위	의존적, 자율적
헬무트 콜	실용적 서방정책	서유럽의 우위 확고-동유럽 붕괴	의존, 주권 회복
슈뢰더	실용적 동방정책	EU enlargement, 하르츠 개혁	의존, 자율적
메르켈	중도적 서방정책	긴축정책, 난민 수용	자율적, 지도적
솔츠	중도 진보적 유럽정책	AfD, 러-우 전쟁, 에너지 전환	자율적, 지도적

IV. 한국의 최근 세대별 통일외견 특징

지금까지의 독일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정학적 변화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 안보, 경제, 주변국 협력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익, 부담, 정체성, 체제 전환에 대해 세대 간, 정치적·지역적으로 의견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독일에서도 통일 이전에 상황에 따라 여론의 우선순위 변화가 나

타나고, 통일 과정에서도 세대 간, 정치적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차이는 주로 무엇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국제정세 변화와 안보 위협, 국내 정책 대응 방향의 변화, 경제 상황 변화와 주변국 협력 인식 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의 세대 차이, 정치적 태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1~2023년간의 통일의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통일, 평화, 경제문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 문항은 없기 때문에,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설문 문항 답변 중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답변과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답변을 대리 변수로 활용하였다. 두 응답에 세대, 정치적 차이가 있는지, 주변국 위협인식이나 경제 상황 인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그동안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이 세대별로, 정치적으로 나뉜 현상이 여러 번 확인되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통일의식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일차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념과 세대 차이, 그리고 경제 상황 인식에 따른 통일 이유의 차이이다.

다음의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정치적 지향이 보수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할 가능성이 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개인의 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민족주의적 이유로 통일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가능성이 컸다. 2021년과 2023년의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 힘 지지층이 민족주의적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적었다.

반대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이가 어릴수록 찬성할 가능성이 컸다. 이념 성향 변수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지 정당의 경우 2021년에만 국민의 힘 지지층이거나 무당층일수

록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컸다.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에서는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할수록 긍정적 답변을 할 가능성이 컸다.

즉, 최근에 민족주의적 이유의 통일 필요성 여론이 감소하고,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한 배경에는 나이와 세대 차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인식이 증가한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2018~2019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위협인식이 감소한 것에 비해 지난 5년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상승해왔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답변은 2019년 30.8%로부터 점차 높아져 2020년 40.8%, 2023년에는 47.5%로 상승했고, 평화 위협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한 의견은 2017년 22.7%로부터 상승해 2021년에는 46%, 2022년에는 44%, 2023년에는 36.4%에 달했다.¹⁸⁾

2023년에는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민족주의적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컸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북한이 위협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할 가능성이 컸다.

이렇듯 민족주의적 이유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과 우선 전쟁 위협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세대 차이, 그리고 정치적 차이가 대체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통일 여론에는 개인의 경제 만족도와 중국 위협인식이, 전쟁 위협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에는 북한 위협이 관련되어 있었다. 단 2023년에는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이념, 지지 정당, 북한 위협의 통계적 영향이 사라졌다.

18) 김학재, 「주변국 관계 인식」 『2023 통일인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23), 137~138, 316쪽.

〈표 4〉 통일의 이유에 따른 민족주의, 평화주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이념	0.136* (0.080)	-0.171** (0.082)	-0.004 (0.091)	-0.089 (0.088)	0.008 (0.087)	-0.011 (0.087)
나이	0.209*** (0.045)	0.239*** (0.047)	0.233*** (0.051)	-0.128*** (0.004)	-0.017*** (0.049)	-0.034 (0.046)
경제 만족도	0.226** (0.098)	0.203** (0.095)	0.114 (0.105)	0.147 (0.107)	-0.150 (0.101)	-0.139 (0.100)
북한 위협	0.076 (0.178)	-0.163 (0.171)	0.296 (0.199)	0.420** (0.205)	0.321* (0.188)	0.045 (0.179)
중국 위협	0.281 (0.173)	-0.028 (0.164)	0.424** (0.202)	0.231 (0.202)	0.257 (0.182)	-0.297 (0.185)
지지 정당	국민의 힘 -0.338* (0.192)	-	국민의 힘 -0.369* (0.220)	국민의 힘 0.389* (0.217) 무당파 0.350** (0.178)		-
cut1	1,861	1,035	2,070	1,202	0,181	-0,170
log-likelihood	-764.565	-759.780	-678.634	-664.988	-693.895	-737.738
n	1145	1139	1,122	1144	1138	1122
	*지지 정당은 민주당 기준					

*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1, 2022, 2023)

이렇게 세대-정치적 차이와 위협인식이 서로 다른 통일의 이유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주변국에 대한 협력 인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위기가 커질수록 주변국과 협력 구도가 변화하므로, 주변 국가들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분석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

면, 미국에 대한 협력 인식은 2007년 53.2%로부터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86.3%, 2023년에는 82.5%에 달하며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협력 대상 인식이 높은 국가는 북한인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인식도 높지만, 협력 대상으로도 인식하는 민족 간의 특수관계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2015년에는 35.2%로 다소 낮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2018~2019년에는 각각 54.6%, 54%에 달할 정도로 상승했다가 남북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3년에는 37.7%만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2013~2017년에는 22~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그 이후 하락해 2023년에는 10.6%만이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협력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본과의 협력 인식이 2019년 이후 다소 상승하여 2023년 현재 21.8%가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협력 인식은 위협 인식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낮았던 2018~2019년에는 북한에 대한 협력 인식이 높았고, 최근 중국의 위협인식이 증가하며 중국에 대한 협력 인식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¹⁹⁾

한국의 이러한 주변국 인식은 이념, 세대, 지지 정당과 위협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를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조사 항목에 대한 답변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세대, 이념, 지지 정당, 그리고 주변국 위협인식의 상관관계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표 5>에서 보이듯이 첫 번째로 협력 대상 인식이 가장 높은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인식, 그리고 정당 지지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었다. 2021년에는 민주

19) 김학재, 「주변국 관계 인식」, 140~142쪽; 김병로, 「북한 인식」, 61쪽.

당 대비 국민의 힘 지지층이 더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2021년과 2023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 2022-23년에는 개인의 경제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최근 협력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협력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컸다. 2022년에는 보수 이념 성향일수록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2023년에는 국민의 힘 지지층과 무당파가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2021년에는 이념 성향이 보수일수록, 국민의 힘 지지층일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컸다. 북한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협력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컸고 이념 성향이 보수인 경우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민주당 대비 국민의 힘 지지층이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며, 2022년에는 미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 지난 3년간 보수 이념 성향일수록 협력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고, 2021, 2022년에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 힘 지지층이 협력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즉,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는 최근 상황에서,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북한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인식이 상관관계가 높았다. 반대로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진보적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 요인, 그리고 연령대가 상관

관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북한 인식에서 세대 차이, 이념 성향, 지지 정당 차이가 뚜렷이 관찰되며, 북·중에 대한 위협인식이 최근 일본에 대한 협력 인식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협력 대상 인식’에 비해 최근에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특히 북한과 일본에 대한 협력 인식과 정치적 입장 차이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최근 3년간에 한정된 자료에 기반한 분석인 만큼 다소 일

〈표 5〉 주변국 협력 대상 인식

	미국			일본			중국			북한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이념	0.034 (0.102)	0.006 (0.117)	0.261 (0.111)	0.073 (0.120)	0.305*** (0.103)	0.019 (0.102)	-0.281** (0.110)	0.067 (0.126)	0.026 (0.131)	-0.365*** (0.082)	-0.344** (0.083)	-0.184** (0.087)
나이	-0.106* (0.058)	0.070 (0.065)	-0.122* (0.062)	0.018 (0.067)	-0.033 (0.058)	-0.043 (0.056)	0.007 (0.062)	0.035 (0.072)	0.107 (0.073)	0.175*** (0.046)	0.198** (0.047)	0.120** (0.047)
경제만족도	0.154 (0.127)	0.221* (0.135)	0.375** (0.129)	0.190 (0.143)	-0.135 (0.118)	0.103 (0.120)	0.032 (0.136)	0.087 (0.145)	0.053 (0.151)	-0.067 (0.099)	-0.237** (0.095)	0.115 (0.100)
북한위협	1.048*** (0.209)	0.415* (0.240)	0.938*** (0.223)	0.859*** (0.331)	-0.069 (0.211)	0.888*** (0.268)	0.068 (0.403)	0.900** (0.402)	-0.414 (0.613)	0.516 (0.310)	-0.576* (0.349)	-0.398 (0.361)
중국위협	0.878*** (0.196)	0.173 (0.222)	0.289 (0.214)	0.886*** (0.326)	-0.189 (0.207)	0.956*** (0.271)	0.048 (0.255)	0.142 (0.342)	-0.088 (0.358)	0.467** (0.195)	0.117 (0.229)	-0.082 (0.229)
지지정당	국민의힘 0.778*** (0.258)	-	-	-	열린민주당 1.984** (0.948)	국민의힘 0.718 (0.253)	국민의힘 -0.479* (0.279)	-	-	국민의힘 -0.623*** (0.195)	국민의힘 -0.301* (0.182)	무당파 -0.334** (0.161)
	무당파 0.530** (0.211)									무당파 -0.444*** (0.159)	정의당 -0.815* (0.423)	
cut1	-0.2329	-0.619	0.506	3.613	1.857	2.753	0.878	2.504	2.631	-0.946	-0.974	0.426
log-likelihood	-524.153	-447.659	-487.04	-420.741	-541.762	-567.156	-468.681	-398.535	-393.61	-756.239	-760.633	-731.166
n	1145	1142	1122	1145	1141	1122	1145	1141	1122	1145	1142	1122
	*지지 정당은 민주당 기준											

*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1, 2022, 2023)

반화하긴 어렵지만, 정치적 이념과 지지 정당, 그리고 세대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의견, 주변국 위협인식과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중장년층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도 있지만, 협력 대상이라고 인식한다. 이와 달리 나이가 어릴수록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을 지지하는 편이며,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기존의 민족주의적 통일의견이 대다수이다가,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가 교착되고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군사갈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북한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최근의 통일에 대한 세대별 여론 변화는 통일 독일 이후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의 변화나 세대별 의견 차이의 양상이라기보다는, 독일에서 동방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에 안보 갈등이 점차 심화되던 시기와 통일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높아졌던 역사적 조건과도 상당한 유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의 통일 과정은 냉전시기에 베를린과 동서독 내부에 있던 지정학적 갈등이 탈냉전 이후엔 독일 외부로 멀어지면서 주변국들과는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먼 국가들로부터 지정학적 위협을 느끼게 된 과정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은 여전히 가장 가까우면서도 영토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주변국들과의 긴장과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유럽에선 독일의 국력이 가장 컸지만, 동북아에선 남북한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생각하면 남북한의 분단이 더 구조적이고 변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셈이다.

추가로 독일 통일 과정 중 약 10년간 다양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쟁점에서 나타난 사회 내부의 차이도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

다. 통일의식조사 조사 항목에도 ‘통일의 이익’, ‘통일의 경제적 부담’, ‘북한 체제 변화 가능성’, ‘국민/민족 정체성’ 항목이 있고 이에 대한 세대 차이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단 60대 이상은 40~50대에 비해 감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이념 성향이 있을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 이념 성향일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통일의 경제적 부담’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로 30~50대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이념 성향일수록 경제적 부담을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꼽는 모습을 보였다.²⁰⁾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이념 성향일수록 긍정적으로 답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세대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한국의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는 통일의 이익, 통일의 부담,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들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통일의 이익과 부담, 동독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게 세대 차이와 정치 성향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보유했음에도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지역격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상대적인 경제력과 북한과의 격차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논쟁과 인식의 차이는 상당히 클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지정학적 상황에

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24), 234-237, 248쪽.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역시 통일 정책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변화로 보인다.

V. 결론

이 글은 1950년대부터 1990년의 통일을 거쳐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까지 독일에서 통일과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고, 세대 간의 차이는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 통일 사례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독일 통일의 성공사례와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좋은 통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시기별로 통일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것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최근의 많은 여론조사와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한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조건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을 지속하며 점차 자국 중심적인 시각이 커지고, 서로 멀어지면서 상대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관점이 형성되고 있다.²¹⁾ 지정학 위기 지표를 통해 볼 때,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의 위협인식이 증가한 상태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수준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미·중 경

²¹⁾ Smeltz, Dina et al. "A Cost of Conflict : Americans Turn Inward",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23); Smeltz, Dina et al. "Pivot to Europe: US Public Opinion in a Time of War"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22); Yougov, "most important issues facing the US", (2009. 1 ~ 2024. 3.); Pew Research Center, "Americans' Top Policy Priority for 2024: Strengthening the Economy" (February 2024).

쟁의 지속으로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²²⁾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가 간 관계에서 2018~2020년에는 상호 갈등이 덜 했지만, 2020년에 한일, 미·중, 남북, 한중 갈등이 심해진 이후 미·중은 다소 멀어졌고, 남북 갈등도 매우 높은 시기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상당한 갈등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²³⁾ 2023년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64.8%, 북핵 위협인식은 82.5%이며²⁴⁾ 국민의 75.2%가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변한 조사 결과도 있다.²⁵⁾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북·중·러 협력이 심화되고, 한·미·일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 다수다.²⁶⁾

이렇게 안보 위협과 지정학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의 안보문제가 중요해지고 경제와 민주주의 문제의 우선순위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에서 1939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우선순위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안보 위협이 커지는 시기, 경제 위기가 발생한 시기에는 각각 안보와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해지고, 안보 위협이 해소되고 경제 위기가 해결된 조건에서는 민주주의를 포함한 다른 의제들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²⁷⁾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1950년대 여론

22) Geopolitical Risk Index <https://www.matteoiacoviello.com/gpr_country.htm>.

23) 김규철, 「한국 국민의 통일인식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가?」 『통일과 평화』 14집 2호 (2022), 60-61쪽; 박성준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 Foresight』 제6호 (2021), 16쪽.

2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통일인식조사』, 249, 268쪽.

25)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조사팀, “2023년 국민 통일인식조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2023); 한국리서치, “2023 대북인식조사 현안 및 대북정책 방향성 평가”, 「한국리서치 주간 리포트」 제229-2호 (2023).

26) 이기동, 최용환,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no. 242 (2023), 12-13쪽.

27) Heffington, Colton et al. “The “Most Important Problem” Dataset (MIPD)” *Conflict*

변화에서 나타난 현상이 미국의 여론 변화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도 최근 지정학 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1~2023년 사이에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면서 통일이 어렵다고 보고, 평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세대, 정치적 차이로 반영되었다. 지정학적 위협인식 증가는, 단지 남북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전반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협력 인식을 높였으며,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북한과 중국,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협력 인식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서독과 유럽에서 1950~70년대에 악화된 안보 상황이 통일 여론의 감소와 평화·안보 여론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듯, 최근 몇 년간의 국제정세 악화는 한국에서 안보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통일 여론이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변국 전반의 체제 간 경쟁·대립 구도가 심화된 상황도 여론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로 조금 더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체제 간 경쟁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부의 세대 차이가 정치적·경제적 차이로 굳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매우 장기적인 국가간 관계의 변화 과정을 다루는 외교적 과정이며, 동시에 한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세대, 지역, 정치적 차이나 이주민을 통합하기 위한 지속적인 민주적 소통과 합의의 이행과정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통일과정은 민주적 정치의 결과 상황에 따라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이 서로 교체되며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던 긴 과정이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의 선택은 이전 정책의 결과를 보완하는 민주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전임 정부가 서방정책을 취해 자국과 서유럽의 역량을 우선시하여 성과를 내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국과 격차와 갈등이 단절로 이어지면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하는 동방정책을 채택했다. 한국의 통일 정책도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한 민주적 선택에 따라 성과를 내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독일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지정학적 상황과 국내 여건, 두 가지 분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일은 냉전시기 베를린이 분단되어 있던 상황으로부터 탈냉전과 통일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점차 멀어지고 주변국들과는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한국은 최근의 중국 부상 이후 미중경쟁과 체제 대립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독일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 대비 독일과 프랑스의 국력이 더 커졌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중국 대비 작은 상황이고 북한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6%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더 신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통일의 미래에 대해 경제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정치-외교적으로도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실있는 정책들의 조합을 모색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범수 외,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24.
- 바비 더피, 이영래 역, 『세대 감각: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는 법』, 서울: 어크로스, 2022.
-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서울: 소나무, 2005.
- 신진욱,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원주: 개마고원, 2022.
-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서울: 문화과 지성사, 2019.
- 진 트웬지 지음, 이정민 역,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23.
- Winkler, Gunnar,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Vereinigung 1989 vis 2016*. Bernau, 2017.
- 김규철,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가?」 『통일과 평화』 제14집 2호, 2022, 39~78쪽.
- 김범수, 「통일에 대한 인식」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26~57쪽.
- 김병로, 「북한에 대한 인식」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74~95쪽.
- 김성희,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180~195쪽.
- 김학재, 「독일의 통일 교육 사례」 원광대학교 시민교육사업단,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 교육』, 파주: 양서원, 2021, 75~102쪽.
- 김학재, 「주변국 관계 인식」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132~157쪽.
- 박성준,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국제전략 Foresight』 제6호, 2021, 1~21쪽.
- 이기동, 최용환, 「한미일 대 중러북의 연대 수준 비교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no. 242, 2023, pp. 1-17.

전상진,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독일 세대논쟁의 88만 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1호, 2010, 127~150쪽.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조사팀, “2023년 국민 통일의식조사”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2023. 8. 9.

한국리서치, “대북인식조사 현안 및 대북정책 방향성 평가,” 한국리서치 주간 리포트 제229-2호, 2023. 5. 10.

Becker, Sascha O. et al. “The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of Germany: Rethinking a Natural Experiment Interpretation of the Enduring Effects of Communism” *IZA Discussion Paper* No. 13032, 2020, pp. 27-28.

Heffington, Colton et al. “The “Most Important Problem” Dataset (MIPD)”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6(3) (2019), pp. 312-335.

Institute for Demoskopie Allensbach, *Wiedervereinigung und die Verhältnisse Ostdeutschland*, 1967.

Kaase, Max and Bauer-Kaase, Petra, “German Unification 1990-1997, The Long, Long Road”, in Lachapelle, Guy and Trent, John eds.,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Identity*, 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2018, pp. 153-180.

Kuechler, Manfred, “Road to German Unity: Mass Sentiment in East and West Germany”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56, No. 1 (1992), pp. 53-76.

Liu, A. Y., Li, X., & Fang, S., “Unpacking “the West”: Divergence and Asymmetry in Chinese Public Attitudes Toward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52(1) (2023), pp. 119-133.

Pew Research Center, “Americans’ Top Policy Priority for 2024: Strengthening the Economy” February 2024.

Pew Research Center, “European Public Opinion Three Decades After the Fall of Communism” 2019.

Pew Research Center, “Two decades after the wall’s fall: End of communism cheered but now with more reservations” The Pew Global Attitude Project 2009.

Smeltz, Dina et al. “A Cost of Conflict: Americans Turn Inward”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23. 10. 4.

Smeltz, Dina et al. “Pivot to Europe: US Public Opinion in a Time of War”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22. 10. 20.

McCarthy, Niall, “German Unity? Share of respondents who find that the east and west have grown to become one nation” Statista, 201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자료 2021, 2022, 2023.

Germ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1980-2018).

Geopolitical Risk Index <https://www.matteociacoviello.com/gpr_country.htm>.

Yougov, “most important issues facing the US”, (2009. 1 ~ 2024. 3.)

<<https://today.yougov.com/topics/politics/trackers/most-important-issues-facing-the-us>>.

Generations and Changes of Public Opinion on German Unification : Comparing the Perception of Korean Unification with the German Case

Kim, HakJa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id public opinion about unification change over time in Germany, and were ther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generations? By analyzing 7 decades of changes in the public opinion of unification in Germany and comparing it with the recent changes in Korea, this article attempts to identify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generations. First, during the 1960s when Cold War tensions and confrontations were severe, security threat increased and peace was prioritized over unification. As security threats declined and economic recession occurred, economic issues became a priority instead. After the unification in the 1990s, public opinion polls on a unified German identity including the benefits and burdens brought by the unification reflected a lack of positive perception on this matter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erefore, in German case, the public issue salience has changed in the context of security threats or economic crise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of opinion appeared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Secondly, Public opinion shifts over the past three years in Korea similarly shows that threat perceptions from North Korea and China increased the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on the notion of unification as reducing the

threat of war. Additionally, threat perceived from North Korea and China in turn increased the perception of a need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Korea, however, the perception of the benefits and burdens of unification differed by the income level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more so than generational differenc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recent generational differences in public opinion about Korean unification are similar to Germany's case in the 1960s where external security threats were observed.

Keywords: German unification, public issue salience, benefits of unification, regional identity, generational differences

김학재 (Kim, HakJa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통일과 평화 여론 조사, 독일 통일, 국가별 사회경제적 특성의 비교 역사 사회학적 분석이다.

일반논문

도명학 소설의 자본주의 비판과 가치 교환의 (불)가능성

나준성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이 글은 도명학의 소설이 문제시하고 있는 가치의 교환 (불)가능성과 자본(주의)에 대하여 드러내면서, 또한 그의 소설이 북한의 현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상황에 관해서이든 남한의 상황에 관해서이든 탈북작가의 소설에서 자본은 늘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도명학 소설에서 자본은 단지 소설의 소재 차원에 머무르거나 소설가가 보고 경험했던 당대 북한 사회의 현상이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치기보다는, 자본주의(자본화)가 갖는 고유한 생리와 그것이 내포하는 여러 문제들을 짚어내는 데에로 나아가 있다. 또한 이 글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에서 같은 값으로 교환되는 것이 사실은 같은 값으로 교환될 수 없는 것임을 도명학의 소설이 폭로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등가 교환이라는 표면적 의미와 부등가 교환이라는 실제적 의미 사이의 격차가 드러나는 순간에 아이러니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도명학은 자신의 문학이 '탈북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북한 현실문학'이라는 용어에 더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은 그의 소설이 아이러니를 통해 자본과 가치의 교환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듯, 아이러니가 갖는 의미를 통해 그는 북한을 떠났지만 그의 소설은 북한을 떠난 적 없었음을 또한 상기하고자 한다.

주제어: 도명학, 북한 현실문학, 탈북문학, 자본(주의), 가치 교환, 아이러니

I. 들어가며—‘탈북문학’과 ‘북한 현실문학’

‘탈북자’라는 단어도 그렇지만,¹⁾ ‘탈북문학’이라는 용어는 그것보다도 더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사를 보면 ‘탈북문학’이 주로 사용되기 이전에 ‘탈북자 문학’²⁾이 있었고, ‘코리아’³⁾/‘탈북’⁴⁾/‘한민족’⁵⁾ 디아스포라 문학, ‘탈북 작가 소설’⁶⁾, ‘탈분단 문학’⁷⁾, ‘다문화 소설’⁸⁾과 같은 용

-
- 1) ‘귀순자’, ‘귀순용사’와 같은 용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률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 되어 지금까지도 공공영역에서 쓰이고 있다. 공공 부문이 아닌 사회 일반에서는 비슷한 뜻을 가진 ‘탈북자’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다. 해당 법률의 제2조(정의)의 1항은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다. (국가정보법령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2) 고인환, 「이방인 문학의 흐름과 방향성 - 이주노동자와 탈북자의 삶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들』 2008년 가을호 (2008.8.); 김효석, 「경계境界’의 보편성과 특수성: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2009);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40집 (2009);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韓國文學論集』 제51호 (2009);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5);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호 (2016).
 - 3) 고인환,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양상: 정철훈의 『인간의 악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7호 (2010).
 - 4)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39호 (2012);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김유경의 청춘연구를 중심으로」 『語文論集』 제57집 (2014).
 - 5) 고인환·이정선, 「탈북 디아스포라 고려인 소설 연구」 『국제어문』 제70집 (2016).
 - 6) 권세영, 「탈북 작가의 장편 소설 연구」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는

어들이 주로 쓰이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 ‘탈북문학’이 박덕규(2015)⁹⁾에 의해 제안되고, 그리고 김영미(2017)¹⁰⁾·배개화(2017)¹¹⁾·서세림(2017)¹²⁾ 이후로는 주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가 되었다.

박덕규(2015)는 1990년대 이후 탈북 현상이 급증하면서 그것이 “문학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명을 요구했으며”, 이에 “분단에서 통일을 지향해 가는 이 시기 문학을 탈북문학이라 명명¹³⁾”하고 있다. 이때 탈북문학은 “분단된 한국을 시공간적 배경에 두고 분단의 모순을 직시하고 과거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 오던 종래의 분단문학의 관점을 넘어서야 할 때¹⁴⁾”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용어였으며 이는 ‘탈북문학’이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모 양상과 한국문학의 관계 정황을 해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고안된 것임을 보여준다.

문, 2015); 연남경, 「탈북 여성 작가의 글쓰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1집 (2017).

- 7) 류찬열, 「분단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시·공간의 확장과 깊이」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8집 (2015).
- 8) 최남건, 『2000년대 한국 다문화소설 연구 - 이주민 재현 양상과 문학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강영훈, 「2000년대 전성태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담론의 변주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65권 (2016).
- 9)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통권 35호 (2015).
- 10) 김영미, 「탈북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9집 (2017).
- 11) 배개화, 「탈북의 서사화와 문학적 저널리즘 -장진성과 지현아의 탈북 수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17호 (2017).
- 12) 서세림,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68호 (2017).
- 13)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89쪽. 이 논문이 발표된 2015년 이전을 살펴보면 직전 해인 2014년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시’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었다. 박덕규·김지훈, 「북한이탈주민 시의 “그림자(Shadow)” 형상화 문제 - 장진성의 시집과 수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7집 (2014) 참조.
- 14)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91쪽.

이때 ‘탈북문학’은 1970년대 이후 임헌영이 제안하여 담론화된, 해방 이후 남북 분단에 관한 문제를 다룬 소설을 뜻하는 ‘분단문학’의 이후 형태(‘포스트-분단문학’)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의 문학에 해당한다.¹⁵⁾ ‘냉전 이후’, ‘분단 이데올로기 이후’라는 환경(milieu)에서 분단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이 ‘탈북문학’인 것이다.

한편 ‘탈북문학’을 ‘분단문학’과 짝패를 이루는 항이라고 보는 논의와는 조금 다른 결에서, 김효석(2009), 한수영(2012),¹⁶⁾ 권세영(2015) 등은 월남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기 문학이 과거에 전개되었던 월남문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논의했다. 그리고 방민호(2017)는 이 맥락에서 탈북문학을 분단체제, 분단문학의 네 번째 형태로 보면서 ‘분단문학의 4기’로 정의하였고, 이를 분단문학의 또 하나의 현상이라 봄으로써 ‘탈북문학’ 및 그와 비슷하게 경합했던 이 시기 문학들은, 분단문학이라는 단일한 대타항만을 갖는 것에서부터 보다 나아가 문학사적으로 계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⁷⁾ 용어나 범주 자체보다는 물론 그 범주를 실제로

15) ‘탈북문학’이라는 용어가 제안되기 이전의 연구인 이성희(2009)에서는 ‘새로운 분단문학’과 같은 용어 맥락이 이미 드러나 있었는데, 박덕규 소설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이 논문은 ‘탈북자의 삶을 다룬 소설’을 “2세대 분단 소설”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세대 분단소설’이 6·25, 현대사 등의 역사적 상처와 ‘이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세대 분단 소설’은 현재 진행형인 탈북자들의 아픔과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 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1호 (2009), 263~264쪽 참조.

16) 한수영,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 『사상과 성찰』 (서울: 소명출판, 2012), 432~455쪽 참조.

17)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 연구의 방법」 『춘원연구학보』 제11호 (2017) 참조. 방민호에 따르면 해방 이후 6·25전쟁 종전까지의 8년 동안의 문학이 분단문학 1기, 그 이후부터 1970~1972년경까지의 절대적인 배타적 지배 구조가 각기 성립했던 시기의 분단문학이 2기,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에서 민주화를 향한 비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들의 문학을 연구사가 어떻게 명명해왔는지의 기록들 역시 그 실제의 텍스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명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이 주목하는 소설가 도명학은 그런데 자신의 문학이 ‘탈북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북한 현실문학’이라는 용어에 더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저는 북한 현실 작품을 쓸 때 화자를 탈북자가 아닌 북한 현지인의 위치에 세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컨대 북한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체제 선전을 강요하는 문예 정책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작품을 썼을가를 상상하며 펜을 잡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 현실을 담은 작품에 대해 통상 일컫는 ‘탈북문학’과 좀 구별해 ‘북한 현실문학’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북한 현실문학’이 남한에서 창작되지만 그것이 북한 독자들이 진짜로 읽고 싶은 작품이 되어 위로가 되고 깨우침이 되고 소망을 주기 바랍니다.¹⁸⁾

이것은 ‘귀순용사’와 ‘귀순자’가 이제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자’가 되어도 여전히 그 ‘벗어남(脫)’의 의미 속에 강하게 매여 있음을 증거한다.¹⁹⁾

약적 과정이 시작된 1987~1988년 또는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한 1989~1991년까지의 시기가 분단문학의 3기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4기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탈북자가 급증하며 발생하여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분단문학의 단계이다. ‘분단문학’의 시기 및 단계적 구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84~193쪽을 참고할 것.

18) 도명학, 「작가의 말」 『잔혹한 선물』 (파주: 푸른사상, 2018), 10쪽.

19) 이에 대해 이지은은 “냉전의 긴장이 가신 1990년대 후반, 남한정부는 북중, 순종과 같은 의미를 지닌 ‘귀순’이라는 말을 버리고 일견 탈이데올로기적으로 보이는 ‘북한 이탈’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으며, “‘귀순자/월남자’로부터 ‘탈북자’로의 변경에는 그들의 존재론적 전환이 암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때 ‘존재론적 전환’이란 도착지나 정착할 지점은 명시되지 않고 끝없는 ‘이탈(ex-)'의 삶만이 남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지은의 이 논의는 소설가 도명학이 무엇으로부

북한을 벗어난 사람이지만, 도명학의 문학은 ‘북한을 벗어난 사람의/사람에 대한 문학’으로 정의되는 것보다 ‘북한의 밖에서 쓰이지만 북한의 안에 대해 쓰인 문학’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도명학 소설에서는 ‘벗어남’보다 ‘벗어나지 않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도명학의 소설은 북한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북한에 있던 때를 기억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명학의 텍스트는 분명 “소설의 형식으로 떠난 땅의 기억을 증언”²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명학 소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정하늬(2017),²¹⁾ 서세림(2018),²²⁾ 배개화(2022)²³⁾이다. 이 글과의 관련성에 따라 순서를 바꾸어 검토해보면, 먼저 서세림(2018)은 도명학 소설을 장해성, 김유경, 정선화, 반디의 소설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5장에서는 도명학의 「책도둑」에 나타난 지식인 표상인 작가 주인공과 「위원장」 인물 등을 통해, “자본의 힘에 의해 시장에서 예술가와 작가의 종속의 일어나지만 동시에 예술가와 작가의 독립성도 시장으로 인해 증대되는 복합적인 현상”이, 북한 사회에서는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성의 논리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사이에도, 예술가와 작가의 독립성은 여전히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²⁴⁾

터 자신의 문학이 거리를 두고 나아가려 하는지에 관한 그 배경과 분명 겹쳐 읽힌다. 이지는, 「끝없는 ‘탈脫’의 궤적을 좇으며」, 이경 외, 『꼬리 없는 소』 (서울: 예옥, 2018), 319쪽.

- 20) 방민호, 「기획의 말」, 이경자 외, 『금덩이 이야기』 (서울: 예옥, 2017), 428쪽.
 21) 정하늬, 「탈북 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제69집 (2017).
 22) 서세림, 「탈북 문학에 표상된 지식인」 『춘원연구학보』 제13호 (2018).
 23) 배개화, 「탈북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에서의 ‘시장 경쟁’ - 김유경, 설송아, 그리고 도명학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8호 (2022).
 24) 서세림, 「탈북 문학에 표상된 지식인」, 253~254쪽.

이라는 그 특수성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정하늬(2017)는 이지명의 소설과 함께 도명학의 소설 「재수 없는 날」과 「책 도둑」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도명학 소설의 주된 서사적 전략인 아이러니를 두 작품을 통해 적실하게 짚어내고 있다. 부림소 역할에 만족하던 「재수 없는 날」의 창수가 스스로 구루마를 끌게 된 날 “주체로서의 각성”을 이루지만, 이날 결국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사이 구루마를 도둑맞는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었던 아이러니를 이 논문은 주목한다. 그 사건의 밑바탕을 이루는 소설세계의 아이러니, 즉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가져와야만 하는 가혹한 자본의 논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행해진” 것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한 「책 도둑」에서는 위원장의 책을 훔친 도둑의 정체가 아내라는 데에서 빚어지는 아이러니가 논문에서는 「재수 없는 날」의 아이러니와 더불어 설명되고 있다.

한편 배개화(2022)는 김유경, 설송아의 소설과 함께 도명학의 「거미줄 철도」와 「황해도 데미지」에 돈주와 중소 상인 사이의 경쟁을 당대 북한의 시장화 및 노동시장 형성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소설이 다루는 당대 북한의 현실을 시장 내에서의 경쟁 현상 정도로만 분석하는 데에서 나아가, 도명학의 두 소설에 나타난 상인들 사이의 계층화 현상과 북한의 권력기관을 배경으로 두었거나 특수기관 산하 무역회사에 소속된 돈주와 개인 돈주 사이에 존재하던 격차를 지적했다.

이 글 역시 도명학의 소설풍경이 그려내는 자본(주의)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위의 논문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먼저 소설의 소재를 비롯하여 소설가가 보고 경험했던 당대 북한 사회의 현상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즉 무엇을 소설세계에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소설세계에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더욱 주목한다. 또한 이 글은 그러한 형상화를 통해 그의 소설들이 자본주의(자본화)가 내포한 문제들과 자본주의(자본화)가 갖는 고유한 생리를 짚어내

고 있다는 점을 주로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은 도명학의 소설이 북한의 사회주의 내에서 같은 값으로 교환되는 것이 사실은 같은 값으로 교환될 수 없는 것임을 폭로하고 있으며, 등가 교환이라는 표면적 의미와 부등가 교환이라는 실제적 의미 사이의 격차가 드러나는 순간에 아이러니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²⁵⁾ 이 글은 도명학의 소설이 그러한 아이러니를 통해 사회주의의 부등가 교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도명학의 소설 가운데 「황해도 데미지」, 「재수 없는 날」, 「책 도둑」, 「함흥역에서」, 「잔혹한 선물」, 「꼬리 없는 소」를 주로 분석한다. 「황해도 데미지」, 「재수 없는 날」, 「책 도둑」, 「함흥역에서」는 골동품 시장, 구루마 운행, 대기숙박집, 장마당 등 북한 내의 자본주의 현상 내지는 시장화를 꾀진하게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 모티프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잔혹한 선물」과 「꼬리 없는 소」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같은 값으로 교환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가 등가 교환되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이 작품들에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비판이 아이러니를 통해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제2장과 제3장에 걸쳐 위의 작품들을 읽고자 한다.

²⁵⁾ 도명학의 소설이 가치 교환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가치 교환의 불가능성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고 보았던 이 글의 본래 시각이, 등가 교환과 부등가 교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심사자로부터 얻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었음을 밝힌다. 보다 타당한 논리를 가르쳐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I. 자본주의의 생리 비판과 ‘도둑’ 모티프

「황해도 데미지」²⁶⁾는 『해주 인력시장』이라는, 황해도를 중심으로 쓰인 탈북 작가들의 소설집에 실린 도명학의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나’, 진수, 형철 일행은 북중 국경도시 혜산을 떠나 황해도 해주와 인근 지역에서 골동품으로 되팔 만한 것을 집집마다 찾아다닌다.

북한이 골동품을 상품화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 88올림픽 때부터였다.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맞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으로 유치하고 축전 준비를 위한 외화가 절실할 때였다. 북한은 가장 빠르고 쉽고,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골동품 반출을 승인하고 축전준비기간에만 팔도록 함으로써 골동품장사의 시초를 열게 된다. 이때 대남연락소, 중앙당 통전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골동품을 사들여 총련, 중국 루트를 통해 해외로 반출하기 시작하였다. (...)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 골동품장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때에 국가기관의 외화벌이 바람속에 개인들도 합류하게 된다. 이미 골동품의 맛을 알게 된 국가기관원들은 권력기관을 등에 업고 합법적 거래에서 불법적 골동품 거래로 전환하고 귀중한 골동품자원을 닦치는 대로 팔아 넘겼다. 골동품이 돈이 된다는 것이 사회 널리 전파되면서 골동품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²⁷⁾ (밑줄-인용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해설강사로 있었던 북한연구자 강은주(2016)에 따르면 국내에서 골동품을 사들여 마진을 붙여 되파는 골동품 장사는 1996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더욱 과열되었으며 기관이 아닌 개인들도 뛰어들게 된다. 골동품을 개인이 팔고 사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²⁶⁾ 도명학, 「황해도 데미지」, 김주성 외, 『해주 인력시장』 (서울: 예옥, 2022).

²⁷⁾ 강은주, 「북한의 무분별한 고분도굴과 골동품 사기」 『北韓』 통권 540호 (2016), 84~85쪽.

의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해 국경 일대 검문을 강화하고 국경행 열차에서 보안원들이 짐 수색을 살살이 하지만 오히려 검열하는 보안원들을 끼고 (골동품은 해외로—인용자 주) 빠져나갔다.²⁸⁾ 「황해도 데미지」는 이 광기 어린 사회적 현상을 톺진하게 그리고 있다.

〈그림 1〉 「황해도 데미지」 속 인물들의 이동 경로



* 출처: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의 황해남도 자연지도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aspx?mc=AD0101&ac=A05&direct=1>

한편 이 소설은 혜산에서 출발하여 황해도의 해주를 비롯하여 벽성군, 태탄군, 웅진군(송월리) 등을 거치면서 다시 혜산으로 돌아오는 여로형

28) 위의 글, 88쪽.

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정을 그려보면 이들은 황해도의 중심인 해주시에서부터 점차 황해남도의 육지 끝자락 쪽으로 이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돈 될만한 것을 찾아 점점 더 벽지에까지 움직여 간 이 자취는, 자본이 아니던 것 예컨대 때론 자원, 때론 자연에서 나는 것들, 때론 혹은 땅 그 자체를 자본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가며 팽창해가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형상과 닮아 있다. 그런데 북중 국경지대에서 남북 국경지대에까지 온 이들은 이 벽지들도 이미 신대륙이 아닌, 누군가 한참 전에 자본화해버린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네 가지의 비-경제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이 비-경제적인 것을 자본화(자본주의 내부로 포섭)한다. 그리고 그것을 사유화하고 착취하면서 그것을 소진시키고 위기에 빠뜨린다. 그런데 이 비-경제적 조건들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국 비-경제적 조건들만이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낸시 프레이저의 ‘식인 자본주의(Cannibal capitalism)’ 또는 ‘제 살 깎아 먹기(Cannibalism)’²⁹⁾ 이론의 핵심적인 설명인데, 네 가지의 비-경제적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토지, 천연자원, 종속적인 무급·저임금 노동에 바탕을 두고 피정복민(특히 인종화된 인민)으로부터 수탈한 부의 거대한 적립”³⁰⁾이다. 이

29) 낸시 프레이저의 ‘식인 자본주의’, ‘제 살 깎아 먹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낸시 프레이저, 장석준 역, 『좌파의 길—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파주: 서해문집, 2023), 71~113쪽을 참고할 것.

30) 위의 책, 265쪽. 첫 번째 조건은 이와 같으며, 덧붙이면 두 번째 조건은 대개 여성이 수행하는 사회적 재생산에 투입되는 무급·저임금 노동, 세 번째 조건은 비인간 자연에서 비롯된 무상이거나 매우 저렴한 투입물의 거대한 적립, 네 번째 조건은 국가와 여타 공적 권력이 제공하는 공공재의 거대한 구현체에 해

‘인종화’의 문제는 낸시 프레이저의 자본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³¹⁾

「황해도 데미지」가 그리는 골동품 자본화 열풍이 분명 착취나 수탈과 연결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낸시 프레이저의 이론을 경유할 때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것은 ‘물렁도’, ‘땡해도’와 같은 단어들이다. 북한의 골동품시장이나 골동로반들의 수탈, 자본화 행위는 서구와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기에는 그 배경도 전후 사정도 실제로 입히는 피해의 정도도 너무나 다르다. 그러나 신의주나 해주에서 온 사람들이 어수룩한 황해도 사람들의 물건을 골동품시장에 포섭하는 상황에서, ‘물렁도’와 ‘땡해도’는 단순히 착하고 어수룩한 사람을 놀리는 말이 아니게 된다. 이 표현은 황해도 사람들이 같은 인종이되 그 내부에서 더욱 ‘미시적으로 인종화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해도는 신의주에서 그리 멀지 않고, 골동품 가격도 신의주가 해산보다 비쌌다. 해산사람들은 주로 동부지역과 거래했다. 결국 신대륙마냥 착각하고 온 황해도는 이미 신의주 “골동로반”들이 한참 앞서 석권한 시장이었다. 그 틈새를 멋모르고 “뵈는 게 없는 잡놈”들이 치고 들어온 격이었다.³²⁾

신의주 “골동로반”들은 ‘나’ 일행보다 훨씬 예전에 이곳을 선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도 ‘나’ 일행은 겨우 만 달러를 중국 조선족 상인으로부터 빌려 골동품을 뒤지는 한편 그들은 “10만 불 이상 들고 오는 경

당한다.

31) 낸시 프레이저의 자본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2장의 제목은 ‘수탈 탐식가: 착취와 수탈의 새로운 얽힘—왜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제국주의적-인종주의적인가’이며, 이 장은 “자본주의는 항상 인종적 억압과 깊이 얽혀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위의 책, 73쪽.

32) 도명학, 「황해도 데미지」, 김주성 외, 『해주 인력시장』, 92쪽.

우가 태반”이다. ‘나’ 일행은 무슨 수를 써서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³³⁾ 그나마 운이 좋게 백자 하나를 헐값에 가져왔지만 그마저도 도둑맞으면서 이들에게는 일확천금의 기대가 날아갔지만, 달러를 빌려준 조선족 상인도 국경을 넘어올 수 없게 되면서 대신 갚아야 할 빚도 없어지게 된다.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어졌으니 소설은 마치 현실 같지 않은 일장춘몽식의 일화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밀천도 빌려다 쓰는 상황에서 돈을 벌겠다는 그 마음만 앞섰지 실제 골동품시장이 돌아가는 사정에 무지했던 젊은 날의 치기가 몇 잔 술과 함께 몇 대 쥐어터진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만든 것이다. 얻어맞고 물건도 도둑맞았으니 이들의 경험도 나름대로 ‘데미지’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일화는 어떠한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에는 훨씬 유쾌한 필치로 서술되고 있다.

‘황해도 데미지’는 그러므로 한 편 콩트 같은 사건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러지는 배경인 황해도와 그곳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데미지에서 더 찾아져야 할 것이다. 황해도와 황해도인을 타자로 보는 시선에서 그곳과 그들이 ‘물령도’, ‘땡해도’로 불리는 데에서 드러나는 차별의 시각도 물론 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설이 보여주는 피해란, 강탈이 아닌 구매가 되는 최저수준으로 물건값을 후려쳐버리는 타지 사람들에 의해 변변치 못한 집안 곳곳이 헤집히는 것이다. 그 풍돈은 심지어 화폐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곳³⁴⁾에서 쥐여주듯 교환되고 있다. 이 피해란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미 들쭉서진 그 집안에 무

33) 이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논의는 배개화, 「탈북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에서의 ‘시장 경쟁’ - 김유경, 설송아, 그리고 도명학의 작품을 중심으로」, 228~234쪽을 참고할 것.

34) 도명학, 「황해도 데미지」, 94쪽. “농촌에는 현금이 없고 쌀, 강냉이, 콩이나 계란 같은 것이 곧 돈이었다. 거기다 황해도 농촌사람들은 함경도나 평안도 농촌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순박한 것 같았다. ‘땡해도’니 ‘물령도’니 하고 황해도 사람을 비하하는 별명이 이래서 생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엇이 아직 남진 않았나 계속해서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을 또한 말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착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못되지 않았고, 실제로 뽕가를 얻은 것이 없어 탓하기도 어려운 ‘나’와 친구들은 그렇게 손상(damage)을 입히고 있었던 것이다. 고고학자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쓰겠다는 서투른 거짓말에도 속는 할머니가 선뜻 내준 백자는, 시골 마을의 구석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형철에게로, 다시 형철에게서 기차의 도둑에게로 옮겨 다니면서 정말로 화폐와 같이 된다.

물론 이들 일행을 자본주의의 마수로 비유할 수는 없다. 북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매달리게 된 것은 북한당국이 ‘고난의 행군’기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게 되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였다. 평양 출신 기자인 한영진에 따르면 북한에 자본주의 문화가 유입되고 시장거래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을 1990년대 중반, 살기 위해서는 직접 돈을 벌어야 했던 주민들의 격해진 민심과 그에 맞춰 북한당국이 자유시장의 규제를 완화했던 조치가 맞물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⁵⁾ 그러므로 「황해도 데미지」의 혜산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황해남도의 시골 마을을 들쭉신 것이 아니라, 살 궁리를 쫓아 북한의 끝에서 끝으로 헤매온 것이다. 이 소설은 이때가 몇 년 몇 월이었다고 서술하거나, 혹은 혜산에서 온 사람들이나 황해도에 살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얼마나 궁핍한 시대의 사람들인지를 서술하는 것 대신에, 이미 텅 비어버린 시골 마을의 벽장과 창고를 보여주고 있다.

35) “북한당국은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 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미 변화의 경향을 가진 민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90년대 중반 달라진 사람들의 의식구조이다. 북한당국은 국가가 주민들의 살림을 일일이 책임 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일단 한발 물러나 자체로 벌어들여 먹고 살게 자유시장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다.” 한영진,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변화상 - 늘어나는 자본주의 문화유입과 생계를 위한 시장거래 활기」 『北韓』 통권 429호 (2007), 129쪽.

「재수 없는 날」은 「황해도 데미지」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논의의 맥락과 서로 통한다. 「재수 없는 날」은 “힘밖에 가진 게 없”어 가난하게 살면서 그 힘으로 일을 도와주고 돈 대신 음식을 벌어들인 창수가, 대학도 나왔고 돈도 있어서 구루마를 가진 금옥과 일종의 노동 계약을 하고 음식 대신 돈을 벌게 되면서 생기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주지하듯 마르크스 자본론의 첫 번째 특징으로 제시되는, 소유자와 생산자가 분리되고 이들 간의 계급이 분할되는 단계를 우화로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소설에서 ‘자본주의의 구조’는 배경에 깔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와 접속하면서, 「황해도 데미지」에 비해 훨씬 뚜렷하게 문면 위로 드러나 있다.

금옥은 창수와 함께 구루마를 팔자 확실히 수익이 올라갔다. 자기는 주로 손님만 붙잡았다. 끄는 것은 창수 몫이었다. 금옥은 창수가 힘들든 말든 상관없이 무작정 많은 짐을 붙잡아 왔다. 그저 고삐만 당기면 되는 부림소로 여겼다. 둘이서 수익을 7 대 3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구루마꾼들은 기가 막혀 금옥을 비난했다. (...) 그래도 구루마 덕분에 배라도 불리고 집에 강냉이국수 한두 사리라도 사 들고 들어가게 돼 창수는 피착취 계급의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금옥이 역시 자기의 노동력 착취를 당연한 이치로 여기기 시작했다. 자기 덕에 창수가 먹고산다고 생각했다. 대학 시절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잉여가치법칙을 실험하고 있는 느낌이었다.³⁶⁾

창수와 금옥은 여러 구루마꾼과 경쟁하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지만 대체로 이 계약관계는 한동안 문제 없이 지속된다. 하지만 본래 배라도 볼릴 수 있는 것에 만족했던 창수는 “돈맛을 보기 시작”하자 고된 일은 자신이 다 하는데 7할이나 뺏기는 것이 차차 분하게 느껴지고, 더 큰 돈을

36) 도명학, 「재수 없는 날」 『잔혹한 선물』, 19~20쪽.

별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러던 어느 날 금옥이 다른 구루마꾼에게 맞아 얼굴이 멍투성이가 되어 구루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날 창수는 금옥의 부탁으로 홀로 구루마 영업을 하고 구루마를 끌게 된다. 사실 창수도 이날은 자신이 혼자 일을 할 테니 7:3이 아니라 5:5로 자기 몫을 받게 해달라고 말할 참에, 금옥이 먼저 제안을 해준 덕에 떼줘야 할 수수료가 훨씬 줄게 되어 기뻐다. 그렇게 이 날 하루는 예외적으로, 창수가 끌기만 하던 남의 구루마는 (거의) 창수의 것이 되면서 창수는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신이 난다.

그런데 일을 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수는 보안원에게 잡혀 어느 보안소 뒷마당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창수는 다른 구루마꾼들과 굶어 죽은 수십구의 시체를 구루마로 옮겨 산에 매장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일로 돈 대신 고급담배 세 갑을 받은 창수는 그것을 담배 장사꾼에게 팔아서 세 식구가 하루 살아갈 돈을 받았지만, 다시 올지 모르는 오늘 같은 날 그 시간에 구루마를 끌었더라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런데 창수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담배 판 돈을 모두 도둑맞게 되고, 구루마를 쓰게 해줬는데 금옥에게 한 폰도 떼주지 못하게 될까봐 취기를 이겨가며 역전으로 간다. 한 시간 뒤 도착할 열차의 손님을 기다리다 취해서 잠이 든 창수는 금옥의 구루마마저 도둑맞게 된다.

이처럼 「재수 없는 날」은 「황해도 데미지」와 마찬가지로 잠시나마 일확천금의 꿈을 꾸었다가 그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서사를 갖고 있다. 「황해도 데미지」에서 내포 작가는 이들이 얻은 것도 빚도 모두 없었고, 「재수 없는 날」에서는 구루마뿐만 아니라 담배 세 갑을 판 돈까지도 없었다. 그것은 북한에 이미 자본주의적인 인식과 자본주의적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 깊이 들어와 있으나, 제도로서의 자본주의는 결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진단일 수도 있다. 혹은 앞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

본주의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해 왔으나 실제로 남한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여왔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⁷⁾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는 도명학의 소설이 북한에서의 자본주의적 흐름과 자본화를 비판하는 것은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나, 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한의 자본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대환의 『큰돈과 큰돈』(실천문학사, 2008)과 같은 소설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자본주의 자체의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은 더욱 그러했다. 경제학자 윤소영은 냉전의 종식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게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내에 나타나는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사례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개혁정책을 들었다.³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1985년이요 덩샤오핑의 중국 개혁·개방은 그에 앞선 1978년에 제안되어 1982년부터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이것들은 패배로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소련이 해체된 1991년 12월 26일로부터 정확히 이틀 후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되고, 세 달 후인 1992년 2월에 '신무역체제'가 수립되며 그로부터 두 달 후인 4월에는 대외개방정책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던 것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패배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단히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북한이라는 시공간을 무대로 하는 소설세계가 자

37) 김영익, 「핵·미사일과 경제난: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준다」 『마르크스21』 37호 (2020.12), 60~66쪽 참조.

38) 윤소영, 『한국사회성격 논쟁 세미나(Ⅱ)』(서울: 공감, 2020) 참조.

본주의적 욕망과 수탈을 짚을 수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의 작동구조를 비판하는 것일 수 있는 배경에 해당한다.

한편 도명학 소설에서의 자본주의적 욕망에 대한 진단은 그의 소설 전반을 이루는 ‘도둑’ 모티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도둑 모티프는 「재수 없는 날」과 「황해도 데미지」 외에도 「책 도둑」과 최근작인 「함흥역에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책 도둑」에서는 중앙에서 100부만 찍어 비공개 도서로 관리하는 일명 ‘백부도서’(대개 해외문학)를 암암리에 돌려 읽는 풍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소설가였으며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던 위원장이 집안의 모든 책을 도둑맞으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배급 사정이 악화되면서 위원장의 부인은 예전에 남편의 문운이 트이면서 받았던 선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고, 급기야는 남편 몰래 그의 책까지도 모두 팔아넘긴 것이었다. 이에 소설에서 가장 주가 되는 서사였던 ‘도둑 찾기’는 허무한 결말을 맞는다.

“도둑은 바로 부인이야. 위원장 선생님 부인 말이야.”

“뭐?”

“남편이 밥도 안 먹지, 잠도 못 자지 보름이나 그러니 죽을까봐 겁나서 자수한 거지. 들어보니 그 책들을 팔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다 굶어 죽었을 뻔 했더군. 세상이 완전 개판이 됐어. 에에, 더러워서 원!”

헐! 이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별안간 둘의 입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너털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짙끔 나오고 입귀가 별나게 찌그러졌다.³⁹⁾

나와는 무관한 정체 모를 악인이 아닌,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무언가를 내다 파는 존재로서의 도둑은 「책 도둑」에서는 부인으로, 「함흥역에서」로 와서는 ‘내’가 된다. 「함흥역에서」의 주인공 ‘나’는 평남 순천의 시

³⁹⁾ 도명학, 「책 도둑」 『잔혹한 선물』, 146쪽.

멘트 공장의 노동자인데,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인 함남 장진을 방문하면서 가난한 고향 집 식구를 위해 시멘트를 빼들려 쌀과 맞바꾸었던 것이다.

장진으로 가기 위해 앞서 함흥역에 도착한 ‘나’는 그곳의 무뢰배들에게 담배와 담뱃불을 빌려주다가 그들로부터 몇 주 전 잃어버린 자신의 라이터를 훔친 도둑이라는 괜한 시비에 휘말린다. 그것은 라이터를 훔쳤다고 몰아세워 ‘내’가 가진 돈과 소지품을 모두 갈취하려는 수법이었다. 이들 무리와 몸싸움을 하게 된 ‘나’는 어느 순간 ‘노동자규찰대’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사람들에게 의해 쌀이 든 배낭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소개로 하룻밤 묵을 ‘대기숙박집’에 가게 된다. 그런데 자신을 지켜준 이들은 곧 본색을 드러내더니 흥기를 들고 인민위원회에 애국미로 가져갈 것이라며 쌀 배낭을 압수한다.

이에 자신의 배낭을 가져간 자가 규찰대원이 아니라 장마당에서 쌀 장사를 하는 사람임을 안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역전안전부로 뛰어가 안전원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다. 안전원은 ‘나’의 말을 듣고 그에게서 쌀 판 돈도 빼앗고 쌀 배낭도 회수했지만, 이내 국가재산에 손댄 죄를 물으며 쌀 배낭을 증거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향 집의 어머니가 몸이 아파 누웠는데 굶어죽을 지경이라는 ‘나’의 말에 안전원은 사정이 딱하다며 쌀 판 돈을 일부 나누어준다.

다음 날 장진행 열차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온 ‘나’는 장마당에서 쌀을 사기 위해 둘러보다가, 자신의 쌀 배낭을 그곳에서 발견한다.

그 안전원 새끼가 팔아먹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국 다 같은 도둑놈들 아닌가. 그 쌀을 팔아먹으려 조서 쓰러 오라고 부른 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어떻게 잔피를 부렸을지도 짐작이 갔다.

기는 도둑 위에 뛰는 도둑이 있고 뛰는 도둑 위에 나는 도둑이 있는 곳. 그리고 보면 나는 기는 도둑일 뿐. 내 위에 뛰는 도둑, 나는 도둑한테 먹히는

건 당연할 수밖에. 해는 떠도 낮이 없고 달이 떠도 빛이 없는 함흥역 25시는 이리했다.⁴⁰⁾

「함흥역에서」의 쌀 배낭은 ‘나’에 의해 시멘트와 교환된 이후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로 옮겨 다닌다. 배낭은 힘이 약한 도둑에서 점차 힘이 강한 도둑 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흐름은 「황해도 데미지」에서의 백자가 궁벽한 시골집의 벽장에서 뜨내기 골동품 장사꾼인 ‘나’에게로 왔다가 썩씨 좋은 도둑에게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유동성에 해당한다.

또한 「책 도둑」의 위원장 부인이 먹고살기 위한 도둑질의 가해자였듯 「함흥역에서」의 쌀 배낭과 「황해도 데미지」의 백자가 이들 두 소설의 주인공에 의해 몰래 교환한 것이거나 훔치듯 헐값에 사온 것이라는 사실은, 도명학 소설에서의 ‘도둑’이 신원미상의 타인만이 아니며 집 밖의 무서운 바깥세상의 존재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함흥역에서」의 ‘내’가 함흥역에 처음 다다랐을 때 그곳에 대해 생각했던 것⁴¹⁾과 함께 ‘내’가 도둑을 만나 오히려 도둑이라는 누명을 썼던 사건과 대비되면서 그 극적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결국 다 같은 도둑놈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때론 법을 어기고 때론 도의를 저버리며 무엇을 훔치거나 뺏아서라도 갖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묻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욕망은 도명학의 소설에서 ‘나’를 비롯한 모두에게서 발견되며, 체제 내에서는 ‘먹고사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더 어수룩한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의 것을 훔치는

40) 도명학, 「함흥역에서」, 이지명 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서울: 예옥, 2024), 114~115쪽.

41) 위의 책, 91쪽. “함흥역은 살벌하다. 타지방 사람은 자칫하다간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곳이 함흥역이다. 낮이고 밤이고 굶주린 승냥이 같은 도둑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훑어보며 먹잇감을 찾는다. 살아있는 것조차 기적적인 사회에 어딘들 도둑이 없겠는가만 함흥역은 험악해도 너무 험악했다.”

크고 작은 도둑이 된다. 생계를 위한 저마다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도둑 모티프는 소설세계를 통어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인 한편, 힘 없는 자들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더 힘센 자에게, 더 많은 “잔피를 부”리는 자 쪽으로 움직이는 자본은, 대개 더 많은 자본이 있는 곳으로 흐르는 자본의 생리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III. 사회주의의 부등가 교환에 대한 비판과 아이러니

「잔혹한 선물」은 엄동설한에 작업을 하는 돌격대원들의 이야기이다. ‘돌격대⁴²⁾’의 이름을 하고 있으며 ‘전투원’이라 불리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언 땅을 곡괭이로 파가며 하는 철길 공사이다. 당국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혹한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훈을 새겨가는 여러분⁴³⁾”이라고 이 돌격대원들을 호명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사실 돌격도, 전투도, 혹은 항일혁명 비슷한 어떤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단어들이 사실은 얼마나 텅 비어있는 것인지가 이 소설에서는 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작 주

⁴²⁾ 정광성, 「북한요지경 北 청년들 목숨 걸고 가는 ‘돌격대’ 어떤 곳?」 『월간조선』, 2023.6, <<https://m.monthly.chosun.com/client/amp/viw.asp?ctcd=&nNewsNumb=202306100050>>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건물을 비롯하여 고속도로, 발전소, 철도 등 다양한 건설 현장에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했으며, 북한 당국은 청년들에게 ‘속도전청년돌격대’, ‘청년돌격대’라는 이름을 붙여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청년돌격대는 산업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삼수발전소 및 고산과수농장 건설 현장 등에 투입돼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는 ‘6.18 건설돌격대’, 2012년 창설돼 세포 등판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된 ‘9.22 건설돌격대’, 2015년 평안북도와 황해북도 토지정리 사업에 참여했던 ‘토지정리돌격대’ 등이 있다.

⁴³⁾ 도명학, 「잔혹한 선물」 『금덩이 이야기』, 169쪽.

인공인 영수는 돌격대 경험이 많은 진호로부터 “될수록 일은 적게, 그러나 평가는 높게”(170)라는 돌격대 생활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이런저런 요령을 배울 수 있다고 좋아한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일을 하던 이들에게 직승기로 선물이 도착한다. 영수는 “헬기까지 동원해 보내는 걸 보면 보통 품목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며 괜히 몸이 달아올랐”지만, 그 선물의 정체는 세 명이서 고작 두 알을 나눠 먹어야 하는 만큼의 사과였다. 진호는 영수가 헬기를 송영하고 온 사이 배가 아프다고 작업에서 빠지게 되었고, 진호의 자리는 용일이라는 열여덟 살 나이의 어린 대원이 채우게 된다. 그리고 영수와 용일을 포함한 대원들은 야간작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최고사령관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충성의 야간전투를 하게 된 것”(180~181)이다.

자정이 되고서야 일이 끝나게 되고, 영수는 낮에 조퇴한 진호를 찾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던 진호는 영수에게 사실 자신이 엄살을 피운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사는 말이야. 지원물자가 자주 오기 마련이거든.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좀 꺾어봐서 아는데 지원물자도 지원물자 나름이야. 말하자면 오늘 같은 경우엔 피병을 부리든 어찌든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게 낫단 말야. 많은 적든 일단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름 붙은 걸 먹으면 그 값을 몇 갑절 해야 되거든. 글썄 먹어 없어지지 않는 옷이나 물건 같은 거라면 받는 게 낫지. 나중에 장마당에 내다 팔아도 돈이 되니까. 근데 아까 화구당번이 누구와 말하는 걸 들으니 오늘은 과일 먹었다면서? 음, 그랬군. 덜덜 떨며 한 입씩 뜯어먹는 걸 사진 찍어 간수했다가 이담에 보면 참 재밌겠는데. 흐흐 생각만 해도 웃긴다. 그래 그거 몇 입 뜯어먹고 야간 작업 하니 기분이 어때?”⁴⁴⁾

44) 위의 책, 183~184쪽.

「잔혹한 선물」에서 ‘선물’이 갖는 잔혹함은 그것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증여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자정까지의 야간작업과 맞바꾸도록 강요되는 교환의 대상인 데에서 발생한다. 언표된 것으로서는 ‘선물’과 ‘야간 전투’는 수령-인민 간이자 최고사령관-돌격대원 간의 숭고한 가치인 ‘사랑’과 ‘충성’을 각각 담보하는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드높은 것들이 아니라, 일 인당 한 개가 채 못되는 사과 조각과 몇 시간짜리의 철야작업 간의 가치 교환이다.

그런데 「잔혹한 선물」에는 가치의 교환이 한 번 더 발생한다. 진호와 교체되어 작업에 투입된 어린 돌격대원 용일이 깜깜한 밤, 나무 주변의 흙을 파내던 그 안에 빠지게 되고 다른 돌격대원들이 그를 구하려 나무를 밧줄로 감아 쓰러뜨리는 순간 용일이 그 나무에 관통되어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소설에서는 몇 시간의 노동에 더해 용일의 목숨까지도, 채 한 알이 못 되는 사과와 맞바꾸는 것이다. 소설은 이 두 가치가 과연 교환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⁴⁵⁾ 북한 사회의 맥락에서 수령의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므로 한 알의 사과와 노동자의 생명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잔혹한 선물」에서의 표면적인 가치 교환이며, 이는 등가 교환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맥락 밖에서 한 알의 사과는 노동자의 생명과 교환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가치 교환은 부등가 교환이다. 이 소설은 표면적인 등가 교환이 실제로는 부등가 교환임

45) 한편 가치의 교환 가능성은 「정 아바이네 집」(도명학, 『잔혹한 선물』)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 소설은 정 아바이의 조카딸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를 보육원에 몰래 두고 오게 되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고뇌의 시간과 고통의 감정을 다룬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소설은 아이를 보육원에 두고 올 것을 조심스레 제안하기로 한 ‘나’의 결정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를 묻는다. 여기에서는 먹고사는 문제와 모성에 사이의 교환 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잔혹한 선물」에서 가치의 교환 가능성과는 그 맥락이 다소 다르므로, 본문이 아닌 각주를 통해 보론으로 덧붙여 둔다.

을 폭로하는 데에서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고 있다.

「잔혹한 선물」이 드러내는 아이러니는 ‘최고사령관의 사랑에 보답하는 돌격대원들의 충성’이라는 외관과 ‘사과 한 알에 의해 교환된 사람의 목숨’이라는 현실 사이의 대조에서 비롯한다.⁴⁶⁾ 선물이 갖는 잔혹함 그것의 크기는, 이 대조가 얼마나 현격한가의 그 정도와 꼭 비례한다. 그래서 ‘잔혹한 선물’인 사과는 철야작업을 하던 자정까지의 시간과, 자정이 지난 후 용일의 시체를 수습하던 때의 시간에 따라 그 잔혹함을 달리하고, 이때 이 텍스트가 드러내는 아이러니의 강도도 함께 격해지는 것이다. 소설 텍스트에는 소설풍경이 자아내는 바로 이 상황적 아이러니가, ‘잔혹한 선물’이라는 말의 아이러니와 한데 뒤엉켜 있다.

「꼬리 없는 소」는 「잔혹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제목에서부터 ‘말의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 「꼬리 없는 소」에서 ‘트락토르(트랙터)는 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사는 동네인 1 작업반 포전만 갈아주고, 거기에는 몇 마리 있는 부림소도 용우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는 소처럼 직접 밭을 가는 수밖에 없다. 관리위원회 간부도 아니고, 얼마 없는 소 몇 마리도 간부들이 잡아먹고 기차에 치어죽은 바람에 이제는 소도 한 마리 없는 용우는 오직 당원이 되는 것 외에는 “쇠새끼 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우는 군 복무 시절 상관들에게 잘 보이면 당원도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부대에서 염소를 훔쳐 자신의 부대 염소농장에 가져다

46) 일찍이 하콘 슈발리에(Haakon Chevalier)는 “모든 아이러니의 기본 특색은 현실과 외관과의 사이의 대조”라고 말했으며, 이는 아이러니의 제요소 중 하나로 설명된다. Haakon Chevalier, *The Ironic Temper : Anatole France and His Time* (New York, 1932), p.42; D. C. Muecke, 문상득 역, 『아이러니(Irony)』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53쪽에서 재인용. D. C. Muecke는 아이러니의 제요소를 1. ‘순진’ 또는 ‘자신에 찬 무지’의 요소, 2. 현실과 외관의 대조, 3. 희극적인 요소, 4. 거리의 요소, 5. 연극의 아이러니에 관한 부기, 6. 미적 요소로 들고 있다. 아이러니의 제요소는 D. C. Muecke, 위의 책, 44-80쪽 참조.

놓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불명예스럽게 군에서 나오게 되었다. 북한은 사정도 옛날과는 달라서 이제는 “돈만 있으면 입당도 직업도 승진도 다 해결된다”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가난한 용우에게는 입당을 하지 않고서는 변변한 직업이든 대학 진학이든 바랄 수가 없다. 그래서 용우는 당원증을 얻기 위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다.

그날 이후 용우의 생활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장 바꿔 입을 옷이 없어 군복은 입고 지냈지만 계급장과 모표는 달지 않았다. 집이 가난한 것도 이젠 참아낼 것 같았다. 그까짓 출세만 한다면야 잘 사는 건 문제도 아니지. 이제부터 군사복무 시절처럼 한 일 년 죽었소, 하고 잘해보자.

용우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자!”라고 된 구호판을 만들었다. 당에서 내놓은 구호지만 자기에겐 꼭 어울린다고 여겨져 골랐다. 당세포위원장은 잘 만들었다고 좋아하며 이왕이면 아예 구호판 관리를 맡아 매일 들고 나가 포전에 세우라고 했다. 귀찮긴 하지만 군대 때 경험으로 봐서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입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⁴⁷⁾

「꼬리 없는 소」의 용우는 「잔혹한 선물」의 영수보다 신세를 고쳐보려는 욕망을 훨씬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용우가 직접 만들었으며 또 그것이 자신에게 꼭 어울린다 생각했던, 이 전투 같은 노동 구호는 일 년이 넘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는 ‘하루쯤 안 가지고 나와도 되는 것’ 정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용우는 박 영감과 승강이를 벌이다 다툼을 하게 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보안원이 이를 발견하고 용우를 야단치려 한다. 반쯤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린 용우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자 보안원은 “너 콩밥 먹고 싶어 환장했구나”라며 협박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용우가 ‘탈북하겠다’라는 협박으로 보안원의 협박을 받아치는 장

47) 도명학, 「꼬리 없는 소」 『꼬리 없는 소』, 106쪽.

면이다.

“마음대로 해요. 콩밥 좀 배터지게 먹게.”

“오 그래? 인마 요즘은 감방에 콩밥두 없어. 그럴 것 없이 노동단련대 좀 갔다올래?”

“단련대건 빵이든 보낼 테면 보내란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진짜지?”

“예, 보내랴요. 갔다가 나오는 날이면 나도 다 알조가 있다고요.”

“뭐 알조가 있어? 있으면 뭐 어쩔 셈이야?”

“여기서 두만강이 지척인데.”

“뭐 두만강? 아니 이 새끼가…….”

갑자기 보안원이 당황했다.

“나두 떨지 모르다구요. 술한 사람들이 뛰었는데 나만 못 편단 법이라도 있어요?”⁴⁸⁾

평양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용우의 마을은 과부촌이라 불리는 리 안에서도 남자가 특히 적었다. 남자들은 잡혀가거나 처형되거나 형기를 마치고 돌아와도 영양실조로 죽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얇거나 늙었고 너무 어리”지 않은 남자는 용우뿐이었다. 거기에 자꾸만 마을 사람들이 탈북을 하면서 이십여 호밖에 되지 않는 동네에만 행방불명자가 다섯 명인 상황에서, 용우는 어디선가 “이제 다시 월경자가 나타나면 (보안원이—인용자 주) 무사치 못하다”는 것을 듣고 위와 같은 협박을 하게 된 것이다.

「꼬리없는 소」에서 주인공은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북한 사회주의에서 노동당원이 되기 위한 노력(=노동착취)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등가 교환된다. 그러나 북한 바깥의 현실에서 노동착취는 그것과 등가 교환될 수 없는 것이다. 국경인 두만강이 지

48) 위의 책, 117쪽.

척에 있다는 용우의 말은 내부세계에 그 바깥의 세계를 환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두 세계의 대조가 아이러니의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그 아이러니를 통해 부등가 교환이 등가 교환처럼 이루어지는 체제 내의 현실이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용우의 탈북 협박은 고급담배와 함께 소를 얼마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보증과 교환된다. 탈북을 하겠다는 으름장이 거래 가능한,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은 「잔혹한 선물」에 나타난 교환과는 달리, 씹쓸한 웃음을 자아내는 코드의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보안원의 자전거 종소리가 “별치 않게 들리”게 되듯 하층민인 용우가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보안원으로부터 혼쭐을 면했을 뿐 아니라 그를 당황하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어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종의 위계 전복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보안원은 탈북자 숫자에 쪼쪼매야 하는, 권력의 최말단이기 때문에 또한 용우의 삶이 전혀 나아진 것도 아니며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요원하기 때문에 이 전복은 너무나 일시적이며 또한 덧없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안원이 주고 간 고급담배를 피우는 용우가 담배 연기로 “코뚜레 모양 가락지”를 만드는 것은 그가 계속 인가대기를 끌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용우는 “사뭇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 소설의 뒷맛은 그것과 비슷할 수 없다.

“에이 빌어먹을, 아무렇게나 돼라.”

보안원이 아무도 알아먹지 못할 소리로 투덜대며 자전거에 올랐다. 멀어저가는 보안원의 뒷모습을 보며 용우는 갑자기 기분이 묘해졌다. 이제껏 두렵게만 느껴졌던 보안원의 자전거 종소리가 별치 않게 들리는 것이 이상했다. 용우는 보안원이 주고 간 고급담배에 불을 붙여 빨고는 입술을 오므리고 푹푹 소리를 내며 코뚜레 모양 가락지를 만들어 내보냈다. 사뭇 흐뭇한 표정이었다.⁴⁹⁾

그런데 우연히 피워 올린 담배 연기가 코뚜레 모양인 것과 용우 스스로 그러한 모양의 담배 연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소설적 효과를 야기한다. 전자의 경우 용우는 이것을 모른 채로 남게 되기 때문에 ‘용우=꼬리 없는 소’라는 등식은 용우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서술자의 입장에서 누설되거나 혹은 객관적인(또는 객관적이라 믿어지는) 세계 안에서 드러나는 진실처럼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인 ‘꼬리 없는 소’를 의미하는 코뚜레 모양의 담배 연기를 용우가 스스로 만들어 보이는 것은, 이 인물이 스스로를 희화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꼬리 없는 소’에서 비롯한 아이러니는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의 차원에서부터 끌어올려져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풍자하며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에서의 아이러니는 아이러니를 구사하는 쪽인 아이러니스트와 아이러니를 경험하는, 즉 당하는 쪽인 희생자를 파생시킨다. 이는 외관과 현실이라는 항과 매개하여 구별되는데, 아이러니스트는 외관을 내보이면서 현실을 모르고 있는 체하는 한편 희생자는 외관에 속아서 현실을 모르는 것⁵⁰⁾으로 나뉜다. 이것을 이 장면과 겹쳐 보면, 용우는 자신이 소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 노릇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결국 자신이 바라는 대로 대학에 가게 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게 되거나 하는 미래는 자신에게 여전히 멀리 있음을 이미 알되 그것을 모르는 체하며 아이러니를 구사한 것이 된다. 이대로 노력하면 당원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주는 희망이라는 ‘외관’과, 그러나 당원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 당원증으로 신세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 그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사이의 격차를 아이러니를 구사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

49) 위의 책, 119~120쪽.

50) D. C. Muecke, 『아이러니(Irony)』, 53쪽.

로 코뚜레를 낀 스스로를 만들어 보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용우는 인우(人牛)가 아니게 된다. 어떤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뜻하는⁵¹⁾ 아이러니를 구사함으로써 용우는 그가 말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된다.

한편 「꼬리 없는 소」에 나타난 용우가 구사하는 아이러니는 풍자에도 해당한다. 의식적인 아이러니는 “안틀어 말함, 풍자적 모방”⁵²⁾과도 연결되는 데에서, 「꼬리 없는 소」를 풍자의 서사전략으로도 읽어볼 수 있다. Arthur Pollard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2장의 “연극이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데에서 연원하여, 그 인물의 풍자 방법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로 풍자는 한 인물이 하는 일, 둘째로 그 인물에 대해서 다른 인물들이 하는 행위 또는 말, 셋째로 그 인물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그리고 넷째로 소설에 있어서는 작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하는 말에 의해 이루어진다.⁵³⁾ 이 논의를 소설에 나타난 풍자에 적용해본다면 이 소설에는 줄곧 네 번째 유형의 풍자, 즉 서술자 차원에서의 풍자가 제시되다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세 번째 유형의 풍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풍자의 전환 과정에서도, 용우가 아이러니의 희생자가 아닌 아이러니의 주체, 아이러니스트임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다.

IV. 결론을 대신하여—소설세계와 북한의 현실

앞서 도명학의 여러 소설에서 인물들의 각기 다르면서도 비슷한 욕망

51) 위의 책, 32쪽.

52) 위의 책, 같은 쪽.

53) Arthur Pollard, 송낙현 역, 『諷刺(Satire)』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32~33쪽. 인용자가 현재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로 수정.

이 좌절되는 양상을 통해 자본화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특히 「황해도 데미지」와 「재수 없는 날」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욕망이 그리는 자취와 함께 자본화에 수반되는 일종의 소진(消盡)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소설세계에서 그러한 소진의 형상은 자본화의 대상(두 소설에서는 각각 백자와 구루마)이 도둑질로 무화됨으로써 자본화의 욕망 역시 함께 무화되는, 일종의 인과 관계를 통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무화(無化)—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돈을 벌고자 했던 수단인 무화(「재수 없는 날」의 구루마),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 환상의 무화(「황해도 데미지」의 백자), 갈수록 어려워지는 집안 사정에도 가져왔던 취미의 무화(「책 도둑」의 책), 공장의 소유인 시멘트와 교환한 먹을 것의 무화(「함흥역에서」의 쌀 배낭)—는 물질적 욕망이나 자본화에 대한 가치 판단만이 아닌, 그것들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북한 현실의 엄혹함을 함께 비추고 있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체제하에서 모두 불온한 것이었다. 도명학 소설에 나타나는 욕망의 좌절은 일확천금에 관한 것에서만이 아니라, ‘먹고 살기’에 관한 것에서도 발생한다. 소설세계가 그리는 북한의 현실은 고향의 가족을 굶기지 않고 싶다는 욕망마저 불온한 것으로 환원한다.

소설세계에는 장마당과 같이 제한된 자본주의적 시장체제가 존재하지만 그 장마당에 오르는 물건은 증거품 명목으로 압수된 쌀 배낭, 남편 몰래 훔친 책이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매대에 오른 상품은 돈이 될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다 파는 자본화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면서, 또한 거기에까지 내몰려 있는 북한 사회에서의 생존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훔친 것을 도둑맞는, 도둑질의 먹이사슬 생태계에서 드러나 있었다.

이 먹이사슬에서 가장 위에 군림하는 존재는 결국 규찰대원 행세를 하

던 이들에게 돈을 뺏고, ‘나’에게는 쌀 배낭을 뺏어 장마당에 팔아넘긴 안전원이었다. 그런데 안전원 역시 본인에게 할당된 만큼의 배급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식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다.

“들어보니 사정이 참 딱하긴 하구만. 뭐 누구나 살기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전원들도 별다를 게 없소. 배급을 준다면 본인만 주고 가족들은 자체 해결이요.”

맞는 말이었다. 작은 뇌물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 안전원들 생활이었다.⁵⁴⁾

도명학 소설에서 ‘북한’이나 ‘당’이라는 국가 내지 공권력은 개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실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것을 위시하는 지극히 소박한 한 개인으로서만 드러나 있다. 권력의 최말단에 위치한 이들은 언제나 ‘나’보다는 힘이 세지만 이들 역시 법이나 절차를 어기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에서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들이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골동품 매매를 하기 위해 물건을 가지고 나온 「항해도 데미지」에서의 군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노동을 시키고는 그 보상으로 압수했던 담배를 나누어주는 「재수 없는 날」에서 보안원, 겉으로는 용우를 혼쫓내겠다 으박지르지만 용우가 탈북을 할까 전전긍긍해 하는 「꼬리 없는 소」에서의 보안원, 증거품으로 제출한다며 압수한 쌀을 장마당에 팔아넘기는 「함흥역에서」의 안전원은 모두 국가나 당을 위시하기에는 너무 소박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함흥역에서」나 「꼬리 없는 소」에서 대리 수행자 인

⁵⁴⁾ 도명학, 「함흥역에서」, 이지명 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112쪽.

물들을 통해 현현되는 국가와 당은 무능하고 허술해서 ‘나’의 꿈꾸이를 원천차단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먹고살기 위한 ‘나’의 노력을 계속해서 좌절시키는 데에는 성공하는 존재들이다. 「함흥역에서」의 ‘내’가 했던 ‘도둑질(시멘트를 쌀과 바꾼 것)은 암암리에 모든 노동자가 해오던 것들임에도 ‘나’는 결국 그 쌀을 고향 집까지 가져가는 데에는 실패한다. 「꼬리 없는 소」의 용우는 자신에게 찢절매는 보안원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는 앞으로 ‘꼬리 없는 소’로서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꿈꾸는 윤택한 삶을 결국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지만 이들 작품에서의 인물들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작동원리에는 무지한 채 고통받기만 하는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함흥역에서」의 ‘나’는 자신을 포함한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도둑임을 알고 있으며 그들 간의 위계를 가늠한다. 「꼬리 없는 소」에서의 용우는 자신의 ‘승리’가 결코 승리가 아님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를 희화화한다. 이러한 현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인물들은 안전원/보안원을 비판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는다. 이들이 허술하게나마 위시하는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 비판과 가치의 부등가 교환에 대한 폭로라는 아이러니를 통해 도명학이 문제 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해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밖에서 북한의 현실을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사실주의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글의 서론에서 확인했던 ‘북한 현실 문학’이라는 작가의 문학론과 마주친다. 북한에 표현의 자유가 있었더라면 쓸 수 있었을 작품, 바꾸어 말해 북한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었을 작품은 북한의 밖에서 그곳을 떠난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보다 북한의 안에서 그곳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낸 것일 거라는 사유가, 그의

소설에서의 '현실'이 자신을 담보하는 가장 큰 원천일 것이다.

■ 접수: 2024년 5월 13일 / 심사: 2024년 5월 30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참고문헌】

- 도명학, 『잔혹한 선물』, 파주: 푸른사상, 2018.
- 도명학, 「꼬리 없는 소」, 이정 외, 『꼬리 없는 소』, 서울: 예옥, 2018.
- 도명학, 『황해도 데미지』, 김주성 외, 『해주 인력시장』, 서울: 예옥, 2022.
- 도명학, 『함흥역에서』, 이지명 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서울: 예옥, 2024.
- 윤소영, 『한국사회성격 논쟁 세미나(Ⅱ)』, 서울: 공감, 2020.
- 이경자 외, 『금덩이 이야기』, 서울: 예옥, 2017.
- 한수영, 『사상과 성찰』, 서울: 소명출판, 2012.
- Fraser, Nancy, 장석준 역, 『좌파의 길—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파주: 서해문집, 2023.
- Muecke, Douglas C., 문상득 역, 『아이러니(Irony)』,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Pollard, Arthur, 송낙현 역, 『諷刺(Satire)』,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 고인환,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양상: 정철훈의 『인간의 악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7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55~71쪽.
- 고인환,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39호, 한민족문화연구학회, 2012, 141~169쪽.
- 김영미, 「탈북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5~31쪽.
- 박덕규·김지훈, 「북한이탈주민 시의 “그림자(Shadow)” 형상화 문제 - 장진성의 시집과 수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525~553쪽.
-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통권 35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89~113쪽.
-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 연구의 방법」 『춘원연구학보』 제11호, 춘원연구학회, 2017, 173~208쪽.
- 배개화, 「탈북의 서사화와 문학적 저널리즘 -장진성과 지현아의 탈북 수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17호, 구보학회, 2017, 231~261쪽.

- 배개화, 「탈북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에서의 ‘시장 경쟁’ - 김유경, 설송아, 그리고 도명학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215~246쪽.
- 서세립,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69~102쪽.
- 서세립, 「탈북 문학에 표상된 지식인」 『춘원연구학보』 제13호, 춘원연구학회, 2018, 235~262쪽.
-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 박덕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51호, 한국문학회, 2009, 261~288쪽.
-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217~243쪽.
- 정하늬, 「탈북 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제69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33~64쪽.
- 강은주, 「북한의 무분별한 고분도굴과 골동품 사기」 『北韓』 통권 540호, 북한연구소, 2016, 84~91쪽.
- 고인환, 「이방인 문학의 흐름과 방향성-이주노동자와 탈북자의 삶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들』 2008년 가을호(2008.8.), 30~56쪽.
- 김영익, 「핵·미사일과 경제난: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마르크스21』 37호(2020.12), 52~67쪽.
- 한영진,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변화상 - 늘어나는 자본주의 문화유입과 생계를 위한 시장거래 활기」 『北韓』 통권 429호, 북한연구소, 2007, 129~139쪽.

<<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AdminstList.aspx?mc=AD0101&ac=A05&direct=1>>.

<<https://m.monthly.chosun.com/client/amp/viw.asp?ctcd=&nNewsNumb=202306100050>>.

The Critique of Capitalism and the (Im)possibility of Value Exchange in Do Myung-hak's Novels

Ra, Jun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lucidate the (im)possibility of the exchange of values as problematized in the novels of Do Myung-hak and their engagement with capital(ism), while also examining how his novels represent the reality of North Korea.

Both regarding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or South Korea, the capital has always been a significant issue in the works of North Korean defector writers. However, in Do Myung-hak's novels, the capital goes beyond merely serving as a material for the narrative or depicting the contemporary North Korean society as experienced and witnessed by the novelist. Instead, it delves into the inherent mechanisms of capitalism (capitalization) and the various issues that it entails. Furthermore, This article elucidates how Do Myunghak's novels disclose the impossibility of value exchange within North Korean socialism, wherein things purportedly exchanged at equal values are in actuality, exchanged at an unequal value. The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aesthetic effect of irony emerges at the juncture of a disparity between the ostensible equivalence of exchange where the substantive inequality of exchange becomes evident.

Do Myung-hak has stated that his literature is more aptly captured by the

term “North Korean realistic literature” rather than “North Korean defector’s literature.” Through the significance of irony, this article also aims to highlight the lasting relevance of Do Myung-hak’s novels to North Korea, despite his physical departure from the country.

Keywords: Do Myung-hak, North Korean realistic literatu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Literature, Capital(ism), Exchange of Values, Irony

나준성 (Ra, Junsung)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대소설 및 현대문학비평을 연구하고 있다. 「이성옥 비평의 문화(운동)론과 ‘현실’이라는 조건의 의미」(『춘원연구학보』 제20호, 춘원연구학회, 2021)와 「벌충과 길항-초기 현대문학 학술장과 문학장 사이의 양상」(『한국현대문학연구』 제67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22) 등을 발표했다.

일반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

: 현황과 전망

이문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2023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의 실패 이후 장기화된 교착 국면을 배경으로 러우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1) 양국 군사력의 변화, 2) 국내적 안정성 및 여론 변화, 3) 국제정세의 변화가 그것이다. 전세 판단과 전황 분석에 필수적인 이 삼차원의 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동된 형태로, 그러나 양국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전쟁 초기와 달리, 현재 소모전의 피해는 주로 우크라이나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군비, 병력, 전투 숙련도, 무기, 병참 등 모든 요소에서 우크라이나의 열세가 확인된다. 두 번째로, 러시아는 서방의 고강도 제재에도 글로벌 사우스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푸틴과 전쟁에 대한 높은 지지 등 정치·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초토화, 20%에 달하는 영토 상실, 심각한 인구 위기, 부패한 통치 시스템, 땅에 떨어진 국민 사기, 극우 민족주의의 확산과 극심한 사회분열 등,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마지막으로, 가자 전쟁의 발발로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미국에 대한 반감이 글로벌 사우스와 중동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등, 국제정세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러우 전쟁 종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촘스키와 하버마스가 제안한 '협상의 호소'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즉각 전쟁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의 필요가 더욱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다.

주제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 전쟁), 푸틴, 젤렌스키, 글로벌 사우스, 영토 양보, 평화협상

I. 서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를 맞이했다. 발발 한 달여쯤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던 협상이 중단된 후, 현재 어떤 대화나 타협도 난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전쟁 중단, 평화협상 개시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반전 평화의 보편적 대의, 3차대전이나 핵전쟁의 위험도 중요한 이유지만, ‘국민 90%, 영토 양보 절대 불가’란 통계 뒤에 가려진 우크라이나의 참상 때문이다.

2023년 여름 개시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의 실패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희비가 명확히 갈렸다. 전황 자체의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2022년 가을, 돈바스와 헤르손, 자포리자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7%를 점령한 후, 2023년 5월 러시아의 바흐무트 함락과 2024년 2월 아우디우카 함락을 제외하면, 전선은 사실상 고착되었다. 현재 전쟁은 영토가 아닌 병력을 타겟으로 한 소모전의 형태로 진행 중이다.

전선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지만, 수개월째 이어져 온 교착 국면을 배경으로 향후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화가 다수 발생했다. 1) 러우 전력(戰力)의 변화, 2) 양국의 국내적 안정성 및 여론 변화, 3) 서방의 전쟁 피로도 확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트럼프의 재부상 등 국제정세의 변화가 그것이다. 전세(戰勢) 판단이나 전황 분석에 필수적인 이

삼차원의 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동된 형태로, 그러나 러우 양국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변화의 내용과 추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에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까지의 전쟁 결산에 해당하는 이 변화를 항목별로 짚어보고 러우 전쟁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상에 기반해 즉각적인 평화협상 개시의 필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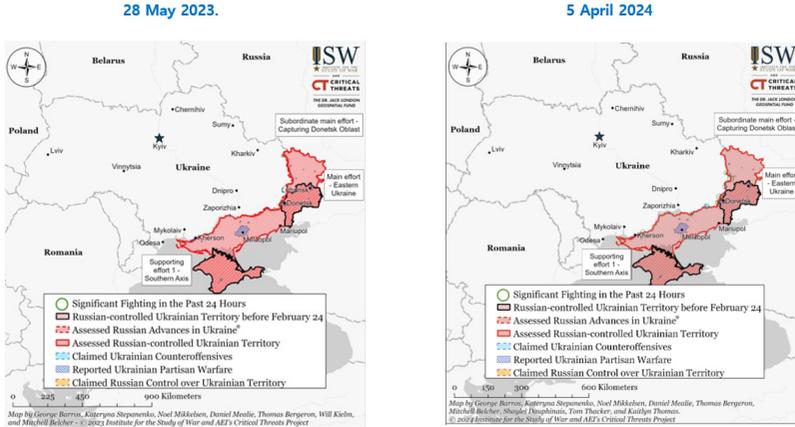
I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력 변화

전쟁 2년 차인 2023년 전황은 1년 차인 2022년과 여러모로 대조된다.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는 예상외의 선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같은 해 가을 하르키우, 헤르손 북부 등 러시아 초기 점령지의 13%를 성공적으로 탈환했다. 반면 여러 차례의 유예 끝에 2023년 6월 4일 마침내 개시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서방의 전폭적 지원과 오랜 준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럼 1은 대반격 직전인 2023년 5월과 현재(2024년 4월)의 전황도다. 1년 가까이 점령 영토 또는 전선에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¹⁾

장기 지속된 전선의 교착 자체가 대반격의 실패를 뜻하며, 실패는 영토에 그치지 않았다. 푸틴이 내세운 이번 전쟁의 3대 목표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비무장화(demilitarization)’로, 이는 ‘우크라이나 군사 능력의 초토화, 또는 불능화’를 의미한다. 영토보다 병력 및 화력을 주로 겨냥한

1) 이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의 상세주소는 참고문헌에 적시함.

〈그림 1〉 우크라이나 대반격 전후 전황 비교



* 출처: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2023.05.28 & 2024.04.05.

현재의 소모전은 이 목표에 정확히 부합한다. 당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었던 잘루즈니(V. Zaluzhny) 역시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023년 11월 1일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잘루즈니는 ‘이동과 속도 중심의 <기동전(manoeuvre warfare)>에서 정적인 소모전 위주의 <진지전(positional warfare)>으로 변화한 현재의 전쟁이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국가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²⁾

실제로 전쟁 초기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소모전의 피해는 주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 군 사상자 수는 전시(戰時) 일급 기밀에 해당하기에 전쟁 종료 이전까지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며 추정만이 가능하다. 2023년 8월 <뉴욕타임즈>의 총결산 보도에 따르면, 전쟁 개시 후 러우 군 사상자 총수는 약 50만 명으로, 러시아 약 30만 명(사망 12만 명/

²⁾ V. Zaluzhny, “The commander-in-chief of Ukraine’s armed forces on how to win the war” *Economist*, Nov. 1, 2023.

부상 17만~18만 명), 우크라이나 약 20만 명(사망 7만 명/부상 10만~12만 명)으로 추정된다.³⁾ 해당 시기 사상자 발생이 전쟁 1년 차에 주로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군의 피해가 더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로 판명난 2023년 12월, 러시아 국방부 장관 쇼이구(S. Shoigu)는 전쟁 개시 후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총수가 383,000명인데, 이 중 159,000명은 대반격 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전체 사상자의 약 40%가 대반격 작전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셈이다.⁴⁾ 자국 피해는 줄이고 적국 피해는 과장하기 마련인 전시 특성상 쇼이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서방 언론부터 중립적인 <알자지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계 언론 역시 대반격 실패의 가장 뼈아픈 결과로 ‘막대한 사상자 수’를 들고 있다. ‘대반격 한 달 동안 4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는 전쟁 전체 시기 발생한 숫자에 맞먹는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⁵⁾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장기화된 소모전으로 심각한 병력 손실을 입었

3) H. Cooper, T. Gibbons-Neff, E. Schmitt, J. E. Barnes, “Troop Deaths and Injuries in Ukraine War Near 500,000” *New York Times*, Aug. 18, 2023.

4) “Шойгу: ВСУ потеряли более 383 тысяч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 начала СВО” *Известия*, 19 декабря 2023.

5) 미 육군 대령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군사고문을 역임한 더글러스 맥그리거(D. Macgregor)가 2023년 8월 22일 <폭스 뉴스(Fox News)>의 앵커 터커 칼슨(T. Carlson)과 인터뷰에서 한 주장이다. 관련 세계 언론 동향은 다음을 참조. T. Carlson, “Into the abyss: Colonel Douglas Macgregor tells us why the Ukraine war must end now” *Twitter*, Aug. 22, 2023; J. Melanovski, “Ukrainian forces on defensive as “counteroffensive” ends in failure, mass casualties” *WSWS.ORG*, October 21, 2023; T. S. Burrige, “Ukraine taking heavy casualties 10 weeks into its counteroffensive” *ABC News*, Aug. 18, 2023; M. Mirovalev, “Strategic objectives not achieved: Has Ukraine’s counteroffensive failed?” *Aljazeera*, Nov. 7, 2023.

다. 나아가 소모전의 핵심지표인 ‘사상자 교체율(casualty exchange rate)’, 즉, ‘군인 사상자를 훈련된 신병으로 얼마나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가’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인구 4배, GDP 10배인 러시아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어샤이머(J. Mearsheimer)가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파멸적 상황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 단언한 이유, 잘루즈니가 위기 극복을 위해 서방의 지원을 호소하면서도 ‘깊고 아름다운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 비관한 근거가 여기 있다.⁶⁾

서방의 지원 의지가 전쟁 초기의 안정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극적인 국면 돌파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의 반대로 오랫동안 계류돼 있던 610억 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이 2024년 4월 20일 하원에서 통과되고, 같은 달 23일 상원에서 승인되었다. EU 역시 헝가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던 50억 유로 상당의 추가지원안이 2024년 2월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⁷⁾ 하지만 ‘충이 있어도 쓸 사람이 없는’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때늦은 지원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러시아의 상황은 정반대다. 전쟁이 아닌 ‘특수군사작전’임을 주장하며 19만 명의 최소 병력으로 전투를 개시한 러시아는 초반 병력 열세에 시달렸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정규군 외 100만 명에 가까운 추가 병력을 비축한 상태다. 2022년 가을 <부분 동원령>으로 30만 명을 소집했고, 이후 심각한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자원 계약병제>로 전격 전환한 후, 2023년 한 해 동안 약 54만 명, 2024년 첫 사분기에만 약 10만 명의 계약

6) “J. Mearsheimer: Ukraine War is a Long-term Danger” *GreyZone*, July 30, 2023; V. Zaluzhny, “Ukraine’s Commander-in-chief on the Breakthrough He Needs to Beat Russia” *Economist*, Nov. 1, 2023.

7) P. Zengerle, R. Cowan, “US Congress passes Ukraine aid after months of delay” *Reuters*, April 24, 2024; “The EU’s €50B for Ukraine is basically nothing” *Politico*, Feb. 6, 2024.

병이 등록을 마쳤다. 하루 평균 1,400명이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셈이다. 쇼이구는 2024년 말까지 계약병 규모를 연 74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12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푸틴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2천 킬로미터가 넘는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 규모는 617,000명에 달한다. 같은 시기 푸틴은 러시아 정규군 규모를 기존 115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17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⁸⁾

전쟁 1년 동안 러시아의 탄약 소모량은 약 1,200만 발, 수비로 돌아선 2023년 예상 소비량은 700만 발이었다. 2024년 현재 러시아군의 탄약 소모량은 월 30만 발, 생산량은 월 25만 발(연 300만 발)로 추정된다. 소모량 대비 생산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무엇보다 전쟁은 상대와 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자체 군수공장이 부재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이미 2023년 10월 나토 군사위원장 롭 바우어(R. Bauer)는 탄약 고갈을 호소하며 회원국에 증산을 요청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 해도 미국과 유럽을 합쳐 서방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탄약의 연간 최대치는 120만 발로, 이는 러시아의 연간 탄약 생산량의 1/3선에 불과하다. 앞서 서술한 미국과 유럽의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수준의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 오래다.

그 결과, 현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하는 일일 포탄량이 약 10,000발인데 반해 우크라이나는 2,000발에 불과하다. 서방의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격차는 수주 내 현재의 5:1에서 10:1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⁹⁾ 이에 더해 러시아에는 북한 변수도 존재한

8) “Минобороны РФ: 100 тыс.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подписали контракт с начала года” *Известия*, 3 апреля 2024; *Итоги года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14 декабря 2023.

9) K. Mayberry, “A new and terrifying world: Kim and Putin to meet again in Russia”

다. 국내외 언론은 2023년 9월 북리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대러 탄약 지원은 현재까지 최소 백만 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⁰⁾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병력난, 무기 고갈, 군비 부족의 삼중고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2023년 11월 27일 젤렌스키는 2024년 국방비로 전체 국가 예산의 절반, GDP의 22%를 책정한 예산안에 서명했다. 금액으로는 약 423억 달러다. 같은 날 푸틴이 서명한 2024년 러시아 국방 예산은 약 1,200억 달러로 우크라이나의 세 배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보다는 70%, 전쟁 전인 2021년보다는 300% 증액된 것으로, 2024년 러시아 전체 예산의 30%, GDP의 6%에 해당한다. 이 정도 규모의 국방비 편성은 소련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¹¹⁾

이렇듯 군비, 병력 규모 및 동원 능력, 이와 밀접히 연동된 전투 숙련도, 무기, 병참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우크라이나의 절대

Aljazeera, Sep. 12, 2023; K. Bo Lillis, N. Bertrand, O. Liebermann and H. Britzky, "Russia producing three times more artillery shells than US and Europe for Ukraine" *CNN*, March 10, 2024; "NATO Admits It Is Running Out of Ammunition" *Newsweek*, Oct. 4, 2023; T. Copp, "Ukraine will be outgunned by Russia 10 to 1 in weeks without US help" *AP News*, April 11, 2024.

10)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인 탄약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탄약량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 Sang-ho Song, "S. Korea indirectly supplied more 155-mm shells for Ukraine than all European countries combined: WP" *Yonhap News*, Dec. 5, 2023; 박준상, 「北, 러시아에 수백만발 포탄·미사일 넘기고 식량 받았다」 『국민일보』, 2024.2.27; US Department of State, "Responding to Two Years of Russia's Full-Scale War On Ukraine and Navalny's Death: Fact Sheet", Feb. 23, 2024; M. F. Cancian, C. H. Park, "Can South Korean 105-Millimeter Ammunition Rescue Ukrain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2, 2024.

11) "Зеленский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гос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РБК-Украина*, 28 ноября 2023; "Путин утвердил рост расходов на армию до рекорда со времен СССР" *Moscow Times: Русская служба*, 27 ноября 2023.

적 열세가 확인된다.

Ⅲ. 국내적 안정성 및 여론 변화

1. 러시아

2023년 1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푸틴과 함께 하는 올해의 결산 (Results of the Year with Putin)>은 전세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국민과의 대화와 내외신 기자회견을 겸한 이 행사는 푸틴 집권 이후 매년 열렸지만, 2022년에는 취소되었다. 전선에서 승기를 잡은 후 재개된 행사 속 푸틴의 모습은 (전쟁 개시 직전이나 프리고진 사태 관련) 2022년 실시된 대국민담화 때와 확연히 달랐다. 그는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자신에 찬 모습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 ‘전쟁 실패와 제재 실패, 달러 패권의 침식’으로 이어진 서방의 패착, ‘집단적 서방(collective West)’의 총공세에도 건재한 러시아의 저력을 과시했다.¹²⁾

국민도 푸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표명했다. 2024년 3월 15~17일 실시된 <8대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은 87.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사상 최고치로, 직전 대선(2018)에서 푸틴이 얻은 득표율(76.7%)보다 10%포인트나 높다. 77.5%를 기록한 투표율 역시 역대 최고치로, 이전 최고치(1991년 1대 대통령 선거의 74.7%)를 넘어섰다.¹³⁾

¹²⁾ *Итоги года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¹³⁾ Д. Ягодкин, “Рекордный результат Путина при самой высокой с 1991 года явке” *ТАСС*, 18 марта 2024;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в России (2024)” Википедии.

2024년 3월 기준, 러시아 국민의 전쟁 지지율도 76%로 매우 높다. 물론 ‘전쟁 지속: 전쟁 중단’ 찬성 비율은 ‘40:48’로, 전쟁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다. 18~24세의 경우 해당 비율은 ‘22:59’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젊은이가 3배나 많다.¹⁴⁾ 날로 강도를 높여 가는 탄압과 규제 속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반전’, ‘반푸틴’을 외치는 목소리 역시 건재하다. 특히 2024년 2월 야권의 상징인 나발니(A. Navalny)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후, 그 지지자들이 반체제 운동의 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사회 전체로 볼 때 이는 매우 제한적인 현상으로, 현재로서는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적 위험 요소나 여론 변화의 조짐을 발견하기 어렵다.¹⁵⁾

러시아 사회의 이러한 안정성, 푸틴과 전쟁에 우호적인 여론의 가장 강력한 기반은 경제적 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강도 제재에도 2022년 러시아 경제의 성장 감소는 -2%대에 그쳤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기반한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¹⁶⁾ 2022년 러시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5조 3,300억 달러로, 제재를 당한 러시아가 제재를 가한 독일을 제치고 유럽 1위, 세계 5위를 차지했다. 2023년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다. 제조강국 독일의 산업적 기반인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반면 러시아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14) Левада-центр, “Конфликт с Украиной: массовые оценки марта 2024 года”, 4 апреля 2024.

15) 서방의 뜨거운 추모 열기와 달리, 러시아 국민의 69%는 ‘나발니의 죽음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발니를 지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며, ‘지지하지 않는다’가 49%, ‘누군지 모른다’가 30%였다. Левада-центр, “Массов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б Алексее Навальном”, 1 марта 1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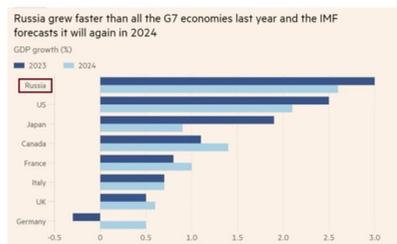
16) 그림 2의 표와 그래프는 각각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2022, PPP”, 2023.12.21.; “The Surprising Resilience of the Russian Economy” *Financial Times*, Feb. 3, 2024 참조.

+3%, 2024년 전망치는 +2.6%로 양자 모두 독일은 물론, G7의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치다.

〈그림 2〉 2022~2024 러시아 GDP

Gross domestic product 2022, PPP

Ranking	Economy	(millions of international dollars)
1	China	30,327,320
2	United States	25,462,700
3	India	11,874,583
4	Japan	5,702,287
5	<u>Russian Federation</u>	5,328,855
6	<u>Germany</u>	5,309,606
7	Indonesia	4,036,901
8	Brazil	3,837,261
9	France	3,769,924
10	United Kingdom	3,556,809
11	Turkiye	3,180,984
12	Italy	3,052,609
13	Mexico	2,742,903
14	<u>Korea Rep.</u>	2,585,011
15	Canada	2,273,489



이처럼 제재를 가하는 서방보다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 경제가 더 승승장구하는 ‘제재의 역설’, ‘제재의 부메랑’의 비밀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2022년 3월 러시아 침공 규탄안이 141개국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과 달리, 제재참여국은 나토 회원국 위주의 46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인구의 85%를 포괄하는 나라들, 즉 글로벌 사우스의 주축인 동남아, 중동, 남미, 라틴, 아프리카 중 어느 나라도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양자, 또는 브릭스(BRICS),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의 다자 단위로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러시아와 교류하고 있다.

일례로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인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와 러시아 간 교역량은 전쟁 발발 6개월 후 각 64%, 106%, 198%, 310%로 폭증했다. 전쟁 전 러시아 석유 수출의 55%가 EU로 향했다면, 전쟁 후에는 중국과 인도가 이를 대체했다. 양국의 러시아산 자원 수입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러시아의 주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 전선에 특별한 이상 신호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외, 수출입 품목 규제는

근외 인접국이나 우호국을 통한 우회수출입이나 병행수출입으로, 유가상한제에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으로 대표되는 편법/탈법적 대응으로, 서구 금융망 퇴출에는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으로, 서구 기업 철수에는 국산화를 통한 대체 공급망 구축으로 대응하며 러시아는 제재 레짐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에 기반해 푸틴 정부는 군사비 등 전시 정부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소비 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주도했다.¹⁷⁾

동원령을 대신해 2023년 1월 시작된 자원병 모집에 하루 평균 1,400명이 몰려든 것도 평균 임금의 3배에 달하는 월급, 거액의 부상 및 사망 보상금, 의료서비스 및 주택 구입 보조금 제공, 연금 포인트 적립 등 파격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푸틴식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의 지속가능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인위적 통제에도 각 8%, 16%에 이르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¹⁸⁾ 하지만 수입 대체화 및 군수산업 활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 증가, 최저임금 인상, 실질임금 증가, 역대 최저수준의 실업률(2.9%) 등의 긍정 요인으로, 적어도 현재까지 러시아 국민은 전쟁의 부정적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러시아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먼저, 확고했던 젤렌스키 리더십의 균열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 대선이 심각한 정쟁의 소재가 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우크라이나의 <계

17) 러시아 경제와 제재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박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외경제 현황 및 대안정책 분석』 (서울: 코트라, 2023); L. Gamio, A. Swanson, “How Russia Pays for War” *New York Times*, Oct. 30, 2022.

18) J. Toporowski, “The War in Ukraine and the Revival of Military Keynesianism”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Jan. 9, 2023.

엄령의 법적 체계에 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계엄령 아래서는 대선과 총선이 금지된다. 하지만 ‘전쟁 종료 후 대선 불출마 약속’을 한 젤렌스키로서는 (법 개정이나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전쟁 중 대선 실시와 이를 통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7일 젤렌스키가 결국 대선 연기를 선언한 것은 지지율의 현저한 하락과 경쟁자의 부상 등, 정치적 불안 요소 때문이다. 대반격 실패 후 총사령관 잘루즈니를 필두로, 전임 대통령 포로셴코(P. Poroshenko), 키이우 시장 클리치코(V. Klichko), 전임 군사고문 아레스토비치(O. Arestovich) 등이 젤렌스키의 전쟁 수행 능력, 독재와 실정, 반부패 캠페인의 실패 등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특히 아레스토비치는 젤렌스키에 정면으로 맞서 ‘영토 양보를 통한 조기 종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¹⁹⁾

정치 엘리트의 분열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민심의 이반이다. 최근 3년간 젤렌스키의 지지율 변화가 이를 상징한다. 우크라이나 대표 여론조사 기관인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KII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젤렌스키 지지율은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27%로 바닥을 쳤다가 전쟁 후인 2022년 12월 84%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대반격 실패 후인 2023년 12월 62%로 급락했고, 2024년 2월 60%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2023년 12월 잘루즈니의 신뢰도는 88%, 총사령관에서 퇴임한 현재는 94%로 젤렌스키를 큰 폭으로 능가한다. 잘루즈니가 대반격 작전을 지휘한 총사령관이었음에도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가 전쟁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¹⁹⁾ Р. Бортник, “Коли і за яких умов в Україні відбудуться вибори: відповіді на запитання від Руслана Бортника” Український інститут політики, 19 жовтня 19 2023; “Я не хочу, чтобы из Украины делали путинскую Россию” *Медуза*, 3 ноября 3 2023.

경제, 사회적 위기도 심각하다. 전쟁 첫째 우크라이나 GDP의 29.1%가 감소했고, 실업률은 36%, 인플레이션은 20.2%에 달했다. 빈곤율도 5.5%에서 24.2%로 증가해 7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으며, 세 가구당 한 가구가 식량부족 상태에 놓였다. 2024년 3월 기준, 상황은 전쟁 초기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인구의 23.3%, 즉, 네 가구당 한 가구가 식량부족 상태에 놓여있으며, 실업률도 13.7%에 달한다.²¹⁾

대규모 전쟁 난민 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그림 3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싱크탱크 <우크라이나 미래연구소(Ukrainian Institute for the Future)>가 추정한 2023년 상반기 우크라이나 인구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2023 우크라이나 인구 상황



* 출처: Український інститут майбутнього, 2023.06.05.

20) KIIS, “Dynamics of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in 2021-2023”, Dec. 18, 2023; KIIS, “Directions of Affairs in the Country and Trust in Political, Military and Public Figures”, Feb. 15, 2024.

21) 2022년 통계는 세계은행, 2024년 통계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전략연구소(Centre for Economic Strategy)> 자료 참조. World Bank, “Poverty & Equity Brief: Ukraine”, Oct. 2023; M. Samoiliuk, “Ukraine War Economy Tracker” Centre for Economic Strategy, April 15, 2024.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 인구는 3,760만 명인데, 이 중 2,070만 명이 전쟁을 피해 해외로 떠났고, 그중 1,210만 명이 돌아왔다. 즉, 아직 860만 명이 해외에 있고, 이를 제외한 국내 거주 총인구수는 2,900만 명에 불과하다. 860만 명의 국외 난민에 국내 실향민 500만 명을 합하면, 인구의 약 1/3이 피난민, 1/4이 해외 난민인 실정이다.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 소장 파니오토(V. Paniotto)에 따르면, 국외 난민의 귀국 희망률은 전쟁 1년 반 만에 90%에서 50%로 급감했다.²²⁾ 그런데 미래연구소가 추산한 ‘국내 거주 총인구 2,900만 명’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인구만 제외한 것으로,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새로 점령된 지역 인구는 포함한 수치다.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규 점령지 인구를 2,900만 명에서 제외하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실제 총인구는 2,500만 명에 불과하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우크라이나 인구는 5,200만 명이었다. 30년 사이 자연감소, 이주, 전쟁의 복합적 결과로 인구가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물론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고 향후 전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점에서 위 2,500만 명도 최대 추정치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은 인구는 1,970만 명에 불과하다’는 메드베제프(D. Medvedev)의 주장이나,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인구의 절반을 잃게 될 것이다’는 파니오토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²³⁾ 더구나 이 2,900만 명 중 노동가능인구는 900만 명 남짓에 불과하다. 위 보고서의 제목, 즉, “우크라이나의 GDP 생산인구가 사라질 것이다(В Україні не буде кому створювати ВВП)” 역

22) “Дев'яносто відсотків за те, щоб не йти на жодні компроміси щодо території” *Gazeta.ua*, 23 серпня 2023.

23) “Медведев заявил, что на Украине сейчас осталось лишь 19,7 млн жителей” *Тасс*, 31 августа 2023; Київський міжнародний інститут соціології, “Божевільні мрії про майбутнє: якою Україна може бути після війни”, 24 серпня 2023.

시 과장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로 현재 우크라이나는 ‘영토냐 사람이냐’의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고질적 병폐인 부패 역시 확산일로다. 2023년 1월 부패 스캔들로 차관급 4명이 해임되었다. 인프라 시설에 집중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전기도, 난방도 끊겨 국민이 어려움을 겪던 당시, 인프라 부 차관은 발전기 구매 관련 뇌물 수수로, 국방부 차관은 최전선 부대 급식비 착복으로, 대통령실 부국장은 인도주의 구호 차량 유용 혐의로, 검찰 부총장은 (‘전시 성인 남성 출국 금지령’을 어기고)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낸 혐의로 사임, 또는 해임되었다. 이에 책임을 지고 2023년 7월, 전쟁 중에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으며, 8월에는 전국의 지역별 모병 책임자 24명 전원이 경질되었다. 뇌물을 받고 징집을 면해준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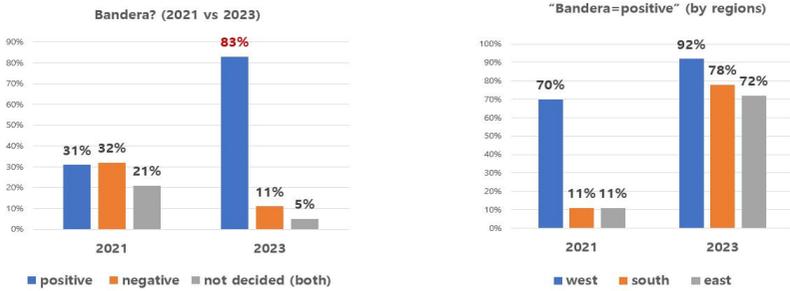
심각한 병력 부족으로 총동원 체제의 강압성이 증폭되면서, 전쟁 초기 세계를 감동시킨 애국적 열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훈련도 못 받고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의 ‘개죽음’에 대한 소문들로 사회가 흥흥하다. 남성들은 허위진단서 발급, 불법 출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징집을 회피하며, 건당 5천~1만 불의 뇌물이 기존의 부패 네트워크를 타고 흐른다.²⁴⁾ 2023년 9월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민주주의이니셔티브재단(Democratic Initiative Foundation)>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행정부와 군 지도 부 부패의 직접적인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한다.²⁵⁾

²⁴⁾ A. Куделюк, “Як українці уникають мобілізації: начальник ТЦК розповів про найпопулярніші способи” *Знай.UA*, 3 травня 2023; M. Santora, “Ukraine Fires Top Military Enlistment Officers After Bribery Scandal” *New York Times*, Aug. 11, 2023; J. Wilson, “Bribes and hiding at home: the Ukrainian men trying to avoid conscription” *Guardian*, Aug. 15, 2023.

²⁵⁾ Фонд «Демократичні ініціативи» ім. Ілька Кучеріва, “Сприйняття загрози корупції громадянами: оцінка влади та вимоги до змін під

극우 민족주의 확산, 이와 밀접히 연동된 사회분열 역시 심각한 위협으로 도사리고 있다. 그림 4는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아이콘’인 스테판 반데라(S. Bandera)에 대한 전쟁 전후 여론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²⁶⁾

〈그림 4〉 전쟁 전후 반데라에 대한 우크라이나 여론 변화



전쟁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반데라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31:32’로 팽팽히 맞섰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독립투사이면서 나치 부역자’, ‘민족 영웅이면서 파시스트 전범’인 반데라의 이중성을 객관적으로 통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감도조차 (친서구) 서부지역에 제한된 현상이었다. 하지만 전쟁을 기점으로 호감도는 31%에서 83%로 폭등했고, 지역별 편차도 거의 사라졌다. ‘학살자’ 반데라가 ‘전국구 영웅’으로

час війни”, 11 вересня 2023.

26) 그림 4의 그래프는 다음의 자료에 기반해 필자가 작성한 것으로, 2021년 결과는 <민주주의이니셔티브재단>과 <라츨코프센터(Центр Разумков)>, 2023년은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임. “Українці краще ставляться до УПА, ніж до Бандери”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7 травня 2021; Київський міжнародний інститут соціології, “Історична пам'ять: результати соціологічного опитування дорослих жителів України”, січень 2023, pp. 3, 15.

거듭난 현상은 전쟁 전 극소수 정치세력에 한정되었던 극우 파시즘의 사회적 확산을 진단하기에 충분한 시그널이다.

전쟁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트라우마, 증오와 원한은 파시즘에 더없이 좋은 양분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은 1) 전장의 국민, 2) 후방의 국민, 3) 집을 떠난 국민, 4) 점령지 국민으로 나뉜다. 3)은 다시 국내 실항민과 국외 피난민으로 나뉘고, 후자는 다시 유럽 피난민과 러시아 피난민으로 나뉜다. 4)의 그룹 역시 2014년 점령지(크림반도와 돈바스 분리공화국)와 이번 전쟁 후 신규 점령지 국민으로 나뉜다.²⁷⁾ 복잡한 분류만으로도 사회통합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나뉘고 갈린 국민 사이 공감과 이해보다 상호 비난과 증오가 앞서는 분위기다. 집중 타겟은 당연히 러시아계 주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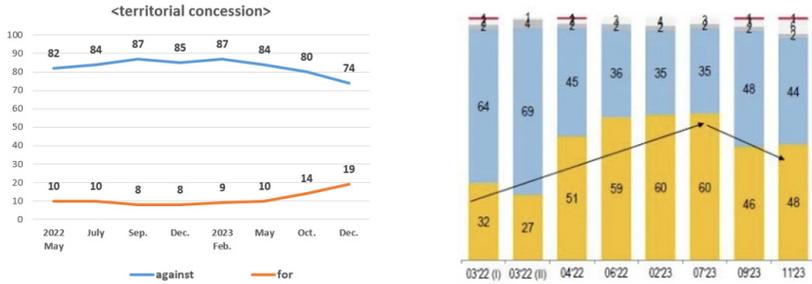
2023년 2월 실시된 <우크라이나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7%가 ‘러시아계 주민을 더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90%가 점령지 주민을 ‘상황의 피해자’라 생각하지만, 사안에 따라 판단은 매우 달라진다. 즉, 점령 정부(러시아)에게 월급을 받거나, 세금을 내거나, (러시아 커리큘럼에 따라 러시아어로) 아이들을 가르친 관료, 사업가, 교사의 경우 ‘전후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70~50%에 이른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분열은 더 극심해지고 사회통합의 꿈은 더 요원해질 것이다.²⁸⁾

이처럼 사회 어디를 들여다봐도 전쟁을 지속할 이유 하나, 동력 하나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젤렌스키는

27)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 소장 파니오토와 러시아 반체제 지식인 야코벤코 (I. Yakovenko)의 유튜브 대담 중 인용. И. Яковенко, “Украина воюющая: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YouTube*, 14 сентября 2023.

28) V. Paniotto, “Possible Challenges National Reconciliation Will Face: How to Win a Lasting Peace?” *Materials of the 13th International Sakharov Conference* (May 18~19, 2023), p. 4 & 9.

<그림 5> 영토 양보 관련 우크라이나 여론 변화



‘국민 여론’을 근거로 타협 불가, 협상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거의 90%의 국민이 ‘영토를 모두 되찾기 전까지 절대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림 5의 좌측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전쟁이 진행된 상당 기간 국민 절대다수가 영토 양보 ‘찬성’보다 ‘반대’를 지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 1년 6개월 만에 영토 양보 ‘찬성’ 여론이 10%에서 19%로 두 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점은 ‘미발표’ 조사자료에서는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즉, 그림 5의 우측 그래프, 즉 (KIIS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레이팅그룹(Sociological group “Rating”)>이 2023년 11월 실시한 ‘비공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토의 완전한 수복 이전 평화협상) ‘반대 : 찬성’ 비율은 ‘48 : 44’로 팽팽히 맞선다.²⁹⁾ 변하지 않은 것

29) 그림 5의 좌측 그래프는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의 자료에 기반해 필자가 작성한 것이고, 우측 그래프는 우크라이나 반체제 신문인 <스트라나(Strana)>에 발표된 것이다. 2016년 창간한 <스트라나>는 우크라이나의 인기 온라인 매체 중 하나였으나, 2021년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사이트 폐쇄 및 접속 금지 처분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트라나>를 친러 매체로 비판하지만,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푸틴을 강력히 비판해 러시아에서도 접속이 금지된 점으로 미루어 친러 매체로 보기는 어렵다. KIIS, “Dynamics of

은 젤렌스키뿐이다.

IV. 국제정세 변화

전쟁 장기화, 대반격 실패, 제재의 부메랑 효과로 (특히 유럽에) 가시화된 경제 위기 등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초기의 열광과 전폭적 지지를 전쟁 피로, 승리에 대한 회의, 지원 무용론으로 변화시켰다.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하, ‘가자 전쟁’)으로 변화는 정점에 달했다. 세계의 관심과 자원이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두 전쟁의 비교를 통해 미국에 대한 반감이 글로벌 사우스와 중동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바이든은 러우 전쟁을 ‘가치’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맞서 세계의 단결을 호소해왔다. 이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를 향했다. 중국,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대다수 국가가 제재 동참은커녕, 그 빈틈을 활용해 전쟁 전보다 더 활발하게 러시아와 교류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선다. 러우 전쟁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이들 국가의 인식, 평가, 해법은 서방과 확연히 다른 방향을 취한다.

일례로 <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65%, 튀르키예인의 65%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진짜 이유’로 ‘우크라이나 수호’가 아닌 ‘서구 지배 유지와 미국

Readiness for Territorial Concessions to End the War As Soon As Possible”, Dec. 14, 2023; “Почти 45% украинцев высказались за окончание войны путем компромисса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трана, 3 декабря 2023.

안보 보호'를 꼽았다. 또 미국인의 71%, 유럽인의 66%가 러시아를 '적이나 경쟁자'로 인식한 반면, 중국인의 79%, 인도인의 80%, 튀르키예인의 69%가 러시아를 '우방이나 파트너'로 여긴다.³⁰⁾ 그렇다고 이들이 러시아 편인 것도 아니다. 모디(N. Modi) 총리의 말처럼 '인도는 인도 편'일 뿐, 이들은 사안과 의제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사이를 유연하게 오간다. 글로벌 사우스의 미들/스몰 파워'들의 이러한 다자동맹 전략은 미국발 냉전 서사를 교란하고, 진영화를 저지하며, 글로벌 지정학의 다극화를 견인한다. 이때 이들의 준거는 가치가 아닌 국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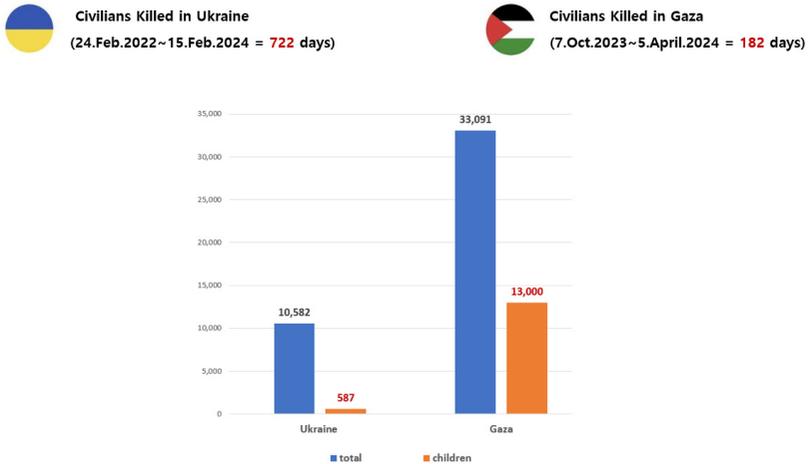
이에 바이든은 '규칙 기반 질서(rule based order)', 또는 인권, 생명, 민주주의 같은 가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및 서방과의 반러 연대가 그러한 가치와의 연대임을 거듭 주장해 왔다. 문제는 미국이 러시아에 적용한 가치의 잣대가 이스라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러우 전쟁과 가자 전쟁,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동일시될 수는 없으며, 먼저 침공한 러시아와 달리 이스라엘은 침략당한 입장이다. 하지만 가자 전쟁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응전에 반대하는 UN 결의안이 회원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침략자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하마스의 공격이 진공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 Guterres)의 말이 환기하는바, 이는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 2) 양측 피해 규모의 반복된 비대칭성, 3)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야기할 대량 참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은 러우 전쟁과 가자 전쟁의 민간인

³⁰⁾ T. G. Ash, I. Krastev, M. Leonard, "United West, divided from the rest: Global public opinion one year into Russia's war on Ukraine" *Policy Brief*, Feb. 22, 2023.

사상자 비교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된다. 아래 그림 6에서 드러나듯이,³¹⁾ 가자 전쟁 개시 후 ‘6개월간’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는 총 33,091명, 이중 어린이는 13,000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러우 전쟁의 경우, 전쟁 ‘2년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는 총 10,582명, 이중 어린이는 587명이다. 인구밀도나 전장의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6개월간의 전쟁 희생자가 2년간의 전쟁 희생자의 3배에 달하고, 어린이 희생자는 무려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공격의 무차별성, 역사적으로 반복돼 온 이-팔 피해 규모의 비대칭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전쟁 개시 후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이스라엘(1,139명)의 40배에 달한

〈그림 6〉 러우 전쟁과 가자 전쟁의 민간인 사상자 비교



31) 그림 6의 그래프는 다음의 자료에 근거해 필자가 작성한 것임.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in Ukraine during Russia’s invasion verified by OHCHR from February 24, 2022 to February 15, 2024” *Statista*, Feb. 23, 2024; “Israel-Gaza war in maps and charts” *Aljazeera*, April 5, 2024.

다. 2023년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가치의 편’을 주장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섰다. 전쟁 발발 직후는 물론이고, 가자가 ‘거대한 어린이 무덤’이 되고 있음이 명확해진 시점에조차 바이든은 “미국은 영원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례 없는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³²⁾ 물론 갈수록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비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들끓는 비판여론으로 인해 미국도 수위 조절에 나서기는 했다. 특히 라파 침공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네타냐후 정권 사이 이례적인 불화가 목격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 그중에서도 바이든은 특히 그렇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에 속한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 방문 시 바이든은 스스로를 ‘시오니스트(zionist)’라고까지 했다. 그는 가자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무기를 제공했다.³³⁾ 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자 지구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에 2023년 10월 18일과 12월 8일, 2024년 2월 20일, 3회 연속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 부결시켰고, 2024년 4월 18일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³⁴⁾

미국의 이러한 이중잣대와 위선에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 중동의 분노가 거세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국제인권법을 계속 무시하는데도, 이스라엘의 최고 동맹국인 미국 및 영국, 독일을 포함한 다른 나

³²⁾ J. Biden,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October 7th Terrorist Attacks and the Resilience of the State of Israel and its People”, Oct. 18, 2023.

³³⁾ 이스라엘은 2차대전 후 미국의 대외원조 최대수혜국으로 194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총액은 약 3,000억 불에 달한다. 이는 2위 이집트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그중 약 3/4이 군사원조에 쓰였다. J. Masters, W. Merrow, “U.S. Aid to Israel in Four Charts” Councils on Foreign Relations, April 11, 2024.

³⁴⁾ “U.S. Vetoes Resolution to Upgrade Palestine’s U.N. Membership” *Time*, April 19, 2024.

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행한 전쟁범죄를 규탄하면서도, ‘기괴한 이중 잣대(grotesque double standards)’를 적용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 당국의 행동은 기꺼이 지지했다”고 지적했다.³⁵⁾ 그 결과,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서방이 국제 규범이나 규칙을 보편적 방식이 아닌 지정학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증거”이며, “이런 모순을 인식하게 된 글로벌 사우스에서는...우크라이나에 지지세력을 모아주려는 유럽과 미국의 ‘규칙 기반 질서’라는 주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다.³⁶⁾

이 모든 변화는 러시아에 유리하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관심과 지원의 분산, 중동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이 독점해 온 도덕적 권위의 훼손, 가치의 패권의 침식이야말로 푸틴에게 가장 반가운 일일 것이다. 2023년 10월 5일 <발다이클럽(Valdai Club)> 기초연설에서 푸틴은 러우 전쟁의 목표를 ‘(영토 획득이 아닌) 새로운 세계질서의 기초가 될 원칙의 정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의 ‘규칙 기반 질서’의 자의성을 맹렬히 비난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 ‘정의로운 다극성’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원칙으로 제안했다.³⁷⁾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푸틴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의로운 다극성’, 또는 ‘국제사회의 민주화’는 미국 유일 패권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국가, 많은 문명이 공정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다극화된 국제관계를 말한다. 푸틴 주장의 요체는 러시아도 다극 중 하나로 인정되고 존중받고 싶다는 것이다.

35) “Post-1948 order ‘at risk of decimation’ amid war in Gaza, Ukraine” *Aljazeera*, April 24, 2024.

36) O. Stuenkel, “Why the Global South Is Accusing America of Hypocrisy: Many countries perceive a double standard in the West’s contrasting responses to Gaza and Ukraine” *Foreign Policy*, Nov. 2, 2023.

37) В. Путин, “Выступлен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 заседании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5 октября 2023.

하지만 미국식 가치의 패권이 아무리 오만하고 위선적일지라도, 전쟁으로 원칙을 세우려는 러시아를 누가 따르고 싶은 가치로, 모범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는가. 오히려 푸틴의 전쟁은 양차 대전 후 국제사회에 공유된 가장 중요한 원칙, 즉, 평화 군축에 대한 합의를 무장 해제시켜 버렸다. 러우 전쟁과 함께 군비 증강에 대한 성찰은 중단되고, 현재 너도나도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은 그간의 금기를 깨고 ‘전쟁국 무기 지원’, ‘GDP 2%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발표했다. 독일 지도부는 이를 ‘시대 전환’이라 명명했고, 하버마스는 이를 ‘2차대전 이래 독일 최대의 정체성 위기’로 탄식했다.³⁸⁾ 이미 아베 시절부터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지닌 보통국가화, 이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원했던 일본은 러우 전쟁 후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선제타격이 가능한 방위체제로 빠르게 전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냉전 종식 후 35년간 유지돼 온 핵 군축 기조도 뒤집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2022년 연감(Year Book 2022)>을 통해 ‘러우 전쟁으로 인한 핵전쟁 긴장 고조로 핵보유국들의 핵전력 증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장기간 이어진 핵무기 감축 추세가 종식될 징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³⁹⁾

그럼에도 가자 전쟁으로 새로 조성되고 있는 국제정세는 푸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미 대선에서 나토와의 불화, 푸틴과의 브로맨스로 유명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러우 전쟁 종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24시간 내 러우전 해결’을 장담해 왔는데, 얼마 전 한 외신은 그 비밀이 ‘우크라이나에

³⁸⁾ J. Habermas, “War and Indignation” *Süddeutsche Zeitung*, April 28, 2022.

³⁹⁾ “Global nuclear arsenals are expected to grow as states continue to modernize—New SIPRI Yearbook out now”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June 13, 2022.

영토 양보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⁴⁰⁾

V. 2024년 전망 및 평화협상 재개의 필요성

현재 러우 전쟁의 양상은 한국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전쟁이 끝나는 데 3년이 걸렸지만, 처음 1년여 사실상의 전쟁이 마감되고, 남은 2년은 한편으로는 휴전을 향한 지난한 협상, 다른 한편으로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치열한 고지전으로 채워졌다. 상술한 현재까지의 정세에 기반하면, 이변이 없는 한, 러우 전쟁도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초기 자주 거론된 5개의 종결 시나리오(① 크림형 종전, ② 코리아형 휴전, ③ 민스크형 연방화, ④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영토 회복, ⑤ 1991년 영토 회복) 중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전제로 한 마지막 3개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따라서 향후 전쟁은 남은 ①과 ②, 즉, 러시아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승리를 전제로 종전 또는 휴전의 분위기와 시점, 조건, 방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승기를 굳히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러시아가 추가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에 유리한 전세,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비무장화, 탈나치화라는 3대 전쟁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푸틴의 발언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 규모는 현재의 점령지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돈바스의 점령률을 높이거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로 회랑을 더 촘촘히 메우는 수준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어떤 경우든 2024년도 우크라

⁴⁰⁾ I. Arnsdorf, J. Dawsey, M. Birnbaum, "Inside Donald Trump's Secret, Longshot Plan to End in Ukraine" *Washington Post*, April 11, 2024.

이나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며,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즉각적인 전쟁 중단, 평화협상 개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초토화, 1/5에 달하는 영토 상실, 실패한 대반격, 무기와 병력 고갈, 심각한 인구 위기, 부패한 통치 시스템, 땅에 떨어진 국민 사기, 극우 민족주의의 확산과 극심한 사회분열 등, 이대로 전쟁이 이어질 경우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이 재개되고, 설령 더 강력한 군사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총이 있어도 쏘 사람이 없는’ 현재의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국민의 무의미한 희생만 초래할 뿐이다.

‘미국의 양심’ 촘스키(N. Chomsky)는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일관되게 ‘무기 지원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를 주장해 왔다. 그가 보기에 전쟁 종식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교전국 중 일방의 치명적 파괴, 또는 협상이 그것이다. 전자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파괴를 의미하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인이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라!’고 거듭 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파괴하라’는 현재의 구호는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보호하라’가 되어야 하며, 즉각 평화협상은 그 유일한 방법이다. 전쟁 초기부터 일관된 촘스키의 이러한 주장은 전쟁 3년차를 맞은 우크라이나의 참상 앞에서 더욱 적실한 울림을 준다.⁴¹⁾

‘유럽의 양심’ 하버마스(J. Habermas) 역시 링 ‘밖’에서 ‘이겨라!’를 연호하는 서방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스스로 무기를 들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경건한 자기기만(pious self-deception)’이며, ‘호전적인 전쟁 독려는 ‘관람석’에서 할 짓이 아닌 것’이다. 하물며 이길 수

41) “Noam Chomsky and Jeremy Scahill on the Russia-Ukraine War” *Intercept*, April 14, 2022; D. Mc Elroy, “Chomsky’s nuclear war fear: Fight to last Ukrainian or choose Macron’s dialogue path” *National*, April 8, 2022.

없는 전쟁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반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발리바르 류의 ‘평화주의 포기’ 선언과 무기 지원 찬성을 하버마스가 ‘잘못된 전향’으로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방은 무기 지원으로 이미 전쟁에 연루되었고, ‘무기 지원은 그것이 초래한 죽음과 파괴에 대한 책임의 공유(shared responsibility)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그러한 책임의 일환으로 하버마스는 더 이상의 전쟁 독려를 멈추고 ‘협상을 호소’할 것을 제안한다.⁴²⁾

두 ‘양심’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정의 구현’과 ‘핵전쟁 회피’라는 서로 충돌하는 목표를 모두 얻기 위해, 대신 돈과 무기를 대주며 모든 짐을 우크라이나 국민에 지우는 것은 가혹하거나 비겁하다. 직접 참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무기는 제공했으나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은 자’의 책임과 윤리가 향해야 할 곳은 ‘우크라이나를, 그 국민을,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협상 호소야말로 진정한 가치의 편에 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전쟁 3년 차를 맞아 즉각 전쟁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의 필요가 더욱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다.

■ 접수: 2024년 5월 2일 / 심사: 2024년 5월 29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⁴²⁾ 9.11테러의 여파로 개시된 이라크 전쟁(2003)부터 파리 테러(2015)에 이르기까지 발리바르는 평화주의 원칙에 입각해 <테러와의 전쟁 ‘반대’>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으나, 러우 전쟁에 이르러 이를 ‘정리로운 전쟁’으로 규정하며 평화주의 포기를 선언하고 무기 지원에 찬성한 바 있다. 하버마스는 발리바르의 이러한 변화를 “예전 평화주의자들의 전향은 실수와 오해들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러우 전쟁에 대한 양자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J. Habermas, “War and Indignation”; J. Habermas, “A Plea for Negotiations” *Süddeutsche Zeitung*, Feb. 14, 2023; M. Dejean, “Étienne Balibar: Le pacifisme n’est pas une option” *Mediapart*, March 7, 2022 참조.

【참고문헌】

- 박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외경제 현황 및 대안정책 분석』, 서울: 코트라, 2023.
- 박준상, 「北, 러시아에 수백만발 포탄·미사일 넘기고 식량 받았다」 『국민일보』 (온라인), 2024년 2월 27일, <<https://v.daum.net/v/20240227172305992>>.
- Arnsdorf, I., Dawsey, J., Birnbaum, M. “Inside Donald Trump’s Secret, Longshot Plan to End in Ukraine” *Washington Post*, April 11, 2024,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4/04/05/trump-ukraine-secret-plan/>>.
- Ash, T. G., Krastev, I., Leonard, M. “United West, divided from the rest: Global public opinion one year into Russia’s war on Ukraine” *Policy Brief*, Feb. 22, 2023, <<https://ecfr.eu/publication/united-west-divided-from-the-rest-global-public-opinion-one-year-into-russias-war-on-ukraine/>>.
- Biden, J.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October 7th Terrorist Attacks and the Resilience of the State of Israel and its People”, Oct. 18, 20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10/18/>>.
- Burridge, T. S. “Ukraine taking heavy casualties 10 weeks into its counteroffensive” *ABC News*, Aug. 18, 2023,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ukraine-taking-heavy-casualties-counter-offensive-soldiers/story?id=102347740>>.
- Carlson, T. “Into the abyss: Colonel Douglas Macgregor tells us why the Ukraine war must end now” *Twitter*, Aug. 22, 2023, <<https://twitter.com/TuckerCarlson/status/1693761723230990509>>.
- Cancian, M. F., Park, C. H. “Can South Korean 105-Millimeter Ammunition Rescue Ukrain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2, 2024, <<https://www.csis.org/analysis/can-south-korean-105-millimeter-ammunition-rescue-ukraine>>
- Cooper, H., Gibbons-Neff, T., Schmitt, E., Barnes, J. E. “Troop Deaths and Injuries in

- Ukraine War Near 500,000, U.S. Officials Say” *New York Times*, Aug. 18, 2023, <<https://www.nytimes.com/2023/08/18/us/politics/ukraine-russia-war-casualties.html>>.
- Copp, T. “Ukraine will be outgunned by Russia 10 to 1 in weeks without US help” *AP News*, April 11, 2024, <<https://apnews.com/article/ukraine-russia-war-ammunition-military-b263dfaceef57fb2c1f74c53861734da>>.
- Gamio, L., Swanson, A. “How Russia Pays for War” *New York Times*, Oct. 30, 2022,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2/10/30/business/economy/russia-trade-ukraine-war.html>>.
- Habermas, J. “A Plea for Negotiations” *Süddeutsche Zeitung*, Feb. 14, 2023, <<https://www.sueddeutsche.de/projekte/artikel/kultur/juergen-habermas-ukraine-sz-negotiations-e480179?reduced=true>>.
- Habermas, J. “War and Indignation” *Süddeutsche Zeitung*, April 28, 2022, <<https://www.sueddeutsche.de/projekte/artikel/kultur/the-dilemma-of-the-west-juergen-habermas-on-the-war-in-ukraine-e032431?reduced=true>>.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May 28, 2023,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russian-offensive-campaign-assessment-may-28-2023>>.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April 5, 2024,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russian-offensive-campaign-assessment-april-5-2024>>.
- “Israel-Gaza war in maps and charts: Live tracker” *Aljazeera*, 5 April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longform/2023/10/9/israel-hamas-war-in-maps-and-charts-live-tracker>>.
- “J. Mearsheimer: Ukraine War is a Long-term Danger” *GreyZone*, 30 July 2023, <<https://thegrayzone.com/2023/07/30/john-mearsheimer-ukraine-war-is-a-long-term-danger>>.
-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Directions of Affairs in the Country and Trust in Political, Military and Public Figures”, Feb. 15, 2024, <<https://www.kiis.com.ua/?lang=eng&cat=reports&id=1368&page=1>>.
-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Dynamics of Readiness for Territorial Concessions

- to End the War As Soon As Possible”, Dec. 14, 2023,
 <<https://kiis.com.ua/?lang=eng&cat=reports&id=1332&page=2>>.
-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Dynamics of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in 2021-2023”, Dec. 18, 2023,
 <<https://kiis.com.ua/?cat=reports&id=1335&lang=eng&page=1>>.
- Lillis, K. Bo, Bertrand, N., Liebermann, O., Britzky, H. “Russia producing three times more artillery shells than US and Europe for Ukraine” *CNN*, March 10, 2024,
 <<https://edition.cnn.com/2024/03/10/politics/russia-artillery-shell-production-u-s-europe-ukraine/index.html>>.
- Masters, J., Merrow, W. “U.S. Aid to Israel in Four Charts” Councils on Foreign Relations, April 11, 2024,
 <<https://www.cfr.org/article/us-aid-israel-four-charts>>.
- Mayberry, K. “A new and terrifying world: Kim and Putin to meet again in Russia” *Aljazeera*, Sep. 12, 2023,
 <<https://www.aljazeera.com/news/2023/9/12/a-new-and-terrifying-world-kim-and-putin-to-meet-again-in-russia>>
- Melanovski, J. “Ukrainian forces on defensive as “counteroffensive” ends in failure, mass casualties” *WSWS.ORG*, Oct. 21, 2023,
 <<https://www.wsws.org/en/articles/2023/10/21/wgcu-o21.html>>.
- Mirovalev, M. “Strategic objectives not achieved: Has Ukraine’s counteroffensive failed?” *Aljazeera*, Nov. 7, 2023,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1/7/russia-looks-stronger-and-has-a-four-fold-advantage-in-manpower>>.
- “NATO Admits It Is Running Out of Ammunition” *Newsweek*, Oct. 4, 2023,
 <<https://www.newsweek.com/nato-russia-ukraine-ammunition-bauer-1832059>>.
- “Noam Chomsky and Jeremy Scahill on the Russia-Ukraine War” *Intercept*, April 14, 2022, <<https://chomsky.info/20220414/>>.
- Elroy, D. Mc. “Chomsky’s nuclear war fear: Fight to last Ukrainian or choose Macron’s dialogue path” *National*, April 8, 2022,
 <<https://www.thenationalnews.com/international/>>.
- Paniotto, V. “Possible Challenges National Reconciliation Will Face: How to Win a Lasting Peace?” *Materials of the 13th International Sakharov Conference*, May

- 18~19, 2023, <<https://kiis.com.ua/?lang=eng&cat=reports&id=1237>>.
- “Post-1948 order ‘at risk of decimation’ amid war in Gaza, Ukraine” *Aljazeera*, April 24, 2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4/24/post-1948-order-at-risk-of-decimation-amid-war-in-gaza-ukraine-amnesty>>.
- Samoiliuk, M. “Ukraine War Economy Tracker” Centre for Economic Strategy, April 15, 2024, <<https://ces.org.ua/en/tracker-economy-during-the-war/>>.
- Santora, M. “Ukraine Fires Top Military Enlistment Officers After Bribery Scandal” *New York Times*, Aug. 11, 2023, <<https://www.nytimes.com/2023/08/11/world/europe/ukraine-fires-recruitment-chiefs.html>>.
- Song, Sang-ho. “S. Korea indirectly supplied more 155-mm shells for Ukraine than all European countries combined: WP” *Yonhap News*, Dec. 5, 2023, <<https://en.yna.co.kr/view/AEN20231205000300315>>.
- Statista,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in Ukraine during Russia’s invasion verified by OHCHR from February 24, 2022 to February 15, 2024”, Feb. 23,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3492/ukraine-war-casualties>>.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Global nuclear arsenals are expected to grow as states continue to modernize—New SIPRI Yearbook out now”, June 13, 2022, <<https://www.sipri.org/media/press-release/2022/global-nuclear-arsenals-are-expected-grow-states-continue-modernize-new-sipri-yearbook-out-now>>.
- Stuenkel, O. “Why the Global South Is Accusing America of Hypocrisy: Many countries perceive a double standard in the West’s contrasting responses to Gaza and Ukraine” *Foreign Policy*, Nov. 2,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11/02/israel-palestine-hamas-gaza-war-russia-ukraine-occupation-west-hypocrisy/>>
- “The EU’s €50B for Ukraine is basically nothing” *Politico*, Feb. 6, 2024, <<https://www.politico.eu/article/eu-ukraine-aid-war-50-billion/>>.
- “The Surprising Resilience of the Russian Economy” *Financial Times*, Feb. 3, 2024, <<https://www.ft.com/content/d304a182-997d-4dae-98a1-aa7c691526db>>.
- “The U.S. Vetoes Resolution to Upgrade Palestine’s U.N. Membership” *Time*, April 19,

- 2024, <<https://time.com/6968956/us-veto-vote-palestine-full-un-membership/>>.
- Toporowski, J. “The War in Ukraine and the Revival of Military Keynesianism”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 Jan, 9, 2023, <<https://www.ineteconomics.org/perspectives/blog/the-war-in-ukraine-and-the-revival-of-military-keynesianism>>.
- US Department of State, “Responding to Two Years of Russia’s Full-Scale War On Ukraine and Navalny’s Death: Fact Sheet”, Feb. 23, 2024, <<https://www.state.gov/responding-to-two-years-of-russias-full-scale-war-again-st-ukraine-and-aleksey-navalnys-death/>>.
- Wilson, J. “Bribes and hiding at home: the Ukrainian men trying to avoid conscription” *Guardian*, Aug. 15, 202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aug/15/bribes-and-hiding-at-home-the-ukrainian-men-trying-to-avoid-conscription>>.
-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2022, PPP”, Dec. 21, 2023, <https://databankfiles.worldbank.org/public/ddpext_download/GDP_PPP.pdf>.
- World Bank, “Poverty & Equity Brief: Ukraine”, Oct. 2023, <https://datacatalogfiles.worldbank.org/ddh-published/0064942/DR0092482/Global_POVEQ_UKR.pdf?versionId=2023-10-16T15:54:56.7074467Z>.
- Zaluzhny, V. “The commander-in-chief of Ukraine’s armed forces on how to win the war” *Economist*, Nov. 1, 2023,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3/11/01/the-commander-in-chief-of-ukraines-armed-forces-on-how-to-win-the-war>>.
- Zaluzhny, V. “Ukraine’s Commander-in-chief on the Breakthrough He Needs to Beat Russia” *Economist*, Nov. 1, 2023, <<https://www.economist.com/europe/2023/11/01/ukraines-commander-in-chief-on-the-breakthrough-he-needs-to-beat-russia>>.
- Zengerle, P., Cowan, R. “US Congress passes Ukraine aid after months of delay” *Reuters*, April 24, 2024, <<https://www.reuters.com/world/us/long-awaited-aid-ukraine-israel-taiwan-poi-sect-pass-us-congress-2024-04-23/>>.

“Зеленский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гос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РБК-Украина*,

28 ноября, 2023,

<https://www.rbc.ua/ukr/news/zelenskiy-pidpisav-zakon-derzhbyudzheta-2024-1701177601.html>.

Итоги года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14 декабря 2023,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72994>.

Левада-центр, “Конфликт с Украиной: массовые оценки марта 2024 года”, 4 апреля 2024,

<https://www.levada.ru/2024/04/04/konflikt-s-ukrainoj-massovye-otsenki-marta-2024-goda/>.

Левада-центр, “Массов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б Алексее Навальном”, 1 марта 2024,

<https://www.levada.ru/2024/03/01/massovye-predstavleniya-ob-aleksee-navalnom/>.

“Медведев заявил, что на Украине сейчас осталось лишь 19,7 млн жителей” *Тасс*, августа 31, 2023,

<https://tass.ru/politika/18625311?ysclid=lv3n37cq8d309642610>.

“Минобороны РФ: 100 тыс.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подписали контракт с начала года” *Известия*, 3 апреля 2024,

<https://iz.ru/1676277/2024-04-03/minoborony-rf-100-tysiach-grazhdan-rossii-podpisali-kontrakt-s-nachala-goda>.

“Почти 45% украинцев высказались за окончание войны путем компромисса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трана*, 3 декабря 2023,

<https://ctrana.news/news/452009-dannye-oprosa-ukraintsev-kak-zavershit-voynu-s-uf.html>.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в России (2024)” *Википедии*,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в России (2024) — Википедия (wikipedia.org)>.

Путин, В. “Выступлени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а заседании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5 октября 2023,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72444>.

“Путин утвердил рост расходов на армию до рекорда со времен СССР” *Moscow Times: Русская служба*, 27 ноября 2023,

<https://www.moscowtimes.io/2023/11/27/putin-utverdil-rost-rashodov-naarmi>

yu-dorekorda-sovremen-sssr-a114367>.

Ягодкин, Д. “Рекордный результат Путина при самой высокой с 1991 года явке” *TASS*, 18 марта 2024, <<https://tass.ru/obschestvo/20263981>>.

Яковенко, И. “Украина воюющая: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YouTube*, 14 сентября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UXrdgbqGR_o>.

“Я не хочу, чтобы из Украины делали путинскую Россию” *Медуза*, 3 ноября 2023, <<https://meduza.io/feature/2023/11/02/ya-ne-hochu-chtoby-iz-ukrainy-delali-putinskuyu-rossiyu>>.

“Шойгу: ВСУ потеряли более 383 тысяч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 начала СВО” *Известия*, 19 декабря 2023, <<https://iz.ru/1675281/natalia-bashlykova/vopros-dveri-shtrafy-za-nedopusk-ga-zovshchikov-v-doma-vvedut-v-etom-godu>>.

Бортник, Р. “Коли і за яких умов в Україні відбудуться вибори: відповіді на запитання від Руслана Бортника” *Український інститут політики*, 19 жовтня 2023, <<https://uiamp.org/uk/koly-i-za-yakyykh-umov-v-ukrayini-vidbudutsya-vybory-v-idpovidi-na-zapytannya-vid-ruslana-bortnyka>>

“Дев'яносто відсотків за те, щоб не йти на жодні компроміси щодо території” *Gazeta.ua*, 23 серпня 2023, <https://gazeta.ua/articles/opinions-journal/_devyanosto-vidsotkiv-za-te-schob-ne-jti-na-zhodni-kompromisi-schodo-teritoriyi/1155243>.

Київський міжнародний інститут соціології, “Божевільні мрії про майбутнє: якою Україна може бути після війни”, 24 серпня 2023, <<https://www.kiis.com.ua/?lang=ukr&cat=news&id=1285&page=2>>

Київський міжнародний інститут соціології, “Історична пам'ять: результати соціологічного опитування дорослих жителів України”, січень 2023, <https://www.kiis.com.ua/materials/news/20230320_d2/UCBI_History2023_rpt_UA_fin.pdf>

Куделюк, А. “Як українці уникають мобілізації: начальник ТЦК розповів про найпопулярніші способи” *Знай.UA*, 3 травня 2023,

<https://kyiv.znaj.ua/456239-yak-ukrajinci-unikayut-mobilizaciji-nachalnik-tck-t-ozproviv-pro-nayropulyarnishi-sposobi>.

Український інститут майбутнього, "В Україні не буде кому створювати БВГТ" *Facebook*, 5 червня 2023,

https://www.facebook.com/UkrainianIF/posts/pfbid0pqD6x5cAbjv8v9qU4axREHnnT4wwAKetHck6BojV61Hog31gxx9gn29RLXPgUFvVl?locale=ru_RU.

"Українці краще ставляться до УПА, ніж до Бандери"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7 травня 2021, <https://www.pravda.com.ua/news/2021/05/7/7292752/>.

Фонд «Демократичні ініціативи» ім. Ілька Кучеріва, "Сприйняття загрози корупції громадянами: оцінка влади та вимоги до змін під час війни", 11 вересня 2023,

https://dif.org.ua/article/spriynyattya-zagrozi-koruptionsii-gromadyanami-otsinka-vladi-ta-vimogi-do-zmin-pid-chas-viyini#_Toc145094544.

Dejean, M. "Étienne Balibar: Le pacifisme n'est pas une option" *Mediapart*, Mars 7, 2022,

<https://www.mediapart.fr/journal/culture-idees/070322/etienne-balibar-le-pacifisme-n-est-pas-une-option>.

Russia-Ukraine War 2023 : Situation and Prospects

Lee, Moonyoung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2023, against the backdrop of a prolonged stalemate following the failure of Ukraine's counteroffensive operation, an important change occurred in the Russia-Ukraine war situation. These are 1) changes in the military power of both countries, 2) changes in domestic stability and public opinion, and 3)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se three-dimensional changes are unfolding in a closely intertwined manner, but in sharply contrasting ways for the two countries. First, unlike the early stages of the war, the damage from the current war of attrition is mainly occurring in the Ukrainian side, and its inferiority is confirmed in all factors including war expenditure, troops, combat proficiency, weapons, and logistics. Second, Russia enjoys economic stability through active exchanges with the Global South despite the West's high-intensity sanctions, and this is leading to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including high levels of support for Putin and the war. In contrast, Ukraine is in a crisis situation that threatens its survival,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its territory, the loss of up to 20% of its territory, a serious demographic crisis, a corrupt governance system, low national morale, the spread of far-right nationalism, and extreme social division. Lastly, with the

outbreak of the Israel-Hamas war in Gaza, global attention and assistance are rapidly shifting from Ukraine to Palestine, and antipathy towards the US is spreading especially in the Global South and the Middle East, creating an atmosphere favorable to Russia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s well. In addition, if Trump wins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it will be the most decisive factor in ending the Russo-Ukrainian War.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appeal for negotiation' proposed by N. Chomsky and J. Habermas, given the existential crisis faced by Ukraine and this is why the need to immediately stop the war and start peace negotiations is even more urgent at the present moment.

Keywords: Russia-Ukraine war, Israel-Hamas war (war in Gaza), Putin, Zelensky, Global South, territorial concessions, peace negotiations

이문영 (Lee, Moonyoung)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노이노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M. 바흐친의 대화주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 인문학과 평화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장보고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민간 남북교류협력 전망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국장)

I. 들어가며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북한은 남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접고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고, 남한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남북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소통 채널은 모두 끊어졌고,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작년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할 기초우

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다”고 말하며, ‘두 국가’ 기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매체에서 통일 관련 메뉴를 삭제했고, 대남 사업을 관장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연구자들은 민간단체의 카운터파트였던 민족화해협의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의 기관도 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 발 ‘두 국가’ 선언은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은 북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행보를 예측하느라 분주하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은 지금껏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해 일해 왔던 민간단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통일’과 ‘민족’을 앞세웠던 통일운동단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남측, 북측, 해외 등 3자 구조로 운영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의 ‘두 국가’ 선언 이후 향후 활동 기조 및 조직 운영과 관련, 오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자주통일평화연대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북지원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남북협력 민간단체¹⁾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남북협력사업과 여타 개도국·저개발국에서의 사업은 분명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남북협력 민간단체들은 그들의 활동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남북 주민의 직접 접촉과 협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해를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어왔다. 비록 ‘통일’과 ‘민족’을 앞세우지는 않는다 해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남과 북은 서로에게 특별한

1) 본고에서 ‘남북협력 민간단체’는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남한 민간단체를 의미하며 사회문화교류를 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제외한다.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지난 30여 년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II. 민간 협력사업, 남북 주민 간 직접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 증진

남북협력 민간단체는 1990년대 중반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조직된 ‘북한 동포돕기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당시까지도 공고했던 반공 정서로 인해 초기에는 정부와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계와 시민사회, 사회 원로들이 대거 합류, 지지 의사를 밝히며 북한 동포돕기운동은 범국민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시작되었기에 초기 활동은 식량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간은 국민 성금과 지자체 기금 등으로 마련한 밀가루, 옥수수, 쌀, 콩, 달걀 등을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였다.

민간의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선민후관’을 강조하며 민간이 남북교류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정부는 대북 창구단일화 등 그간 민간의 활동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를 풀었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을 보조하였다.

정부 차원의 시스템 변화와 함께 민간 대북지원의 성격도 점차 변화했다. 초기 민간의 대북지원은 식량이나 생필품 등 단일물자의 일회성 지원이 대부분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병원, 협동농장, 제약공장, 양묘장, 양식장 등 북측 사업장 중심의 개발협력성 사업으로 진화하였다. 한

번 주고 끝나는 일회성 물자 지원과 달리 개발협력 사업은 남북 주민의 접촉과 협력에 기반한다. 덕분에 협력사업을 통해 남과 북의 의사, 간호사, 건설 기술자, 농학자, 약제사, 양묘 기사 등 다양한 이들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필자가 일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만 해도 1998년 첫 방북 이후 지금까지 580회 이상 북한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연인원 6천 5백여 명의 남한 국민이 북한 땅을 밟았다.

민간 협력사업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 첫째, 비록 북한 주민 전체의 인도적 수요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민간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물자가 북측으로 지원되며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일조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차원의 무상 대북 지원은 9,235억 원,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 기금 지원 1,200억 원까지 합치면 총 1조 1천억 원이 넘는 물자가 민간 대북지원사업에 투입되었다.²⁾ 민간을 통해 북측에 지원된 물자는 식량, 영유아·산모를 위한 영양식은 물론, 비료·농자재·농기계 등 농업 물자, 필수 의약품과 병원 설비, 수술 도구 등 보건의료 물자, 모목,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자재 등 매우 다양했다.

둘째, 지식공유, 기술전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북한 주민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00년대 조선의학협회가 주최하고 남북한, 해외 동포 의사들이 참여했던 ‘평양 의학과학도론회’는 대표적인 지식공유 사업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농업, 보건의료, 양묘, 양어, IT 등 남북협력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전수가 이뤄졌으며, 제3국에서의 북한 기술진 연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2)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총괄」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마지막으로, 민간의 남북협력사업은 분단 이후 서로를 악마화했던 남북 주민이 서로를 ‘인간화’하는 계기였다. 남과 북의 주민들은 협력사업을 매개로 직접 만나 얘기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상호 이해와 화해의 기반이 되었다. ‘만남을 통한 변화’가 민간의 남북협력사업을 매개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물론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과 교류협력만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정치군사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군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신뢰는 남북 주민 간 긍정적 상호 작용(접촉, 대화, 교류,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민간의 협력사업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민간의 협력사업은 남북 당국의 강대강 대치 속에 오랜 기간 멈춰 있다. 일부 단체가 해외동포 단체와의 3자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의 방식이나 규모에서나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으니, 근시일 내 민간의 협력사업이 정상화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30여 년 전 민간이 ‘북한 동포돕기운동’을 시작할 때도 상황은 지금만큼이나 녹록치 않았다. 지금은 민간이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협력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을 직시하고 향후 활동을 준비해야 할 때다.

Ⅲ. 교류협력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2013년 유엔 군축회의 석상에서의 ‘대한민

국의 최종 파괴' 등, 북한의 거친 대남 발언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협상 과정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전술에서 비롯됐다면, 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두 국가 선언'은 더욱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예전 같지 않다. 과거에도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종종 형성됐지만, 민간 교류협력이 시작된 이래 지금처럼 노골화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때문에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조용히 설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중러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2016년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남북교류협력을 둘러싼 큰 변화 중 하나이다. 그 이전까지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5개의 대북제재 결의안(2321, 2356, 2371, 2375, 2397호)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강력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2018년 남측 정부가 구상했던 여러 협력사업이 좌초됐던 것도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다. 개인적으로 북한 말 '두 국가론'이 몰고 온 소란에 당황했던 이유는 '북한이 어떻게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을 별 개 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냐'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을 타국으로 인식해 왔던 한국 사회가 북한의 말 한 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 놀라웠다.

남한 사회 안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과 북을 별개 국가로 보는 시각이 만연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 말 '두 국가론'은 우리 사회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남북관계의 성격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아직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논의는 점차 정치권에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은 통일외교 분야 공약중 하나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 간 외교관계 수립’을 들고 나왔다. 시민사회가 주최한 ‘6개 정당 공약 평가 토론회’³⁾ 참석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남북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현실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고민해 온 많은 시민사회 활동가와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과거 필자는 시민사회 활동가, 북한 연구자, 철학자 등이 함께한 ‘남북관계 미래상’에 대한 콜로키움에 참여했었다. 거의 15년 전이었음에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30여명 참석자 대부분이 ‘통일 한반도’ 보다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남과 북’을 이상적인 남북관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통일보다 평화를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위협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통일’은 우리 일상의 안정을 흔드는 ‘위협’일 수 있다. 반면, 잠시였을지언정 우리가 누려보았던 ‘평화’는 ‘좋은 것’, ‘추구할만한 것’으로 인식된다. 결국 북한 발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평화’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2024년 4월 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 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의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사회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IV. 남북협력 민간단체의 중단기 활동 방향

남북협력 민간단체가 활동했던 지난 3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몇 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대적'이었지만,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다. 충돌의 가능성을 넘어, 어떤 이들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지경이라고 얘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협력 민간단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무력 갈등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교류도 협력도 화해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남북협력 민간단체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를 지향했다면, 지금은 '평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다.

1.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옹호 활동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며 남북의 완충 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남북 당국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사와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국방·군사 부문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개입에 한계가 있는 국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전쟁과 무력 충돌에서 자유로운 삶의 환경'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단기적으로 대북협력 민간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촉구해야 한다. 지난 4월 열린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정파 의원 모임의 구성 및 시민사회와의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한 바 있다. 대국회·대정부 옹호사업과 더불어 시민사회는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쟁 방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2. 다자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유지

남북 간 소통의 단절은 오해와 오판, 이로 인한 우발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 남북 소통 채널의 복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당분간 당국 간 대화 채널 복구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당국에 비해 훨씬 유연한 민간 채널을 활성화하여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민간은 북측과 만날 수 있는 몇몇 다자 플랫폼에 참여해 왔다.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 주최하고 남북한, 미국, 중국, 몽골, 일본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laanbaatar Process)’가 대표적인 예이다. 2018년부터 캄보디아 평화갈등학센터(Center for Peace & Conflict Studies)가 주최하는 연례 평화대화도 남북 시민사회가 만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공간이다. 그런가하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유엔 차원의 국제회의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다자틀 속에서 남북협력,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의 소통과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은 다자 플랫폼을 통한 남북 간의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3. 교류협력 제도 운영의 정상화와 남북협력사업 재개 추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남한 당국은 물론 남측 민간과의 모든 접촉, 교류, 협력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남한 당국도 작년 여름부터 민간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민간단체의 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서의 유엔으로의 송부를 거부하는 등, 민간의 대북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다.⁴⁾ 그간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온 교류협력 제도가 남북 당국의 대치 속에 무너지고 있다. 남북 협력 민간단체는 민관정책협의회 등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북측과의 접촉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대북 채널 복원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국경봉쇄가 풀리며 과거 민간 남북협력을 관장했던 북측 관리들의 중국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 선언 이후 이들의 소속이나 역할은 어떤 형태로든 변하겠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 민간은 대화와 협력 재개의 기회를 포착해 나가야 한다.

4.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

남북 관련 이슈는 그간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기보다 분열시키는 요인이었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도 요동쳤다.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 요구된다. 지난 2018년부터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평화·통일 비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다. 동 사회적 대화는 서울과 지역을 돌며 시민들의 대화 모임을 조직,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논의 주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한반도 평화와 미래 통일 체제의 모습, 통일 비용과 이익,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우선순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관계와 내부 역량, 그

4) 유엔은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면서도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대북지원을 진행하고자 하는 남한 민간단체는 우리 정부를 통해 면제 신청서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7월부터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유엔 북한 상주조정관실(UN Resident Coordinator Office DPRK)을 통해 면제 및 면제 연장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리고 인도지원과 경험 등 남북교류협력을 포괄한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대화의 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가며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V. 나가며

민간 남북협력이 활발하던 시기, 민간은 굳이 평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협력사업 자체가 남북 주민의 상호이해와 화해를 증진하는 평화운동이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웠다. 평화의 시간이 길어지며 통일로 연결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평화라는 기반이 없이 통일로 갈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협력 민간단체들은 평화, 통일, 남북관계 미래상에 대해 무언가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두 국가’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남과 북을 단순한 ‘두 개 국가’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은 남북을 ‘적대적’이고 ‘교전중인’ 두 국가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당장은 남북관계에서 ‘적대’와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활동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국회와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연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긴장 완화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북측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복구, 민간의 협력사업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남북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단순히 위기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두 국가’를 수용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필자가 꿈꾸는 미래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한 관계’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였다. (물론 남한은 여전히 이러한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특수 관계’ 하에서 다른 나라와는 가능하지만 남북 간에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았다. 남북 주민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상대에게 연락할 수도, 상대를 방문할 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다. 상대방의 방송, 언론, 출판물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제약을 가하는 국가는 북한 외에 어디도 없다. 이 ‘마이너스의 특수 관계’를 ‘플러스의 특수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 과거에도, 북한이 ‘두 국가’를 선언한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노력 속에서 우리 사회가 바라는, 남과 북 공히 지향하는 남북관계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예정 (Yi, Yehjung)

2003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활동을 시작, 남북보건의료사업, 회원사업, 정책옹호, 국제협력 등을 담당해 왔다. 2018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2년 동안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1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복귀하여 현재 사업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장보고

《겨레말큰사전》을 통해 본 남북 공동 국어사전의 위상과 과제

모순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는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간 사업회는 2015년 12월 이후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2021년 3월에는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을 실물 형태의 종이사전과 유사하게 제작하는 등 법정기한 내 사전을 완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겨레말큰사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족'의 주요 결정 요소 중 하나가 동일 언어인 만큼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문화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¹⁾ 이는 최근 통일부가 강조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 언어,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통일 한반도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²⁾ 이러한 의미와 평가에도 불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은 완성되지 못한 채 여전히 미결과제를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431>

1)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211>>.

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6136000504?input=1195m>>.

남겨 두고 있다.

I. 《겨레말큰사전》 편찬, 남북교류 협력사업 중 가장 접점이 많은 분야

한국 법체계상 북한은 적대의 대상이자 교류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 간 문화교류는 정치·군사 분야 남북관계에 종속되어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³⁾ 이러한 위축된 환경 속에서 필자가 일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이 겨레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는 사업인 만큼 남북관계 복원 시 활용되거나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 나아가 관련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고착될수록 문화예술을 매개로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체제에 기반하면서도 상대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진 문화예술의 장르적 특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간 남북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이후에도 극적인 관계 복원 및 화해 분위기로의 전환을 위해서 처음 물꼬를 튼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였기 때문이다. 그간 남북 모두 ‘문화’, ‘문화유산’ 등을 남북교류 협력사업 중 가장 접점이 많은 분야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정치적 갈등을 겪는 와중에도 비교적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했고, 남북 모두 이 분야의 사업은 여러 번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계속 이어왔다.⁴⁾ 남북관계 복

3) 김태경·이경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수평적 민관 협력, 기본 법제 정비, 초당적 최소합의」, 국회미래의제 23-13호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2023), 2쪽.

4) 박지영,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과 역사유물」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

원 시 예측하기 어려운 재개 시점 등 정황상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기존에 진행해 왔고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을 매개로 재개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두 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먼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 국어사전 편찬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회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차례 남북 간 회의를 서울, 평양, 금강산, 개성, 베이징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 조치 등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의가 중단되었으나 2014년 대북 조치가 유효한 상황에서도 11월, 공동회의를 금강산에서 재개한 이래 2015년까지 5차례의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있었다. 2004년 합의 이후 남북이 총 25차례의 공동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집필한 올림말(사전에 올려서 뜻풀이를 하는 말. ‘표제어’라고도 함.) 30만 7천여 개를 토대로 현재, 종이사전과 전자사전 편찬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의 궁궐터 ‘만월대’를 발굴하고 있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의 경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2011년 조사 이후 3년 동안 중단된 시기가 있었고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재개되었으며 이후 3년 만인 2018년에 제8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재개 당시 이 조사는 3년 만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남북 교류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해당 공동조사를 통해 금속활자 1점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와전 및 도자기 등 1만 7천 9백여 점의 유물을 수습하는 성과를 냈으며 2020년부터는 개성만월대 디지털기록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발굴 재개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⁵⁾

류혈력 이해하기』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199쪽.

5)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 <<http://www.manwoldae.org/>>.

II. 《겨레말큰사전》의 현황과 성과

현재의 남북관계 지형, 국제적 환경, 우리 사회 내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시각, 그나마 남북협력을 바라보던 우호적인 시각도 예전 같지 않아서 현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북 합의가 최우선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경우, 북과의 합의 없이 종이사전 발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선포한 데 이어 대남 기구 정리, 대남 추종 근절 등 남북 합의가 무의미해진 현 상황에서 사업 결과물이 법정기한 내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 추진 동력 상실 등 더 큰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업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공교롭게도 사업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19년을 돌이켜보니 크게 절반의 만남과 절반의 단절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공동회의 개최 시기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공동회의 미개최 시기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이니 중단과 재개의 반복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모두에게 충실한 시간과 버티는 시간으로 현장을 지켜온 듯하다.

1. 공동회의 개최 시기(2005~2015년)

이 시기 사업회는 총 25차례의 공동회의를 서울, 평양, 금강산, 중국(베이징, 다롄) 등에서 개최하였다. 공동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참가 인원 확정, 회의 장소 섭외, 회의 안건 채택, 반출입대상 목록화, 예산 계획, 신고 시스템 업무 등 회의 장소로 떠나기 직전까지 긴장의 연속이다. 준비과정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거나 보완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회의를 북



제25차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회의 개최(2015. 12., 중국 다롄)
(출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한에서 개최할 경우, 회의 장소는 곧 격리 장소를 의미하기도 해 심리적, 물리적 한계가 더 크게 와닿는다.

남북이 직접 교류하는 사업인 만큼 공동회의 참가 규모는 평균적으로 남북 총 30명 내외이고, 7박 8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회의 안건을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북 작업자 3, 4명으로 구성된 7개 공동 작업조를 꾸려 회의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공동회의 기간 내에 남북이 검토할 수 있는 원고는 최대 1만 8천여 개 정도이며, 사전에 최종적으로 실리게 될 합의 원고는 원고당 2번 이상 남북의 교차 검토가 필요하다.



《겨레말큰사전》의 '1차 합의 원고'를 만드는 절차

(출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전 편찬 공정을 살펴보면, 남북이 사전에 수록하기로 한 올림말 30만 7천여 개를 대상으로 남한은 17만 5천 개, 북한은 13만 2천 개로 각각 배분하여 집필하였고, 남북이 맡은 분량을 모두 집필 완료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공동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원고는 총 12만 5천 개에 그친다. 각각 작업한 원고 18만 2천 개에 대한 합의와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 규범 합의가 미결과제로 남아있다. 법정기한 내 사전을 완간하기 위해서는 미결과제 해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위와 같이 미완의 숙제는 남아 있으나 이 시기 사업회가 얻은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⁶⁾ 남북은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2005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함과 동시에 제1회 공동회의를 금강산에서 개최한 이후 총 25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전에 실을 올림말 총 30만 7천 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올림말의 분포를 보면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올림말 165,773개(54%), 남한에만 있는 올림말 112,236개(36%), 북한에만 있는 올림말 29,804개(10%)이다. 올림말 총 30만 7천 개는 남북이 각각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전에서 선정한 올림말 23만 개와 새어휘(문헌어, 지역어, 신어 등) 7만 7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올림말은 남북이 공동으로 작성한 <올림말 선정 지침>에 근거하여 남북에서 실제 쓰는 말들로 선정되었다. 쓰임이 없는 순화어와 이념적인 올림말(선군정치, 주체사상교양, 혁명선배 등), 고유명사(만경대, 백두산밀영 등)는 신지 않기로 했다.

남북은 위와 같이 선정된 올림말 중 기존 올림말 23만 개를 동등하게 배분하여 집필하였는데, 남한은 “ㄱ, 口, ㅇ, ㅈ, ㅊ” 부문을, 북한은 “ㄴ, ㄷ, ㄹ, ㅂ, ㅅ, ㅋ, ㅌ, ㅍ, ㅎ, ㅍ, ㅍ, ㅍ, ㅍ, ㅍ, ㅍ” 부문을 작업하였다. 새

⁶⁾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사업회 홈페이지; 모순영, 「김정은 시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과제와 전망」,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8).

어휘 7만 7천 개(남 6만 개, 북 1만 7천 개)도 각각 채집하고 집필하였다. 이외에도 공동회의에서 남북은 《겨레말큰사전》만을 위한 남북통일 표기 형태와 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자모 배열 순서 및 자모의 이름을 합의했다.

필자가 위와 같이 단어 선정부터 합의, 집필, 규범까지 세밀한 과정을 서술한 이유는 그만큼 사전 편찬 작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겨레말큰사전》은 남한 단독으로 사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대자인 북측위원회와의 공동 작업 시간이 필요하고, 만나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니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회 설립 초기부터 해외 지역어를 발굴하고 채집하기 위해 연변, 사할린,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길림성 연변 지역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쓰고 있는 지역어 3천 8백여 개를 사전에 수록하고 말뭉치(‘날말’이나 ‘문장’의 실제 쓰임을 파악하기 위해 시·소설·수필·신문·잡지 등을 모아 입력해 놓은 자료)를 구축하였다. 다만, 해외 지역어 반영 비중이 저조한 만큼 2012년 이후 중단된 해외 지역어 조사 재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사업회는 기회가 된다면 사업회 취지와 특성에 맞는 새로운 활로 모색 방안으로 국내외 재외동포 언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사업회는 이 ‘공동회의 개최 시기’에 사업 본연의 목적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남북 모두에게 《겨레말큰사전》이라는 역사적 사업의 가치가 충분히 빛날 수 있었던 시기였고, 남북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남북의 문화적인 공통점을 찾고, 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대내외 평가가 과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2. 공동회의 미개최 시기(2016~2024년)

역설적으로 이 시기 일선 현장은 가장 분주한 시기이다. 남북교류사업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남북이 만나지도 못하는데, 사업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다. 익숙한 질문이고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야속하기도 하고 무거운 질문이다. 필자의 답변은 이렇다. 이 시기 사업회는 공동회의 재개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회의 안건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북한이 작업을 기로 한 원고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일정 부분은 사업회가 분담해서 작업을 수행해야만 후속 작업이 진행되기에 당초 배분했던 업무보다 가중되는 상황이 잦다는 것이다.

이 시기 주력했던 작업은 그간 작업해 왔던 올림말 집필 원고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열·교정과 합의원고 정리 작업이다. 이 작업은 사전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으로 사업회 편찬 인력의 밀도 있는 작업이 요구된다. 사업회는 기존 말뭉치를 추가 구축하여 2017년까지 총 3억 어절을 확보하였고, 사전에 수록될 세밀화(삽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1만 1천여 점, 웹서비스 자료 구축, 신규 지역어 발굴, 신규 올림말 채집 및 목록 작성, 신규 전문용어 채집 및 분석도 병행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 제작에 사업회 모든 구성원이 집중했던 기간이다. 사업회 단독으로 집필·교열·교정, 합의 원고를 정리한 결과물을 토대로 2021년, 대북 협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1집 10권, 17,810쪽)을 완성하였다. 향후, 공동회의 재개 시 원고 합의 시간 단축 등 완건을 위한 잔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 혐의용 《겨레말큰사전》 가제본(21. 3.)

(출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업회는 2019년부터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시민 참여형’ 홍보사업으로는 2020년에 유튜브 채널인 겨레말TV를 개국했고, 온라인 홍보관도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는 ‘전국 겨레말 나들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겨레말문화학교 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남북 언어와 교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4회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개최(23. 11.)

(출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지난 2021년부터는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의제를 토대로 유네스코와 함께 매년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업회는 이 포럼을 통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각적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대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제 학술행사인 만큼 제3자의 중재 형식으로도 북한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편찬성과를 토대로 일반인이 남북 언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남녘말 북녘말>을 개발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언어』총서 등을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6월에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 통합본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편찬성과 결과물(생활용어 총서·소사전 발간, 스마트폰 앱 제작)

(출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022년에는 겨레말큰사전 북한 토박이말 자문단을 조직했다. 탈북민 전문가의 언어 적응 경험과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회의 재개 지원

에 따른 사전 편찬의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유사 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업회의 위기 돌파 노력에 자극받아 탈북민 자문단을 연이어 결성하기도 했다.

사업회는 공동회의가 재개되지 못하는 시기에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하였으나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활동 입지가 좁아질수록 남북 공동사업의 가치나 의미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필자는 통일 미래세대에게 통일 인식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이미 여러 통계 자료가 증명하고 있는 만큼 통일 의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 사업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현장 체험 학습 등 관심을 유도할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참고로, 사업회는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인천통일관, 제주통일관과 지역 기반 통일플러스센터 등에 남북한 언어 차이와 겨레말 퀴즈 콘텐츠를 전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Ⅲ. 사업회의 고유한 위상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남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언급되며(2005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200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편찬 지원을 재합의)⁷⁾ 그 의미와 성과를 평가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42309>>; 통일부, <<https://reunion.unikorea.go.kr/euni/home/pds/policylaw/iew.do?id=24&mid=SM00000130>>.

받은 사업이다. 또한 사업회는 통일부로부터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민간단체로 편찬사업회법 제정 이후 매년 공적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타 민간단체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은 민간단체 사업이 중장기 사업으로 진화한 주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간교류 사업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사업회의 고유한 위상은 역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교류 재개의 마중물이 될 사업으로 기대받고 있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의 남북 협력 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와의 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 사업회는 국제학술포럼을 통해 남북 언어문화 관련 국내외 학계 연계 및 협업을 추진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회는 궁극적으로 문화교류의 순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 내부 측면에서는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이 사용자 중심으로 편찬되는 만큼 실용성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기존의 교류사업 추진 시 남북관계 특수성이 고려되었으나 최근에는 국제정세 속의 보편적 통일사업으로서의 평가 및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통일 이후 언어문화생활 통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전으로 효용성이 큰 만큼 통일로 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전>이라는 분명한 성과물을 내놓는 작업 의미가 크다.

사업회법 제정은 사업추진의 핵심 동력이다. 남북교류 사업의 특성상 국가 보조, 공적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공청회 과정을 통해 법 제정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07년 4월 사업회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8) 김태경·이경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수평적 민간 협력, 기본

사업회는 정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만큼 기금 수령에 따른 공적 책임이 강조된다. 매년 정부 기조 및 통일부 업무추진 방향 이행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통일에 관해서는 점점, 연대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며 민간단체로서 정부와 국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전액 정부 기금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독자적 출구 모색 및 사업 확장의 한계에 직면하기 쉽다. 또한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퇴색되고 장기적으로 교류협력이 위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간단체 활동도 위축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

통일 방안 마련 시 《겨레말큰사전》의 실용성 및 효용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등 통일 미래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인식 제고보다는 통일문제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세대별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고 청소년의 통일 불필요 인식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 직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⁹⁾ 통일 미래세대에게는 실리적인 이유가 중시되고 있다.¹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남북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실용적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 제시가 요구된다. 남북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이익이 되는 교류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통일을 개인 생존 문제이자 공동체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미래세대

법제 정비, 초당적 최소합의」, 16쪽.

9) 2021년 통일부가 시행한 2030세대 통일인식 조사, 2021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2021년 인천광역시 평화통일인식 조사 등 참고.
10) 2023년 6월 7일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주최, 통일부 후원 'MZ 세대와 함께하는 통일미래 포럼' 내용 중 일부 참고.

가 통일 일부가 되어 스스로 통일에 대해 말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 미래세대가 공공이익을 중시하는 만큼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통일 사전은 사업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될 것이다.

IV. 사업회의 대처 방안과 과제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남북교류사업의 지속 취약성 관점에서 볼 때 정권 변화에 따라 정부 승인의 폭과 범위가 달라져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교류협력의 중단이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¹¹⁾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회의 경우, 사업추진 시 역대 정부별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정책 기조와 방향성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정부별로 구분하는 것이 현장에서선 무의미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토대로 오히려 남북관계 현안, 북·중·러 간 군사협력 강화, 대북제재, 국제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사업회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사업회법이 제정된 이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공동회의 총 25회를 모두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 때 남측 단독 사업은 추진되었으나 공동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예산 지원 및 대북정책 측면에서 중장기 사업은 정부별 차이점을 분석하기 쉽지 않다. 다만, 지금처럼 민관협력 현장의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현 상황에서

11) 김태경·이경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수평적 민관 협력, 기본 법제 정비, 초당적 최소합의」, 2쪽.

사업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사업회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른 가변적인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방안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물꼬’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 뜻갈래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예문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다’이다. 언제고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일, ‘남북교류의 물꼬’를 《겨레말큰사전》으로 틀 수 있기를 바라며 필자는 남북교류사업 현장 제일선에서 공동회의 재개 및 사업 속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참고문헌】

김태경·이경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수평적 민관 협력, 기본법 제 정비, 초당적 최소합의」, 국회미래의제 23-13호,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2023, 16쪽.

모순영, 「김정은 시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과제와 전망」,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8.

박지영,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과 역사유물」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199쪽.

개성만일대남북공동발굴 디지털기록관, <<http://www.manwoldae.org/>>.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https://gyeoremal.or.kr/>>.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211>>.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ewsId=48623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6136000504?input=1195m>>.

통일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policylaw/view.do?id=24&mid=SM00000130>>.

모순영 (Mo, Sun Young)

현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6년 사업회 설립 초기부터 일했으며 2014년 이화여대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건설팀 자문위원, '북한이탈여성지원과연대'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위원,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공저, 2018)이 있으며, 2021년 통일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평

텍스트의 유동성과 진실성

: 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2023)에 대한 서평

배개화 (단국대학교)

I. 서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은 에너지 및 원자재난으로 공장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1990~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1995년 말부터 북한에서 특정 계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급제가 중단되었다.¹⁾ 이 때문에 1998년부터 탈북자의 남한 입국이 급증하였다.²⁾ 이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1.202406.447>

- 1)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제7권 2호 (2005), 29~30쪽.
- 2) 대한민국정부에서 사용하는 탈북자에 대한 공식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947명 정도였으나, 2016년 11월에 3만 명을 넘긴 이후 2023년까지 약 3만 4천 명이 입국하였

와 동시에 탈북 관련 출판물도 점점 늘어났다. 이중에서 가장 양적으로 많은 출판물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경험이나 탈북 과정을 서사화한 수기-대부분 일대기 형식의 자서전이다. 탈북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도 꾸준히 출판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소설이다.³⁾ 탈북을 소재로 한 소설은 처음에는 남한 작가들이 주도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창작한 장편 소설이나 단편 소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이제 탈북작가가 쓴 ‘탈북을 소재로 한 소설’은 남한 문학의 서브 장르로 불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⁴⁾

탈북을 소재로 한 수기나 시 소설들이 축적되면서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탈북 문학’은 주로 ‘탈북을 소재로 한 시나 소설’을 가리킨다.⁵⁾ 하지만, 논자는 여기에 탈북자들이 쓴 수기(life-writing)도 포함하고 싶다. 탈북 수기는 개인의 ‘서사’라는 점에서 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쓴 시나 소설에 대한 연구로는 첫 번째 북한 이탈 현상을 다룬 ‘탈북 디아스포라’ 연구,⁶⁾ 두 번

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 3) 이영미,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문학정체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4집 (2016), 218쪽.
- 4) 여기에는 서울대 방민호 교수와 그의 프로젝트를 지원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기여가 크다.
- 5) 이런 관점을 취한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박덕규와 이성희가 편한 『탈북 디아스포라』가 있다. 박덕규·이은정 편저,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참조.
- 6) 고인환,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양상: 정철훈의 《인간의 악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37 (2010), 55~71쪽; 김효석,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현황과 가능성 고찰: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7 (2014. 3), 303~332쪽;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탈북 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4호 (2014), 1~21쪽; 권세영, 「탈북작가 장편소설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194쪽;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 52 (2017), 81~104쪽;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회』 16 (2017), 517~542쪽.

째 ‘북한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⁷⁾ 세 번째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에 관한 연구,⁸⁾ 네 번째 북한의 현실과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⁹⁾ 한국에서는 ‘수기’나 ‘자서전’과 같이 저자가 자신의 삶을 기술하는 것을 문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기의 출판량에 비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¹⁰⁾

-
- 7) 이경재, 「탈북 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 표상 연구」 『통일인문학』 76 (2018), 255~285쪽; 김영미, 「탈북 여성 작가 소설 속 (재)구성된 여성 주체의 의미」 『한국문학과 예술』 43 (2022), 59~91쪽; 서세림,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에 나타난 모성 인식」 『현대소설연구』 82 (2021), 227~254쪽; 연남경, 「탈북 여성 작가의 글쓰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1 (2017), 421~449쪽; 백지윤, 「탈북 작가의 ‘몸’ 형상화와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 김유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4 (2017), 125~147쪽.
- 8) 방민호, 「수용소 문학에 관하여: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수용소 군도>, <인간보독소>를 중심으로」 『문학의 오늘』 8월호 (2018.8), 376~408쪽; 정하늬, 「탈북작가 도명학과 이지명의 단편 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통일인문학』 69 (2017), 33~64쪽; 박덕규, 「북한 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의 의미: <고발>과 <잔혹한 선물>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7권 3호 (2018), 63~86쪽; 서세림, 「탈북 작가들의 시에 나타난 ‘먹는 행위’의 의미 연구」 『영주어문』 44 (2020), 173~199쪽.
- 9) 이지은, 「유동하는 텍스트와 북한 재현 양상: 반디의 <고발>과 테보라 스미스의 번역 *Accusation*」 『춘원연구학보』 13 (2018), 497~532쪽; SEEMA, 「탈북 작가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 양상 연구」 『춘원연구학보』 24 (2022), 89~116쪽; 서세림, 「탈북 문학에 표상된 지식인」 『춘원연구학보』 13 (2018), 235~262쪽; 서세림,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8 (2017), 69~102쪽; 배개화, 「탈북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에서의 ‘시장 경쟁」 『현대소설연구』 88 (2022), 215~246쪽; 배개화, 「탈북자 소설을 통해 본 북한의 시장사회주의와 경제 현실」 『비평문학』 91 (2024), 77~109쪽.
- 10) 배개화, 「한 탈북여성의 국경 넘기와 초국가적 주체의 가능성」 『춘원학보』 11 (2017), 209~236쪽; 배개화, 「탈북의 서사화와 문학적 저널리즘: 장하성과 지현아의 탈북수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7 (2017), 231~261쪽; 서세림, 「탈북자 수기에 나타난 감정과 도덕」 『이화어문논집』 45 (2018), 159~185쪽; 김경연·황국명,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97 (2022), 89~128쪽.

탈북자들의 출판물이 증가하면서 탈북을 서사화하는 것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¹⁾ 예를 들어 서세림은, 탈북 작가들이 수기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개입은 이들의 글쓰기에 왜곡이나 과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는 신동혁의 *Escape from Camp 14*를 독자들의 기대와 출판사의 상업적 이해, 그리고 탈북자 자신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욕망 등이 결합하여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 사례로 제시한다.¹²⁾ 배개화도 동일한 탈북자가 쓴 수기들임에도 작품에 따라서 탈북의 의미가 바뀐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장진성은 첫 번째 수기에서는 남한 출판물을 읽은 것이 우연히 보위부에 발각되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그는 영어로 출판된 두 번째 수기 *Dear Leader*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탈신비화를 전경화 하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체제 비판자의 탈출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또한 지현아는 전형적인 탈북 이주자이지만 자신의 탈북을 국가 폭력을 외부세계에 폭로하기 위한 것으로 재의미화 한다.¹³⁾

이지은은 ‘유동하는 텍스트’(fluid text)란 관점에서 단편소설집 『고발』이 미국에서 *Accusation*로 번역 출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텍스트의 변형을 분석하였다. ‘유동하는 텍스트’란 작가의 초안, 출판사의 교정판, 개정판, 영화 각색 등과 같이 여러 버전으로 존재하는 문학 작품을 의미한다.¹⁴⁾ 『고발』은 ‘반디’로 알려진 북한 거주 작가가 고난의 행군 동안 창

11) 서사는 사건들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특정한 방식이다. 즉, 작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함-플롯을 만듦-으로써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서사로 만든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사실적 혹은 허구적 사건들은 재배열된다. 이에 따라 경험 혹은 관찰된 사건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12) 서세림, 「탈북자 수기에 나타난 감정과 도덕」, 162, 165~168쪽.

13) 배개화, 「탈북의 서사화와 문학적 저널리즘」, 235쪽.

14) 이지은, 「유동하는 텍스트와 북한 재현 양상」, 500~501쪽.

작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소설들로서 작가가 탈북자를 통해서 작품을 남한으로 보낸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지은은 『고발』에 수록된 작품들의 특정 부분들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국 독자의 기대에 맞게 북한의 ‘불량 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하였다.¹⁵⁾ 이러한 변형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가 접촉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그 사회가 텍스트를 의미화하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본 서평이 소개하는,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도 ‘유동하는 텍스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작가 설송아는 2011년 북한을 이탈한 여성으로서 평양 근교 ‘평성’에서 장마당 활동을 하였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단편 소설들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작가는 여주인공 ‘진옥’이 등장하는 단편소설 4편, 즉 「진옥이」(2015), 「초상화 금고」(2018), 「인생 열차표는 비싸지 않았다」(2020), 그리고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2021)를 묶어서 장편소설 『태양을 훔친 여자』(2023)를 출판하였다. 네 편의 단편소설이 장편소설로 개작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내용의 변형이 있다. 이러한 변형은 잠재 독자 및 출판사의 상업적 이해와 타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양을 훔친 여자』에는 이런 타협에도 불구하고 변형될 수 없는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서평은 이 두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탈북 서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말해진 서사,’ 즉 독자의 기대에 맞게 생산된 그래서 내용이 예측 가능한 서사가 아니게 될 가능성을 탐색하겠다.¹⁶⁾

15) 위의 글, 515~526쪽. 인류학자인 김선경은 탈북자들의 TED 강연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녀에 따르면, “북조선 출신자의 고통에 관한 자서전 산업이 미국 사회에서 확장되면서 상업적 가치의 맥락에서 필자와 강연자가 선정”되며, 탈북자들은 듣고 싶은 것-북조선의 악마화와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으로서의 탈북자이 명확한 시장이 선호하는 이야기를 제공해야 한다;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창비, 2020), 212~214쪽.

16) 김경연·황국명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조사’를 거치면서

II. 『태양을 훔친 여성』의 텍스트 변형

이 장에서는 먼저 출판된 네 편의 단편소설과 『태양을 훔친 여자』(2023)를 비교하여 변형이 일어난 부분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논평이나 잠재 독자에 대한 작가의 고려가 작품의 변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겠다.

우선, 설송아의 단편소설들은, 주인공 ‘진옥’이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를 이용하여 장마당 상인에서 ‘외화벌이 회사 사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주인공 진옥은 1996년 이후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가 진행되자 장마당에서 휘발유를 트럭운전수에게 판매(「진옥이」)하며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형성한다. 2003년 5월의 종합시장 상설화 조치 발표 이후, 그녀는 항생제를 집에서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여 큰돈을 모으지만 남편의 고발로 보위부에 체포된다(「초상화 금고」). 그녀는 1년 동안 교화소에서 복역한 후에 장마당으로 복귀하여 기차를 이용한 야채 되걸이 장사·원산지와 판매지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장사를 한다(「인생 열차표는 비싸지 않았다」). 진옥은 평성지역 검사와 후원 관계를 맺고 그의 보호하에 돈주로 성장한다. 그녀는 시멘트 속에 수출 금지 품목인 구리를 숨겨 신의주로 운반한 후 중국으로 밀매하여 큰 자본을 축적한다. 이후 2014년 5월 30일,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정부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발표하고 북한주민의 국영기업 운영 및 투자를 허용하자, 진옥은 개천철도국의 디젤기관차와 열차를 대여하여 ‘신의주-평양’ 간 여객열차 운행하는 ‘외화벌이 회사 사장’이 된다.

심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이 방법에 따라서 탈북자들은 자신의 탈북 서사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말해진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게 된다; 김경연·황국명,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100~102쪽.

이러한 줄거리는 『태양을 훔친 여자』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된다. 이 장편소설은 2015년 병든 딸을 위한 약을 구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봄순의 영혼이 1998년으로 돌아가서 인생 2회차를 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¹⁷⁾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는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이 태동해 발전하던 과도기”로서,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개혁이 있었다.¹⁸⁾ 이것을 기억하는 봄순은 사적 시장경제가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장마당에서 떡 장사를 하여 초기 자본을 축적하고, 1990년대 말부터 7.1 경제개혁 조치 때까지 트럭 운전수를 대상으로 휘발유 장사를 한다(「진옥이」). 2003년 5월의 종합시장 상설화 조치 이후에는 항생제를 불법 제조하여 시장에 도매로 공급하여 ‘돈주가 된다.’¹⁹⁾ 진옥처럼 봄순도 남편의 배신으로 보위부에 체포되지만 아버지의 로비로 경제범으로 교화소에 수감된다(「초상화 금고」). 1년 후 풀려난 봄순은 주유소 터에 아파트를 지어 1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다(추가된 내용). 2014년 5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공포를 기회로 봄순은 개천 철도국의 외화벌이 회사 사장이 된다(「평양 신의주 로또행 열차」).²⁰⁾

「진옥이」 시리즈와 『태양을 훔친 여자』는 큰 줄거리에서는 공통점이

17) 설송아 작가는 2011년 탈북하기 전 몇 년간 국가의 허가를 받은 외화벌이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설 작가는 ‘진옥’이라고 불리는 여주인공이 장마당의 시장 상인에서 당의 허가를 받은 외화벌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성장하는 네 편의 단편 소설을 출판하였다. 설송아는 이것을 합쳐서 『태양을 훔친 여자』를 출판했다: 설송아, 「진옥이」 『국경을 넘는 그림자』 (예옥, 2015), 221~250쪽; 「초상화 금고」 『꼬리없는 소』 (예옥, 2018), 219~256쪽; 「인생 열차표는 비싸지 않았다」 『원산에서 철원까지』 (예옥, 2020), 179~209; 「평양 신의주 로또행 열차」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예옥, 2021), 171~227쪽.

18) 설송아, 『태양을 훔친 여자』 (자음과 모음, 2023), 321쪽.

19) 위의 책, 129쪽.

20) 광인옥과 임을출에 따르면 평양에서 돈주는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가져진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다; 광인옥·임을출, 「평양 시장 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3권 (2016), 279~282쪽.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내용상의 변화가 있다. 우선 「진옥이」에서 진옥이가 자신의 성을 철저히 도구화하여 시장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 「인생 열차표는 비싸지 않았다」에서 채소 되걸이 장사를 하는 것, 「평양 신의주 로또행 열차」에서 진옥이 검사와 후원관계를 맺고 구리를 중국으로 밀매하는 것이 삭제된다. 대신에 『태양을 훔친 여자』에서 인생 2회차 봄순의 장마당 활동은 인생 1회차를 살면서 경험한 북한의 시장화 과정과 그에 대한 식견을 따라서 건전하게 이뤄진다. 또한, 단편소설에서 없는 진옥과 남편 이외의 남자들과의 낭만적 관계가 등장한다.

이런 변형이 일어난 것은 「진옥이」와 「초상화 금고」 등이 출판되었을 때, 연구자들로부터 일부 내용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세림은 「진옥이」에 대해서 “장마당 교환경제와 자본의 투입 과정이 성적 일탈행위와 함께 상당히 극단적으로 제시된다.”라고 비판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서세림은, 진옥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하여 출산이 압박해 오는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강제로 아이를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의식조차 돈의 힘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²¹⁾ 이경재 역시 “설송아 작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여성의 이악함이 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이라고 지적한다.²²⁾ 그는 성을 도구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여성(진옥)의 모습은 그 자체로 참된 인간성의 자리와는 한참 거리가 먼, 도구화된 부정적 인간 형상이라고 평가한다.²³⁾ 이러한 평가가 영향을 미쳐서인지 『태양의 훔친 여자』에서 관련 내용들이 다른 내용으로 대체된다.

우선, 진옥이가 자신의 성을 철저히 도구화하여 시장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에 비해 봄순은 상당히 건전한 상업 활동을 한다. 「진옥이」와 『태

21) 서세림,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88-89쪽.

22) 이경재, 「탈북 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 표상 연구」, 272쪽.

23) 위의 글, 275-276쪽.

양을 훔친 여자』의 여주인공은 공통되게 건설자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의 1급 국영기업의 설계실에 입사한다. 하지만 둘은 결혼 후 하게 될 장사의 밑천을 마련하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진옥의 장사 밑천-쌀 1톤-은 아버지가 준 것이다. 공장 노동자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경제력을 갖게 된 비결은 그녀가 간부 과장과 내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배정된 직장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옥은 간부 과장과 성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두 달 후, 그녀의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에서 경리과 창고장으로 승진한다. 배급 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갈 때, 진옥이 아버지는 4호 창고-군량미를 제외한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에 가득한 물자를 횡령하여 장마당에 팔아서 부를 축적한다. 이렇게 축적된 부의 일부는 진옥의 장사 밑천이 된다.²⁴⁾

반면에 『태양을 훔친 여자』의 여주인공 봄순은 김일성의 초상이 새겨진 2급 국기훈장을 팔아서 장사 밑천을 마련한다. 봄순은 수령의 충신이 되어 교화소에서 갇힌 아버지를 구하고 당원이 되기 위해서 ‘비오는 날 김일성의 동상이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씌어’주는 등 노력한다. 하지만 봄순은 이렇게 하여 받은 2급 국기훈장을 장마당에서 5천원을 받고 판다. 그리고 이 돈으로 ‘떡장사’를 시작한다. 이런 변형은 봄순의 목표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신에서 장마당의 돈주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봄순의 장사 밑천이 봄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은 건전한 성격의 것으로 바뀐 점이다. 또한 봄순도 진옥처럼 공장의 당서기인 승재와 성관계를 하지만, 장편소설에서는 이것이 성폭행으로 묘사된다. 당서기는 봄순의 아버지가 교화소에서 혁명화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녀를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아버지도 교화소에서 풀어줄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²⁴⁾ 설송아, 「진옥이」, 228쪽.

봄순은 상부 당에 공장 당서기의 성폭행을 신고하려고 한다. 이러한 변형에는 남한에서 직장 상사와의 성관계를 ‘위계에 의한 직장 내 성폭행’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여주인이 휘발유 장사를 위해서 국영 석유 공급소와 연줄을 만드는 방법도 변화가 있다. 「진옥이」에서 진옥은 국영 석유 공급소에서 몰래 기름을 판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시아버지의 연줄을 이용하여 석유 공급소 소장과 거래 관계를 만들기로 계획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과거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시아버지와 다시 성관계를 갖는다. 이후 시아버지는 석유 기름 공급소 소장을 만나 공장 자금 명목으로 암시장에 팔고 있는 석유 기름량을 머느리 앞으로 돌려주었다. 『태양을 훔친 여자』의 봄순도 휘발유 공급을 받기 위해서 과거 자신을 성폭행 했던 화학공장 당서기의 연줄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성관계가 아니라 금전적 뇌물이다.

여주인공이 남성 조력자와 맺는 관계에도 변화가 있다. 「진옥이」에서 진옥은 휘발유 장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자신의 첫 번째 손님이자 단골손님이 된 트럭 운전수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다. 그 대가로 트럭 운전수는 그녀에게 다른 트럭 운전수들을 손님으로 소개해 준다. 반면에 『태양을 훔친 여자』에서 봄순의 남성 조력자인 우진과 동찬은 휘발유 장사의 일공-직원으로 등장한다. 첫 번째 조력자인 우진은 봄순의 첫사랑이다. 우진은 봄순이 떡장사를 할 때 집에서 시장까지 리어커를 끌며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일제 자전거를 그녀에게 선물하였다. 두 번째 조력자는 꽃계비 출신의 동찬으로 운전사들을 손님으로 유치하고, 봄순이 남편 철육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그와 몸싸움을 하기도 한다. 둘은 공통되게 봄순의 ‘돈 벌 줄 아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봄순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성은 장편소설의 기본텍스트는 ‘삼각관계’라는 소설창작의 기본 구조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동시에 봄순과 조력자들의 낭만적 관계는 여주인공이 돈벌이를 위해 성을 도구화한다는

평가를 희석한다.²⁵⁾

또한 여주인공의 모성에 대한 묘사도 변한다. 「진옥이」에서 진옥은 휘발유 장사를 하던 중에 임신을 한다. 그녀는 출산과 양육이 장사에 방해가 될 것을 걱정하여 임신 8개월 된 아이를 낙태한다. 반면에 『태양을 훔친 여자』에서는 여주인공의 모성이 강조된다. 1회차 인생에서 봄순은 양젓물을 먹고 식도가 협착된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로 딸과 함께 사망한다. 2회차 인생에서 봄순은 앞으로 태어날 딸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비참하게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여 돈주가 되고자 한다. 하지만 봄순은 휘발유 장사를 할 때 남편의 구타로 유산을 한다. 이런 변형을 통해서 작가는 여주인공이 돈벌이를 위해서 모성이나 윤리적 의식이 마비되었다는 비평을 피해 간다. 대신에 작가는 여주인공을 모성이 풍부한 여성이자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묘사한다. 이런 모습은 남한에서 출판되는 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이자, 독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여주인공이 교회소에서 돌아와서 재기할 때의 내용

25) ‘욕망의 삼각형’은, 르네 지라르가 근대소설에서 주인공의 욕망이 직접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의 대상에 대한 욕망을 모방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이다. 그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플로베르의 『보바리부인』, 스탕달의 『적과 흑』,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나타난 욕망의 삼각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는 “근대소설의 모태 개념(l'idée-mère)은 ‘욕망의 삼각형’으로서 이것은 ‘소설적 소설’의 이론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서울: 한길사, 2002), 39~101쪽. 근대소설에서 욕망의 삼각형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삼각 연애’이다. 이 구조 속에서 주인공은 중개자의 연애 대상에 대한 욕망을 모방하여 그/그녀와 사랑에 빠지며, 대상을 두고 중개자와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 중개자는 소설 속에서 서브남자주인공 혹은 서브여자주인공으로 종종 등장한다. 이광수의 『무정』 이래로 한국의 장편소설은 ‘삼각 연애’를 기본 구조로 하여 그 위에 심리, 정치, 사회, 혹은 역사적 서사를 쌓아올린다.

도 변형이 일어난다. 「인생 열차표는 비싸지 않았다」에서 진옥은 교회소에서 출소한 후에 기차를 이용하여 야채 되걸이 장사·원산지와 판매지 사이의 가격 차이로 이익을 얻는 장사를 하다가, 기차를 이용한 장사의 원리를 터득한다. 즉, 그녀는 소규모의 보따리 장사보다는 화물칸 전체를 빌려서 규모가 큰 되걸이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파악한다. 후속작인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에서 진옥은 당시 신의주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시멘트 되걸이 장사를 한다. 여기에 더해 그녀는 국가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구리를 중국으로 밀매하여 큰돈을 번다. 진옥이 이처럼 평양과 신의주 사이를 오가며 국가에서 금지하는 구리를 밀매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과 후원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을 훔친 여자』에서 봄순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터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재기에 성공한다. 처음에 그녀는 대동강으로 가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직접 운반해 온다. 이후 그녀는 동찬을 건설반장으로 삼고 그의 조력하에 3.8노동을 나온 농민들과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완공한다. 그녀는 아파트를 개인들에게 분양하여 비용을 제하고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작가는, 봄순이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내용을 바꾼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서 설송아 작가는 『태양을 훔친 여자』의 여주인공 봄순이 단편소설의 여주인공 진옥이처럼 “성을 도구로 성공 가도를 달린다,” 혹은 “참된 인간성의 자리와는 한참 거리가 먼 도구화된 부정적 인간 형상을 보여준다”고 비판 받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동시에 작가는 장편소설의 성공 문법으로 통용되는 삼각연애 관계를 추가한다. 이러한 변형은 잠재 독자의 기대 및 출판 관행에 충실함으로써 상업적 성공을 얻으려는 작가의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Ⅲ. 텍스트의 변형에도 숨길 수 없는 것들

이상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단편소설들과 장편소설 사이에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여주인공의 신분상승 욕망과 결합된 ‘가치’ 변화이다. 북한 정부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발표하고 공정가격-정부에서 책정한 상품 가격-과 임금을 시장가격-더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에 맞추었다. 이에 따라 모든 상품의 공정가격을 시장가격에 맞춰서 25배 인상하고 노동자 임금도 20배 인상하였다.²⁶⁾ 7.1조치는 당시까지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배급하던 재화와 서비스가 ‘제 가치대로 계산’된 가격에 따라 판매되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돈 혹은 부로 바꾸었다.²⁷⁾ 고난의 행군 이전 북한에서 인간행위의 가치는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과 열의 등에 의해 측정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화폐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한 개인의 위세의 정도를 표현하는 기준이 되었다.²⁸⁾

이러한 가치 변화는 진옥과 봄순이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이다. 원래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진옥과 봄순은 북한 사회의 ‘가치’ 변화에 편승하여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한다. 진옥이 8개월된 아이를 낙태하기로 결심한 것도 “돈이 곧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봄순에게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봄순이 장사 밑돈을 마

26)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제7권 2호 (2005), 41쪽.

27) 민영기, 「화폐공동체의 성립과 수령공동체의 균열」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 (2014), 129~130쪽.

28) 위의 글, 131~132쪽.

련하기 위해서 충성의 상징이었던 '2급 국기 훈장'을 장마당에 파는 행동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다. 봄순이 훈장을 판 이유는 "이제는 출신 성분보다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하면 되는 거야."라는 믿음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옥과 봄순은 공통되게 현재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최상위 계층인 돈주가 되기를 열망한다. '부를 쌓아서 자신의 사회적 위세를 높이려는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베블린의 말처럼, 진옥과 봄순이 돈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돈을 벌면 벌수록 더욱 커진다.²⁹⁾

설송아 작가는 봄순을 진옥에 비해서 성적으로 정숙하고 사업을 건전하게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진옥과 봄순의 사업은 정부가 금지하는 불법 장사이다. 두 여주인공이 하는 사업은 '시장사회주의'(market-socialism) 국가에서 종종 발견되는 공정가격과 시장가격의 '병행가격체계'를 이용한 것이다.³⁰⁾ 국영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공정가격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다. 시장사회주의에서 상품의 공급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의 시장가격은 공정가격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상인은 공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격차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다. 진옥(「진옥이」)과 봄순도 병행가격 체계를 이용하여 장마당에서 휘발유 장사를 해서 상당한 돈을 번다. 휘발유 공급소의 공정가격과 장마당의 시장가격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인들은 휘발유 공급소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종합시장이 상설화된 이후 진옥(「초상화 금고」)과 봄순이 하는 항생제 가공업도 병행가격체계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이다. 코르나이

²⁹⁾ 소스타인 베블린, 이종인 번역, 『유한계급론』 (현대지성, 2018), 40쪽.

³⁰⁾ 야노쉬 코르나이, 차문석·박순성 역,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서울: 나남, 2019), 230~231쪽.

는 병행가격체계하에서 생산기업은 단지 생산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에 할당된 싼 투입물(원자재)을 다른 생산기업에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독특한 종류의 ‘중개자’로 활동한다고 말한다.³¹⁾ 이점은 「초상화 금고」와 『태양을 훔친 여자』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두 여주인공의 향생제 사업을 보면, 1차 생산기업인 화학공장 책임기사는 보조금이 포함된 싼 배양균 농축액(중간재)을 향생제라는 완제품으로 가공하지 않고, 봄순이라는 2차 생산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봄순은 화학공장 책임기사로부터 구매한 농축액을 가공하여 카나마이신 분말로 만든다. 그리고 이 분말을 시장에서 도매로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 그리고 소매상인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와 동시에 ‘진옥이’ 시리즈와 『태양을 훔친 여자』는 시장사회주의체제에서 관찰되는 ‘윤리적 조정 기제의 마비’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³²⁾ ‘진옥이’ 시리즈와 『태양을 훔친 여자』는 ‘세상은 불법으로 움직인다’라는 세계관을 반복해서 표현한다.

[개] “그리고 보면 세상은 불법 천국이야, 합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살아 숨 쉬는 것들이 다 불법 아닐까……”³³⁾

[내] “이 나라는 불법 천국이야. 합법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불법이야.”³⁴⁾

[개]는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에서 진옥이 한 말이고, [내]는 『태양

31) 위의 책, 231쪽.

32) 위의 책, 219~222쪽.

33) 설송아,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 179쪽.

34) 설송아, 『태양을 훔친 여자』, 295쪽.

을 훔친 여자』에서 동찬이 한 말이다. 발화의 주체가 바뀌기는 하였지만 인용문은 동일한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설송아는 『태양을 훔친 여자』에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은 경쟁에서 밀려났다. 반대로 불법의 틈새를 영리하게 이용해 장사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성공했다”라고 강조한다.³⁵⁾ 심지어 작가는 경쟁에서 승리한 봄순을 “법이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한다.³⁶⁾ 이러한 성격은 봄순의 ‘돈 벌 줄 아는 능력’의 원천이자 동찬이 그녀를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작가가 직접 말하는 봄순의 성격과 세계관은 작가가 잠재 독자들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행한 여러 가지 변형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설송아 작가는 북한에서 여성 돈주의 가치관과 성장 과정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제공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 중 하나가 경제의 최상위층에 오른 ‘돈주’에 대한 것이다. 특히 언론들은 ‘평양 모던’이라는 주제어 하에서 ‘돈주’ 계층의 재력과 소비 생활에 관음증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³⁷⁾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 4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돈주’는 소수이며 여성 돈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는 북한의 여성 ‘돈주’의 세계관과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5) 위의 책, 118~119쪽.

36) 위의 책, 287쪽.

37) 유강문, 「호화아파트 살며 사치…“돈주, 혼사 때 당 간부보다 인기”」 『한겨레신문』 2019년 4월 1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8142.html>>.

IV. 결론

설송아 작가의 단편 소설들은 주로 서울대의 방민호 교수와 평화통일 연구소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판된 탈북작가 단편소설집 시리즈에 실린 것이다. 이 시리즈는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출판되기 때문에 상업적 성공에 대한 큰 압박이 없이 출판되었다. 또한 한국 출판 시장에서 단편소설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작가도 이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태양을 훔친 여자』는 2022년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콘텐츠 창작지원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출판 지원 덕분에 설송아 작가는 이 장편소설을 남한의 상업 출판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출판할 수 있었다.³⁸⁾ 그런데 한국의 출판시장에서 장편소설은 단편소설에 비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둬 작가와 출판사에게 금적전 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설 작가나 출판사 측에서 출판을 준비하면서 이 소설의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 또한 설 작가가 밝힌 것처럼 출판 과정에서 한국 작가가 어드바이저로 개입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단편 소설 시리즈에서 날 것으로 묘사됐던 여성주인공의 ‘불법, 비법을 서슴지 않고 돈벌 줄 아는 여성’의 면모가 『태양을 훔친 여자』에서는 남한의 여성주의 소설의 익숙한 문법에 따라서 ‘모성이 풍부하고 남성 가부장과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여성’으로 포장된다.

『소설의 이론』에서 루카치는, 근대 소설은 주인공이 자신의 고유한 본질-개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그 외적 형식은 본질적으로 자서전적인

38)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네이버 블로그의 「설송아 작가 신작 『태양을 훔친 여자』 - 남북통합문화 콘텐츠 창작지원 공모 선정」, <https://blog.naver.com/uniculture_kr/223117529343> 및 통일부 홈페이지의 「소설에 그린 북한여성의 삶. 탈북민 설송아 작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mov/?boardId=bbs_000000000000123&mode=view&cntId=775&category=&pageIdx=8> 참조.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⁹⁾ 그리고 슈람케는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찾아가는 영혼의 이야기’라는 점에 현대소설의 시민성, 민주주의적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⁴⁰⁾ 설송아 작가가 ‘자신의 개별성’이 개진되는 소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남한출판계에서 통용되는 여성주의 소설의 문법과 탈북 서사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의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평자는 푸코적 개념인, ‘파레시아(parrhesia)’ 즉,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⁴¹⁾

그렇다면, 설송아 작가가 북한에서 돈주로 성장할 때의 경험을 허구화한 『태양을 훔친 여자』는 ‘파레시아’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일까? 서평자는, 여주인공을 독자의 입맛에 맞게 묘사하려는 작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여성 돈주’에 대한 진술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돈 벌 줄 아는, 그래서 신분상승에 성공한 여자’라는 자기 반영적 정체성을 여주인공의 형상에 일관되게 투사하고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작가가 그런 여주인공의 모습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서평자가 보기에 『태양을 훔친 여자』는 여러 가지 변형을 거쳤지만 남한 독자들 혹은 작가가 잠재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해외 독자들의 기대에 잘 맞아떨어지는 작품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서평자는 이런 어긋남 사이로 드러나는 진실성에 이 작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9)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9), 89~101쪽.

40) 위르겐 슈람케, 원당희·박병화 역, 『현대소설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5), 46~50쪽 참조.

41) 미셸 푸코, 오트르망 역, 『담론과 진실: 파레시아』 (파주: 동녘, 2017), 29쪽. 푸코는 파레시아는 고대 민주정 도시 국가의 특징이자 시민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슈람케에 따르면, 토마스 만이나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작가들은 현대소설의 시민성 민주주의적 특징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현대소설의 ‘파레시아’적 본질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9.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창비, 2020.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서울: 한길사, 2002.

미셸 푸코, 오토르망 역, 『담론과 진실: 파레시아』, 파주: 동녘, 2017.

설송아, 『태양을 훔친 여자』, 자음과 모음, 2023.

소스타인 베블린, 이종인 역, 『유한계급론』, 현대지성, 2018.

야노쉬 코르나이, 차문석·박순성 역,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서울: 나남, 2019.

위르겐 슈람케, 원당희·박병화 역, 『현대소설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5.

곽인옥·임을출, 「평양 시장 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3권, 2016, 279~282쪽.

김경연·황국명, 「경제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97, 2022, 89~128쪽.

민영기, 「화폐공동체의 성립과 수령공동체의 균열」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 2014, 113~146쪽.

배개화, 「탈북의 서사화와 문학적 저널리즘: 장하성과 지현아의 탈북수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17, 2017, 231~261쪽.

배개화, 「탈북자 소설을 통해 본 북한의 시장사회주의와 경제 현실」 『비평문학』 91, 2024, 77~109쪽.

배개화, 「탈북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에서의 ‘시장 경쟁」 『현대소설연구』 88, 2022, 215~246쪽.

서세립, 「탈북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8, 2017, 69~102쪽.

서세립, 「탈북자 수기에 나타난 감정과 도덕」 『이화어문논집』 45, 2018, 159~185쪽.

이경재, 「탈북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 표상 연구」 『통일인문학』 76, 2018, 255~285쪽.

이지은, 「유동하는 텍스트와 북한 재현 양상: 반디의 <<고발>>과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Accusation」 『춘원연구학보』 13, 2018, 497~532쪽.

유강문, 「호화아파트 살며 사치…“돈주, 혼사 때 당 간부보다 인기”」 『한겨레 신문』
2019년 4월 1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8142.html>>.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배개화 (Bae, Gaehwa)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임화, 이태준 및 해방 이후 10년 동안의 북한문학이 주된 연구 관심사이다. 2017년부터는 탈북이탈주민이 쓴 수기나 소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문학의 탈식민적 주체성』(2009), 「조선문학가동맹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대립과 그 원인, 1945~1953」(2014), 「한국전쟁기 북한 문학의 애국주의 형상화 논쟁」(2020), 『탈북문학의 도전과 실험』(공저, 2019), 「탈북작가들의 소설을 통해 본 북한에서의 ‘시장 경쟁」(2022), 「탈북자 소설을 통해 본 북한의 시장사회주의와 경제 현실」(2024) 등이 있다.

『통일과 평화』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20년 1월 7일

개정 2020년 4월 14일

개정 2024년 4월 1일

제1장 논문투고 및 게재

1. 『통일과 평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2. 『통일과 평화』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투고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통일과 평화』 편집위원회(jpus.jams.or.kr)를 통해 제출한다.
5. 투고논문의 첫 페이지에 투고자 이름은 물론 본문 가운데 ‘필자’, ‘졸고’ 등으로 하여, 투고자의 신상을 짐작하게 하는 그 어떤 단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6. 제출된 원고는 익명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된다. 원고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7. 교정쇄는 필자에게 2회 또는 3회에 걸쳐 전달되며,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8. 투고논문에는 연구윤리서약, KCI문헌유사도검사결과서를 첨부한다. 유사율이 높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되,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로 한다.
10. 논문 제출 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통일과 평화』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게재와 함께 논문의 저작권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저자(들)가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통일과 평화』 게재 논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를 본 논문으로 인용한다.

제2장 원고 작성 요령

[제목, 목차, 저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통일과 평화』 최근 간행호에 따른다.
2.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저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요약문, keywords,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3.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5.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본문]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논문 요약문]

1. 논문 요약문은 단순 요약이 아닌 해당 논문의 독창적인 견해 및 연구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작성한다.
2. 국문요약문은 원고지 3매, 영문요약문은 2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3. 영문요약문은 외국인 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평화연구원 원어민의 교정 단계를 거친다.

[인용문]

1.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2.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연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 8. 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98~299쪽.

[표, 그림]

1.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3-3, 그림 2-5)를 부여한다.
2.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각주]

1.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2.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 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 ;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운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20~28쪽.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20쪽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최종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36쪽.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15쪽.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6~51쪽.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 북한자료의 경우

- 예)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한 담화(1970년 5월 22일)」, 사회과학출판사 편,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12~136쪽.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경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권영진,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1990), 20~35쪽.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0~15쪽.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 청소년들」 『조선일보』 (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3.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은주,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22쪽.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270쪽.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4. 구술 자료의 전거는 면담자, 구술자, 면담일자, 면담장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 특별한 경우 구술자명을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일반적으로 국문단행본, 영문단행본, 국문논문, 영문논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4.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 작성 양식과 동일하되, 출판지와 출판사명의 괄호가 제거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107~128쪽.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통일과 평화』 연구윤리 규약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19년 11월 20일

제1장 저자(투고자)의 연구윤리와 책임

제1조(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 평화』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제2조(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3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6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하는 행위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르지 않고 재사용하는 행위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7조(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8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심사 의뢰)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1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심사서 작성)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제16조(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연구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한다.
-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 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